

예산안분석시리즈 5



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Ⅳ

【보건복지위 · 환경노동위 · 국토교통위 · 여성가족위】

2013. 1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예산안분석시리즈 5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총 괄 | 김 수 흥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윤 용 중 예산분석심의관
정 환 철 경제예산분석과장
서 세 욱 산업예산분석과장
문 종 열 사회예산분석과장
박 동 찬 행정예산분석과장
정 영 진 법안비용추계1과장
이 선 주 법안비용추계2과장

작 성 | 정 민 주, 김 경 원, 강 상 규, 김 성 은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김 효 진, 남 희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지 원 | 이 정 아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실무원

「예산안분석시리즈」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 02) 788-3771 | s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5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 보건복지위 · 환경노동위 · 국토교통위 · 여성가족위 】

2013. 1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발 간 사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 환경 악화로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세수 기반도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한 재정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짜임새 있는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절감과 지출의 효율성 증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를 통하여 향후 5년 동안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계획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예산안을 총수입 370.7조원, 총지출 357.7조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재정총량의 적정성,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및 지출구조조정 방안 등 재정건전성 확립과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와 부처별 사업을 심층분석한 「예산안분석시리즈」를 발간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4년도 예산안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 「부처별 분석」, 「분야별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 등 총 9권으로 구성되며, 국회 예산안 심사일정에 맞추어 발간할 예정입니다.

「총괄 분석」은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재정총량·재정운용 상의 주요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부처별 분석」은 각 부처의 주요사업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것입니다. 「분야별 분석」은 보건·복지·고용, R&D 등 12개 재정운용분야별로 재원배분 추이, 주요 현안분석, 향후 재정과제 등을 제시하였으며, 「예산안 분석 종합」은 앞서 발간된 예산안분석시리즈의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한 보고서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분석시리즈」에서는 재정총괄·운용 관련 중점분석사항을 「총괄 분석」에 추가 하였고, 지난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분야별 분석」에 역점을 두는 등 국회의 거시적·총량적 예산안 심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분석시리즈가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님들의 예산안심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3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국 경 복

일러두기

□ 「2014년도 예산안분석시리즈」의 구성

- 「2014년도 예산안분석시리즈」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 번	보고서 제목
1	예산안 총괄 분석 (개요·재정총량·재정운용)
2	예산안 부처별 분석 I (운영위·법사위·정무위·재정위)
3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미방위·교문위·외통위·국방위)
4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I (안행위·농해수위·산업위)
5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복지위·환노위·국토위·여성위)
6	예산안 분야별 분석 I
7	예산안 분야별 분석 II
8	성인지 예산서 분석
9	예산안 분석 종합

* 국회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추어 발간 예정

- 「총괄 분석」(시리즈 1)은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재정총량·재정운용에 관한 쟁점을 분석·정리하였습니다.
- 「부처별 분석」(시리즈 2~5)은 총 4권으로 구성되었으며, 국회의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소관 정부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분석·정리하였습니다.
- 「분야별 분석」(시리즈 6~7)은 총 2권으로 구성되었으며, 12개 재원배분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주요 재정현안 및 향후 재정과제를 분석하였습니다.
- 「성인지 예산서 분석」(시리즈 8)은 성인지 예산서를 총괄적으로 분석하였고,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소관 부처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분석·정리하였습니다.
- 「예산안 분석 종합」(시리즈 9)은 예산안분석보고서(시리즈 2~8)의 주요 분석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예산안분석 결과 도출된 세출조정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차 례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I.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괄 / 3

1. 예산안 개요	3
2. 회계·기금별 개요	4
3.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8
4.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9
5. 의무지출 사업	11
6. 예산안의 주요 특징	12
7. 예산안 분석 요약	14

II.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 예산 분석 / 17

1. 생계급여: 연례적인 예산 과소 편성	17
2. 자활사업: 내일행복지원단의 신설시 기존 전달체계를 고려하여 통합운영 필요	23
3.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경상경비 절감 필요	26
4.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	30
5. 노후설계서비스지원사업: 유사사업 수행기관 간 역할 분담방안 마련 필요	39
6.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사업: 정부 내 유사 사이트 통합 운영 필요	42
7. 노인일자리 운영: 수행체계 일원화 및 성과 부진사업의 발전방안 마련 필요	45
8.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49

9.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의 법적근거 및 종합계획 마련 필요	53
10. 영유아보육료 지원: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통한 보육료 지원단가 재산정 필요 ..	60
11.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존 정책과의 차별화 필요	65
12.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 유사 사업 연계·운영방안 마련 필요	68
13.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연례적인 예산 과소 편성	70
14. 국가결핵예방: 국산BCG백신생산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연례적 집행 실적 부진으로 예산 조정 필요	76

[식품의약품안전처]

I.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 총괄 / 79

1. 예산안 개요	79
2. 회계간 재정구조	80
3.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80
4. 예산안의 주요 특징	82
5. 예산안 분석 요약	83

II.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 84

1.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적정 세입규모 편성 필요	84
2.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자치단체의 신청을 감안하여 신규 설치 필요 ...	86
3. 의료기기품질지원센터 지원: 업무의 유사성에 따른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검토	89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I. 환경부 예산안 총괄 / 93

1. 예산안 개요	93
2. 회계·기금간 개요	94
3.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98
4. 신규 및 주요 증감사업	99
5. 의무지출 예산안	101
6. 예산안의 주요 특징	101
7. 예산안 분석 요약	103

II. 환경부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 106

1. 재정운용구조: 재정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계구조 개편 필요	106
2. 하수도사업: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안 일부 조정 필요	112
3. 도시침수대응: 사업 추진실적을 반영한 예산안 일부 조정 필요	115
4. 비점오염저감사업: 집행실적 부진에 따른 예산안 일부 조정 필요	118
5. 물환경정책시스템구축: 가축분뇨전자인계·인수시스템 구축과 이의 민간대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21
6. 고도정수처리시설: 설계지연 및 사업자 재정비 가능성을 반영한 예산안의 일부 조정 필요	123
7.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 사업추진 실적 부진에 따른 예산안 일부 조정 검토 필요	125
8.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운영: 기관운영방안 마련 필요	128
9.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과 위기관리기반 구축사업 및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사업: 기관간 기능정비를 통한 예산안 조정 필요	130
10. 환경산업 실증화단지 조성: 사업 진행과정을 반영한 예산안 조정 필요 ...	133

[고용노동부]

I. 고용노동부 예산안 총괄 / 135

1. 예산안 개요	135
2. 회계·기금별 개요	136
3.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139
4. 주요 증액사업 및 신규사업	140
5. 의무지출 사업	142
6. 예산안의 주요 특징	143
7. 예산안 분석 요약	144

II.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 146

1.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을 감안하여 예산 조정 및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146
2.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조정 및 사업효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50
3. 고용창출지원사업: 집행 실적 부진을 감안한 예산 조정 및 장시간 근로개선 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153
4.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계획 부실로 예산 조정 필요	156
5. 중장년취업아카데미운영: 사업의 유사성에 따른 전직지원사업과 통합 추진 필요	158
6. 임금피크제지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및 보완대책 필요	161
7. 스펙초월채용시스템 구축: 사업성과 불확실성에 따라 예산 조정 필요	163
8. 해외취업지원: 사업 확대 이전에 충분한 계획 수립 필요	166
9. 해외인턴사업: 사업성과 제고방안 필요	169
10. 청년창직인턴제: 사업성과가 미흡하므로 예산 조정 필요	171
11. 직장어린이집지원: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저조하므로 사업성과 제고방안 필요	173

[기상청]

I. 기상청 예산안 총괄 / 177

1. 예산안 개요	177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78
3. 의무지출 예산안	179
4. 예산안의 주요 특징	180
5. 예산안 분석 요약	181

II. 기상청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 182

1. 항공기 기상관측망구축 및 장비운영사업: 사업지연을 고려하여 항공기상라이다 도입 임대료 예산 조정 필요	182
2. 기상산업활성화사업: 민간대행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84
3. 기상레이더 운영사업: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187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I. 국토교통부 예산안 총괄 / 193

1. 예산안 개요	193
2. 회계·기금별 개요	194
3.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197
4.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98
5. 의무지출 사업	203
6.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4
7. 예산안 분석 요약	206

II. 국토교통부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 212

1.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한 예산 조정 필요	212
2. 공동물류지원: 지자체 수요저조를 감안한 사업 효과 검토 필요	215
3.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사업: 사업내용 변경 및 지자체 실행을 감안한 조정 필요	219
4. 고속도로 조사사업: 사업비 성격에 따른 비목정정 및 집행실적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 필요	223
5. 국도건설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국도 내역 편성 필요 등	228
6.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신규사업의 집행 여건 검토 및 구체적 산출근거 없는 민간선투자이자비용 조정 필요	234
7.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총액계상): 경관도로조성사업의 총액계상 분리 등	240
8.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확정 노선에 대한 신규 편성 및 집행실적을 감안한 적정 사업비 계상 필요	244
9.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지자체별 여건을 감안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251
10. 택시감차보상: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감차 사업비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256
11. 항행안전시설유지관리: 일반수용비의 적정 조정 및 사업목적에 맞는 내역사업의 편성 조정 필요	259
12. 항공산업발전지원(신규): 항공레포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 마련 필요 ..	263
13. 광역철도건설: 사전 사업계획 철저 필요 및 집행여건을 감안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265
14. 주택마우처시범사업지원(신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및 철저한 준비를 통한 시범사업 실시 필요	273
15. 재정비촉진지원사업: 집행 부진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279
16. 도시재생사업: 유사·중복 우려로 사업 내용의 정비 필요	285
17. 노후공단재정비지원: 정상적인 사업 진행의 지연이 우려되는바 철저한 사전 사업계획 수립 필요	291

18. 보금자리주택사업: 주택기금 지원 시점과 주택 착공 사이의 시차에 대한 검토 필요	293
19. 행복주택(신규): 지구 확정 이후 예산 반영 필요	298
20.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집행 부진에 따라 매입단가 및 사업 추진 절차 점검 ..	302
21. 준주택지원: 지원 적정성 검토 및 집행 실적 부진으로 인한 예산안 조정 필요 ...	306
22. 기존주택개선사업: 연례적 집행부진으로 인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3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안 총괄 / 313

1. 예산안 개요	313
2.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314
3.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315
4. 의무지출 사업	316
5. 예산안의 주요 특징	317
6. 예산안 분석 요약	318

I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 320

1.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연례적 집행 부진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320
2. 행복도시건설홍보·자족기능유치지원: 유사·중복 우려로 사업 내용 조정 필요	323
3. 오송 ~ 청주시 연결도로, 오송 ~ 청주공항 연결도로: 연례적 집행 부진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329
4. 1생활권,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집행실적을 감안한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안 조정 필요	332

[새만금개발청]

I. 새만금개발청 예산안 총괄 / 334

- 1. 예산안 개요 334
- 2. 신규 및 주요 증감사업 335
- 3. 예산안의 주요 특징 336
- 4. 예산안 분석 요약 339

II. 새만금개발청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 340

- 1. 새만금명품복합도시건설지원: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기반시설 적기 조성
필요 340
- 2. 새만금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문화체육관광부)의 새만금개발청 이관 필요 343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I. 여성가족부 예산안 총괄 / 347

- 1. 예산안 개요 347
- 2. 회계·기금별 개요 348
- 3.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350
- 4.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351
- 5. 의무지출 사업 352
- 6. 예산안의 주요 특징 352
- 7. 예산안 분석 요약 354

II.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 356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특화형 새일센터 별도 지정의 효과성 미흡 우려를
고려한 시범운영 필요 등 356
2. 아동양육지원: 종일제 지원연령에 따른 아이돌보미 수당 차등 편성 필요 등 ... 362
3.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교육급여(기초생활급여) 예산의 국회 확정
내용을 반영한 아동교육지원비 예산 조정 필요 366

제 1 장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I.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괄

1. 예산안 개요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3개 기금(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계 기준 세입 및 기금수입은 2013년 대비 14조 9,579억원(15.7%) 증액된 108조 6,503억원, 세출 및 기금지출은 2013년 본예산 대비 18조 6,409억원(15.7%), 추경예산 대비 18조 2,589억원(15.3%) 증액된 137조 4,118억원이다.

세입예산안은 기타경상이전 수입 감소(712억원) 등에 따라 2013년 6,330억원에서 2014년 5,722억원으로 9.6% 감소하였다.

세출예산안은 기초연금 도입(1조 9,905억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4,944억원) 증가에 따라 2013년 26조 934억에서 2014년 29조 3,337억원으로 12.4% 증가하였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민연금기금 내 국민연금급여지급 증가(1조 7,511억원)에 따라 2013년 93조 595억원에서 2014년 108조 781억원으로 16.1% 증가하였다.

[표 1] 보건복지부 예산안 개요(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입	세입	390,081	632,960	632,960	572,235	-60,725	-9.6
	기금수입	94,177,785	93,059,463	93,059,463	108,078,070	15,018,607	16.1
	총계	94,567,866	93,692,423	93,692,423	108,650,305	14,957,882	16.0
지출	세출	22,670,996	25,711,436	26,093,449	29,333,739	3,240,290	12.4
	기금지출	94,177,785	93,059,463	93,059,463	108,078,070	15,018,607	16.1
	총계	116,848,781	118,770,899	119,152,912	137,411,809	18,258,897	15.3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예산안 개요」(2013. 10)

김경원 예산분석관(kwkim@assembly.go.kr, 788-4636)

총지출은 2013년 본예산 대비 5조 2,857억원(12.8%), 추경예산 대비 4조 8,997억원(11.8%) 증액된 46조 3,500억원이다.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9%로 2013년 본예산 12.0% 대비 0.9%p가 증가하였고, 추경예산 11.8% 대비 1.1%p가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3년 추경 대비 25조 7845억원에서 29조 131억원으로 12.5% 증가하였고, 기금은 17조 3369억원으로 2013년 15조 6657억원 대비 10.7% 증가하였다.

[표 2] 보건복지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회 계	22,398,503	25,402,528	25,784,541	29,013,081	3,228,540	12.5
기 금	14,140,241	15,661,745	15,665,745	17,336,919	1,671,174	10.7
총지출	36,538,744	41,064,273	41,450,286	46,350,000	4,899,714	11.8

주: 총지출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여유자금, 차입금원금상환),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예산안 개요」(2013. 10)

2. 회계 · 기금별 개요

가. 세입 · 세출예산안

2014년 세입예산안을 각 회계별 총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타경상 이전수입 감소에 따라 세입규모가 2013년 46조 1,665억원에서 2014년 39조 4,459억원으로 14.6%감소하였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세입규모가 2013년 17조 1,295억원에서 2014년 17조 7,776억원으로 3.8% 증가하였다.

[표 3] 보건복지부 세입예산안(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회계	일반회계	215,663	461,665	461,665	394,459	-67,206	-14.6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74,208	171,295	171,295	177,776	6,481	3.8
	총 계	389,871	632,960	632,960	572,235	-60,725	-9.6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예산안 개요」(2013. 10)

세출예산안은 총계 기준으로 일반회계가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라 2013년 25조 8,574억원에서 2014년 29조 968억원으로 12.5% 증가하였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2013년 613억원에서 2014년 591억원으로 3.5% 감소하였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 노인일자리 지원(제주)사업이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2013년 34억원에서 순감하였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 2013년 1,713억원에서 2014년 1,778억원으로 3.8% 증가하였다.

[표 4] 보건복지부 세출예산안(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회계	일반회계	22,474,220	25,475,824	25,857,435	29,096,819	3,239,384	12.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60,247	61,273	61,273	59,144	-2,129	-3.5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2,329	3,044	3,446	0	-3,446	순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34,200	171,295	171,295	177,776	6,481	3.8
총 계		22,670,996	25,711,436	26,093,449	29,333,739	3,240,290	12.4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예산안 개요」(2013. 10)

4개 회계의 전체 총지출은 2013년 추경 기준으로 25조 7,845억원에서 2014년 29조 131억원으로 12.5% 증액되었다. 일반회계 지출 규모는 28조 7,844억원으로 2013년 대비 12.5% 증액되었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출규모는 591억원으로 2013년 대비 3.5% 감액되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출규모는 2013년 34억원에서 순감하였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지출규모는 1,696억원으로 2013년 대비 2.7% 증액되었다.

[표 5] 보건복지부 회계별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회계	일반회계	25,173,082	25,554,693	28,784,373	3,229,680	12.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1,273	61,273	59,144	-2,129	-3.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044	3,446	-	-3,446	순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65,128	165,128	169,564	4,436	2.7
회계별 총지출 합계		25,402,528	25,784,541	29,013,081	3,228,540	12.5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예산안 개요」(2013. 10)

나.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총계 기준 총 108조 781억원으로 2013년 변경계획 대비 16.1% 증가하였다. 각 기금별로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규모가 2013년 대비 16.4%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응급의료기금은 운용규모가 2013년 대비 1.3% 축소되었다.

[표 6] 보건복지부 기금 총괄(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 금	국민건강증진기금	1,993,599	2,074,769	2,074,769	2,239,780	165,011	8.0
	국민연금기금	91,933,659	90,763,793	90,763,793	105,620,185	14,856,392	16.4
	응급의료기금	250,527	220,901	220,901	218,105	-2,796	-1.3
총 계		94,177,785	93,059,463	93,059,463	108,078,070	15,018,607	16.1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예산안 개요」(2013. 10)

3개 기금의 총지출은 17조 3,369억원으로 2013년 변경계획 15조 6,657억원 대비 10.7% 증가하였다. 각 기금별로는 국민연금기금이 15조 2,187억원으로 2013년 대비 12.3% 증가한 반면, 응급의료기금은 1,965억원으로, 7.1%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감액에 기인한다.

[표 7] 보건복지부 기금별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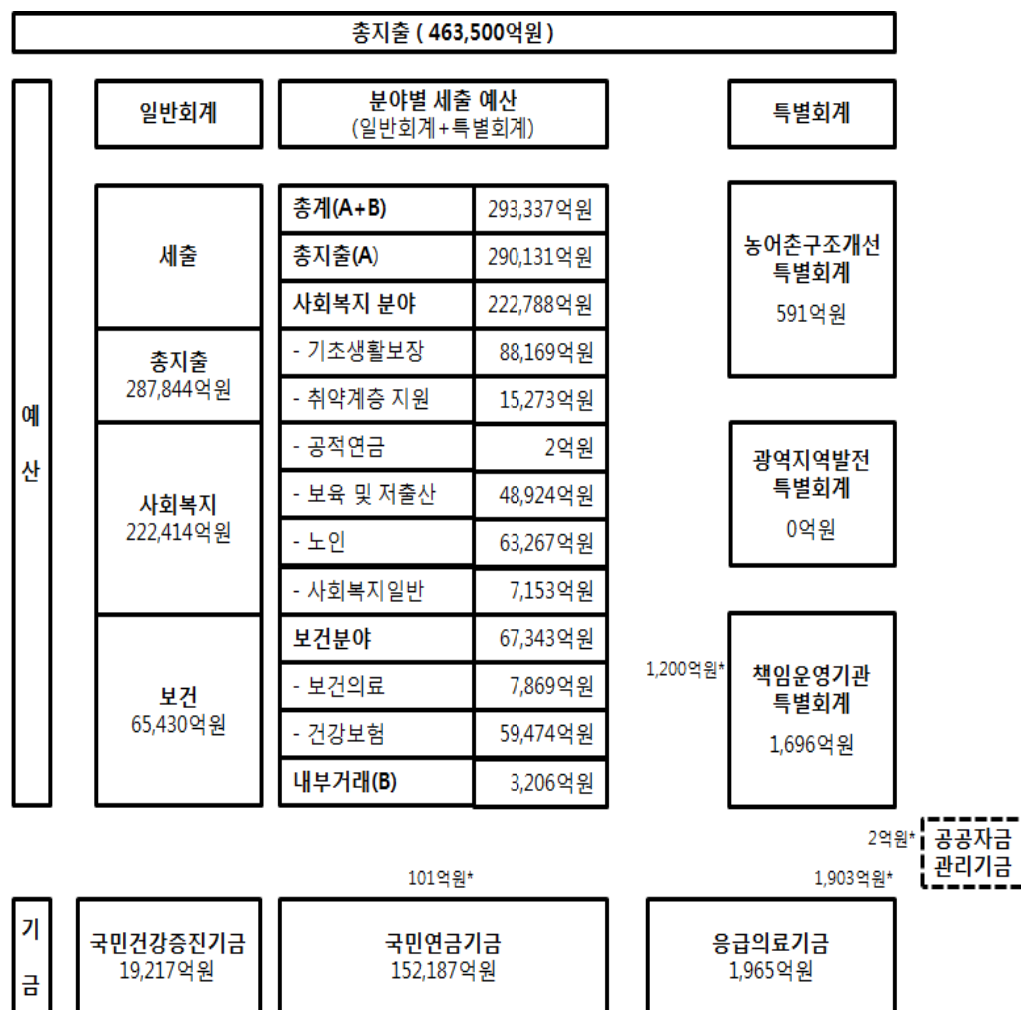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 금	국민건강증진기금	1,900,727	1,900,727	1,921,683	20,956	1.1
	국민연금기금	13,553,413	13,553,413	15,218,735	1,665,322	12.3
	응급의료기금	207,605	211,605	196,501	-15,104	-7.1
기금별 총지출 합계		15,661,745	15,665,745	17,336,919	1,671,174	10.7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예산안 개요」(2013. 10)

3. 회계 · 기금간 재정구조

보건복지부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각각 1,200억원, 101억원, 1,903억원, 2억원을 전출하고 있으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응급의료기금은 총지출의 70%와 96.8%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림 1] 보건복지부 소관 회계·기금간 재정지출흐름도



* 일반회계에서 회계 및 기금간 거래 금액

4. 신규 및 주요 중액사업

2014년도 신규사업은 총 17개 사업, 477억원 규모이다.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R&D)은 범부처 공동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개인별 맞춤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진단치료기술 개발 추진을 위해 120억원을 편성하였다.

그 외 신규 R&D사업으로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100억원),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35.6억원),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20억원)이 있다.

R&D사업 외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중소형 병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펀드 조성사업(100억원)과 국민연금공단 본부이전직원 주거지원(43억원), 청사이전지원(33억원)이 있다.

[표 8]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 예산안
일반회계	청사이전지원	3,323
일반회계	연구중심병원육성(R&D)	10,000
일반회계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R&D)	12,000
일반회계	국가보건의료표준화	507
일반회계	항노화 산업육성	800
일반회계	중소형 병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펀드 조성	10,000
일반회계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R&D)	3,560
일반회계	정신건강기술개발(R&D)	2,000
일반회계	2015 세계 간호사대회	100
일반회계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550
책임특별회계	나주병원 임상실습 수입대체경비	10
책임특별회계	목포병원 수입대체경비(손익)	46
책임특별회계	부곡병원 수입대체경비	42
책임특별회계	국립서울병원 수입대체경비	56
책임특별회계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외부수탁사업(수입대체)	400
책임특별회계	춘천병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임상실습 수입대체경비	20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공단 본부이전직원 주거지원	4,324
총 17개 사업		45,428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예산안 개요」(2013. 10)

한편,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은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013년 추경 대비 62% 증액한 5조 2,002억원을 편성하였다.

장애인연금사업도 기초연금 도입에 맞춰 연금지급액을 2배 인상함(10만원→20만원)에 따라 2013년 추경 대비 35.5% 증액한 4,660억원을 편성하였다.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지방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각각 60.4%, 59.4%로 10%p 인상함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이 2013년 추경 대비 18.6%,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27.2% 증액하였다.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자 수 및 지원단가 인상으로 2013년 추경 대비 28% 증액한 7,285억원을 편성하였다.

국민연금기금에서는 국민연금급여지급사업이 노령연금 지급 증가로 인해 2013년 추경 대비 13.6% 증액한 14조 5,814억원을 편성하였다.

[표 9]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 회계	기초노령연금지급	3,209,726	3,209,726	5,200,203	1,990,477	62.0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4,808,555	4,808,555	5,302,954	494,399	10.3
	영유아보육료 지원	2,594,419	2,594,419	3,076,452	482,033	18.6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80,950	880,950	1,120,857	239,907	27.2
	의료급여경상보조	4,247,847	4,393,447	4,436,554	188,707	4.3
	주거급여	569,185	569,185	728,487	159,302	28.0
	장애인연금	344,006	344,006	466,005	121,999	35.5
	노인일자리 운영	235,342	244,242	299,690	64,348	26.3
	차상위계층 지원	210,730	210,730	273,549	62,819	29.8
국민연금 기금	국민연금급여지급	12,830,300	12,830,300	14,581,400	1,751,100	13.6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예산안 개요」(2013. 10)

5. 의무지출 사업

의무지출 사업은 2013년 본예산 대비 5조 1,486억원(15.1%), 추경예산 대비 4조 9,841억원(14.6%) 증가한 39조 1,938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주요 의무지출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이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급단가인상으로 2013년 추경예산 대비 1조 9,905억원 증액한 5조 2,002억원을 편성하였다.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 증가에 따라 2013년 추경 대비 4,944억원 증액한 5조 3,030억원을 편성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는 2013년 추경 대비 28% 증액한 7,285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는 1% 증액한 4조 4,366억원, 생계급여는 3.3% 감액한 2조 5,240억원, 교육급여는 14.2% 감액한 1,111억원, 해산·장제급여는 3.4% 감액한 212억원을 편성하였다.

국민연금기금사업 중에서는 노령연금 대상자 증가로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이 2013년 추경 대비 1조 7,511억원 증액한 14조 5,814억원을 편성하였다.

[표 10] 보건복지부 의무지출 총괄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총지출(A)	36,538,744	41,064,273	41,450,286	46,350,000	4,899,714	11.8
의무지출(B) (비중, B/A)	31,349,589 (85.8)	34,045,167 (82.9)	34,209,669 (82.5)	39,193,814 (84.6)	4,984,145	14.6
일반 회계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4,343,441	4,808,555	5,302,954	494,399	10.3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604,460	684,387	644,087	-40,300	-5.9
	교육급여	110,630	129,481	111,053	-18,428	-14.2
	생계급여	2,471,897	2,590,188	2,523,954	-85,136	-3.3
	의료급여 경상보조	3,981,229	4,247,847	4,436,554	43,107	1.0
	주거급여	565,988	569,185	728,487	159,302	28.0
	해산장제급여	15,152	21,985	21,244	-741	-3.4
	기초노령연금지급	2,990,557	3,209,726	5,200,203	1,990,477	62.0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487,824	541,210	584,883	43,673	8.1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의사상자지원	3,267	3,500	3,500	3,150	-350	-10.0
	영유아보육료지원	2,639,103	2,594,419	2,594,419	3,076,452	482,033	18.6
	장애인연금	282,752	344,006	344,006	466,005	121,999	35.5
	장애인활동지원	228,561	382,876	382,876	428,454	45,578	11.9
	장애수당(기초)	52,553	52,553	52,553	52,905	352	0.7
	WHO의무분담금납부(ODA)	11,946	12,571	12,571	10,374	-2,197	-17.5
책임 운영 기관 특별 회계	8개 국립병원 건강보험부담금	1,964	2,461	2,461	2,420	-41	-1.7
국민 건강 증진 기금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1,007,280	1,019,817	1,019,817	1,019,135	-682	-0.1
	부담금환급금 지원	230	100	100	100	-	-
국민 연금 기금	국민연금급여지급	11,550,755	12,830,300	12,830,300	14,581,400	1,751,100	13.6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예산안 개요」(2013. 10)

6. 예산안의 주요 특징

보건복지부는 보건, 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보육,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로서, 201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과 탈수급 지원을 강화하는 저소득층 배려 정책, 기초연금 도입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 중복·누수 없는 복지전달 체계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능 강화,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 확대를 포함한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 구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보건·복지·고용분야 총지출 105.9조원 중 43.8%인 46.4조원이며, 이는 2013년 본예산 대비 11.8%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 증가율을 보면 기초연금의 도입이 포함된 노인분야가 2013년 본예산 대비 47.8%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는 2013년 본예산 대비 5.6% 감소하였다.

둘째,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주요 국정과제 관련 예산이 25조 8,850억원으로 55.8%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7.8조원), 기초연금 도입(5.2조원), 장애인연금 2배 인상(0.4조원)등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

셋째, 보건복지부 총지출 중 의무지출의 비중은 84.6%에 이르고 있다. 2014년 의무지출예산은 39.2조원으로 2013년 본예산 34조원 대비 15.1% 증가한 규모이며, 2017년까지 연평균 9.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생계급여 사업 등 의무지출사업은 과소편성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사업의 확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014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되었으며,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2014~2017년 동안 총 5.7조원의 지방비가 증가하는 등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다섯째, 중앙부처 복지사업이 17개 부처 292개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 및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예산 누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희망복지지원단 및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가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사업과 국민연금 기금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은 사업의 목적, 방식이 유사하므로 수행기관간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예산안 분석 요약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업의 유사·중복 5건, 예산 과소편성 3건, 법·제도 미비 3건 등 총 14건으로 요약된다.

[표 11]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 분석사항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분석사항
[예산의 과소 편성]						
일반 회계	기초생활 급여	생계급여	2,361,845	2,609,090	2,523,954	○ 지급기준선이 자격기준선에 미치지 못해 제도 개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노인장기 요양보험 지원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운영	487,875	541,210	584,883	○ 연례적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하고 있으나, 최근 대상자 확대 고려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이 필요함
	건강보험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4,343,441	4,808,555	5,302,954	○ 4대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연례적으로 과소추계하고 있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적정 추계를 통해 예산조정 필요
[예산 과다 편성]						
일반 회계	보육인프라 구축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	644	1,288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와 같은 방안을 통해 보육의 질 제고가 가능하므로, 활동횟수 증가보다 사업특색을 살리는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분석사항
-----------	----------	----------	------------	------------	-------------	------

[사업의 유사·중복]

일반 회계	자활지원	자활사업	386,536	472,269	412,444	○ 내일행복지원단과 기존 고용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 유사·중복
	저출산고령 사회정책 개발관리	노후설계 서비스 지원사업	-	500	800	○ 국민연금의 노후설계서비스 사업과 유사·중복되므로 수행기관간 역할 분담 방안 마련 필요
	저출산고령 사회정책 개발관리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 개선	5,029	4,733	4,597	○ 동 사업에서 운영 중인 마음더하기 포털과 모자보건 사업에서 운영하는 아가사랑 사이트가 기능이 유사하므로 통합 필요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 일자리 운영	183,077	244,242	299,690	○ 재능활용일자리사업의 경우 기존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교육형 노인일자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행체계 일원화 필요
	한의약 산업지원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	-	500	1,000	○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과 유사하므로, 기존 글로벌 헬스케어사업의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필요성·공익성 결여]

일반 회계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	16,298	19,908	23,477	○ 현재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애등급제 폐지여부가 포함된 종합계획 수립 필요
----------	-------------	--------------------	--------	--------	--------	---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분석사항
[집행실적 부진]						
국민 건강 증진 기금	결핵관리	국가 결핵예방	39,077	39,177	36,525	○ 국산BCG 생산사업은 2008년 이후 계속되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생산시설을 구축한 뒤에도 백신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 계획 수립 시까지 적정수준으로 예산 조정 필요
[법·제도 미비]						
일반 회계	노인 복지지원	기초노령 연금 지급	2,990,557	3,209,726	5,200,203	○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2014~2017년 재정추가 소요가 12.7조원 내지 14.2조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함
	사회복지 전달체계	공공사회 복지전달 체계개선	28,956	59,428	96,711	○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조금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보조금 지급제외대상이므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 보육료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2,319,291	2,594,419	3,076,452	○ 표준보육비용 단가 재산정을 통한 보육료지원단가 현실화 및 합리적인 보육료단가 산정을 위해, 일률적으로 정해진 지원단가를 시설정원별로 구분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음

주: 2013예산은 추경반영 예산

II.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 예산 분석

1. 생계급여: 연례적인 예산 과소 편성

- 생계급여 대상자 수 산정시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에 따른 대상자 감소 효과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부정수급자 적발로 인한 감소도 조정계수를 통해 중복적용하고 있어 예산이 과소편성되는 측면이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중 생계급여는 제도개편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격기준에 부합하도록 지급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생계급여사업(일반회계, 1961~, 보조)은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대비 851억원(3.3%) 감소한 2조 5,240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최근 생계급여 대상자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1~9월 대상자 수를 2013년 비해 5만명 감소한 123만명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표 1] 생계급여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예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생계급여	2,361,845	2,590,188	2,609,090	2,523,954	-85,136	-3.3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존 통합급여 방식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1조 8,760억원을 편성하였고, 10~12월까지는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6,479억원을 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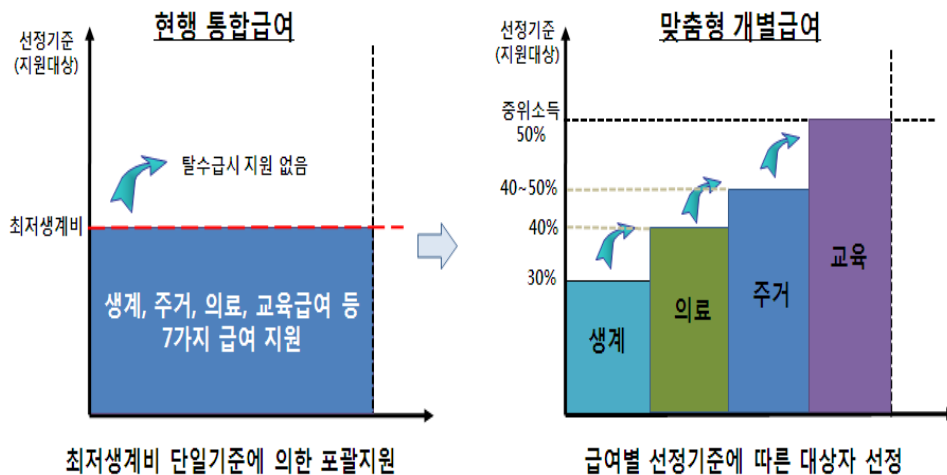
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2014년 10월 예정)

(1) 맞춤형 개별급여의 도입

현행 통합급여 방식의 경우 최저생계비 100%이하(2013년 155만원)의 자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등 7가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맞춤형 개별급여의 경우, 최저생계비보다 상대적 경제수준을 고려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각 급여별로 수급기준을 다르게 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급여별 기준을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¹⁾의 30%(115만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155만원), 주거·해산·장제급여는 중위소득의 43%(165만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192만원)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²⁾

[그림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내용



자료: 보건복지부(2013. 9)

또한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를 모두 관장하고 있으나, 제도 개편 이후에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로,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이관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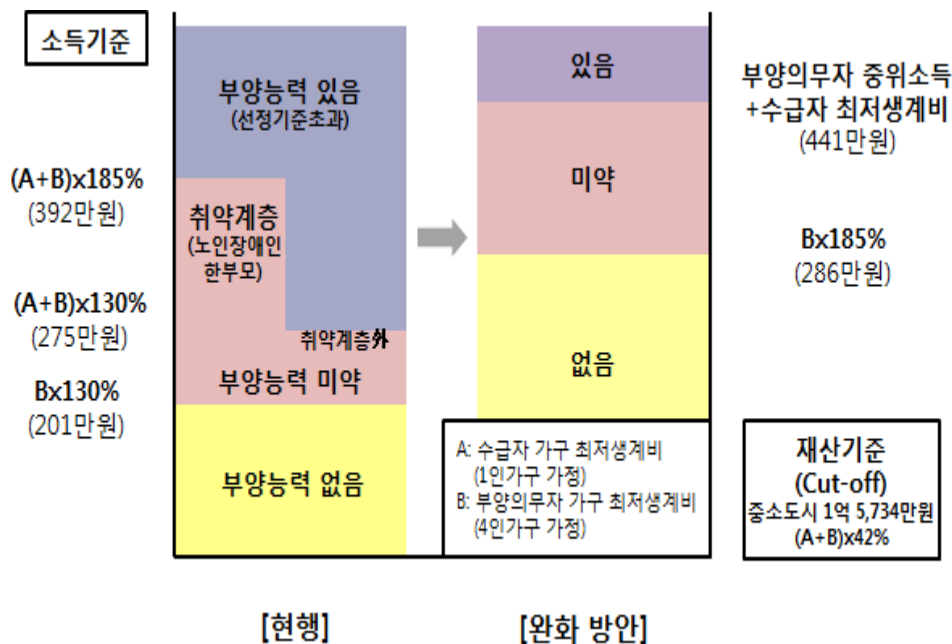
1) 201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상 2011년 4인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현행 균등화지수를 적용하고, 2년간 중위소득 증가율을 적용한 2013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84만원임.

2) 2013년 9월 10일 사회보장위원회 발표

(2)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현행 기준에서는 최저 생계비의 130%(201만원) 미만인 자를 부양능력 없는 부양의무자로 보고 있으나, 제도 개편 이후에는 이 기준이 최저 생계비의 185%(286만원)미만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그림 2]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자료: 보건복지부(2013. 9)

(3) 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

정부는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를 통한 안정적 탈수급 및 자립 기반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2014년 10월로 예정된 개편을 통해 기존에 지급받던 수급자의 급여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급여별 대상자 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2015년 시행 예정인 교육급여의 경우 변동이 없으나, 생계급여의 경우 상반기 123만명에서 10월 이후 133만명으로, 주거급여는 108만명에서 152만명으로, 의료급여는 133만명에서 14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주거급여의 경우 대상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33%에서 43%로 증가하는데 기인하며,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주된 증가요인이다.

[표 2]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대상자 수 증감

(단위: 만명, %)

	2014 9월 이전 (A)	2014 10월 이후(B)	증 감 (B-A)/A
생계급여	123	133	8.1
주거급여	108	152	40.7
의료급여	133	145	9.0
교육급여	21	21	0
재산·장제급여	3.5	3.8	5.6

주: 교육급여의 경우 2015년부터 개편 예정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다. 대상자 수 과소추계 및 조정계수 중복산입

정부가 2014년 예산안에서 예상한 생계급여 대상자 수는 과소추계된 측면이 있다.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생계급여 대상자는 개편 전 123만명, 개편 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포함하여 133만명³⁾이다.

[표 3] 생계급여 예산산출 주요변수 비교

(단위: 만명, 만원, %)

	2013 예산(A)	2014 예산안		증 감	
		개편전(B)	개편후(C)	(B-A)/A	(C-A)/A
총 지원인원(일반+시설)	128	123	133	-3.9	3.9
최저생계비(4인기준)	154.6	163.1	163.1	5.5	5.5
일반지원단가	34.5	35.4	35.4	2.6	2.6
시설지원단가	20.3 (본예산 15.9)	21.5	21.5	5.9	5.9
근로소득공제	4.4	-	-	-	-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1	-	-	-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완화	2	-	-	-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완화	-	-	12	-	-
기존 수급자 한시보장	-	-	29만가구	-	-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3)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완화를 통한 대상자 증가분 제외시 121만명임.

정부는 2014년 개편 전 기준 수급자가 2013년 대비 5만명이 감소한다고 예상하였는데 이는 수급자 산출시 2013년 1~6월까지의 평균 수급가구 수(767,824가구)에 2011년 1월(824,309가구)과 2013년 6월의 수급가구 수(764,396가구)를 비교하여 30개월간의 월평균 증감율($\Delta 3.1\%$)을 적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2011년~2012년 감소분은 사회보장통합관리망 도입으로 인한 부정수급자 적발에 따른 일시적인 감소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급자 수 과소추계의 원인이 된다.

[표 4] 생계급여 수급자 수

(단위: 명, 가구)

	2010	2011	2012	2013	2014
일반수급자	1,370,331	1,307,402	1,204,600	1,183,135	1,136,525
일반수급가구수	828,254	807,864	767,484	767,610	744,021
시설수급자	89,471	90,855	90,710	93,542	93,475
총수급자	1,459,801	1,398,257	1,295,310	1,276,677	1,230,000

주: 연평균 수치. 2013년은 1~7월 평균. 2014년은 제도변경 전 예상치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2013년 시행한 각종 기준완화로 인해 2013년 일반수급가구수와 시설수급자 수가 모두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년 대비 5만명 감소로 예측하여 편성된 예산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사회보장통합관리망 실시에 따른 부정수급 적발 반영분 1,347억원을 조정계수로 감액반영하고 있는데, 수급자 수 산정시 이미 반영이 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조정계수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생계급여 사업의 경우 연례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한 이·전용(2011년 590억원, 2012년 1,101억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정계수를 통한 수급자 수 감소분 반영을 지양하고, 적정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 자격기준과 지급기준의 일치 필요

사회보장위원회의 발표(2013. 9)에 따르면,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3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하인 가구가 된다.

또한,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개편 전 생계급여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중위 30% 수준으로 조정 검토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2014년 예산안 편성시 생계급여의 실질적인 지급기준인 최대지급액을 개편전과 같은 102.8만원으로 산출하였다.

이는 제도 개편에 따라 최대지급액을 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개편 전에 현금급여선(131.9만원)의 77.968%(생계급여 비중)으로 정한 최대지급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중위소득 30%선의 가구는 개편 후에도 개편 전과 같은 8.4만원을 지급하게 된다.⁴⁾

이에 따라 최대지급액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가구(A)와 최대지급액선에 있는 가구(B)의 소득을 비교할 경우 최대지급액선에 있는 가구(B)가 지급액에 의해 최대지급액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가구(A)에 비해 전체 소득이 높아지는 역진적인 소득 분배의 우려가 있다.⁵⁾

개편 후 자격기준인 중위소득 30%는 기존 생계급여 수준(중위소득 27%)과 소비지출액이 경상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구 분포를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생계급여가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전제로 운영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최대급여액을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인상하여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담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소득인정액이 최대지급액과 같은 가구는 생계급여액이 0원이었으나, 개편 후 제도하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대지급액과 같은 가구가 8.4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5) 다만, 2014년 예산안에서는 기존 수급자 한시보장을 통해 2,694가구에 2.25억원을 지원하여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2. 자활사업: 내일행복지원단의 신설시 기존 전달체계를 고려하여 통합운영 필요

-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지원 사업(내일행복지원단)은 ‘희망복지지원단’과 기존에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 중인 ‘근로빈곤층 우선 지원 시범사업’의 고용센터의 역할을 고려하여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자활사업(일반회계, 2000~, 보조)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예산 4,723억원 대비 598억원(12.7%) 감소한 4,124억원을 편성하였다.

[표 1] 자활사업 예산안 현황

	2012 결산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단위: 백만원, %) 증 감	
				(B-A)	(B-A)/A
자활사업	386,536	472,269	412,444	-59,825	-12.7
- 자활근로	341,436	409,857	382,798	-27,059	-6.6
- 자활사례관리	762	1,020	1,020	-	-
- 희망리본	8,258	22,282	27,686	5,404	24.3
- 지역자활센터운영	36,080	38,810	-	-38,810	순감
-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지원	-	-	640	640	순증
- 자활통계시스템 선진화	-	300	300	-	-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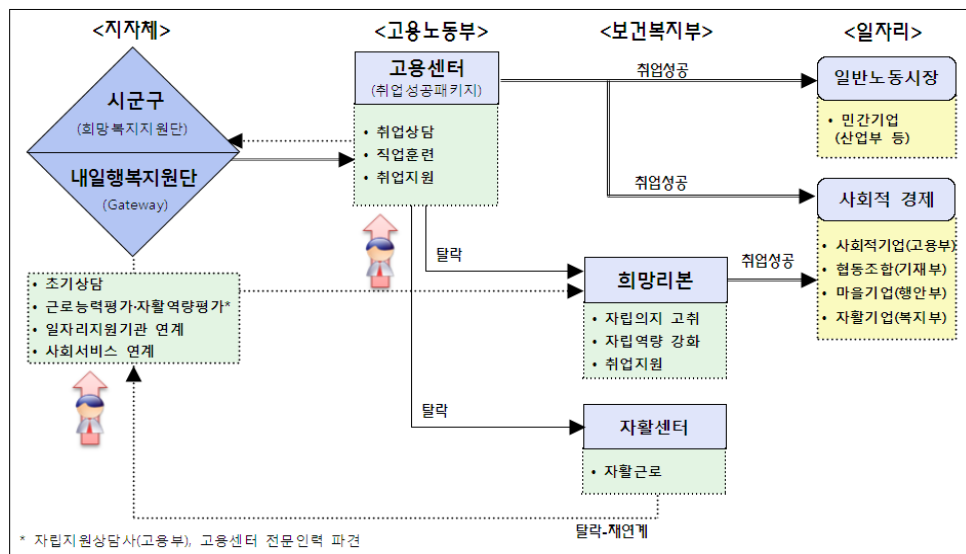
나.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지원: 기존 전달체계와의 역할 분담

자활사업의 내역사업 중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지원 사업은 2014년 신규사업으로 6.4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일행복지원단’ 5개소를 설치하여 각 부처·지자체 일자리지원기관의 연계·통합 및 직업상담사·고용센터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다.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탈수급 지원을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협업을 통한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시범사업’을 2013년 9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시범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모두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1개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 중 취업가능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결하고 취업곤란자는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 자활근로사업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자활일자리 체계도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내일행복지원단이 수행할 계획인 Gateway역할은 이미 시행중인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시범사업’의 사전단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행복지원단’의 설치와 ‘근로빈곤층 우선 지원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향후 Gateway 역할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동시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일행복지원단’은 이미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사례관리사업비)과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을 통해 230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희망복지지원단’과 유사한 형태로 설치될 예정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직공무원과 사례관리사로 구성된 팀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고 서비스연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2] 내일행복지원단과 희망복지지원단 비교

	내일행복지원단	희망복지지원단
의의	고용센터, 자활센터, 민간·사회적 경제기업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중 심 고용·복지 서비스 지원	복합 문제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의 통 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조직
2014년 예산안	6.4억원	143억원
설치 지자체	5개 시군구 계획	230개 시군구 설치·운영중
1개소당 인원	사회복지직공무원 3~5명 예정 직업상담사 4명 배치 예정	사회복지직공무원 평균 5.2명 통합사례관리사 평균 4명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3. 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전체에 대한 복지사례관리를 수행하는 희망복지지원단과 달리 내일행복지원단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용·복지연계서비스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같은 지자체 내에서 희망복지지원단과 내일행복지원단을 별도로 설치하기 보다는 희망복지지원단의 고용·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희망복지지원단이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및 군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을 통해 읍·면·동 중심의 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분야에 별도의 전달체계를 신설하는 것은 정책효과를 분산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달체계 신설시 기존 전달체계의 발전방안까지 고려한 유사·중복성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내일행복지원단은 기존 전달체계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3.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경상경비 절감 필요

- 현재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애등급제 폐지여부가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장애등급심사사업 경상경비의 경우, 경상경비의 주된 산출근거인 심사물량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같이 70.3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적정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함.

가. 현황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사업(일반회계, 1989~, 직접수행, 보조)은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인의 장애인정과 장애등급사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장애인 등록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 199억원 대비 35.7억원(17.9%) 증가한 235억원을 편성하였다.

[표 1]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증 감	
				(B-A)	(B-A)/A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16,298	19,908	23,477	3,569	17.9
- 장애등급심사	15,562	19,499	19,873	374	1.9
-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343	309	503	194	62.8
- 장애등록제도관련 연구	393	100	100	-	-
- 심사서류 대행확보	-	-	2,101	2,101	순증
-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연계지원 체계 구축	-	-	900	900	순증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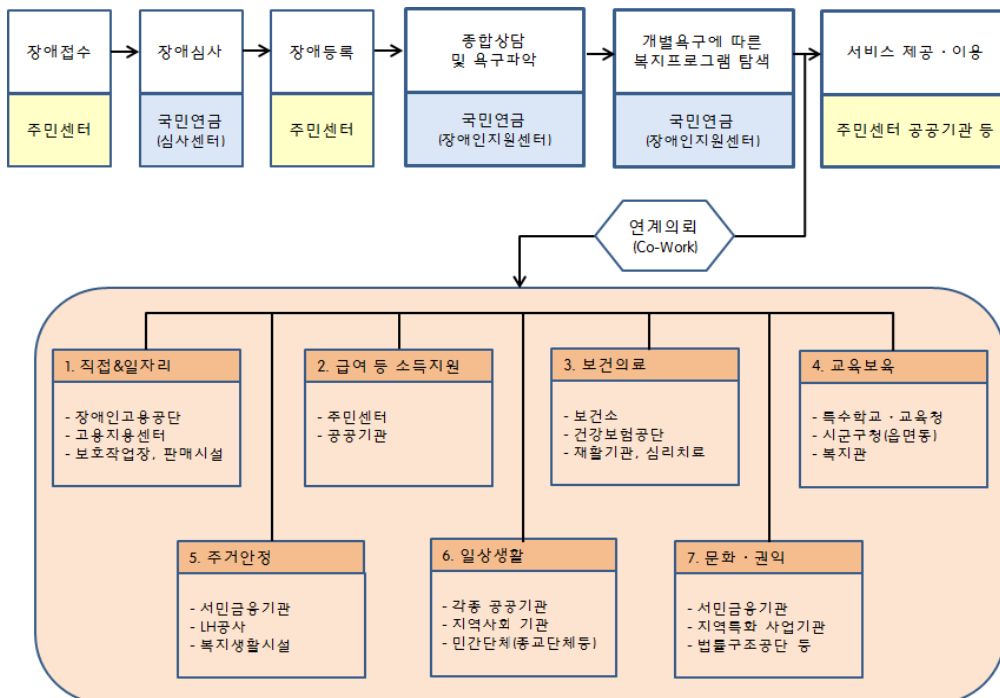
나.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연계지원 체계 구축: 장애등급제 추진 방안을 고려하여 사업진행 검토 필요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연계지원 체계 구축사업은 2014년 신규사업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에게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주된 대상은 연간 12.3만명에 달하는 신규 장애인이 될 것이며, 사업의 목적이 80여종의 장애복지제도(정부 제공 서비스기준)를 장애인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란 점에서, 장애복지서비스가 생소한 신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계획한 사업진행절차는 장애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등록을 마치면, 공단직원의 가정방문(중증장애인), 공단 방문 및 유선신청(경증장애인)을 통해 상담 및 종합사정을 거쳐 적합한 복지급여를 결정한 뒤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의뢰하는 방식이다.

[그림 1] 장애인 맞춤형 연계지원 체계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장애인 맞춤형 연계지원 체계상으로 보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종합상담 및 욕구 파악과 개별욕구에 따른 복지프로그램 탐색 및 통합안내서비스를 주로 수행하게 되고, 주된 역할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안내를 하고, 이후 공단에서 서비스이용계획을 수립하면 공단 및 지자체(시·군·구)에서 서비스제공기관과 연계하거나 지자체에서 공적 서비스와 연계(읍·면·동)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장애인 등급 심사에 따라 결정된 등급별로 분류되어 제공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등록시 판정된 장애인 등급에 맞춰 관련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이미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대상사업⁶⁾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등록시 담당공무원이 공공요금 감면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장애등급제 하에서 장애인 맞춤형 연계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2017년 장애등급제 폐지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⁷⁾, 장애등급제 폐지 여부와 함께 사업 추진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장애등급심사: 심사건수 감소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 필요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사업의 세사업인 장애등급심사의 경우 2014년 예산안에 서 인건비 128.5억원과 경상경비 70.3억원 등 총 198.7억원을 편성하였다.

정부는 2014년 심사물량을 29만 6천건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2013년 예산의 예측물량인 33만 3천건 대비 3만 7천건 감소하는 수준이다.

6) 2013년 10월 현재 전기요금, TV수신료, 통신비 요금할인 서비스 제공 중에 있음. 도시가스요금할인의 경우 도시가스사와 연계 후 구현 예정임.

7) 보건복지부(2013. 10)

[표 2] 연도별 심사물량 비교

(단위: 건)

	심사물량 계획	산출내역
2011	220,0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4.1일부터 장애등급심사 전면 시행 (2010년 1~3급 → 1~6급 장애인까지 확대)
2012	246,3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등급심사 확대 및 재판정 확대에 따른 심사물량 증가
2013	33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3,000건= 265,000건 + 68,000건 - 265,000건= 2010년, 2011년, 2012년 6월기준 심사량 고려하여 심사물량 추계 - 68,000건= 10,000건(외국인 등)¹⁾+40,000건(국가유공상 이자)²⁾+18,000건(재판정 증가)³⁾
2014	3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00건= 250,000건('12년 실적치) + 50,000건 - 50,000건=40,000건(국가유공상이자)* + 10,000건(판정 기준 완화)

주: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신설로 외국인 등도 장애인 등록 가능(2013. 1. 27 시행)
 2.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3. 2013년 현재 재판정 기준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 증으로 2014년 계획시 재판정 증가는 미반영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심사물량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을 위한 비용인 경상경비를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경상경비 중 심사건수와 관련 있는 수용비에 대해서는 심사물량 감소가 따라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심사 물량 감소를 고려하여 과다 편성된 경상경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

- 2014년 7월에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새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⁸⁾할 예정임에 따라 2014~2017년간 재정의 추가부담은 12.7조원(정부 추계) 내지 14.2조원(국회예산정책처 추계)으로 전망되는 바, 재정소요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함.

가. 현황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일반회계, 2008~, 보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 3조 2,097억원 대비 1조 9,905억원(62%) 증가한 5조 2,002억원을 편성하였다.

[표 1] 기초노령연금 지급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증 감	
				(B-A)	(B-A)/(A)
기초노령연금 지급	2,990,557	3,209,726	5,200,203	1,990,477	62.0
- 기초노령연금 급여	2,988,479	3,207,235	1,607,255	-1,599,980	-49.9
- 기초연금 급여	-	-	3,569,867	3,569,867	순증
- 기초(노령)연금 운영	2,078	2,491	23,081	20,590	826.6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2014년 예산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1월에서 6월까지 기초노령연금 급여로 1조 6,073억원을,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 급여로 3조 5,699억원을 편성하였다. 전년대비 증액된 이유는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급액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8) 2014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관련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 운영을 위해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이 아닌 「기초연금법안」 제정을 목표로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도입’이란 표현을 사용함.

나. 「기초연금 제도」 개요

정부가 2014년 7월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은 ①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② 10~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하고, ③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기로 하였다.

먼저 대상자 수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70%선인 447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기초연금법안」 제3조에서 선정기준액을 정함에 있어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하위 70% 수준이 되도록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간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⁹⁾)의 크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을 적용하게 된다.

$$\text{기초연금수급액} = (\text{기준연금액} - \frac{2}{3} \times \text{A급여}) + \text{국민연금수급자 부가연금액}$$

여기서 기준연금액¹⁰⁾은 2014년의 경우 20만원이고, 국민연금수급자 부가연금액¹¹⁾은 10만원이며, 2014년 하반기 기초연금 수급액은 평균 18만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2014년 수급개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내인 자까지는 20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가입기간이 20년 이후인 자부터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¹²⁾이 40%가 되는 2028년의 수급개시자는 가입기간 15년 이내인 자까지 20만원을 수급하고, 가입기간 30년 이후인 자부터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9) A급여는 $1.2A(1+0.05N)$ 으로 산출되며, 여기서 A는 수령 직전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인 A값을 의미하고, N은 20년 초과 가입기간을 의미한다.

10) 기준연금액이란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기초연금법안」 제2조제5호)

11) 「기초연금법안」에 국민연금수급자 부가연금액의 정의는 없으며,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최소 지급보장액을 의미한다.

12) 개인의 근로기간 동안의 소득 대비 연금액을 의미

1988년 70%→1998년 60%→2008년 50%→2013년 47.5%→2028년 40%

[표 2]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

(단위: 만원)

가입기간	2014년 7월 수급자	2028년 이후 수급자
10년	20	20
11년	20	20
12년	19	20
⋮	⋮	⋮
15년	16	20
16년	15	19
⋮	⋮	⋮
19년	11	17
20년	10	17
⋮	⋮	⋮
30년	-	10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2013년 47%→2028년 40%)으로 인해 A급여가 점점 감소하는 국민연금 구조를 기초연금 산식에 반영한 정부안에 따라 A급여의 감소가 기초연금액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율을 살펴보면, 2014년 예산안에서는 중앙정부가 74.5%를 부담하고, 지방정부는 25.5%를 부담하도록 편성하였다. 이는 기초연금법안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노인인구 및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40~90% 범위에서 국고보조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2014년 7월 도입 예정)의 비교

(1) 대상자 및 수급액의 변화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의 도입 후에도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대상자는 소득하위 70%의 노인이 된다.

수급액의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A값의 5%(2014년 4월~6월 99,900원)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었으나, 기초연금은 10~20만원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A급여와 연계하여 지급하게 된다.

[표 3]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비교

(단위: 만원, 명, %)

항목	기초노령연금 (2014 예산안 기준)		기초연금
	1~3월	4~6월	7~12월
예산액	1,607,255		3,569,867
- 수급자 (소득하위 70%)	4,044 (수급률 64.4%)	4,112 (수급률 64.4%)	4,470 (수급률 70%)
- 지원액(단독)	96,800	99,900	100,000~200,000
- 지원액(부부)	154,900	159,800	160,000~320,000
- 국고보조율	74.5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이에 따라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령액을 비교해 보면,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현재 세대 노인(1948년생 가정)이 기대여명까지 수령할 금액은 총 2,423만원으로 예상되는데, 기초연금은 현재 세대 노인이 기대여명까지 수령할 금액이 총 4,184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 세대 노인에게 기초연금 도입이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래 세대 노인(1988년생 가정)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령예상액이 2억 3,630만원인데 비하여, 기초연금 수령예상액은 2억 248억이므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미래세대 노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대여명까지 수령총액 비교

(단위: 만원)

현 세대 노인	기초노령연금(A)	3,695
	기초연금(B)	4,184
	차액(B-A)	489
미래 세대 노인	기초노령연금(C)	23,630
	기초연금(D)	20,248
	차액(D-C)	-3,382

주: 1. 현세대 노인은 1948년생, 기대여명 17년 가정

2. 미래세대 노인은 1988년생, 기대여명 22년 가정

3.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A값의 5%에서 2028년 A값의 10%로 단계적 인상¹³⁾ 가정하여 추

4. 기초연금은 정부발표안 기준으로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재정소요의 변화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경우 2014~2017년간¹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총 39.6조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이는 같은 기간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소요 예정액(26.9조원)보다 12.7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다.

[표 5] 기초연금 정부 재정전망

(단위: 조원)

	2014	2015	2016	2017	계
국비	5.2	7.7	8.1	8.5	29.5
지방비	1.8	2.6	2.8	2.9	10.1
계	7.0	10.3	10.9	11.4	39.6

주: 1. 2014년 상반기는 기초노령연금 제도 운영 가정

2. 2014~2017년 국고보조율 74.5% 가정

자료: 보건복지부(2013.10)

2040년에는 기초연금의 경우 99.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111.6조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이는 2028년 이후 A값의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해 2014~2017년 총 3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재정소요액보다 14.2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기초연금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

(단위: 조원)

	2014	2015	2016	2017	계
국비	5.1	7.4	8	8.6	29.1
지방비	1.8	2.5	2.7	2.9	9.9
계	6.9	9.9	10.6	11.5	39

주: 1. 2014년 상반기는 기초노령연금 제도 운영 가정

2. 2014~2017년 국고보조율 74.5%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3) 「기초노령연금법」 부칙(법률 제8385호, 2007.4.25.) 제4조의2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14) 2014년 상반기는 기초노령연금 예산 포함

2040년에는 기초연금이 103.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비해 기초노령 연금은 110.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약 6.9조원 정도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7]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중장기 재정전망 비교

(단위: 조원)

기 간		기초노령연금(A)	기초연금(B)	차이(B-A)
정부전망	2014~2017년	26.9	39.6	12.7
	2040년	111.6	99.8	-11.8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14~2017년	24.8	39	14.2
	2040년	110.3	103.4	-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재정소요 증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필요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2014~2017년 동안에 추가되는 재정부담이 12.7조원(정부 전망) 내지 14.2조원(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정부 재정의 부담 증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2012년 고령사회¹⁵⁾에 진입한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라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14%이상인 사회

[표 8] 2012년 지역별 고령화 순위

(단위: 명, %)

	총인구	65세이상인구	구성비	순위
전남	1,762,178	376,297	21.4	1
전북	1,803,230	316,308	17.5	2
경북	2,642,439	461,779	17.5	3
강원	1,504,986	247,509	16.4	4
충남	2,147,980	343,052	16.0	5
충북	1,561,471	226,638	14.5	6
서울	9,991,064	1,084,072	10.9	11
울산	1,120,444	87,853	7.8	16
전국	50,219,669	6,137,702	12.2	-

자료: 통계청(2013. 10)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2014~2017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추가 재정부담은 3.6조원(정부는 3.3조원 추가부담 전망)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4년 기준 74.5%인 국고보조율을 상향시키거나 추가 재정소요에 대해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2014년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시 지방비 부담 증가를 포함한 재정소요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마. 기초연금 도입 관련 주요 논의(안)별 비교

(1)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 대해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65세 이상 노인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차등지급(10~20만원)하는 정부안(기초연금)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 대해 20만원씩 정책지급하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다.¹⁶⁾

이 방안에 따르면, 수급자가 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전부인 638만명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에 비해 수급자가 191만명 증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재정소요를 검토해 보면, 정부는 2014~2017년 동안 57.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연금에 비해 17.5조원이 추가되는 수준이다.¹⁷⁾

16)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3. 9)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60.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기초연금에 비해 21.6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 대해 20만원씩 정액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 추계와 비교해 보면,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이 3.6조원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9] 기초연금 논의(안)별 비교

(단위: 조원)

구분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방식) (A)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 대해 20만원지급방식(B)	논의(안)별 차이 (B-A)
2014~2017 재정소요	정부(C)	39.6	57.1	17.5
	국회예산정책처(D)	39.1	60.7	2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2013. 10)

(2) 소득인정액 차등지급 방식

2013년 7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국민연금 연계방식과 소득인정액 차등지급 방식이 있으며, 정부는 그 중 국민연금 연계방식을 기초연금 산정방식으로 결정하였다.¹⁸⁾

소득인정액 차등지급 방식은 소득하위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¹⁹⁾이다.

소득인정액 차등지급 방식에 따르면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볼 때 기초연금 20만원 수급자 152만명 중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30%까지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연금 연계방식에서는 기초연금 20만원 수급자 353만명 중 국민연금 동시수급자가 61만명에 이르게 된다.

17)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3.10)

18)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3.9)

19) 정부가 국민연금 연계방식과 비교하는 소득인정액 차등지급 방식은 소득하위 0~30%는 20만원, 30~50%는 15만원, 50~70%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함되지 않는 집단이 소득하위 30%까지 노인이기 때문에 이들 노인에 대해서만 20만원씩 지급하려는 것임.

[표 10] 국민연금 연계방식과 소득인정액 차등지급 방식 지급액 비교

(단위: 만명)

		20만원	20~15만원	15~10만원
국민연금 연계방식	국민연금수급자	61	17	10
	무연금자	292	3	8
	합 계	353	20	18
소득인정액 차등지급방식	국민연금수급자	0	34	54
	무연금자	152	76	75
	합 계	152	110	129
두 방식의 차이		201	-90	-111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소득인정액 차등지급 방식에 대한 2014~2017년 정부의 재정소요 추계를 보면, 3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기초연금에 비해 7.1조원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1] 기초연금 논의(안)별 비교

(단위: 조원)

구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방식)	소득인정액 차등지급방식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 대해 20만원지급방식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의 70%	65세 이상 노인의 70%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 위 70%	65세 이상 노인 전부
지급액		A값의 5% (약 10만원)	10~20만원 범위에서 국민 연금 A급여에 따라 차등지급	소득하위 0~30% : 20만원/ 30~50% : 15만원/ 50~70% : 10만원	A값의 10% (약 20만원)
2014~ 2017 재정소요	정부	26.9	39.6	32.5	57.1
	국회예산 정책처	24.8	39.1	33.8	60.7

주: 기초노령연금 외 논의(안)은 2014년 7월 시행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2013. 10)

이에 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2017년 기간 동안 소득인정액 차등지급 방식에 33.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초연금에 비해 5.3조원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5. 노후설계서비스지원사업: 유사사업 수행기관 간 역할 분담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는데, 국민연금공단도 수행 중인 노후설계서비스 사업과 목적·방식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두 수행기관간 역할 분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사업(일반회계, 2013~, 보조)은 노후설계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를 위하여 건강·재무·대인관계·여가의 전 영역에 대하여 상담·연계·사후관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 예산 5억원 대비 60% 증가한 8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표 1]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증 감	
				(B-A)	(B-A)/A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사업	-	500	800	300	60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나. 국민연금기금 내 노후설계서비스사업과 역할 분담방안 마련 필요

노후설계서비스사업은 노후설계교육, 찾아가는 노후설계서비스, 노후설계지역 교육기반육성, 포털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 사업은 국민연금기금이 2008년 4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노후설계서비스지원사업과 사업목적·내용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표 2] 노후설계서비스지원사업과 국민연금 노후설계서비스 비교

	노후설계서비스지원(보건복지부)	노후설계서비스(국민연금)
목적	노후설계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를 위하여 건강·재무·대인관계·여가의 전 영역에 대하여 상담·연계·사후관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후설계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제공
2014년 예산안	8억원	16.47억원
수행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라북도 순창군	국민연금공단
내역사업	노후설계교육(250명) 찾아가는 노후설계서비스(10개기업) 노후설계지역 교육기반조성 노후설계 진단·교육포털 구축	전문강사 보수교육(93명) 담당직원 보수교육(97명) 재무설계사 양성(1,232명)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55만건)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3. 9)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국민연금의 노후설계서비스는 2014년 기금계획상 16.5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무·건강·일·주거·대인관계·여가생활 등 6대 영역에 대한 노후설계를 위해 전국 7개 권역별로 전담강사 93명을 지정하여 대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97개 지사에서 담당직원을 분장하여 내방 고객에 대한 맞춤형 전문 노후설계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및 상담을 연간 55만건씩 수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노후설계서비스지원사업의 경우 노후설계교육사업, 찾아가는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노후설계지자체사업은 전라남도 순창군이 수행기관이다. 이 사업의 2013년 9월까지 실적을 살펴보면, 노후설계교육사업은 662명을 교육인력으로 양성하였고, 사회복지관 등 총 308개 기관에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찾아가는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의 경우 총 17회에 걸쳐 산업체 직원, 중장년층, 농어촌 주민을 방문하였고, 노후설계지자체교육기반조성은 168명을 대상으로 지역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176명을 대상으로 노후진단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두 사업 모두 교육인력 양성을 통해 대국민 노후설계 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상에 있어 국민연금기금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이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의 교육을 통해, 노후설계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은 지사내 전담인력 1인을 두고 노후설계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설계역량은 국민연금 노후설계서비스사업이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연금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역할 분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사업: 정부 내 유사 사이트 통합 운영 필요

- 대국민 정책홍보(세사업)사업의 마음더하기 포털은 임신·출산·육아 정부 정책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이 유사한 아가사랑 사이트(모자보건사업)와 유사하므로 두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통합하여 정부 운영 사이트 정보 제공의 신뢰도를 높이고 운영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사업(일반회계, 2007~, 보조)은 저출산 및 급격한 고령화의 극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전략을 실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 예산 47.3억원 대비 2.9%(1.4억원) 감소한 45.9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그 중 대국민 정책홍보 사업에 34.1억원을 편성하였다.

[표 1]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증 감	
				(B-A)	(B-A)/A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사업	5,009	4,733	4,597	136	2.9
대국민 정책홍보	3,394	3,412	3,412	-	-
국민운동본부지원	1,480	1,044	1,066	22	2.1
인식개선사업운영비	155	137	119	-18	-13.1

주: 2013년 예산은 추경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나. 온·오프라인 홍보사업: 모자보건사업과 임신·출산·육아 정보 사이트 중복 운영

2014년 예산안에서 대국민 정책홍보사업은 TV·라디오 광고 19.2억원, 신문광고 등 2.9억원, 온오프라인홍보 1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대국민 정책홍보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산출근거	내용	사업비
TV·라디오 광고 등	TV공중파 캠페인 광고, 라디오 캠페인 광고 등	1,924
신문 광고 등	일간지 고령화 극복 캠페인 광고 등	288
온·오프라인 홍보	마음더하기 포털 운영 등	1,200 (마음더하기 포털 110)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온·오프라인 홍보 12억원 중 마음더하기 포털 운영을 위해 1.1억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제경비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2014년 마음더하기 포털 예산 산출근거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인건비	55,869,461	4명
제경비	44,695,568	인건비의 80%, 사무실 임대료, PC운영비
기술료	-	
부가가치세	10,056,502	
소 계	110,565,029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신·육아·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건강증진기금 내 모자보건사업에서 운영하는 아가사랑 사이트가 있다. 두 사이트의 차이점은 마음더하기 포털이 정책 검색사이트라면, 아가사랑 사이트는 정보 제공 및 상담이 주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가사랑 사이트에서도 출산지원 시책, 정책뉴스, 자료실 등을 통해 정부 정책 정보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볼 때 별도로 2개의 사이트를 운영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4] 마음더하기 포털 방문자수

(단위: 명)

	총 방문자 수	일평균 방문자 수	비고
2012.04~12	229,805	851	2012.03까지 시범운영
2013.01~08	528,257	2,201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두 사업의 방문실적을 비교해 보면, 마음더하기 포털은 2013년 현재 일평균 2,201명이 방문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으나, 아가사랑 사이트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종합정보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2013년 일평균 방문자 수가 20,153명에 이르고 있다.

[표 5] 아가사랑 사이트 방문자 현황

(단위: 명)

	총 방문자 수	일평균 방문자 수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2012	10,097,686	27,589	1,429	4,787
2013	4,897,307	20,153	567	1,926

주: 2013년은 상반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마음더하기 포털의 경우 전년 대비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이트·포털의 경우 인지도가 중요하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아가사랑 사이트 수준으로 방문자 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임신·출산·육아 정보의 경우 민간영역에서 이미 활성화가 된 부분으로 정부 운영 사이트를 찾는 계층은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복적인 사이트·포털 운영은 정부 운영 사이트 이용자를 분산시키고,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사업별로 정책홍보사이트를 운영하기 보다는 수요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통합된 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구축 후에도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등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까지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노인일자리 운영: 수행체계 일원화 및 성과 부진사업의 발전방안 마련 필요

- 재능활용일자리사업의 경우 기존 노인단체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중 교육형 노인일자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행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의 사업성과가 저조함에 따라 사업성과를 제고시킬 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노인일자리 운영사업(일반회계, 2004~, 직접수행/보조)은 취업취약 계층인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보충적 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3년 예산 2,442억원 대비 554억원(22.7%) 증가한 2,997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표 1] 노인일자리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		(B-A)	(B-A)/A
노인일자리 운영	183,074	235,342	244,242	299,690	55,448	22.7
- 노인일자리 확대	164,873	218,138	225,038	281,511	56,473	25.1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11,232	9,254	11,254	10,229	-1,025	-9.1
-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6,945	7,925	7,925	7,925	-	-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24	25	25	25	-	-

주: 2013년 예산은 추경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노인일자리확대 사업은 전년 대비 25.1%(564.7억원) 증가한 2815.1억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사업은 전년 대비 9.1%(10억원) 감소한 10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사업이 각각 전년대비 같은 79억원과 2,500만원을 편성하였다.

나. 재능활용형 일자리: 노인단체 지원사업과 수행체계 일원화 필요

내역사업 중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의 2014년 산출내역을 보면, 재능활용형 일자리사업에 58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재능활용형 일자리사업은 기존 소득보충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달리 재능 나눔, 자원봉사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3개월간 기초연금 미수급자 15,000명에게 활동실비 10만원 지급, 수행기관 운영비 지원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사한 사업을 노인단체 지원 사업 중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50.3억원)에서 2011년부터 수행 중에 있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의해 총 27,167명(2012년 기준)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1,594개의 자원봉사클럽이 활동 중이며,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제공 중에 있다.

수행기관에 있어서도 대한노인회의 경우 이미 전국 17개 지역에 1,594개의 자원봉사 클럽을 구축하고 있는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별도의 사업 수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도리어 자원봉사 체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수행체계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표 2]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실적

	클럽	클럽조직참여자	리더양성참여자	(단위: 개, 명, 건)
				봉사활동실적
2011	732	13,060	2,090	9,240
2012	1,352	23,063	3,568	19,829
2013	1,594	27,167	4,228	16,577

주: 2013년 9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중 사회공헌형 사업 내 교육형 일자리 사업은 전문성을 갖는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유형이며, 다른 일자리 유형과 달리 참여대상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제한하지 않고, 참여자의 월보수는 20만원 수준이다.

기존 교육형 일자리 사업 창출실적을 보더라도, 2011년 20,317개에서 2012년 27,505개로 전년 대비 35.3%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성고가 우수한 교육형 일자리 사업을 더 증가시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2011~2013 사회공헌형 일자리 유형별 실적

(단위: 개, 명)

구분		2011	2012	2013
계 획		196,964	195,776	203,588 (212,175)
계		194,480	217,710	169,747
창출 실적	공익형	129,066	143,478	111,382
	교육형	20,317	27,505	21,260
	복지형	45,097	46,727	37,105

주: 1. 2009년도부터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통합 목표치를 설정하여 지자체별 배정(지역여건 반영)

2. 2013년 9월 기준

3. 계획은 예산안 확정시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결국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일자리 사업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노인자원봉사 사업과 수행체계를 일원화를 포함한 통합·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사업실적제고 방안 마련 필요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사업은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과 별개로 지역 사회 구직 희망 노인의 취업 상담·알선 등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4년 예산안에서는 전년대비 같은 79.25억원을 편성하였다.

노일일자리 사업의 경우 참여노인의 소득보전 효과 외 의료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고령화시대에 맞춰 정책개입 필요성이 강한 사업이나,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사업의 2009년 이후 실적을 보면, 2010년 이후 취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자 수도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취업실적

(단위: 명,%)

	목표	알선	취업	목표 대비 취업성공률
2009	39,000	67,069	41,908	107.5
2010	39,000	37,539	28,635	73.4
2011	21,000	32,545	19,997	95.2
2012	21,000	37,238	18,646	88.8
2013	21,000	29,801	13,842	65.9

주: 2013년 8월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의 저조한 취업실적을 상향시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9년 이후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자치단체 보조사업)과 같이 노인인력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실적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5] 노인일자리 창출실적

(단위: 개, 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창출목표		117,000	196,000	186,000	200,000	220,000	240,000
창출 실적	전체	126,370	222,616	216,441	225,497	248,395	240,088
	사회공헌형	110,389	195,797	185,676	194,480	217,710	212,175
	시장진입형	15,981	26,819	24,765	25,866	25,539	21,913
	시장자립형	-	-	-	5,151	5,146	6,000

주: 2013년 9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8.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보험료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가입자 증가율 및 보수월액 증가율을 0%로 반영)하고 있으나, 최근 대상자 확대수준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함.

가.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일반회계, 2008~, 직접수행, 보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추진 경비 지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부담금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2014년 예산안에서는 2013년 예산 5,412억원 대비 8.1%(437억원) 증가한 5,849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증 감	
				(B-A)	(B-A)/A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487,824	541,210	584,883	43,673	8.1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933	984	984	-	-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지원	415,243	459,058	503,301	44,243	9.6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국가부담금 지원	42,739	46,410	43,848	-2,562	-5.5
- 기타의료급여비용 국가지원	28,909	34,758	36,750	1,992	5.7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은 전년과 같은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442억원(9.6%) 증가한 5,0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국가부담금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6억원(5.5%) 감소한 438억원, 기타의료급여비용 국가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0억원(5.7%) 증가한 368억원을 편성하였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연례적인 과소추계

동 사업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1항²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예상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안 산출근거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에 6.55%(장기요양보험료율)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지속적으로 과소추계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도 과소 추계되고 있고, 이에 따라 2010~2012년 과소지급된 국고보전금이 총 932억원에 달하고 있다.

[표 2] 2009~201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과소지급액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a)	16,516	19,416	20,762
국고보전금(b)	3,323	3,883	4,152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결산)(c)	17,509	20,806	23,137
국고차액(b-d)	-179	-278	-475
결산액 대비 국고지원비율(b/c*100)	19	18.7	17.9

자료: 보건복지부(2013. 9)

2014년 예산안의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액 추계시에도 2012년 보험료 수입 실적에 2년간 보험료율 증가율만 적용하고 가입자 수 증가율 및 보수월액 증가율은 적용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도 과소추계되었다.

2013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수지가 1조 4,985억원 흑자라는 점을 고려 하더라도,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2013년 요양급여비 지출이 전년 대비 34% 증가한 3조 6,705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보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표 3] 장기요양 재정추이

(단위: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입	7,518	20,238	27,720	31,732	34,706	38,983
요양보험료	3,723	11,371	17,509	20,806	23,137	25,196
국고지원금	1,181	2,044	3,323	3,883	4,152	4,591
의료급여	2,575	6,689	6,708	6,779	7,028	8,641
기타수입	39	134	180	264	389	555
지출	5,731	18,791	25,547	27,714	29,113	39,016
요양급여비	4,585	17,236	23,916	25,894	27,244	36,705
관리운영비	1,146	1,555	1,631	1,820	1,869	2,311
당기수지	1,787	1,447	2,173	4,018	5,593	-33
누적수지	1,787	3,234	5,407	9,425	15,018	14,985

주: 2013년은 추정치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특히 2013년 7월에 3등급 인정점수를 기존 53점에서 51점으로 완화하여 경증 치매 환자 일부(1만명)를 포함 2.3만명이 대상자로 추가되었고, 등급판정도구 보완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치매노인 8천명이 추가로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어 2014년 7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5.1만명이 추가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최근 대상자 확대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표 4]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대상자 확대 정책 현황

(단위: 명, 억원)

	일시	내용	추가 대상인원	소요비용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2012.7.1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55~75점→ 53~75점	24,000	국고 87억원 (6개월분)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2013.7.1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53~75점→ 51~75점	23,000	국고 117억원 (6개월분)
치매특별등급신설	2014.7.1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50,654	국고 185억원 (6개월분)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또한 2013년 6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35.6만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비율은 약 5.8%(65세 이상 전체인구 614만명)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12.1%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대상자 수 확대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표 5]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

(단위: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자 수 (인정자)	286,907	315,994	324,412	341,788	355,727

주: 2009~2012년 연도말 기준, 2013년 6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대상자 자연증가분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건정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연례적인 과소추계문제는 조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

9.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의 법적근거 및 종합계획 마련 필요

-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복지전달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나, 보조금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보조금 지급제외대상이므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수사례 타 지자체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중 공공주도형 사업은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평가 등을 통해 사업목적이 달성 가능하므로 재검토 필요

가. 현황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일반회계, 2009~, 보조)은 보건·복지·고용 등 개인별·가구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공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대비 381억원(65%) 증가한 967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표 1]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증 감	
				(B-A)	(B-A)/A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26,871	58,612	96,711	38,099	65
-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25,124	57,249	93,304	36,055	63
- 사례관리사업비	1,200	1,409	1,409	-	-
- 희망복지지원단 지원체계 운영	-	250	250	-	-
-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	-	1,028	1,028	순증
- 민관협력 활성화지원 시범사업	-	-	200	200	순증
- 교육훈련비	400	400	400	-	-
- 연구용역비	70	50	50	-	-
- 홍보사업비	30	30	30	-	-
- 일반운영비, 여비	40	40	40	-	-

주: 2013년 예산은 추경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주된 내역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총 4,517명의 복지공무원 채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한 933억원을 편성하였고, 사례관리사업은 전년과 같이 1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인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10.3억원을, 민관협력 활성화지원 시범사업은 2억원을 편성하였다.

나.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의 법적근거 보완 필요

2014년 예산안에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총 1,325억원이 편성되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지원사업에 673억원,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에 119억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사업에 141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2]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예산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2014 예산안	산출근거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지원	67,344	· 서울 : 466명×30백만원×50%=6,990백만원 · 지방 : 2,874명×30백만원×70%=60,354백만원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11,900	· 서울 : 153명×30백만원×6/12(개월)×50%=1,148백만원 · 지방 : 1,024명×30백만원×6/12(개월)×70%=10,572백만원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 지원	14,060	· 3,487명×1.003백만원×6/12(개월)×67%=14,06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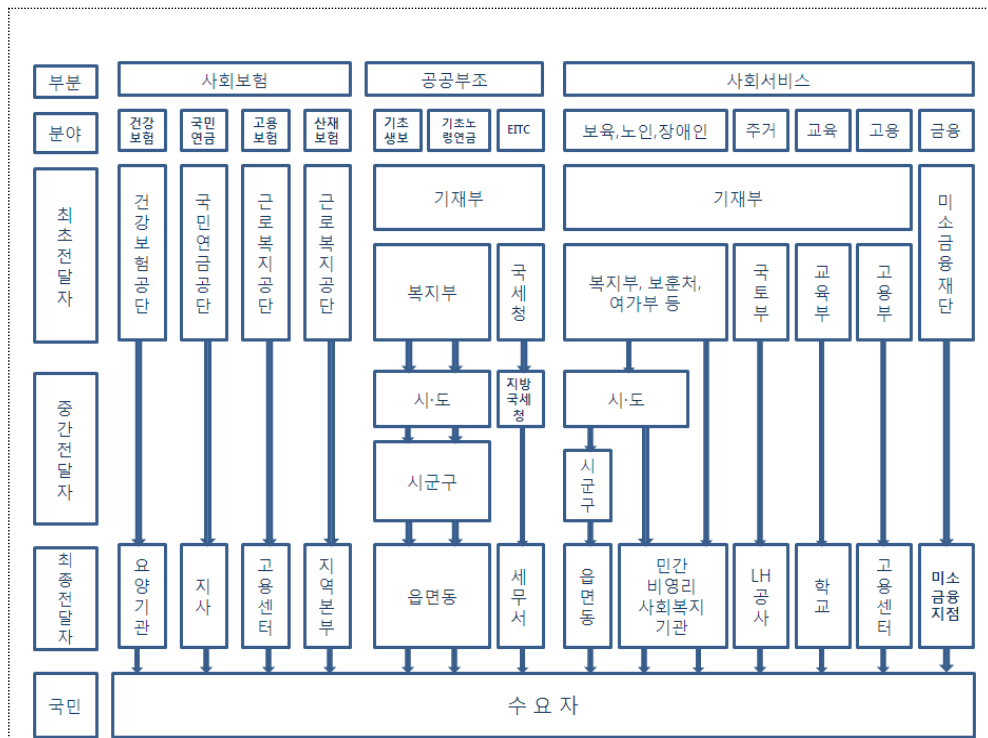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지원사업의 경우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2012~2014년간 총 3,340명의 복지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업무를 고려하여, 복지공무원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사업은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라 3,487개 읍·면·동에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9월 현재 17개 부처 292개에 이르는 복지사업 중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170개 사업²¹⁾(58%)이 전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3,487개 읍면동에 복지담당 공무원은 평균 2.9명²²⁾에 그치고 있다.

[그림 1] 복지전달체계 현황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발표(2013. 9)

2011년 7월 13일 정부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통해 2012~2014년간 총 7,000명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하기로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7,000명의 확충은 복지직 신규 채용(신규총원 4,400명 및 자연결원분 총원 800명)과 행정직 복지업무 배치(1,800명)를 병행 추진하면서 복지직과 행정직의 비율을 7:3으로 충원하기로 계획하였다.

21) 170개 사업 중 신청업무는 162개 사업, 조사업무는 156개 사업, 결정 업무는 148개, 급여제공 업무는 129개에 이르고 있음.

22) 복지직 2.0명, 행정직 0.9명 근무

[표 3]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인력확충계획

(단위: 명)

		계	2011	3개년 계획			
				계	2012	2013	2014
계		7,000	1,060	5,940	3,000	1,800	1,140
복지직 신규충원	소계	5,200	1,060	4,140	2,100	1,300	740
	신규충원	4,400	1,060	3,340	1,800	1,000	540
	자연결원분 충원	800		800	300	300	200
행정직 배치		1,800		1,800	900	500	400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그러나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복지담당공무원 증가를 살펴보면, 2010년 6월 22,461명에서 2013년 6월 기준 총 25,403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3년간 2,842명 증가에 그쳤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최소한 2012년까지 증원계획분인 4,060명이 증가했어야 하지만, 계획대비 70% 수준만 증원된 것이다.

특히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신규채용의 경우 94.5%의 계획 달성율을 보이고 있으나, 자연충원은 46.6%, 행정직 재배치는 65.5%의 계획 달성율을 보이는 데 그치고 있어 자연충원 및 행정직 재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4]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지원사업 실적

(단위: 명)

	신규채용		자연충원		행정직 재배치	
	계획인원	채용인원	계획인원	채용인원	계획인원	재배치 인원
2012	1,803	1,792	311	217	914	809
2013	996	854	296	66	501	118
계	2,799	2,646	607	283	1,415	927

주: 2013년 2월 기준

자료: 안전행정부(2013. 3)

2011년 추진한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2013년 9월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통해 지자체 업무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하고 2011년 인력확충계획을 2014년 3월까지 완료하여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4.2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표 5]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중 인력충원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자체 업무조정 및 인력 재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만명 이상 동 주민센터 자체기능 조정을 통한 복지인력 확보 -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민원24 사용 활성화 등 읍면동 민원업무 경감 추진 - 과소 동 주민센터 통폐합 - 지자체 공무원 총 정원 중 복지담당공무원 비율 (2012년 기준 8.9%) 조정 검토
기존 복지담당공무원 확충대책 철저한 이행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행부 주관으로 지도·감독 및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을 계획대로 확충 배치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발표(2013. 9)

이러한 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가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를 보조금 지급제외대상으로 정한 것에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의 인력충원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복지누수현상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복지직 공무원 1,177명에 대한 인건비 6개월 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인력확충 계획과 달리 개별사업으로 인한 인력소요에 대비한 인건비 지원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복지공무원 인력체계를 고려하여 종합계획 하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공공주도형 사업과 기존 사업의 연계방안 마련 필요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은 공공주도형과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주도형 사업은 시·군·구별로 읍·면·동 또는 권역 단위로 민관 협의기구 운영을 통해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아이টে을 발굴하는 사업이고, 민간주도형 사업은 선도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 사례를 토대로 우수 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활성화 등을 고려한 시범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 다른 사업에서 이미 협의체 구성·지원, 민관협력체계 강화 등의 연구용역, 민관협력을 통한 소외계층 발굴이 실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복지사업평가사업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위한 전국·지역대회 지원 2.4억원, 민·관협력체계강화방안 연구 0.5억원 등을 2014년 예산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사업(2014년 예산안 1억원 편성)을 진행중에 있다.

또한, 민관협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사업(2014년 예산안 9.84억원 편성)에서도 희망복지지원단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있다.

한정된 국가자원과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민관협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안 산출근거상 지원내역 대부분이 회의비·교육비·홍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사업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표 6] 민간협력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지원내역

(단위: 천원)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교육비	1,750	17,000
회의 및 운영비	6,150	
홍보비	1,000	3,000
기타	지역주민 토론회 1,100	-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결국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상 동 사업의 역할이 민관협력사례 발굴을 통한 타 지자체 확산이라는 점에서 볼 때,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평가나 연구용역을 통해 타 지자체에 우수사례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업들과 연계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민간주도형 모델의 경우,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드러난 관 중심의 운영상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가치가 있으며, 자금 지원 이후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10. 영유아보육료 지원: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통한 보육료 지원단가 재산정 필요

- 정부는 2014년 예산안에서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율을 현행 대비 10%p 인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영유아보육료의 실질적인 국고보조율은 60.4%가 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통한 보육료 지원단가의 재산정이 시급하며, 보육료 재산정시 시설정원을 반영한 지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일반회계, 1992~, 보조)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예산안에서는 2013년 예산 2조 5,944억원 대비 18.6%(4,820억원) 증가한 3조 765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2013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이유로는 국고보조율을 기존 서울 10~30%, 지방 40~60%에서 서울 20~40%, 지방 50~70%로 10%p 인상하였기 때문이다.

[표 1]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증 감	
				(B-A)	(B-A)/A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2,639,103	2,594,419	3,076,452	482,033	18.6
- 만0~2세보육료지원	2,112,475	2,132,478	2,720,205	587,727	27.6
- 만3~4세보육료지원	371,128	382,755	272,453	-110,302	-28.8
- 만5세아보육료지원	13,475	-	-	-	-
- 장애아보육료지원	43,314	40,223	42,306	2,083	5.2
- 맞벌이가구보육료지원	45,449	-	-	-	-
- 다문화가정보육료지원	9,566	-	-	-	-
- 농어업인보육료지원	9,806	-	-	-	-
- 시간연장보육료지원	33,890	33,890	41,488	7,598	22.4
- 맞벌이전업주부일제조사	-	5,073	-	순감	순감

주: 2013년 예산은 추경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영유아보육료 중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편성된 금액은 만 0~2세 보육료 2조 7,202억원과 만3세 보육료 중 2012년 기준 보육료 197,000원 상당 분인 2,725억원이며, 그 외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고 있다.

나. 국고보조율 인상으로 인한 지방재정부담 완화

2012년 0~2세 전계층 영유아보육료 지원 실시 이후 영유아보육료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로 인한 보육료 지급 중단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2012년 9월 4,115억원의 지방비 국고보전을 실시하였고, 2012년 11월 국회 지방재정특위는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20%p 인상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어 2013년에는 0~5세 가정양육수당 전계층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예산 부대의견으로 목적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5,607억의 지방비를 국고에서 보전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하여 2013년에 지방비 국고 보전분을 포함한 실질국고보조율은 58.2%인 것으로 보인다.

[표 2] 2012~2014 보육료 및 양육수당(복지부 소관) 국비 및 지방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2013 예산	2014 예산안
		예산	결산		
국비		2,493,937	2,737,451	3,470,290	4,197,309
지방비	지자체 부담	2,570,737	2,281,556	2,895,325	2,783,120
	국고보전	-	411,545	560,700	-
	소 계	2,570,737	2,693,101	3,456,025	2,783,120
합 계		5,064,674	5,430,552	6,926,315	6,980,429
국고보조율 (국고보전액 포함 실질국고보조율)		49.2%	50.4% (58.3%)	50.1% (58.2%)	60.1%

주: 1. 2012년 결산은 실 집행액 기준
2. 2013년 예산 국고 보조율은 확정내시 기준
3. 2014년 국고보조율은 예측치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또한 정부는 2013년 9월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을 통해 2014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전년 대비 10%p 인상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은 2013년 지방비 국고보전분을 포함한 58.2%보다 1.9%p인상된 60.1%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적정한 보육료 지원단가 마련 필요

2014년 0~2세 보육료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7.6%가 증액된 2조 7,20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사업은 0~2세 영유아의 부모에게 바우처 형태의 보육료지원과 일부 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육료 지원단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28.6만원~39.4만원, 인건비 미지원시설²³⁾의 경우 40.1만원~75.5만원이 지원된다.

[표 3] 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원)

	합계	보육료	기본보육료
만0세	755,000	394,000	361,000
만1세	521,000	347,000	174,000
만2세	401,000	286,000	115,000
만3~5세	미정	미정	

주: 1. 기본보육료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에 지급

2.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는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교육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2014년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는 미고시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는 2009년 표준보육비용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표준보육비용은 교재교구비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급간식비는 중품 국산 재료 사용 수준으로, 관리운영비는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23)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과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현재 보육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 단가가 2009년도에 책정된 만큼, 표준보육비용 단가를 재산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9년 표준보육비용 조사 당시 구성항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아동연령별로 45%~81%까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표준보육비용 조사 구성항목별 비중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인건비	575,000(81%)	364,000(71%)	274,000(67%)	153,000(52%)	127,000(45%)	127,000(45%)
교재교구비	56,800(8%)	57,400(11%)	43,800(11%)	52,000(18%)	51,800(18%)	52,600(18%)
급간식비	27,800(4%)	39,700(8%)	39,700(10%)	39,700(13%)	52,900(19%)	52,900(19%)
관리운영비	37,000(5%)	37,000(7%)	37,000(9%)	37,000(12%)	37,000(13%)	37,000(13%)
시설설치비	14,700(2%)	14,700(3%)	14,700(3%)	14,700(5%)	14,700(5%)	14,700(5%)
표준보육비용	711,300	512,800	409,200	296,400	283,400	284,200

주: 2009년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

이에 따라 표준보육비용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비교해 본 결과 2013년 보육교직원인건비는 2009년 표준보육비용 조사 당시에 비해 인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육교사 6호봉 월급은 13.8% 인상, 원장 13호봉 월급 9.3% 인상, 취사원 3호봉 월급이 9.3% 인상되었다.

[표 5] 2009년 표준보육비용 인건비 단가 및 2013년 인건비 비교

(단위: 원, %)

구분	보육교사(6호봉)	원장(13호봉)	취사원(3호봉)
2009	151.8	230.5	115.5
2013	172.8	251.9	126.2
증감률	13.8	9.3	9.3

주: 2009년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 및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그간 임금인상을 외에도 물가상승률, 2012년부터 실시된 무상보육 정책 등 표준보육비용 재산정 필요성이 높으므로 조속히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며, 향후 정기적으로 표준보육비용 산정을 할 필요가 있다.²⁴⁾

표준보육비용 산정 이후에는 현재 획일적으로 97인 정원의 시설을 기준으로 보육료 단가를 산출한 것과 달리 시설정원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표 6] 2009년 시설정원별 표준보육비용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만0세	668,500	738,400	709,900	711,300	705,200	704,800	696,200
만1세	473,600	542,600	511,700	512,800	506,500	505,200	496,300
만2세	369,200	438,000	408,800	409,200	402,600	402,400	394,000
만3세		326,100	294,600	296,400	289,700	290,100	279,900
만4세		316,200	283,800	283,400	276,500	275,100	266,100
만5세		317,100	284,600	284,200	277,400	276,100	267,200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24)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3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 주기 등은 정해져있지 않다.

11.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존 정책과의 차별화 필요

- 동 사업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추세를 고려하여 활동횟수 증가보다는 컨설팅 기능 강화를 통한 기존 보육의 질 제고 수단과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 현황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사업(일반회계, 2013~, 보조)은 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통해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3년 예산 6.4억원 대비 6.4억원(100%) 증가한 12.8억원을 편성하였다.

[표 1]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증 감	
				(B-A)	(B-A)/A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	644	1,288	644	100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용방안 마련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확대경향을 고려한 적정 사업비 편성 필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사업은 2013년 현재 시군구별로 1개씩 부모 모니터링단(10명)을 설치하여 월 1회 활동하고 있으나, 2014년 예산안에서는 이를 월 2회 활동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부모 모니터링단의 운영 목적은 부모 및 지역사회 보육전문가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투명성 확보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부모모니터링단의 기능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나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10인으로 구성되며, 연 2회 개최하여야 한다.

[표 2] 부모 모니터링단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비교

	부모 모니터링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목적	부모 및 지역사회 보육전문가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를 통한 어린이집의 운영투명성 확보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 실시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예산지원	12.88억원(2014년)	없음
구성	부모, 보육전문가, 컨설턴트 10인 내외	어린이집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5~10인 이내
활동주기	월1회 → 월2회(2014년)	반기 1회

자료: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운영위원회의 주된 역할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결정기능이라는 점에서 볼 때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경우 부모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기당 1회로 축소된 운영위원회 활동주기를 다시 분기당 1회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경우 2005년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연 18,653개('14년 기준)의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86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평가인증의 내실화를 위해 확인점검 대상 기관을 전년 대비 480% 증가시키고 점검자 수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 모니터링단이 차별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제도가 가지고 있지 않은 컨설팅 기능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2013년 상반기 기준 부모 모니터링단의 실적을 볼 때 참여인력 중 컨설턴트의 비중이 1%에 불과하고 활동 중 컨설팅 비중도 1.7%에 불과하여 컨설팅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표 3] 2013년 상반기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현황

(단위: 명, 건)

구성현황				운영 현황	
계	부모	보육전문가	컨설턴트	모니터링	컨설팅
1,068	691	366	11	3,243	57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따라서 부모모니터링단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내실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활동횟수 증가보다는 컨설팅 기능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2.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 유사 사업 연계 · 운영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 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이 있으므로, 해외 홍보시 두 사업이 각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연계·운영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일반회계, 2013~, 직접수행, 보조)은 한의약분야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진출 기반구축을 통해 의료관광시장 선점 및 신수요·신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이며, 2014년 예산안에서는 2013년 예산 5억원 대비 100%(5억원) 증가한 10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표 1] 한의약 해외환자유치지원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증 감	
				(B-A)	(B-A)/A
한의약 해외환자유치지원	-	500	1,000	500	100
한방의료기관 역량 강화	-	180	300	120	66.7
전략적 마케팅·홍보	-	230	600	370	160.8
시장조사 및 전략수립	-	90	100	10	11.1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한방의료기관 역량 강화(3억원), 전략적 마케팅·홍보(6억원), 시장조사 및 전략수립(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방의료기관 역량강화사업은 한방의료 국제코디네이터 등 전문가 양성 등을 하는 사업이며, 전략적 마케팅·홍보사업은 해외현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조사 및 전략수립사업은 유치국가 다변화 심화연구를 하는 사업이다.

나. 기존 해외홍보 시스템과 연계·운영 필요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서 수행 중인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과 별도로 보건산업정책국에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인력양성, 해외 홍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한의약 부문의 경우 기존 양의학과 의료기관 규모·성과 등에 있어 격차가 크며, 의료체계·선호국가가 서로 다르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해외 홍보까지 별도로 수행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홍보의 경우, 현지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인데, 기존의 보건산업진흥원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해외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의 경우 주된 역할이 연구개발에 집중되어 있고, 해외환자 유치도 지역(대구·경북)사업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과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직원이 5명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해외환자 유치역량이 충분하다고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2007년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시작한 이래 이미 6개국²⁵⁾ 해외지사를 구축 중이며, 해외환자 유치와 국내 보건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국제의료본부에 34명이 배치되어 있어, 보건산업진흥원이 보다 강화된 지원체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건산업진흥원의 기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과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을 협력 수행 중인 한국국제의료협회 구성병원 중 한방병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의약 해외 유치사업 중 해외현지 설명회 개최 등 전략적 마케팅·홍보 사업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의 네트워크가 구축된 국가에 대해서는 연계하여 홍보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5) 미국, 싱가포르, 중국, 영국, UAE, 카자흐스탄

13.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연례적인 예산 과소 편성

- 4대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연례적으로 과소추계하고 있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적정 추계를 통해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일반회계, 1988~, 보조)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용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전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2013년 예산 4조 8,086억원 대비 10.3%(4,944억원) 증가한 5조 3,030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표 1]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증 감	
				(B-A)	(B-A)/A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4,343,441	4,808,555	5,302,954	494,399	10.3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제1항²⁶⁾ 및 제99조²⁷⁾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며, 2014년 예산의 경우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인 5조 1,865억원, 과징금 예상수입액의 50%인 72억원, 4대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소요 1,09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6)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③·④(생략)

[법률 제11141호(2011.12.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27)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징금) ①·②·③(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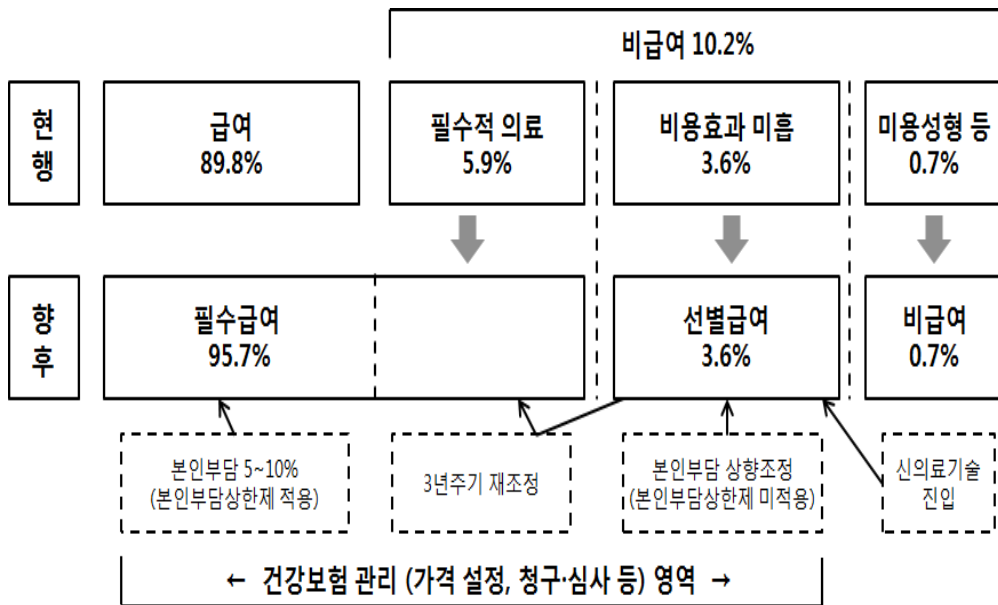
⑤ (생략)

나. 4대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 고려

정부가 발표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보면,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비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면서 본인부담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다만,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로 존속시기로 하였으며,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간병비와 같은 비용은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림 1]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개념도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2013년 초음파검사의 급여화를 시작으로, 2014년 MRI 등 영상검사 및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등이 급여화가 이루어지는 등 4대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확대가 2013~20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표 2] 건강보험 단계적 확대 방안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의약품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검사수술	초음파검사	MRI 등 영상검사	방사선치료 수술행위	검사(유전자 검사등) 및 교육상담료
치료재료	-		심장·뇌수술 재료 행위연계수술재료	일반 수술재료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13~2017년간 누계기준 약 8조 9,9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중 2014년에는 9,3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한다.

[표 3] 4대 중증 등 보장성 강화 재정소요

(단위: 백억원)

구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신규투입	238	30	59	75	74	-
소요재정	899	30	93	180	279	317

주: 1. 신규투입: 당해연도의 신규 급여 확대를 위한 재정

2. 소요재정: 당해연도 신규 급여확대 재정+전년도까지 급여 확대한 의료의 당해연도 재정

자료: 보건복지부(2013. 6)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2012년 기준 4.57조원) 활용 및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조달하고, 보험료인상율은 1.7%~2.6%선(2014년 보험료율 5.88%)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표 4] 건강보험 재정현황

(단위: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입	289,079	311,817	335,605	379,774	418,192
보험료수입	244,384	259,352	281,650	323,995	358,534
국고지원금	30,540	37,838	39,122	42,129	44,980
건강증진기금	10,239	10,262	10,631	9,568	10,073
기타수입	3,916	4,365	4,242	4,082	4,605
지출	275,412	311,849	348,599	373,766	388,035
보험급여비	264,948	301,461	336,835	361,890	376,318
관리운영비	9,841	9,724	11,077	11,040	11,387
기타지출	623	664	687	836	330
당기수지	13,667	-32	-12,994	6,008	30,157
누적수지	22,618	22,586	9,592	15,600	45,757

자료: 보건복지부(2013. 9)

그러나, 2008년~2012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진료비가 연평균 8.2%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계획과 같이 보험료를 인상을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표 5]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단위: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진료비		348,690	393,390	436,281	462,379	478,392
전년대비증감		7.66%	12.82%	10.90%	6.00%	3.46%
의료기관	진료비	253,254	286,415	321,426	341,410	360,439
	전년대비증감	7.78%	13.09%	12.22%	6.22%	5.57%
	연간1인당이용횟수	16.83	17.98	18.57	18.82	19.21
	내원일당진료비	31,358	32,898	35,507	36,914	37,916
약국	약제비	95,436	106,974	114,855	120,969	117,953
	전년대비증감	7.32%	12.09%	7.37%	5.32%	-2.49%
	연간1인당약제비	198,820	220,946	235,383	246,211	238,311
	내원일당약제비	22,479	23,468	24,685	25,534	24,171
	연간1인당처방일	8.84	9.41	9.54	9.64	9.86

주: 본인부담금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3. 9)

특히 이번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대책에서 제외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해 향후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를 대비하여 보험료율 인상 또는 국고지원 증가와 같은 수입관리 측면과 만성 질환 예방과 같은 지출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연례적인 보험료 예상수입액 과소추계

정부는 2014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37조 464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보험료수입 실적(35조 8,535억원)에 2년간 보험료율 인상률(2013년 1.6%, 2014년 1.7%)을 적용한 금액이다.

그러나, 2013년 2분기까지 보험료 수입이 19조 9,645억원²⁸⁾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는 점과 2012년 보험료 수입이 35조 8,535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13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은 최소한 38조 5,784억원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험료 인상율(1.7%)을 고려할 때 2014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2013년 보험료 예상수입액보다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2014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37조 464억원으로 추계한 것은 과소추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은 41.4조원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 지원금액은 5.8조원이 되어야 적정수준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4년 예산안에서 편성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 5조 3,030억원의 경우 4대 중증질환 재정소요 1,093억원을 고려하더라도 과소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 과소추계가 국회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2012년 3년 동안 정부가 과소추계한 국고 지원액은 총 1조 2,952억원에 이르고 있다.

28)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

[표 6]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과소추계액

(단위: 억원)

연도	실제 보험료 수입 기준 지원추계액(A)	국고지원액(B)	과소추계액 (A-B)
2010	39,431	37,930	1,501
2011	45,330	40,715	4,615
2012	50,195	43,359	6,836
계	134,956	122,044	12,952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정확히 추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2년 과소추계액이 국고지원액의 15.7%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예산편성시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대한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액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건강보험가입자 국고지원사업 예산을 적정편성할 필요가 있다.

14. 국가결핵예방: 국산BCG백신생산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연례적 집행 실적 부진으로 예산 조정 필요

- 국산BCG²⁹⁾생산사업은 2008년 이후 계속되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생산 시설을 구축한 뒤에도 백신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 계획 수립시까지 적정수준으로 예산 조정 필요

가. 현황

국가결핵예방사업(국민건강증진기금, 1953~, 직접수행, 보조)은 결핵관리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1기 결핵관리종합 계획」 수립에 따라 결핵 조기 발견, 철저한 환자 관리 및 지원, 결핵관리기반 강화 등 결핵 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결핵조기퇴치 및 국민건강증진하는 사업이다.

2014년 예산안에서는 2013년 예산 391억원 대비 6.8%(26.5억원) 감소한 365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

[표 1] 국가결핵예방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증 감	
				(B-A)	(B-A)/A
국가결핵예방사업	39,077	39,177	36,525	-2,652	-6.8
- 결핵환자 치료 및 관리	21,645	21,791	21,868	77	0.4
- 결핵환자 발견	12,908	14,762	12,411	-2,351	-15.9
- 국제협력	1,725	1,425	1,225	-200	-14.0
-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원	2,293	1,199	1,021	-178	-14.8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내역사업별로 보면 결핵환자 치료 및 관리사업이 219억원, 결핵환자 발견사업이 124억원, 국제협력사업이 12억원, 국가결핵관리사업지원사업이 10억원이다.

29) BCG : bacille de Calmette-Guerin vaccine. 1921년 개발된 결핵용 백신임.

내역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결핵환자 치료 및 관리사업의 경우 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국산BCG백신생산 및 연구지원사업의 경우 12.3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나. 국산BCG백신생산 및 연구지원: 실집행 실적 부진으로 예산 조정 필요

국산BCG백신생산 및 연구지원사업 중 국산BCG백신생산사업은 질병관리본부 가 결핵협회(결핵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고, 2011년 6.2억원, 2012년 8.8억원을 집행하였으나, 결핵협회의 실집행액은 2011년 1.2억원, 2012년 0.7억원 등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다.

[표 2] 국산BCG백신생산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집행		대한결핵협회 실집행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이월	예산현액	집행액	차기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11	620	620	620	-	620	116	504	-
2012	881	881	881	504	1,385	68	1,317	-
2013	1,062	-	1,062	1,317	2,379	-	-	2,379
2014	900	-	900	-	-	-	-	-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이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BCG백신 균주확보계획이 계속 변경됨에 따라 BCG생산을 시작하지 못한데 있다. 2008년 BCG 백신 균주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녹십자와 생산위탁계약을 맺었으며, 2009년 덴마크 SSI사와 균주확보와 기술이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그 후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었다.

2011년 BCG-Korea³⁰⁾ 생산을 결정하면서 그동안 추진하던 대니쉬방식에서 BCG-Korea로 균주를 변경하였으나, 2013년 BCG-Korea는 백신생산에 부적합하다는 전문가 회의결과가 나왔고,³¹⁾ 2013년 7월 실무자회의에서는 파스퇴르 연구소의 공식 허가 문서 확보 후 향후 계획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30) 결핵연구원에서 파스퇴르 균주를 계대배양하여 연구 중인 균주

31) 2013.7.8. BCG 백신생산사업관련 전문가 회의(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결핵연구원 등 전문가 28명)

[표 3] 국산BCG백신생산 관련 주요일지

일자	내용
1987	BCG백신 생산업무 국립보건원에서 결핵연구원으로 이관
2006. 6. 7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결핵연구원, BCG백신 생산시설 이전과 BCG백신 생산 전까지 수입 결정
2006. 9. 21	생산 전까지 수입 백신은 BCG백신(Danish균주)로 결정
2008. 12. 30	국가 BCG백신 생산시설 구축 및 생산 위탁사업자 (주) 녹십자로 계약(전남 화순)
2009. 10. 16	덴마크 SSI사와의 생산기술 및 생산용 종균확보를 위한 MOU체결
2011. 3.	SSI사에서 1,2차 계약서 수정안 제시 기술이전비용 47억원, 해외수출시 패널티 1,600억원 등
2011. 6.	결핵연구원 BCG 생산 위한 균주 확보, BCG-Korea 생산
2011. 12.	결핵분과위원회 및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국가 BCG백신 생산 균주 변경(BCG-Danish→BCG-Pasteur)
2013. 6. 14	전문가 회의 결과 결핵연구원에서 Pasteur균주를 계대배양하여 연구 중인 균주(BCG-Korea) 사용은 백신 생산에 부적합 결정
2013. 7. 11	실무자 회의 결과 파스퇴르 연구소에서 BCG 백신 생산용 균주의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허가 문서 확보 후 향후 계획 검토

자료: 보건복지부(2013. 10)

동사업이 지속적인 집행 부진으로 예산현액이 23.8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진가능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BCG균주 확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사업에 대해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I.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 총괄

1. 예산안 개요

201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총계 기준으로, 세입은 2013년 대비 3억원(3.8%) 감액된 83억원, 세출은 2013년 본예산 대비 418억원(13.9%) 증액, 추경예산 대비 262억원(8.3%) 증액된 3,427억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출예산은 기금 및 내부거래가 없어 총계기준과 총지출기준 모두 3,427억원으로 동일하다.

[표 1]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 개요(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세입	10,551	8,615	8,615	8,287	-328	-3.8
일반회계	10,551	8,615	8,615	8,287	-328	-3.8
세출	243,596	300,911	316,481	342,681	26,200	8.3
일반회계	239,002	282,855	298,425	323,858	25,433	8.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3,462	13,462	14,091	629	4.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4,594	4,594	4,594	4,732	138	3.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2013. 10)

2. 회계간 재정구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정은 기존의 일반회계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체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개 회계로 구성되며 각 회계 간 전·출입이 없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이다.

[그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예산액 3,427억원		
일반회계 3,239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1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47억원

3.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014년도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 14억원 규모이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은 이력추적관리제도 의무화에 따라, 식품 등 표시제도 관리 강화는 식품용 기구류 구분 표시제 도입에 따라 신규로 편성되었다.

[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규사업

사업명		(단위: 백만원) 2014 예산안
일반회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680
	식품 등 표시제도 관리 강화	442
	식중독 감염 예방·대응 네트워크 운영(ODA)	26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2013. 10)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사업이 제조·가공·조리 중 비의도적 생성 유해물질 저감화로 10억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업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100 → 188개소)로 137억원, 식의약품안전정보체계 선진화 사업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으로 36억원, 식품 등 안전관리(R&D) 사업이 불량식품 근절 연구 확대로 68억원 증가하였다.

[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 회계	불량식품 근절 추진체계 운영	-	1,798	2,226	428	23.8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확대	73	73	633	560	766.7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664	664	1,345	681	102.6
	식품 기준 규격 국제조화	388	388	720	332	85.6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675	675	1,690	1,015	150.4
	국민영양 관리	776	776	1,300	524	67.4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6,808	14,580	28,324	13,744	94.3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	589	589	1,110	521	88.5
	희귀의약품센터 지원	555	555	826	271	48.8
	의약품허가 및 제약산업 지원	1,143	1,143	2,116	973	85.1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지원	1,950	1,950	2,840	890	45.6
	식품 등 안전관리(R&D)	17,740	17,740	24,498	6,758	38.1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R&D)	3,480	3,480	4,493	1,013	29.1
	국가실험동물관리	542	542	670	128	23.7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정보화)	3,490	3,490	7,108	3,618	103.7
	의료기기관리운영	293	293	437	144	49.1
	축수산 안전관리 과학화(R&D)	1,767	1,767	2,275	508	28.8
	축산식품안전관리	1,496	1,496	2,380	884	59.1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산물안전성조사	675	675	1,126	451	66.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2013. 10)

4. 예산안의 주요 특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로, 2014년도 예산안에는 총지출 기준으로 3,427억원을 편성하였다.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민생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4대 사회악 중 불량식품 근절 지원을 통한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201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 분석 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입부문에서 수입대체경비인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을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되는 문제가 있다. 수입대체경비가 세출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한 예산총계 주의의 예외적인 제도이나, 초과수입 발생에 따른 초과지출은 당초 편성된 예산 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집행이 가능하므로 과거의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편성하고 초과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품부문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3년 추경에서 편성된 물량이 자치단체의 수요 부족 및 지방비 부담으로 설치완료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자치단체의 신청 등을 감안하여 추가 설치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치된 센터에 대해서는 매년 운영 지원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센터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센터를 대상으로 설치 효과, 만족도 평가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유사한 업무를 두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어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기품질지원센터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제품개발 지원 업무 및 국내외 정보기술 수집 분석 업무가 유사하므로 효율적 업무수행과 사업관리를 위해 통합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예산안 분석 요약

201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업의 유사·중복 1건, 예산 과다 편성 2건 등 총 3건으로 요약된다.

[표 4]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 주요 분석사항

(단위: 백만원, %)

회계/ 기금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분석사항
[사업의 유사·중복]						
일반 회계	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	의료기기 품질지원 센터 지원	204	204	182	○ 제품개발지원 등의 업무는 의료기기정보기술 지원센터 사업과 유사하므로, 효율적 추진을 위해 두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 검토 필요
[예산 과다 편성]						
일반 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대체경비)		7,239	4,429	4,562	○ 연례적으로 과소편성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일반 회계	집단급식소 위생강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3,708	14,580	28,324	○ 2013년 추경에서 편성된 물량이 자치단체의 수요 부족 및 지방비 부담으로 설치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추가 설치 여부는 자치단체의 신청 등을 감안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음

주: 2013예산은 추경반영 예산

II.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1.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적정 세입규모 편성 필요

- 연례적으로 과소편성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인허가 또는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수입으로, 2013년 대비 1억원 증가한 46억원이 편성되었다. 인허가와 심사는 ‘인허가 심사지원 등(7037-650)’¹⁾ 사업에서 수행하며,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은 ‘인허가 심사지원 등’ 사업의 재원이 되는 수입대체경비이다.

[표 1]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면허료 및 수수료	7,239	4,429	4,429	4,562	133	3.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나. 연례적 과소계상

최근 4년동안(2009~2012년) 연도별 결산현황을 보면, 매년 10~24억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출에 있어서도 2010년 7억원, 2011년 18억원, 2012년 8억원을 초과지출하였다.

1)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효능이 있는 의약품 등을 수익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허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동일한 46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2]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연도별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초과수입액 (B-A)	초과지출 승인액
2009	4,055	-	4,055	5,097	5,097	125.7	1,042	-
2010	3,387	-	3,387	4,820	4,820	142.3	1,433	709
2011	4,222	-	4,222	6,654	6,654	157.6	2,432	1,787
2012	4,821	-	4,821	7,239	7,239	150.2	2,418	782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3. 5)

수입대체경비는 세출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예산 부족액 발생시 세입범위 내에서 초과지출 승인을 통하여 부족액을 충당할 수 있는 바, 예산액의 과소계상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초과수입 발생에 따른 초과지출은 당초 편성된 예산 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집행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정확한 수입 규모의 추계를 통해 초과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은 전년도 수입 수납실적, 향후 여건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례적인 과소계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규모를 반영’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을 전년도 수납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출,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자치단체의 신청을 감안하여 신규 설치 필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3년 추경에서 편성된 물량이 자치단체의 수요 부족 및 지방비 부담으로 설치완료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자치단체의 신청 등을 감안하여 추가 설치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일반회계, 2009~, 직접/자치단체보조²⁾)은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영양증진 기반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 제공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137억원 증가한 283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3,708	6,808	14,580	28,324	13,744	94.3
-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운영 및 관리	2,938	5,687	13,459	26,865	13,406	99.6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675	687	687	687	0	0
-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운영 등	44	43	43	43	0	0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교육·홍보	51	119	119	119	0	0
-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평가	-	272	272	610	338	124.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운영 및 관리에서 예산이 134억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규로 88개소 설치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2) 국고보조율은 서울 30%, 광역/경기도 50%이다.

나. 자치단체 수요를 초과한 예산 편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³⁾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해 위생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 교육 실시, 급식소 컨설팅,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며,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개발·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동 센터 설치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2017년까지 100개의 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당초 계획(100개소)을 2013년까지 조기 완료하기 위해 2013년 추경에서 64개소의 추가설치가 반영되었으나, 2014년 예산안에서 88개소가 추가로 설치되는 것으로 편성되었다.

[표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계획

(단위: 개소)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 계획	12	10	14	16	18	15	15
추 경	12	10	2013년에 78개소 (당초 14개소+추가 64개소)				100
2014년 예산안	12	10	78	2014년에 88개소 추가			18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3. 10)

센터 설치가 확대될 경우 수혜대상 아동수가 증가되고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강화로 학부모의 걱정이 줄어들어 민생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2013년 추경에 편성된 64개소 중 2013년 10월말 현재 13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38개소는 설치 중이나, 나머지 13개소는 자치단체의 수요 부족 및 지방비 부담으로 설치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3년 1~3월에 예산 편성을 위해 수행한 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물량은 2011년 12개소, 2012년 23개소, 2013년 23개소, 2014년 19개소의 총 77개소로 자치단체의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계획	설치 완료	설치 진행
2011	12	12	-
2012	10	10	-
2013 본예산	14	14	-
2013 추경	64	13	38

주: 2013. 10. 24일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3. 10)

따라서 자치단체의 신청과 지방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추가 설치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설치된 센터에 대해서는 매년 운영 지원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센터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센터를 대상으로 설치 효과, 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 후, 추가 설치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3. 의료기기품질지원센터 지원: 업무의 유사성에 따른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검토

- 의료기기품질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제품개발지원 및 국내외 정보기술 수집 분석 등의 업무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사업과 유사하므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의료기기품질지원센터 지원사업(일반회계, 1998~, 보조)은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기기 제품개발과 외국 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2,200만원 감소한 1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의료기기품질지원센터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의료기기품질지원센터 지원	204	204	204	182	-22	-10.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업무와 유사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의료기기법」 제42조4)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의료기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준규격, 임상시험, 허가심사, 품질관리 등 인·허가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동 센터는 2012년 6월 개소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부터 사업비를 지원(2012년 12억원)⁵⁾하고 있다.

4) 「의료기기법」 제42조(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설립) ① 국내외의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5) 세부사업명: 의료기기 국제경쟁력 강화(3032-310)

아래표를 보면 개방실험실 운영을 제외하고, 국내외 정보기술 수집 분석, 제품 개발 지원 등 의료기기품질지원센터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업무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의료기기품질지원센터의 국내외 정보기술수집분석 및 국내외 정보기술 확산 사업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국제규격 연구 및 교육, 홍보 사업은 국내외 정보기술 수집·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고, 의료기기품질지원센터의 해외품질인증지원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품질관리교육, 의료기기 개발 및 신속 제품화 지원 등 제품개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표 2] 의료기기품질지원센터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사업내용 비교

	의료기기품질지원센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사업목적	영세 의료기기 제조업체 자생력 확보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방실험실 운영 및 품질 시험 지원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의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향상
설립연도	1998. 1	2012. 5
조직구성	4명	4팀 23명
주요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정보기술수집분석 및 국내외 정보기술 확산 (연 4회 저널 발간) ○해외품질인증지원 - 제품시험검사 실무 세미나 등 ○개방형실험실 운영 ○센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규격 가이드라인 발간 - 국제규격 연구 및 교육·홍보 ○품질관리(GMP) 교육 ○의료기기 개발 및 신속 제품화 지원 (임상시험교육 및 컨설팅)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수집·분석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3. 10)

「의료기기법」 제43조⁶⁾는 국내외 정보기술 수집, 제품화지원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기품질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기 보다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로 동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2012년 6월에 설립되어 조직의 안정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의료기기법」 제43조(센터의 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료기기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국제규격 연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의 지원
2. 신개발의료기기를 제품화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지원
3. 위험관리 등 품질관리체계 및 허가·신고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홍보 및 지원
4. 의료기기의 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한 기준규격의 국제화 등 지원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의 정보 및 기술 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제 2 장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I. 환경부 예산안 총괄

1. 예산안 개요

201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은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개의 기금(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계 기준 세입 및 기금수입은 2013년 본예산 대비 1,652억원(3.5%), 추경예산 대비 370억원(0.6%) 증액된 5조 7,607억원이고, 세출 및 기금지출은 2013년 본예산 대비 5,013억원(5.2%), 추경예산 대비 1,282억원(1.3%) 증액된 10조 1,715억원이다.

[표 1] 환경부 예산안 개요(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입	세 입	4,184,026	4,653,803	4,825,012	4,819,010	-6,002	-0.1
	기금수입	922,968	898,661	898,661	941,666	43,005	4.8
	총 계	5,106,994	5,552,464	5,723,673	5,760,676	37,003	0.6
지출	세 출	7,698,199	8,771,531	9,144,615	9,229,844	85,229	0.9
	기금지출	858,192	898,661	898,661	941,666	43,005	4.8
	총 계	8,556,391	9,670,192	10,043,276	10,171,510	128,234	1.3

자료: 환경부(2013. 10)

세출예산안 총계에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전출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과 기금 여유자금운용과 같은 보전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외한 총지출 규모는 2013년 본예산 대비 1,244억원 (2.0%) 증액 그리고 추경예산 대비 764억원(1.2%) 감액된 6조 2,047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이다.

[표 2] 환경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회 계	4,746,515	5,220,584	5,421,457	5,352,481	-68,976	-1.3
기 금	824,355	859,662	859,662	852,202	-7,460	-0.9
총지출	5,570,870	6,080,246	6,281,119	6,204,683	-76,436	-1.2

자료: 환경부(2013. 10)

2. 회계·기금별 개요

가.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 세입예산안을 각 회계별 총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토 지대여료가 신규로 계상되어 전년대비 2억원이 순증하였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경 우, 세입은 법정부담금 등 자체세입과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되는데, 2013년 대 비 자체세입 1,218억원(8.3%) 감소와 일반회계전입금 1,590억원(4.8%) 증가로, 2013 년 4조 8,250억원에서 2014년 4조 8,188억원으로 0.1% 감소하였다.

[표 3] 환경부 세입예산안(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회계	일반회계	170	-	-	185	185	순증
	환경개선 특별회계	4,183,856	4,653,803	4,825,012	4,818,825	-6,187	-0.1
총 계		4,184,026	4,653,803	4,825,012	4,819,010	-6,002	-0.1

자료: 환경부(2013. 10)

세출예산안은 총계 기준으로 일반회계가 2013년 3조 3,163억원에서 2014년 3조 4,754억원으로 4.8% 증가되었는데, 동 회계 세출예산은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된다. 반면, 환경개선특별회계는 2013년 4조 8,250억원에서 2014년 4조 8,188억원으로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2013년 7,698억원에서 2014년 7,665억원으로 각각 0.1%와 0.4% 감소하였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2013년 1,379억원에서 2014년 890억원으로 35.5% 감소하였으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2013년 956억원에서 2014년 802억원으로 16.1% 감소하였다.

[표 4] 환경부 세출예산안(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회계	일반	2,858,327	3,145,044	3,316,254	3,475,369	159,115	4.8
	환특	4,171,753	4,653,803	4,825,013	4,818,825	-6,188	-0.1
	광특	477,127	768,800	769,800	766,473	-3,327	-0.4
	농특	103,454	108,240	137,904	88,972	-8,932	-35.5
	에특	87,539	95,644	95,644	80,205	-15,439	-16.1
총 계		7,698,199	8,771,531	9,144,615	9,229,844	85,229	0.9

자료: 환경부(2013. 10)

4개 회계의 전체 총지출은 2013년 추경 기준으로 5조 4,215억원에서 2014년 5조 3,525억원으로 1.3% 감액되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출 규모는 4조 4,168억원으로 2013년 대비 0.03% 감액되었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7,665억원으로 2013년 대비 0.4% 감액되었다. 특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에너지및자원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지출 규모가 890억원과 802억원으로 2013년 대비 각각 35.5%와 16.1%의 대폭 감액이 이루어졌다.

2013년 대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에너지및자원개발특별회계에 있어서 큰 폭의 감액은 각각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서 495억원(37.9%) 그리고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사업에서 179억원(40.6%)의 사업비 감액 편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표 5] 환경부 회계별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		2014 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B)	(B-A)	(B-A)/A
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4,247,900	4,418,109	4,416,831	-1,278	-0.0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768,800	769,800	766,473	-3,327	-0.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8,240	137,904	88,972	-48,932	-35.5
	에너지및자원개발특별회계	95,644	95,644	80,205	-15,439	-16.1
회계별 총지출 합계		5,220,584	5,421,457	5,352,481	-68,976	-1.3

자료: 환경부(2013. 10)

나.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규모는 총계 기준 총 9,417억원으로 2013년 변경계획 대비 4.8% 증가하였다. 각 기금별로는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운용규모가 2013년 대비 26.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석면피해구제급여와 여유자금운영에 있어서 전년대비 각각 33.1%와 28.2%의 증액편성 때문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4,780억원으로 2013년 대비 4.6% 증가하였는데, 이는 여유자금운영에 있어서 전년대비 288.2%(406억원)의 증액편성에서 기인하고 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2,212억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하였는데, 대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감액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운영에 있어서 3,756% 증액편성 때문이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은 1,148억원으로 2013년 대비 8.1% 증가한 것인데, 환경기초시설설치와 여유자금운영에서 각각 15.3%와 115%의 증액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영산강수계관리기금은 870억원으로 2013년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가는 환경기초시설설치와 여유자금운영에서 각각 25.9%와 67.7%의 증액편성 때문이다.

[표 6] 환경부 기금 총괄(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계획		2014 계획안(B)	증 감	
			당초	변경(A)		(B-A)	(B-A)/A
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437,758	457,004	457,004	478,017	21,013	4.6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10,687	220,219	220,219	221,238	1,019	0.5
	금강수계관리기금	97,502	106,191	106,191	114,783	8,592	8.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78,684	83,243	83,243	87,029	3,786	4.5
	석면피해구제기금	33,561	32,004	32,004	40,599	8,595	26.9
	총 계	858,192	898,661	898,661	941,666	43,005	4.8

자료: 환경부(2013. 10)

5개 기금의 총지출은 8,522억원으로 2013년 변경계획 8,633억원 대비 1.3%가 감소하였다. 각 기금별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4,425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106억원, 영산강수계관리기금 762억원으로 2013년 대비 각각 1.2%, 4.3%, 5.2% 감소하였다. 반면, 금강수계관리기금은 1,078억원으로 2013년 대비 4.7% 증가하였으며 석면피해구제기금은 151억원으로 24.6% 증가하였다.

[표 7] 환경부 기금별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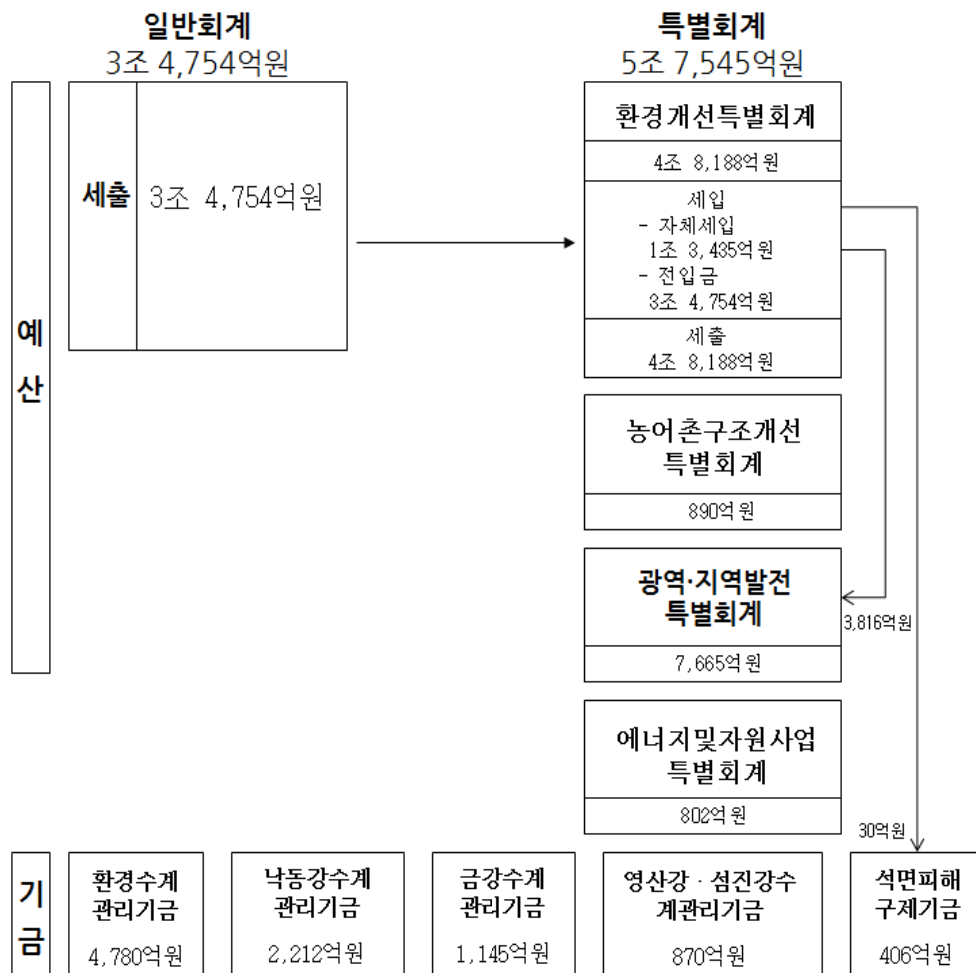
		2013 계획		2014 계획안 (B)	증 감	
		당초	변경(A)		(B-A)	(B-A)/A
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447,859	447,859	442,513	-5,346	-1.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19,942	219,942	210,556	-9,386	-4.3
	금강수계관리기금	102,948	102,948	107,811	4,863	4.7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76,806	80,400	76,234	-4,166	-5.2
	석면피해구제기금	12,107	12,107	15,088	2,981	24.6
기금별 총지출 합계		859,662	863,256	852,202	-11,054	-1.3

자료: 환경부(2013. 10)

3.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환경부 재정구조의 특징은 타 부처와 다르게 일반회계는 형식적으로만 설치되어 있고,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즉,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3,816억원 그리고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30억원 전출 등 환경부 전체 재정지출의 77.7%가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전입되고 있다.

[그림 1] 환경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조



주: 1. 총계 기준이며, 총지출 규모는 6조 2,047억원임

2.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3조 4,753억원)으로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됨

자료: 환경부(2013. 10)

4. 신규 및 주요 중감사업

2014년 신규사업은 환경개선특별회계 15개 사업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개 사업 등 총 16개 사업으로 396억원 규모이다. 예산안 규모로 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사업이 108억원으로 가장 크고 화학물질취급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화학물질 취급안전관리·지원사업이 64억원으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환경보호일반부문이 환경오염시설 허가체계 선진화사업, 환경산업육성 지원인력 인프라구축사업,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지원사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사업, 새만금청사 시설개선사업 등 5개로 신규 사업이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다. 또한, 창조경제 지원을 위하여 CO2저장 환경관리기술개발사업과 조류감시 및 제거 활용기술개발 및 실증화사업 등 2개의 R&D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다.

[표 8] 환경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 예산안
환경개선특별회계	물산업클러스트조성	300
	CO2저장 환경관리기술개발(R&D)	2,000
	조류감시및제거활용기술개발및실증화(R&D)	1,200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1,500
	인천남구재활용센터건립	1,325
	폐기물직매립제로화 사업	500
	저탄소차협력금	3,511
	야생생물자원이용기반구축	1,200
	국립야생동물보존연구원건립	200
	자연생태공간조성	1,500
	환경오염시설허가체계 선진화사업	1,000
	환경산업육성지원인력인프라구축	3,298
	화학물질취급안전관리지원	6,445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	10,776
	새만금청청사시설개선	4,5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발원지물길복원사업	300
총 16개 사업		39,555

자료: 환경부(2013. 10)

한편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3년 대비 440억원(733.3%)이 증가하였고, 한강수계에 있어 환경기초시설운영사업은 400억원(41.8%)이 증액되었으며, 국립생태원출연사업은 254억원(127.2%)이 증가하였다. 반면, 공단폐수처리시설사업은 2013년 대비 663억원(20.6%)이 감액되었고,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345억원(80.8%) 감소하였으며,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사업은 179억원(40.6%) 감액되었다.

[표 9] 환경부 소관 주요 증감사업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환경 개선 특별 회계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설치	19,746	42,704	8,200	-34,504	-80.8
	천연가스자동차보급	36,142	36,142	26,890	-9,252	-25.6
	유해화학물질테러사고대비	4,171	6,271	4,746	-1,525	-24.3
	공단폐수처리시설	308,803	322,734	256,392	-66,342	-20.6
	국립생태원출연	20,001	20,001	45,436	25,435	127.2
	폐기물자원회수시설확충		3,090	5,639	2,549	82.5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15,412	15,421	21,228	5,807	37.7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6,000	6,000	50,000	44,000	733.3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기후변화적응및국민실천지원	44,029	44,029	26,164	-17,865	-40.6
4대강 수계관리 기금	환경기초시설운영(한강수계)	95,816	95,816	135,850	40,034	41.8
	오염총량관리(한강수계)	871	871	3,096	2,225	255.5
	수질보전활동지원(금강수계)	757	757	1,012	255	33.7
	수변녹지조성관리(금강수계)	2,930	2,930	3,856	926	31.6

자료: 환경부(2013. 10)

5. 의무지출 예산안

의무지출 사업은 2013년 1,874억원 대비 4.9% 감소한 1,782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환경부 의무지출사업은 세입징수비용교부금, 건강보험부담금,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ODA)으로 구성되는데, 세입징수비용교부금은 부담금 징수에 소요되는 행정경비 및 환경개선부담금 추가징수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이며,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ODA)은 기후변화협약 가입에 따른 의무분담금이다. 2013년 환경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2013년(3.5%)에 비하여 약간 낮아진 수준이다.

[표 10] 환경부 의무지출 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총지출(A)		4,746,515	5,220,584	5,421,457	5,352,481	-68,976	-1.3
의무지출(B) (비중, B/A)		157,019 (3.3)	187,367 (3.6)	187,367 (3.5)	178,208 (3.3)	-9,159	-4.9
환경 개선 특별 회계	세입징수비용 교부금	152,784	182,985	182,985	173,836	-9,149	-5.0
	건강보험부담금	3,328	3,472	3,472	3,480	8	0.2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ODA)	907	910	910	892	-18	-2.0

자료: 환경부(2013. 10)

6. 예산안의 주요 특징

환경부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의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2014년 예산안에는 총지출 기준으로 6조 2,047억원(예산안 5조 3,525억원, 기금계획안 8,522억원)을 편성하였다.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투자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도 환경서비스 품질제고, 기후변화대응·자원순환사회 실현 등 미래 환경 대비 강화, 생활체험 환경보건서비스 강화 등에 역점을 두었다는 데 있다.

2014년도 환경부 예산안 분석 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구조 자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일반회계는 예산 전액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됨으로써 형식적으로만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의 재정사업은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동 특별회계의 자체세입 취약과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세수결손에 따른 이월 및 불용 등의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운용구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상하수도 및 수질부문 예산안은 전년대비 1.7%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의 대폭 감액 편성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감액에도 불구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과 도시침수대응사업에서의 대폭 증액이 있었다. 상하수도 및 수질부문 예산안의 90% 이상은 지방자치단체보조로 지출되는데, 이런 특징을 고려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비점오염원저감시설 등을 검토한 결과 집행실적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폐기물부문 예산안은 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 폐기물자원회수시설확충사업,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구축사업 등에서 상당한 감액 편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폐기물자원회수시설확충사업 예산안 등에는 총사업비 협의 지연과 민자 협상 지연 등으로 연례적인 이월액을 발생시키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대기부문 예산안의 특징은 대기개선을 위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투자가 집중된데 있다. 따라서 천연가스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지원 예산안의 검토에 있어서 실제 보급가능 한 범위 내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연부문 예산안은 유일하게 전년대비 증액(6%)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생물자원보전시설의 건립 및 운영지원에 투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하고, 국립낙동강자연관은 직제를 포함한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국립야생동물보전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과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측면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7. 예산안 분석 요약

2014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집행실적 부진 5건, 법·제도 미비 3건, 사업계획 부실 1건, 사업의 유사·중복 1건 등 총 10건으로 요약된다.

[표 11] 환경부 예산안 주요 분석사항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분석사항
[집행실적 부진]						
환경개선 특별회계	하수관거 정비	하수관거 정비	605,142	794,405	704,404	○ 2014년 예산안에 2013년 집행실적이 전무한 계속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들 사업의 예산안 조정 필요
	하수처리 시설확충	하수처리장 확충	438,599	445,711	323,557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52,043	195,149	226,476	
환경개선 특별회계	하수관거 정비	도시침수 대응	-	-	171,457	○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계속사업에 증액 편성된 예산안의 조정 필요
환경개선 특별회계	수질보전 및 관리	비점오염 저감사업	44,317	53,183	67,930	○ 2014년 예산안에 2013년 집행실적이 부진한 계속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집행부진 사유 및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일부 조정 필요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경산업 및 친환경제품 보급기반 구축	환경산업 실증화 단지 조성	-	10,500	23,502	○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실시설계비도 이월이 불가피한 상태인데, 2014년 예산안은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이어서 사업진도를 고려한 예산안의 조정 필요
환경개선 특별회계	생태계 보전	국립멸종 위기종 복원센터 건립	-	4,000	5,000	○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토목공사비를 포함한 일부 예산안의 연내 집행이 우려되는바, 이를 고려한 예산안의 조정이 필요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분석사항
-----------	----------	----------	------------	------------	-------------	------

[법·제도 미비]

환경개선특별회계			4,171,753	4,418,109	4,416,8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는 재정사업을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체세입 취약으로 일반회계 의존도가 심화되고 세입결손에 의한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음 ○ 동 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사회적 기반시설이나 공공재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은 일반회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환경관련 부담금 징수목적과 연관이 높은 사업은 특별회계에 존치 추진하는 등 회계구조의 개편 필요
환경개선 특별회계	물환경 정보화	물환경정책 시스템 구축	453	930	7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은 현재 민간대행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내용 및 사업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정비가 요구됨
환경개선 특별회계	생태계보전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운영	-	1,340	9,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개관에 대비하여 직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방안 정비 필요

[사업계획 부실]

광역·지 역발전특 별회계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	6,000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지원 지연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비 가능성이 고려하여 예산안의 일부 조정 필요
---------------------	--------------------	--------------------	---	-------	--------	--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분석사항
[사업의 유사·중복]						
환경개선 특별회계	과학원 운영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과 위기관리 기반 구축사업	150	-	4,3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야생동물보존연구원을 설립할 경우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총괄기능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기관간 명확한 기능 분담 필요
	생태계보전	국립야생 동물보존 연구원 건립	-	-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환경과학원에 생물안전 실험실이 구축되는 것을 고려, 국립야생동물보존연구원 기능을 명확하게 적립하고 기관간 중복 방지를 위하여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II. 환경부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1. 재정운용구조: 재정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계구조 개편 필요

-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위주로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체세입 취약으로 일반회계의존도 심화와 세입결손에 의한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음.
-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예산사업 중 사회적 기반시설이나 공공재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은 일반회계 재정사업으로 전환·추진하는 등 회계구조 개편이 필요
- 환경관련 부담금 징수목적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존치·추진하고, 자체세입 확대를 위한 부담금제도 개선 등이 요구됨.

가. 현황

환경부는 타 부처와 다르게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4개 특별회계를 통하여 재정을 운용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4년 환경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698억원(1.3%) 감소한 5조 3,525억원인데, 이를 회계별로 보면 환경개선특별회계가 4조 4,168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82.5%를 차지하여, 환경부의 재정사업이 주로 동 회계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4,754억원은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145,044)	(3,316,254)	(3,475,369)	(159,115)	(4.8)
환경개선특별회계	4,247,900	4,418,109	4,416,832	-1,278	-0.0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8,240	137,904	88,972	-48,932	-35.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768,800	769,800	766,473	-3,327	-0.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5,644	95,644	80,205	-15,439	-16.1
합 계	5,220,584	5,421,457	5,352,481	-68,976	-1.3

주: 1. 총지출 기준이며, 괄호는 총계 기준임

2. 일반회계는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임

자료: 환경부(2013. 10)

이렇게 세출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은 자체세입과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확보되고 있다. 2014년 동 회계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4조 8,188억원인데, 이 중 자체세입은 1조 3,435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안의 27.9%를 차지하고 일반회계전입금은 3조 4,753억원으로 7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입원별로 보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일반회계전입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 전입금¹⁾이며, 자체세입의 경우 72%가 환경관련 법정부담금을 통하여 충당되고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48조

[표 2]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13 세입예산		2014 세입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자체세입	14,653	14,653	13,435	-1,218	-8.3
- 법정부담금	10,365	10,365	9,673	-692	-6.7
- 융자금 회수	2,913	2,913	2,469	-444	15.2
- 기타경상이전수입	721	721	745	24	3.3
- 재산수입	567	567	432	-135	-23.8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6	26	48	22	84.6
- 수입대체경비	9	9	6	-3	-33.3
- 기 타	53	53	62	9	17.0
전입금	31,885	33,597	34,753	1,156	3.4
- 일반회계 전입금	31,451	33,163	34,753	1,590	4.8
- 공자기금 예수금	434	434	-	-434	순감
합 계	46,538	48,250	48,188	-62	-0.1

자료: 환경부(2013. 10)

나. 자체세입 취약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규모 증가

(1) 자체세입 취약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세입의 상당 부분은 환경관련 법정부담금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연례적인 징수실적 저조를 고려할 때 동 회계의 재정적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는 환경관련 법정부담금은 10개인데, 2010-2012년 이들 부담금의 수납실적을 보면 2010년 49.4%에서 2012년 47.4%로 수납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2년의 경우 환경관련 법정부담금 중 가장 규모가 큰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실적을 보면, 1조 4,841억원의 징수가 결정되었는데 6,723억원만이 실제 징수되어 45.3%의 낮은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배출부과금의 경우에는 징수실적이 더욱 부진하여 902억원의 징수가 결정되었으나, 147억원만이 징수되어 16.3%의 수납률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환경개선특별회계 귀속 법정부담금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10	903,130	1,712,212	845,189	49.4	844,305	22,719
2011	937,545	1,780,686	846,080	47.5	914,871	19,735
2012	1,012,575	1,806,011	856,408	47.4	917,674	31,928
2013	1,036,483	1,360,138	453,353	33.3	901,859	4,925

주. 2013년은 7월말 기준

자료: 환경부(2013. 10)

이와 같은 경기침체 및 준조세 납부저항에 따른 징수실적 저조 문제 이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 증가, 특히 기술발전에 따라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일몰이 예상²⁾되고 있어 부담금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세입결손에 따른 사업비 이월 및 불용

최근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세입의 주요 세입원인 환경관련 법정 부담금과 용자원리금의 징수 및 상환실적 저조로 인하여, 동 회계의 자체세입 결손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1,407억원에서 2012년에는 1,960억원에 이르고 있다.

[표 4]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세입 결손내역

(단위: 억원)

	2011			2012		
	예산액 (A)	수납액 (B)	결손액 (B-A)	예산액 (A)	수납액 (B)	결손액 (B-A)
계	14,114	12,707	-1,407	14,816	12,856	-1,960
법정 부담금	9,375	8,460	-915	10,126	8,564	-1,562
용자 원리금	3,875	3,045	-830	3,791	3,148	-643
기타 수입	864	1,202	338	899	1,144	245

자료: 환경부(2013. 10)

2) 환경부(2013. 10).

이러한 자체세입 결손은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처리장확충사업, 공단폐수처리시설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전출금 등에 있어서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1년부터 세입결손에 의한 사업비 이월 및 불용 규모는 연간 3,000억원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 예산현액의 7%를 넘는 수준으로 환경부 소관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결손에 따른 이·불용액 현황

(단위: 억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이월액	670	1,294	1,754	979	942
불용액	-	-	-	2,457	2,295
계	670	1,294	1,754	3,436	3,237
현액대비	2.1	3.1	4.2	7.2	7.1

자료: 환경부(2013. 10)

(3)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의존도 심화

최근 환경관리의 범위가 전통적인 환경오염원의 저감 및 처리에서 기후변화 대응, 생태자원의 보전 및 이용, 환경산업 및 환경보건 등으로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이런 다원화된 환경관리 수요에 부응하여 비록 환경재정의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지만,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세입의 취약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의존은 2009년을 기점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2014년에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의 72.1%를 일반회계전입금이 차지하고 있다.

[표 6]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추이

(단위: 억원, %)

	2000	2004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안)
계	10,505	12,652	25,089	28,967	35,603	39,650	42,714	43,639	46,538	48,188
자체 세입	6,152 (58.6)	9,026 (71.3)	9,794 (39.0)	11,981 (41.4)	13,284 (37.3)	13,272 (33.5)	14,114 (33.0)	14,816 (34.0)	14,653 (31.5)	13,435 (27.9)
일반 회계 전입금	4,353 (41.4)	3,626 (28.7)	15,295 (61.0)	16,986 (58.6)	22,319 (62.6)	26,378 (66.5)	28,600 (67.0)	28,823 (66.0)	31,885 (68.5)	34,753 (72.1)

자료: 환경부(2013. 10)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은 특별회계의 설치조건을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 조항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전입금 비중이 연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특별회계로서의 독립성 취약과 더불어 환경부 재정운용구조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 회계구조 개선 및 자체세입 확대방안 필요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을 고려할 때, 현행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일정부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특별회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동시에 추진하는 재정사업도 특정 환경개선사업만이 아니라 상·하수도과 같은 공공재의 제공 등 일반적인 세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세출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내재된 이러한 성격은 동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재정적 건전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부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재원조달만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회계의 운용구조를 개선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수행되고 있는 인건비 등 기본경비사업과 사회적 기반시설이나 공공재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관련 부담금 징수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사업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존치·추진하고 동시에 동 특별회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징수율 제고 대책 등 부담금 운영체계에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2. 하수도사업 :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안 일부 조정 필요

- 2014년 동 사업 예산안에는 2013년 집행실적이 전무한 계속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들 사업의 예산안 일부 조정이 필요

가. 현황

하수관거정비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1992~/보조), 하수처리장확충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1992~/보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2007~/보조)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하수관거와 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며 국가는 이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2014년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예산안은 2013년 대비 900억원(11.3%)이 감소한 7,044억원, 하수처리장확충사업 예산안은 1,222억원(27.4%)이 감소한 3,236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안은 313억원(16.1%) 증가한 2,265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다.

[표 1]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확충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하수관거정비	605,142	749,422	794,405	704,404	-90,001	-11.3
하수처리장확충	438,599	421,274	445,711	323,557	-122,154	-27.4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52,043	176,448	195,149	226,476	31,327	16.1

자료: 환경부,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II-1)」(2013. 9)

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지난 2011-2012년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하수도 관련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세수부족에 의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즉,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2011년 503억원 그리고 2012년에는 470억원, 하수처리장확충사업은 2011년 835억원 그리고 2012년 570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2011년 191억원 그리고 2012년 185억원의 세수부족에 의한 이월액 및 불용액이 각각 발생하였다. 이러한 세수부족에 의한 이월액 및 불용액의 연례적 발생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집행 가능한 사업을 선택하여 지원할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표 2]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처리장확충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하수관거정비	2011	432,173	27,386	-9,704	449,855	399,571	12,410	37,874
	2012	605,142	12,410	-	617,552	570,585	13,555	33,412
하수처리장 확충	2011	488,996	60,384	262	549,642	466,130	49,346	34,166
	2012	438,599	49,346	-31	485,220	428,016	17,149	40,055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2011	143,908	-	-	143,908	124,851	5,465	13,592
	2012	152,043	5,465	-	157,508	138,977	15,695	2,836

자료: 환경부(2013. 10)

이런 의미에서 2013년 9월 말 현재 추진 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처리장확충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의 보조사업자 집행실적을 보면 각각 75%, 62.5%, 57%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하수처리장확충사업과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의 실적이 부진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보조사업자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실집행률 (C/B)
하수관거정비	791,056	623,034	623,034	59,713	682,747	512,271	75.0
하수처리장확충	443,711	304,434	304,434	54,418	358,852	224,403	62.5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95,149	166,640	166,640	26,657	193,297	110,166	57.0

주. 2013년 9월 말 기준

자료: 환경부(2013. 10)

특히, 개별 사업별로 보조사업자 집행실적을 보면 부진한 사업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경우, 전체 299개 사업 중 실집행률이 30% 이하인 사업이 61개(20.4%)이고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도 19개(6.3%)이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전체 228개 사업 중 실집행률이 30% 이하인 사업이 88개(38.5%)이고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도 55개(24.1%)가 존재한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전체 268개 사업 중 실집행률이 30% 이하인 사업이 86개(32.1%)이고,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은 46개(17.2%)이다.

[표 4] 2013년 진행 중인 사업 중 보조사업자 집행실적 30%이하 사업 현황
(단위: 개소)

	보조사업자 집행실적							
	2013년 전체 추진사업 중				2014년 지원대상사업 중			
	20~30%	10~20%	10%이하	소계	30%이하	20%이하	10%이하	소계
하수관거정비	16	16	31(19)	61	14	12	25(16)	51
하수처리장확충	8	7	73(55)	88	5	6	50(37)	61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0	11	65(46)	86	8	10	50(35)	68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2013. 10) 재정리.

이처럼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은 대부분 실시설계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연도 중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 사업에 대한 2014년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 즉, 2014년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안은 216개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2013년 현재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16개(7.4%)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수처리장확충사업 예산안의 경우 120개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인데, 이 중에는 2013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38개(31.7%)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안은 148개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2013년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35개(23.6%)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처리장확충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안에 포함된 2013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잔여사업비, 집행부진 사유, 사업의 추진가능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안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도시침수대응: 사업 추진실적을 반영한 예산안 일부 조정 필요

-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계속사업에 증액 편성된 예산안의 일부 조정 필요

가. 현황

도시침수대응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2014~/신규, 보조)은 하수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 및 저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 예산안은 1,715억원이다.

[표 1] 도시침수대응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도시침수 대응	-	-	-	171,457	-	-

자료: 환경부,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II-1)」(2013. 9)

나. 사업 추진 실적저조로 인한 연례적 이월 및 불용액 발생

집중 호우 시 도시침수 피해는 도시 인근 하천의 범람(외수침수)에 의한 것과 하천의 범람이 아닌 도시 자체의 빗물배제능력의 부족(내수침수)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 내수침수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내수침수 피해의 증가는 현행 하수관리체계가 오수처리에 치중하여 홍수피해 예방에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하수관거,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과 같은 빗물처리를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빗물관리 인프라의 조속한 확충을 위하여, 2014년 신규로 1,715억원의 도시침수대응사업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동 예산안에는 2013년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되던 23개 저류시설 설치사업과 7개 신규 사업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 중 2013년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되던 23개 사업에 대한 2013년 보조사업자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76.4%로 나타나고 있어 하수도사업

에 있어 새로이 도입된 하수저류시설의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보조사업자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B)
저류 시설 설치	89,878	61,379	61,379	10,365	71,744	54,838	-	-	76.4

주. 2013년 9월 말 기준

자료: 환경부(2013. 10)

특히, 신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석남천 월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1,372억원 그리고 총국고 지원 343억원 규모로 2011년부터 시작되어 예산이 지원되었다. 하지만,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타당성 재검토 요구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2011년 예산 30억원은 전액 이월되었고, 2012년 환경부에서 교부하지 않은 예산 35억원은 불용되었다. 또한, 2013년 3월에 (턴키공사)사업자가 비록 선정되었으나 지하터널에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국내 처음이어서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어 2013년 예산 65억원의 이월이 예상된다.

석남천월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521억원, 총국고 260억원 규모로 2012년부터 추진되었는데, 민원발생, 실시설계 기간 미도래 등으로 2012년 사업비의 일부 이월이 있었고 2013년 사업비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표 3] 보조사업자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신월대심도 하수저류시설	2011	3,000	3,000	3,000	-	3,000	-	3,000	-
	2012	3,500	-	-	3,000	3,000	-	3,000	-
	2013	6,500	-	-	3,000	3,000	-	-	-
석남천 월류수 저류시설	2012	895	895	895	-	895	571	324	-
	2013	6,292	-	-	324	324	324	-	-

주. 2013년 9월 말 기준

자료: 환경부(2013. 10)

이처럼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상당한 이월액 발생이 예상되에도 불구하고 2014년 신월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예산안은 전년대비 9.8% 증액된 71억원, 석남천 월류수저류시설 예산안은 200% 증액된 18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대폭 증액 편성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비점오염저감사업: 집행실적 부진에 따른 예산안 일부 조정 필요

- 2010년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은 연례적으로 부진
- 2014년 예산안에는 2013년 집행실적이 부진한 계속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집행부진 사유 그리고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예산안의 일부 조정이 필요

가. 현황

비점오염저감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2004~/직접, 보조)은 도시지역, 도로, 농경지, 축산지역 등 비점오염원(non-point pollution source)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구축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 예산안은 2013년 예산 대비 284억원(49.7%) 증가한 854억원이다.

[표 1]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비점오염저감사업	50,927	57,123	57,123	85,350	28,407	49.7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지원	44,317	51,473	53,183	67,930	14,747	27.7

자료: 환경부,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II-1)」(2013. 9)

나. 집행실적이 부진한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세사업인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를 국고로 보조(50~70%)하는 것으로, 2014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47억원(27.7%) 증가한 67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최근 비점오염원의 하천부하량이 점오염원의 부하량을 넘어서고 녹조나 조류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이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비점오염원 설치지원사업 예산안은 2010년의 166억원 대비 4배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 지원사업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의 추진실적은 연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0-2012년간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 지원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2010년의 경우 예산현액 166억원 중 109억원이 집행되어 65.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2011년에는 예산현액 328억원 중 152억원만이 집행되어 46.3%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2012년의 경우 예산현액은 568억원인데 389억원만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68.6%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3년의 경우(9월말 현재 기준)에도 예산현액 501억원 중 243억원만이 집행되어 48.6%의 여전히 부진한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B)
2010	16,594	16,594	16,594	-	16,594	10,943	5,641	5	65.9
2011	34,628	27,190	27,190	5,641	32,831	15,202	16,592	1,037	46.3
2012	44,317	40,180	40,180	16,592	56,772	38,928	17,634	210	68.6
2013	51,473	32,502	32,502	17,634	50,136	24,345			48.6

주. 2013년은 9월말 기준.

자료: 환경부(2013. 5)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을 고려할 때 철저한 집행관리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이 필요한데, 2014년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 지원사업 예산안에 포함된 30개 계속사업 중에는 2013년 집행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11개나 포함되어 있다.

[표 3] 2014년 예산안 지원 대상사업 중 2013년 집행실적이 20% 미만인 사업

(단위: 개소)

	보조사업자 집행실적			
	0%	10%미만	10%~20~ 이하	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4	4	3	11

자료: 환경부(2013. 5)

따라서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 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실적 문제를 개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이 가지고 있는 집행실적 저조사
유 그리고 이의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안을 일부 조정할 필요
가 있다.

5. 물환경정책시스템구축: 가축분뇨전자인계·인수시스템 구축과 이의 민간대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현재 가축분뇨전자인계·인수시스템구축사업은 민간대행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내용 및 사업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어 조속한 정비가 요구됨.

가. 현황

물환경정책시스템구축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2003~/직접)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하여 수질, 수량, 수생태계, 오염발생(배출)원, 하천·호소 퇴적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물환경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2014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3,000만원(14.3%) 감소한 7억 9,700만원이다.

[표 1] 물환경정책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물환경정책시스템 구축	453	930	930	797	-133	-14.3
- 가축분뇨전자인계 인수시스템구축	-	500	500	358	-142	-28.4

자료: 환경부,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II-1)」(2013. 9)

나. 가축분뇨 전자 인계·인수시스템 구축사업의 민간대행 근거 결여

물환경정책시스템 구축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가축분뇨 전자 인수·인계시스템구축사업은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수거·처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축된 정보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예산안은 3억 5,8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8.4% 감소된 규모다.

가축분뇨 전자 인수·인계시스템의 구축사업은 현재 22만 농가에서 209백만 마리의 소·돼지·닭 등의 사육으로 128천톤/일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나, 배출·수

집·운반·처리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농가 및 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데 현실에 배경을 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2012.5)’을 마련하였는데,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액비의 관리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동 시스템의 구축이 계획되어, 현재는 한국환경공단이 민간대행의 형태로 폐기물관리를 위한 ‘올바로(allbaro)시스템’에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동 시스템의 구축·운영과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대행과 관련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가축분뇨 전자 인계·인수시스템의 구축·운영뿐만 아니라, ‘2014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민간대행 사업비는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을 위한 경비인 바, 민간대행을 위한 법령상의 규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가축분뇨 전자 인계·인수시스템 구축사업이 가축분뇨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자시스템 구축·운영뿐만 아니라 민간대행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고도정수처리시설: 설계지연 및 사업자 재정비 가능성을 반영한 예산안의 일부 조정 필요

- 2013년 국비지원 지연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축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일부 조정이 필요

가. 현황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3~2015/보조 및 융자)은 녹조발생 수계와 연계된 6개 지방상수도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 예산안은 2013년 대비 440억원(733.3%) 증가한 500억원이다.

[표 1]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	6,000	6,000	50,000	44,000	733.3

자료: 환경부,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II-1)」(2013. 9)

나. 수시배정에 의한 국비지원 지연과 부적절한 지원 대상 선정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주요 수계에서 녹조로 인한 독성물질의 발생과 수돗물 냄새 민원 빈발에 따라, 이의 해결을 위하여 지방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설치를 국고보조(30%)와 융자(50%)를 통하여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은 설계비가 지원되고 2014년부터는 시설비가 지원될 예정인데, 설계비 지원 지연과 부적절한 지방정수장 선정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첫째,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수시배정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국비가 2013년 10월에 담당 부처로 배정되어 아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지 못한 상황이

다. 따라서 비록 금년 중 국고가 교부되어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계가 지연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은 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 하나인 성남시의 경우 국고보조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3정수장과 광역정수장을 연계하여 관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정수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 이후 노후화로 가동이 정지된 제2정수장을 모래여과방식으로 개량·운영하기로 하고 ‘성남시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환경부에 신청·승인을 얻었다. 이를 계기로 성남시는 승인된 모래여과방식 대신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막여과 방식으로 변경하여 설계를 진행하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고지원을 신청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성남시의 이러한 자체 정수장 확보 행태는 감사원의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를 통하여 확인되게 되었고,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 경제성이 없는 성남시 제2정수장 개량사업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보조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통보하였다.³⁾ 이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 대상에서 성남시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국비 교부 지체에 따른 설계 지연 가능성과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2014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는 일부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3)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실태」(2013. 9)

7.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 사업추진 실적 부진에 따른 예산안 일부 조정 검토 필요

- 사업추진 실적 저조로 인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목공사가 동일 연도에 이루어질 예정
-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토목공사비를 포함한 일부 예산안의 일부 조정 검토 연내 집행이 우려되는바, 이를 고려한 예산안의 조정이 요구됨.

가. 현황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사업(2013~2016/직접)은 2013~2016년간 총사업비 1,070억원을 투자하여 국가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을 조정·선도할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경상북도 영양군에 건립하는 것으로, 2014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0억원(25%) 증가한 50억원이다.

[표 1]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	-	4,000	4,000	5,000	1,000	25.0

자료: 환경부,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II-1)」(2013. 9)

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예산안 편성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민간·지방자치단체 등 서식지외 보전기관에 산재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조정·선도하는 종합연구기관의 설립이라는 취지로 2013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전계획 미비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 되고 있다.

2013년 동 사업의 예산은 토지매입비와 기본 및 실시 설계비를 포함한 40억원으로 수시배정사업 형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을 위

한 추진 TF가 2013년 5월에 구성되고 사업추진 세부계획은 동년 7월에 완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예산배정 협의는 7월부터 진행되었는바 협의지연으로 인하여 실제 예산은 10월에 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토지매입 및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은 대부분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표 2] 2013년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사업 집행 현황(9월 기준)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	4,000	-	-	4,000	-		

자료: 환경부(2013. 10)

「국가재정법」 제39조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건축사업은 300억원)의 경우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 설계, 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시설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사업 예산안은 전년도 토지매입비 및 기본설계비의 이월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 및 보상비, 건립사업 실시설계비와 토목공사비 등을 동일 연도의 예산안으로 편성하고 있다.

[표 3] 2013-2014년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안	
토지매입비	575	토지매입 및 보상비	2,803
기본 설계비	3,425	운영계획수립 등 설계비	100
-		건립사업 실시 설계비	897
-		터파기 및 절성토 등 토목공사비	500
-		토목공사 시행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500
-		착공식 및 조달수수료	200
계	4,000		5,000

자료: 환경부(2013. 10)

2014년 예산안 작성지침은 예산안의 단계별 편성의 예외로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를 함께 계상할 수 있는 조건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높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사업비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것인데,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실시 설계뿐만 아니라 2013년에서 이월될 기본설계와 이에 수반될 각종 행정절차를 2014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토목공사비를 포함한 일부 예산안의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

8.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운영: 기관운영방안 마련 필요

- 2014년 개관에 대비하여 직제를 포함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의 조속한 정비가 요구됨.

가. 현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운영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2013~ / 직접)은 영남권역 생물자원 수집·보관·연구·관리, 생물자원 전시·교육, 생물자원산업 지원 등을 위해 건립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운영·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 예산안은 2013년 대비 86억원(640.7%)이 증가한 99억원이다.

[표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운영	-	1,340	-	9,925	8,585	640.7

자료: 환경부,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II-1)」(2013. 9)

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직제 및 운영 방안 부재

원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은 2018년까지 지역별(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생물자원관을 건립하여, 권역별 국가생물자원의 보전체계를 구축하려는 환경부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총사업비 922억원을 투자하여 2009-2013년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사업이 추진되었는데, 2013년 11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2014년 5월 개관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본격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소요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직제와 같은 운영방안이 부처간 협의 지연으로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국립생물자원관(인천)의 소속기관(분원)으로 국가기관화 하여 현재 국립낙동강생물자원 추진기획단 인력(6명)을 전환 재배치하고 45명을 신규 채용하여 총 51명을 정원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직제 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8조제2항4)에 의해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한 바, 2013년 6월 환경부는 수시직제를 요구하였으나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신설 전시·연구기관의 법인화 원칙을 이유로 환경부가 요구하는 직제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양 부처의 견해를 정리하면, 환경부의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권역별 생물자원관을 건립하고 이를 국립생물자원관(인천)의 소속기관으로 연계·운영함으로써 국가 생물자원의 보전·관리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안전행정부의 입장은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직제 개정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국립낙동강자원관을 정상적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양 부처간 조율을 통하여 국가기관화나 법인화 등 운영방향에 대한 조속한 결정이 요구된다. 만약 안전행정부의 입장처럼 법인화하여 출연금 등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 상 근거가 필요하고 이의 마련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더욱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제8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와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4월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9.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과 위기관리기반 구축사업 및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사업: 기관간 기능정비를 통한 예산안 조정 필요

-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을 설립할 경우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총괄기능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기관간 명확한 기능분담 필요
- 국립환경과학원에 생물안전실험실이 구축되는 것을 고려,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기능을 명확하게 적립하고 기관간 중복 방지를 위하여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및 위기관리기반 구축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2012~/직접)은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유래 병원체의 조사·분석을 위한 생물안전실험실을 국립환경과학원에 건립하는 것으로, 2014년 예산안은 44억원이다.

반면, 국립야생동물보건원 건립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2014~2016/신규, 직접)은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춘 시설을 건립·운영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60억원이고 2014년 예산안은 2억원이다.

[표 1]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및 위기관리기반 구축사업 및 국립야생동물보건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및 위기관리기반 구축	150	-	-	4,391	-	-
국립야생동물보건원 건립	-	-	-	200	-	-

자료: 환경부,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II-1)」(2013. 9)

나. 기관간 명확한 기능분담 필요

최근 야생동물에서 유래되어 온 인수공통감염성 질병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의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총괄 관리할 별도 조직으로서 국립야생동물보건원의 건립을 2014년 예산사업을 통하여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동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기능중복 문제의 발생여지가 있어 양 기관간 기능조정 및 업무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야생동물 질병의 모니터링, 진단, 대응 등의 총괄기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가축질병위기관리메뉴얼」(환경부, 2006)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바이오안전연구팀)이 「야생동물 질병연구」와 「야생동물 질병관리 강화사업」 등의 예산사업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이러한 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 야생동물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대응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하여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및 위기관리기반 구축사업을 통하여 야생동물 유래 병원체의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동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국립생태원과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능의 분장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비는 전액 이월 또는 불용되었으며, 2013년에 들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 중인데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설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표 2]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및 위기관리기반 구축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2	150	-	-	150	-	129	21
2013	-	-	-	129	90		

주. 2013년 집행액은 9월 기준

자료: 환경부(2013. 10)

이와 별도로 정부는 2010년 수립된 「생물자원 보전·관리·이용 마스터 플랜(2011-2020)」에 근거하여 야생동물 질병관리 업무수행 체계를 확대·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즉, 동 플랜은 (가칭) 야생동물질병관리본부 및 지역별 (가칭) 야생동물보건센

터를 구축하여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총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분석, 야생동물 질병 역학조사, 야생동물 질병검역 및 방역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을 건립하고 기존 시·도별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연계·운영할 계획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전환 계획과 관련하여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의 설립, 야생동물치료센터의 총괄역할,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및 역학조사 기능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동 조항은 야생동물치료기관(야생동물치료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의 설치 및 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의 계획과 같이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질병관리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려면, 첫째 이러한 전환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야생동물 질병관리계획 수립, 진단, 역학조사, 살처분 등의 조항을 신설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기관간 기능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 사업과 생물안전실험실 건립을 위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및 위기관리기반 구축사업과의 조정이 필요하다. 즉, 국립환경과학원에 생물안전실험실이 구축되는 것을 고려하여 향후 야생동물보건연구원의 기능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0. 환경산업 실증화단지 조성: 사업 진행과정을 반영한 예산안 조정 필요

-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실시설계비도 이월이 불가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예산안에는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이어서 사업진도를 고려한 예산안의 일부 조정이 필요

가. 현황

환경산업실증화단지 조성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2013~2016/직접)은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환경신기술 실증화, 시제품 제작, 기술력에 대한 국가 인증 등을 위한 환경산업 원스톱지원 단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14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30억원(123.8%) 증가한 235억원이다.

[표 1] 환경산업실증화단지 조성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환경산업실증화단지 조성	-	10,500	10,500	23,502	13,002	123.8

자료: 환경부,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II-1)」(2013. 9)

나. 공사착공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지연

환경산업실증화단지 조성사업의 취지는 2013~2016년간 국비 1,560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술 개발에서 수출까지 환경기업 육성을 위한 전 과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인데, 2013년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동 사업의 예산은 매립목적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 등 기본조사 설계비(811억 6,9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5억 5,000만원), 시설비(82억 9,300만원), 감리비(5억 3,300만원), 시설부대비(6,500만원) 등으로 총 105억원인데, 2013년 10월 현재 기본계획 설계비 중 일부인 5억 4,100만원만이 집행되어 5.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환경산업실증화단지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제1차 연도 토목(부지조성)공사⁵⁾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제2차 연도 본공사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시설로 지정받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가 집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위한 기본설계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진행과정을 고려할 때, 2013년 동 사업의 예산 중 실시설계비와 제1차 연도 토목 공사비는 부득이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환경산업실증화단지 조성사업 예산안을 보면, 환경산업실증화단지 조성 추진기획단 운영비(1억 200만원)과 제2차 연도 공사비(234억원)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성은 2013년도 실시설계비의 이월 가능성으로 인하여 결국 실시설계비와 공사비의 단일 연도 편성을 제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재정법」 제39조의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의 단계별 편성 취지를 침해하는 결과를 만들 여지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예산안 작성지침은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를 함께 계상할 수 있는 조건, 다시 말해 공사비의 집행 가능성 여부를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높은 경우”로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제2차 연도 공사비의 집행 가능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절차와 더불어 실시설계 및 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2014년 상반기에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환경산업실증화단지 조성사업 예산안의 적정성 여부는, 대규모 공사에서 각종 행정절차, 실시설계자 선정, 실시설계 그리고 그에 대한 승인 등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환경산업실증화단지 조성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커서 2014년 예산안에 포함된 공사비는 일부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5) 환경산업실증화단지의 대상토지가 매립연약지반인 수도권매립지인 관계로 본 공사 이전에 부지 조성공사가 필요

[고용노동부]

I. 고용노동부 예산안 총괄

1. 예산안 개요

201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및 5개 기금(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계 기준으로, 세입 및 기금수입은 2013년 본예산 대비 3조 4,337억원(15.8%) 증액된 25조 976억원, 세출 및 기금지출은 2013년 본예산 대비 3조 4,873억원(14.7%) 증액, 추경예산 대비 3조 4,673억원(14.6%) 증액된 27조 1,621억원이다.

[표 1] 고용노동부 예산안 개요(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입	세입	77,718	54,131	54,131	58,443	4,312	8.0
	기금수입	17,031,142	21,609,767	21,609,767	25,039,177	3,429,410	15.9
	총계	17,108,860	21,663,898	21,663,898	25,097,620	3,433,722	15.8
지출	세출	1,546,617	2,065,018	2,085,050	2,122,887	37,837	1.8
	기금지출	17,031,142	21,609,767	21,609,767	25,039,177	3,429,410	15.9
	총계	18,577,759	23,674,785	23,694,817	27,162,064	3,467,247	14.6

자료: 고용노동부, 「2014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2013. 10)

총지출은 2013년 본예산 대비 6,058억원(4.4%) 증액, 추경예산 대비 4,600억원(3.3%) 증액된 14조 4,790억원이다.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2013년 본예산 4.1% 대비 0.1%p가 감소하였고, 추경예산 대비로는 4.0%로 변동이 없다.

[표 2] 고용노동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회 계	1,488,817	1,997,218	2,017,250	2,045,087	27,837	1.4
기 금	11,250,817	11,876,000	12,001,790	12,433,915	432,125	3.6
총지출	12,739,634	13,873,218	14,019,040	14,479,002	459,962	3.3

주: 총지출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여유자금, 차입금원금상환),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2014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2013. 10)

2. 회계 · 기금별 개요

가.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 세입예산안을 각 회계별 총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증가, 보조금 정산반환금 수입증가 등에 따라 세입규모가 2013년 540억원에서 2014년 584억원으로 8.0% 증가하였다.

[표 3] 고용노동부 세입예산안(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회계	일반	77,692	54,092	54,092	58,413	4,321	8.0
	에특	26	39	39	30	-9	-23.1
총 계		77,718	54,131	54,131	58,443	4,312	8.0

자료: 고용노동부, 「2014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2013. 10)

2014년 세출예산안은 총계 기준으로 일반회계가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지원인원 확대,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지원범위 확대,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따라 2013년 2조 291억원에서 2014년 2조 688억원으로 2.0% 증가하였고, 에특회계의 경우 진폐근로자 고령화 등에 의한 수급자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2013년 466억원에서 2014년 435억원으로 6.6% 감소하였으며, 광특회계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확대에 따라 2013년 86억원에서 2014년 98억원으로 14.3% 증가하였다.

[표 4] 고용노동부 세출예산안(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회계	일반	1,483,816	2,009,075	2,029,107	2,068,806	39,699	2.0
	농특	862	819	819	819	-	0.0
	에특	42,251	46,560	46,560	43,472	-3,088	-6.6
	광특	10,516	8,564	8,564	9,790	1,226	14.3
	혁특	9,172	-	-	-	-	-
총 계		1,546,617	2,065,018	2,085,050	2,122,887	37,837	1.8

자료: 고용노동부, 「2014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2013. 10)

4개 회계의 총지출은 추경 기준으로 2013년 2조 173억원에서 2014년 2조 451억원으로 1.4% 증액되었다. 일반회계 지출 규모는 1조 9,910억원으로 2013년 대비 1.5% 증액되었으며, 에특회계 지출 규모는 435억원으로 2013년 대비 6.6% 감액되었으며, 광특회계 지출 규모는 98억원으로 2013년 대비 14.3% 증액되었다.

[표 5] 고용노동부 회계별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회계	일반	1,941,275	1,961,307	1,991,006	29,699	1.5
	농특	819	819	819	-	0.0
	예특	46,560	46,560	43,472	-3,088	-6.6
	광특	8,564	8,564	9,790	1,226	14.3
회계별 총지출 합계		1,997,218	2,017,250	2,045,087	27,837	1.4

자료: 고용노동부, 「2014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2013. 10)

나.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총계 기준 총 25조 392억원으로 2013년 변경 계획 대비 15.9% 증가하였다. 각 기금별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용규모가 2013년 대비 26.2%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은 운용 규모가 2013년 대비 27.8% 축소되었다.

[표 6] 고용노동부 기금 총괄(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계획		2014 계획안 (B)	증 감	
			당초	변경(A)		(B-A)	(B-A)/A
기금	고용보험	8,134,711	9,541,136	9,541,136	11,291,046	1,749,910	18.3
	산재보험	7,479,635	10,371,706	10,371,706	11,885,417	1,513,711	14.6
	임금채권보장	566,305	832,531	832,531	1,050,693	218,162	26.2
	장애인고용촉진	416,888	472,433	472,433	528,843	56,410	11.9
	근로복지진흥	433,603	391,961	391,961	283,178	-108,783	-27.8
총 계		17,031,142	21,609,767	21,609,767	25,039,177	3,429,410	15.9

자료: 고용노동부, 「2014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2013. 10)

5개 기금의 총지출은 12조 4,339억원으로 2013년 변경계획 12조 18억원 대비 3.6% 증가하였다. 각 기금별로는 고용보험기금이 7조 481억원으로 2013년 대비 7.5% 증가한 반면, 산재보험기금은 4조 7,504억원으로 2013년 대비 1.1% 감소하였는데, 이는 산재병원 리모델링 및 시설건립 완료 감액 등에 기인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2,816억원으로 2013년 대비 6.2% 감소하였는데, 이는 채당금 지급 감소 추이 반영에 기인한다.

[표 7] 고용노동부 기금별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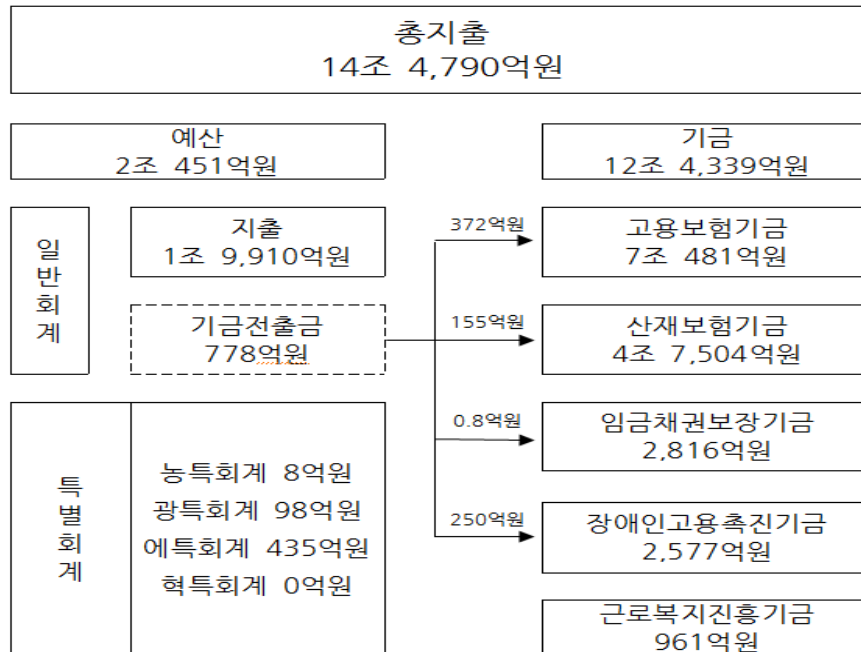
		2013 계획		2014 계획안 (B)	증 감	
		당초	변경(A)		(B-A)	(B-A)/A
기금	고용보험	6,483,153	6,559,138	7,048,146	489,008	7.5
	산재보험	4,765,407	4,805,067	4,750,396	-54,671	-1.1
	임금채권보장	300,231	300,231	281,560	-18,671	-6.2
	장애인고용촉진	247,163	247,308	257,691	10,383	4.2
	근로복지진흥	80,046	90,046	96,122	6,076	6.7
기금별 총지출 합계		11,876,000	12,001,790	12,433,915	432,125	3.6

자료: 고용노동부, 「2014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2013. 10)

3.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의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금 778억원이다. 778억원 중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은 372억원, 산재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은 155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의 전출금 8,200만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의 전출금은 250억원이다.

[그림 1]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4. 주요 중액사업 및 신규사업

2014년도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 314억원 규모이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101억원, 교과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해외인턴사업 70억원, 민간부문 스마트워크 확산지원 51억원 등이다.

[표 8] 고용노동부 소관 신규사업

사업명		(단위: 백만원) 2014 예산안
일반회계	상용형 시간선택제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10,052
	스펙초월채용시스템구축	4,740
	중장년취업아카데미운영	4,500
	해외인턴사업	7,000
고용보험기금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	5,145
총 5개 사업		31,437

자료: 고용노동부, 「2014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2013. 10)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해외취업지원이 2013년 대비 45.6% 증가한 328억 원, 고용창출지원사업이 2013년 대비 137.5% 증가한 1,132억원,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이 2013년 대비 115.2% 증가한 227억원, 임금피크제지원금은 2013년 대비 154.9% 증가한 292억원이다.

[표 9]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	고용센터인력지원	24,292	28,922	35,330	6,408	22.2
	해외취업지원	18,501	22,501	32,772	10,271	45.6
	취업성공패키지지원	166,147	169,642	224,582	54,940	32.4
	청년창직인턴제	6,887	6,887	10,070	3,183	46.2
	사회공헌일자리지원	2,180	2,180	6,370	4,190	192.2
고용 보험	고용창출지원사업	47,662	47,662	113,203	65,541	137.5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53,162	53,162	80,266	27,104	51.0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348,914	348,914	399,554	50,640	14.5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159,356	170,356	208,580	38,224	22.4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1,905	1,905	62,577	60,672	3,184.9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12,269	25,429	39,429	14,000	55.1
	직업훈련생계비대부(용자)	15,280	15,280	30,000	14,720	96.3
	직장어린이집지원	49,840	58,130	76,184	18,054	31.1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	10,563	10,563	22,732	12,169	115.2
	고용연장지원금	41,975	44,975	53,025	8,050	17.9
	임금피크제지원금	11,448	11,448	29,184	17,736	154.9
산재 보험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신축	2,200	2,200	14,608	12,408	564.0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운영	12,434	12,434	19,236	6,802	54.7

자료: 고용노동부, 「2014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2013. 10)

5. 의무지출 사업

의무지출 사업은 2013년 8조 7,508억원 대비 14.6% 증가한 8조 9,745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주요 의무지출 사업을 보면,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직하는 경우 일정기간 생계안정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인원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2013년 대비 9.1% 증가한 3조 8,602억원이 편성되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지급추이를 반영하여 2013년 대비 0.1% 증가한 3조 9,689억원이 편성되었다. 체당금지급은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5.4% 감소한 2,525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0] 고용노동부 의무지출 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총지출		12,739,634	13,873,218	14,019,040	14,479,002	459,962	3.3
의무지출 (비중)		8,416,266 (66.1)	8,716,845 (62.8)	8,750,821 (62.4)	8,974,511 (62.0)	223,690	14.6
일반	ILO분담금(ODA)	13,993	11,538	11,538	10,297	-1,241	-10.8
에특	진폐위로금지급	38,595	43,103	43,103	39,956	-3,147	-7.3
	건강진단	2,956	2,133	2,133	2,178	45	2.1
고용 보험	구직급여	3,442,031	3,537,500	3,537,500	3,860,168	322,668	9.1
	조기재취업수당	234,635	232,513	266,489	137,353	-129,136	-48.5
	자영업자 실업급여	-	2,851	2,851	4,997	2,146	75.3
	모성보호육아지원	600,431	656,986	656,986	698,211	41,225	6.3
산재 보험	산재보험급여	3,851,288	3,963,392	3,963,392	3,968,852	5,460	0.1
임금 채권	체당금지급	232,319	266,813	266,813	252,484	-14,329	-5.4
근복	기타민간상환 (중소복지)	18	16	16	15	-1	-6.3

주: 고용노동부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14년 62.0%

자료: 고용노동부, 「2014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2013. 10)

6. 예산안의 주요 특징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청년, 여성, 고령자, 저소득층) 고용, 직업능력개발, 실직·체불·산재 근로자 안전망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로서, 2014년도 예산안에는 총지출 기준으로 14조 4,790억원을 편성하였다.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2차년도 예산으로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등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민간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중장년 재취업지원, 창업·해외취업 지원, 스펙초월 및 능력중심 사회 구축 등의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201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분석 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제 일자리 창출, 장시간근로 개선, 유연근로 확산 등 민간의 근로시간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이 집행률과 실적이 부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며,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하고 취약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효과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둘째, 중장년 더 오래 일하기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분리 추진되어 사업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임금피크제 지원 사업의 경우 60세 정년연장제 조기도입과 임금피크제 연계를 전제로 증액 편성되었으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부족으로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바, 동 사업의 예산이 집행 가능하도록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해외취업 지원,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성과가 저조한 사업에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K-Move 사업으로 확대한 해외취업지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인턴사업은 해외취업을 등 사업성과가 미흡하므로 참여청년의 졸업예정자 비중을 제고하고 취업연계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예산안 분석 요약

201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업의 유사·중복 1건, 집행실적 부진 2건, 예산 과다 편성 2건, 사업계획 부실 2건, 사업성과 미흡 4건 등 총 11건으로 요약된다.

[표 11]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 분석사항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분석사항
[사업의 유사·중복]						
일반회계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	-	-	4,500	○ 동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이 중장년 전직지원사업과 유사하므로, 두 사업의 통합 추진 필요
[집행실적 부진]						
고용보험 기금	여성고용 안정지원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3,408	10,563	22,732	○ 연례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예산 조정 필요
고용보험 기금	고용창출 지원사업	고용창출 지원사업	22,091	47,662	113,203	○ 연례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 조정 필요
[예산 과다 편성]						
일반 회계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	-	10,052	○ 고용창출 효과가 계획한 것 보다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고용보험 기금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임금피크제 지원	9,763	11,448	29,184	○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의 어려움으로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바, 동 사업의 예산이 집행가능하도록 보완대책 마련 필요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분석사항
[사업계획 부실]						
고용보험 기금	여성고용 안정지원	스마트워크 센터 구축 및 운영	-	-	5,145	○ 현재 민간에서 스마트워크 센터 설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 수요조사 등 철저 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 요가 있으며, 사업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 필요
일반회계	해외취업 지원	해외취업 지원	28,740	22,501	32,772	○ K-Move 사업으로 확대된 해외취업지원 사업이 소 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 록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계획 수립 필요
[사업성과 미흡]						
일반회계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	-	4,740	○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 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2014년 예산은 적정 규모로 조정 필요
일반회계	해외인턴 사업	해외인턴 사업	8,625	8,952	7,000	○ 해외취업률이 저조하므 로, 취업연계효과를 높이 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 으로 검토 필요
일반회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창직 인턴제	16,528	6,887	10,070	○ 인턴기간 확대가 창업률 제 고를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증액된 예산 조정 필요
고용보험 기금	여성고용 안정지원	직장 어린이집 지원	47,836	58,130	76,184	○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 집 설치가 저조하므로, 재정지원 확대 등 성과 제고 방안 검토 필요

자료: 2013예산은 추경예산 반영

II.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1.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을 감안하여 예산 조정 및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연례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고용보험기금, 2010~, 직접 및 위탁)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적합업무 발굴 등을 통해 안정되고 임금·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¹⁾를 창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122억원 증가한 227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	3,408	10,563	10,563	22,732	12,169	115.2
- 인건비 지원	2,008	9,063	9,063	19,532	10,469	115.5
- 컨설팅 지원	1,000	1,000	1,000	1,700	700	70.0
- 운영비	400	500	500	1,500	1,000	200.2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1)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요건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무기계약직),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금지,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감원방지기간 준수, 채용후 3개월간 고용유지, 소정근로시간 대비 연장근로 10% 이상 제한, 소득수준 최저임금의 130% 이상 등이다.

지원대상자가 2013년 3,571명에서 2014년 5,030명으로 확대되고, 지원수준(임금의 50%)의 상한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115.5% 증액되었으며, 컨설팅 사업장이 2013년 100개소에 190개소로 확대되면서 컨설팅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70.0% 증액되었다.

나. 인건비지원의 집행 부진

인건비 지원사업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여, 연간 지원실적이 2011년 139명, 2012년 866명이며, 2013년의 경우 8월까지 859명 지원에 그쳤다.

[표 2]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지원 집행실적: 2010~2014년

(단위: 백만원, 명, %)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10	인건비 지원	3,240	-	-
	지원인원수	2,000	-	-
2011	인건비 지원	5,160	198	3.8
	지원인원수	3,333	139	4.2
2012	인건비 지원	5,360	2,009	37.5
	지원인원수	1,751	866	49.5
2013	인건비 지원	9,063	3,016	-
	지원인원수	3,571	859	-
2014	인건비 지원	19,532	-	-
	지원인원수	5,030	-	-

주: 1. 위탁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의 실집행액 기준임

2. 2013년은 8월말 기준 교부액

자료: 고용노동부(2013. 4)

또한, 재정이 지원된 일자리의 시간당 평균임금(8,143원)은 시간제일자리 시장 평균임금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정규직근로자 시간당 정액급여(12,863원)의 63.3%에 불과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고 평가되기 어렵다.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성파가 부진한 것은 시간제 일자리 시장이 주로 저부가가치 기업과 저숙련 취업애로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창출될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사업의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취약한 우리나라 고용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예산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 등을 보장하도록 관련법²⁾을 개정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적합한 직무형태 개발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 시간제일자리 컨설팅 사업 내실화 필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직무개편 등을 통해 시간제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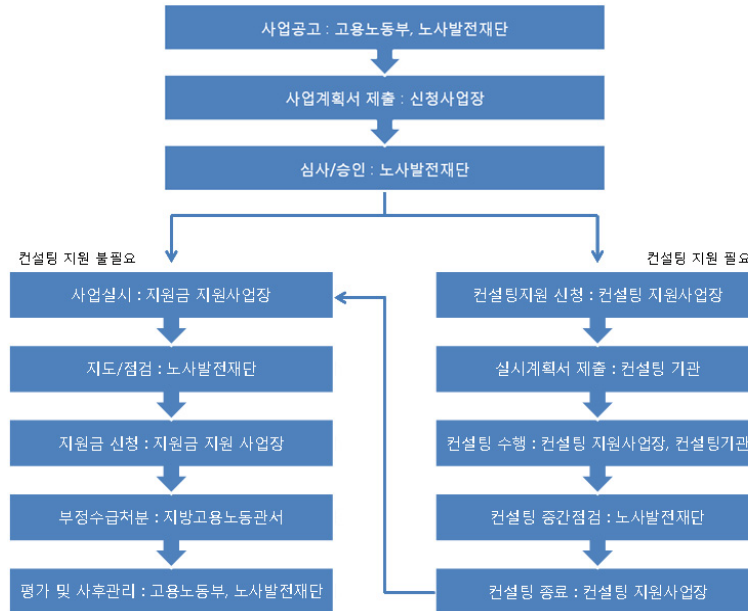
컨설팅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이 위탁하여 수행하며, 사업규모 및 컨설팅 내용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기관에 500~700만원이 지원되고 채용실적에 따라 최대 3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컨설팅 대상사업장이 2013년 100개소에 2014년 190개소로 확대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예산은 7억원(70.0%) 증액된 17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은 신청사업장이 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동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승인하여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과 즉시 시행하여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³⁾

2)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 참여사업장은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건비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인건비가 지원된다.

[그림 1]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추진체계



시간제일자리 창출 노하우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컨설팅을 받은 업체 중 실제 일자리를 창출한 업체 비중이 적어 사업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2012년 동안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208개소 중 실제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장은 57개소(27.4%)에 불과하다.

[표 3] 시간제일자리 컨설팅 사업 추진 실적

	컨설팅 승인사업장	컨설팅 승인사업장 중	
		지원금 지원사업장	지원금 지급인원
2011	104개소	35개소	267명
2012	104개소	22개소	234명
2013. 8월	46개소	2개소	8명

자료: 고용노동부(2013. 10)

따라서 컨설팅 대상사업장을 확대하기 보다는 승인 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컨설팅이 일자리 확대에 이여지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고, 예산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조정 및 사업효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하고 취약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효과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가. 현황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일반회계, 신규, 직접 및 위탁)은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⁴⁾를 신규로 창출한 우선지원대상기업⁵⁾에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신규로 101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	-	-	10,052	순증	순증
- 사회보험료 지원	-	-	-	8,506	순증	순증
- 운영비	-	-	-	1,546	순증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인건비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외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4) 상용형 시간제의 법적 규정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직인 경우이고, 동 사업의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지원요건은 계약기간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직인 경우에 주당 근로시간이 15~30시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의 130~300%, 전일제 근로자와 임금(시간비례원칙), 복지, 승진, 복지 등에서 균등대우 일자리 조건이 추가된다.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등)

[표 2] 고용노동부 소관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사업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든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등)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130% 이상 - 무기계약직(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금지 - 근무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 감원방지기간 준수 - 채용후 3개월간 고용유지 - 소정근로시간 대비 연장근로 10% 이상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130~300% - 상용형 (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직) -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금지 - 신규 고용 또는 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빈일자리 채용
지원내용	임금의 50%(상한 월 80만원)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100% (1인당 58,173원)
지원기간	1년	2년
예산안 및 지원대상자 (2014년)	227억원 (5,030명)	101억원 (37,198명)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13. 10)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신규 고용창출 효과 저조 등 사업효과 미흡 우려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수가 순증한 경우와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 등으로 빈일자리가 발생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첫째, 사회보험료 지원에 따른 시간제 일자리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정부가 계획한 것 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 2014년 계획하고 있는 16만명은 최근 2년간 시간제 일자리 증가추이(5만명)를 감안할 때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다. 시간제 근로자는 고용위기로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대폭 확대된 2009~2010년을 제외하고 2011~2013년 동안 연평균 5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 시간제 근로자(15~64세) 증가 추이 및 정책 목표

(단위: 천명)

과거 추이					국정과제(고용률 70% 로드맵)				
2008.8~ 2009.8	2009.8~ 2010.8	2010.8~ 2011.8	2011.8~ 2012.8	2012.8~ 2013.8	2013	2014	2015	2016	2017
143	136	55	86	31	91	163	206	235	22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13. 10) 및 통계청 제출자료(2010. 10)

둘째, 사회보험료 지원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보다는 저임금의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전일제 근로자 대신 양질의 시간제 근로자 2명을 고용하는 임금 외의 비용(복지비용 등)이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1인당 58,173원) 지원만으로 이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⁶⁾

따라서 사회보험료 지원은 시간제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는 효과가 미흡하고 사업목표와는 달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보다는 취약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효과만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6)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무개편 등으로 시간제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한 경우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인건비가 지원된다.

3. 고용창출지원사업: 집행 실적 부진을 감안한 예산 조정 및 장시간 근로개선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연례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고려하여 추진 가능한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시간 근로 개선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보험기금, 2011~, 직접 또는 민간위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함께하기 도입·확대,⁷⁾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⁸⁾ 전문인력채용,⁹⁾ 고용환경개선¹⁰⁾ 등으로 고용을 확대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655억원 증가한 1,132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고용창출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고용창출지원사업	22,091	47,662	47,662	113,203	65,541	137.5
- 일자리함께하기지원	2,789	12,888	12,888	78,316	65,428	507.7
-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1,523	3,030	3,030	3,650	620	20.5
- 전문인력채용지원	2,975	7,387	7,387	3,823	-3,564	-48.2
- 고용환경개선지원	12,756	22,685	22,685	25,788	3,103	13.7
- 기타 관리비 등	2,228	1,672	1,672	1,626	-46	-2.8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 7) 사업내용: 일자리순환제(Job Rotation) 도입·확대, 교대제전환, 근로시간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지원수준: 일자리순환제·실근로시간단축 연 720만원, 교대제전환 지원우대 최대 연 1,080만원
- 8) 사업내용: 신성장동력산업분야 및 국내복귀기업 중 창업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지원수준: 연 720만원(임금의 75% 한도)
- 9) 사업내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지원수준: 연 1080만원(임금의 75% 한도)
- 10) 사업내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지원수준: 환경개선 투자금액(1천만원 이상)의 50%(5천만원 한도) 및 증가 근로자당 120만원(30명 한도)를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

나. 근로시간단축 등 도입 부진에 따른 연례적인 집행 부진

일자리함께하기지원은 일자리순환제(Job Rotation) 도입·확대, 교대제전환, 근로시간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 예산안 편성의 특징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지원해 오던 인건비 지원이 전년 대비 32.6% 확대되었으며, 설비투자 지원 및 기존 근로자 인건비 지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표 2]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예산안 주요 증액 내역

	2013	2014	주요 내용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1,963명, 129억원	2,974명, 171억원	최대 연 1,080만원 지원
설비투자 직접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160개소, 160억원	투자비용의 30% 매칭 지원, 평균 1억원, 최대 2억원
설비투자 용자지원 (대규모기업)	-	40개소, 400억원	평균 10억원, 최대 50억원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	2,000명, 52억원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1/2 매칭하여 6개월 간 지원, 1억원 한도

장시간 근로 개선을 지원하는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다. 신규채용 인건비지원의 집행률은 2011년 16.1%, 2012년 30.1%, 2013년 9월 현재 26.7%이다.

[표 3] 신규채용 인건비지원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명, 개소, %)

	계획		집행			집행률	
	인원	금액	사업장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1	1,500	1,440	6	65	232	4.3	16.1
2012	1,800	9,180	61	559	2,789	31.1	30.1
2013	1,963	12,888	62	896	3,445	45.6	26.7
2014	2,974	17,100	-	-	-	-	-

주: 2013년 집행은 9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2013. 10)

이는 기업이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꺼려하고,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통해 초과수입을 포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자를 2013년 1,963명에서 2014년 2,974명으로 51.5% 확대 계획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신규 도입된 설비투자 지원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자와 연동되어 편성되었으므로, 동 예산도 조정이 필요하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건비 지원 기업수가 2012년 61개소, 2013년 9월 62개소임을 감안할 때, 2014년 200개소에 대해 신규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것은 과다 계획된 측면이 있다. 더욱이 설비투자는 현인원의 5% 이상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되므로 인건비 지원 요건보다 더 엄격하다.

[표 4]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지원요건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설비투자 직접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설비투자 융자지원 (대규모기업)
지원 요건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교대제 개편 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현 인원의 5% 이상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교대제 개편 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현 인원의 5% 이상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일자리함께하기지원은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며 2014년에도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진 가능한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이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재정지원 이외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 장시간 근로 개선의 실효성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계획 부실로 예산 조정 필요

- 현재 민간에서 스마트워크센터 설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 수요조사 등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 필요

가. 현황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고용보험기금, 신규, 직접)은 일·가정 양립 실현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워크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51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2012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	-	-	5,145	순증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동 사업에서는 스마트워크센터 10개소에 대해 1개소당 5억원의 설치비용이 지원될 계획이며, 설치비용에는 임차보증금, 시설 및 인테리어, 사무집기, 운영경비 등이 포함된다.

나. 사전 수요조사 미 실시 등 사업계획 부실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장시간근로 해소와 유연근로 확산을 통해 고용률 제고를 제안하였으며, 유연근로 확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스마트워크를 확산할 계획이며, 민간부문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해 사업주에게 시설비 및 장비비를 지원하는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10개소, 1개소당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스마트워크센터란 사무실외의 장소에서 IT기기를 활용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워크센터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며, 국내 기업 중 스마트워크센터를 도입한 기업의 사례를 볼 때 유연근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보다는 사업의 성격 상 스마트워크센터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사의 경우 본사 및 국내외 지사 간 영상회의를 실시하여 국내지사 및 해외지사 간 출장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며, □□□사의 경우 생산공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자가 서울 본사에서 원격으로 현지 공장의 업무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표 2] 스마트워크 유형

구분	개념
재택형	근로자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일하는 형태
스마트워크센터	개인 좌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동의 장소 또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동근무 장소에서 일하는 형태
이동형	장소나 시설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제공 현장에서 원격접속이 가능한 기기(휴대폰, PDA 등)를 활용하여 일하는 형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수요 조사 등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가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에 대해 수요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기업 수요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및 민간 간 비용 분담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육아기 여성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지원할 계획인데, 이는 스마트워크센터 내 또는 인접시설에 수유실, 모자휴게실, 보육시설 등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스마트워크 실태 및 수요조사,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 모델 구축, 충분한 사전조사 등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5. 중장년취업아카데미운영: 사업의 유사성에 따른 전직지원사업과 통합 추진 필요

- 동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이 중장년 전직지원사업과 유사하므로 두 사업의 통합 추진 필요

가. 현황

중장년 재취업지원을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퇴직 후 생애 재설계 및 재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동 시스템은 중장년 취업아카데미(신규, 45억원), 중장년 전직지원사업(2006년~, 150억원), 사회공헌일자리(2011년~, 64억원) 등 3개 사업을 주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표 1] 고용노동부 소관 중장년 재취업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

	2012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중장년취업아카데미운영	-	-	-	4,500	순증	순증
중장년 전직지원사업	12,266	14,008	14,008	14,958	950	6.7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2,554	2,180	2,180	6,370	4,190	192.2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이 중 중장년취업아카데미운영(일반회계, 신규, 민간보조)은 고학력, 전문분야 직업경험이 있는 중장년이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력재설계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45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에 따라 만 40세 이상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2014년 1,000명)에 대해 직업훈련 등이 제공되며, 민간운영기관에 1인당 컨설팅 및 훈련비 42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나. 고용노동부 중장년 전직지원사업과 유사

중장년취업아카데미운영은 중장년 전직지원사업¹¹⁾과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두 사업 모두 만 40세 이상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컨설팅, 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한다.

[표 2] 중장년취업아카데미 및 중장년 전직지원사업

구분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중장년 전직지원사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사업시작연도	신규	2006년
2014년 예산	45억원	150억원
주요 예산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운영기관에 1인당 컨설팅 및 훈련비 420만원 지원 - 2014년 1,000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위탁기관)의 인건비 등을 1개소당 3억~10억원 지원 - 2013년 25개소 → 2014년 28개소 - 서비스 지원 인원(2012년) 50,613명
사업목적	중장년의 제2의 인생설계 지원	중장년의 재취업·창업 지원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만 40세 이상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주요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재설계 컨설팅 - 기본역량강화교육 - 기업맞춤형 훈련(채용약정) -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취업알선 - 취업 및 창업교육 - 전직지원 컨설팅 제공 - 대기업 퇴직인력 DB구축 - 대기업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무료 잡매칭 지원 - 중소기업 대상 기업단위 전직지원 서비스
운영기관	중장년 취업지원센터 (노사발전재단), 대학 등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노사발전재단,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무역협회, 지역경총 등)

자료: 고용노동부(2013. 10)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1) 고용보험기금으로 추진되는 취약계층취업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대상자 및 지원내용에서 유사한 사업은 분리 추진되는 것 보다는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추진되는 것이 사업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전직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2014년 28개소)를 중장년 취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로 편성된 중장년취업아카데미운영은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 중장년 전직지원사업으로 통합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임금피크제지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및 보완대책 필요

-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 부족으로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바, 동 사업의 예산이 집행가능하도록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보완대책 검토 필요

가. 현황

임금피크제지원(고용보험기금, 2006~, 직접)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의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및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118억원 증가한 292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임금피크제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임금피크제지원	9,763	11,448	11,448	29,184	11,763	154.9
- 정년연장형	7,748	8,371	6,926	27,007	20,081	289.9
- 재고용형	1,339	1,723	730	1,346	616	84.4
- 근로시간단축형	-	257	257	118	-139	-54.1
- 정년보장형	676	1,097	800	713	-87	-10.9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나. 60세 정년제와 임금피크제의 연계 미흡으로 집행 저조 예상

임금피크제지원 중 정년연장형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는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피크 임금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이하 감액분(최대 60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원한다.¹²⁾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자는 2013년 2,400명에서 2014년 6,820명(184.2%)으로, 예산은 83억원에서 270억원(225.3%)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기존 수

12) 연 근로소득 5,760만원 이하 근로자만 지원된다.

급자 2,400명에 신규수급자가 4,420명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신규수급자를 4,420명으로 계획한 것은 60세 정년연장제가 2016년 실시¹³⁾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60세 정년연장을 조기에 도입하고 임금피크제와 연계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표 2] 임금피크제지원 지원인원 및 지원계획

(단위: 명)

	2010	2011	2012	2013		2014년 계획		
				계획	전망	합계	기존 지원인원	60세 정년제에 따른 추가인원
인원	1,869	2,843	2,377	2,956	2,400	6,820	2,400	4,420

자료: 고용노동부(2013. 10)

정년연장제는 사업주가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합의가 필수적이다.¹⁴⁾ 그러나 임금피크제에 대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도출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표 3]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이루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사업의 예산이 집행 가능하도록 임금직무체계 개편 지원, 임금체계 개편 관련 분쟁해결 지원 등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3)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3년 4월 30일 국회 통과로, 60세 정년제는 2016년부터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1월 국가, 지자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14)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조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임금체계가 유지된다. 한편 60세 정년연장제가 의무화된 이후 기존 정년을 이유로 퇴직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위반에 해당해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7. 스펙초월채용시스템 구축: 사업성과 불확실성에 따라 예산 조정 필요

-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2014년 예산은 적정 규모로 조정 필요

가. 현황

스펙초월채용시스템 구축(일반회계, 신규, 직접 또는 민간보조)은 열정과 잠재력 있는 청년이 해당 분야 대표 멘토의 실무형 멘토링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스펙초월 멘토스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47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스펙초월채용시스템 구축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스펙초월채용시스템 구축	-	-	-	4,740	순증	순증
- 일반수용비	-	-	-	100	순증	순증
- 위탁사업비	-	-	-	100	순증	순증
- 연구개발비	-	-	-	40	순증	순증
- 민간경상보조	-	-	-	4,500	순증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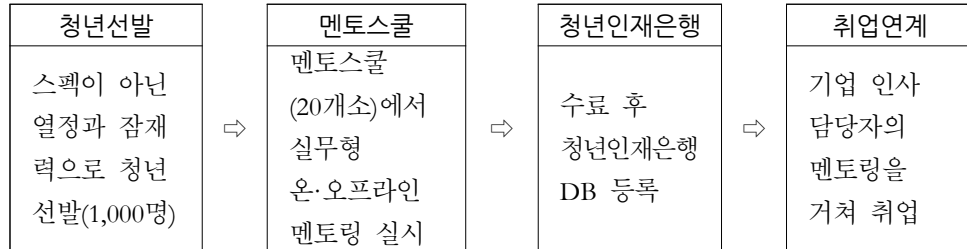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2014년에 1,000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멘토스쿨 20개소에서 멘토링을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 멘토스쿨 위탁운영기관에 1인당 3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멘티에게는 과정 참여기간 소요경비가 1인당 6개월간 120~180만원이 지원된다.

나. 교육 프로그램 지원의 사업성과 불확실

스펙초월채용시스템 구축은 스펙에 관계없이 열정과 잠재력 있는 청년을 선발, 멘토링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청년 선발, 멘토스쿨에서 멘토링 실시, 청년인재은행 DB 등록, 취업연계로 이루진다.

[그림 1] 스펙초월채용시스템 구축 사업의 프로세스



자료: 고용노동부(2013. 10)

스펙초월채용시스템 구축의 주 내용인 멘토스쿨의 멘토링은 청년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소프트웨어, 스마트 앱 개발, 사이버보안 등 문화·정보통신 콘텐츠 분야에서 ‘조현정의 소프트웨어개발 스쿨’, ‘김일호의 캐릭터 스쿨’ 등 8개 멘토스쿨(각 30명, 총 240명)을 시범 운영 중이다.¹⁵⁾ 이는 3~5개월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이며, 멘토스쿨 위탁운영기관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멘티에게는 과정 참여기간 소요경비가 1인당 1개월간 최대 30만원 지원된다.

[표 2] 2013년 멘토스쿨 시범사업 추진 현황

운영기관	교육 프로그램	내용	(단위: 명)
			참여인원
비트컴퓨터	조현정의 소프트웨어개발 스쿨	java, database 등 소프트웨어를 응용하여 전문 프로그램 인재양성(5개월)	30
(주)오콘	김일호의 캐릭터 스쿨	창의력 기반 캐릭터 디자이너 육성(3개월)	30
SK인포섹(주)	신수정의 시큐리티 스쿨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안 인재 양성(3개월)	30
삼성디자인학교	정국현의 산업디자인 스쿨	포트폴리오 제작, 시장조사, 프로젝트 개발 등 다양한 주제 실습을 통한 산업디자이너 양성(3개월)	30
유비벨로스(주)	양병선의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쿨	다양한 스마트기기용 임베디드 SW 개발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양성(3개월)	30

15) 2013년 7월말에 시작되었으며, 기존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2013년 11억원).

(단위: 명)

운영기관	교육 프로그램	내용	참여인원
벤처스퀘어	명승은의 스마트앱 개발 스쿨	스마트 웹&앱 프로그래밍 개발 인재양성(3개월)	30
(주)게임빌	이경일의 모바일게임스쿨	모바일 게임 기획·개발·마케팅 까지 게임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 양성(3개월)	30
한국오라클	민효기의 빅데이터 스쿨	신규분야 빅데이터 관리 등 관련기술 전문가 양성(3개월)	30

자료: 고용노동부(2013. 10)

멘토스쿨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사업성고가 불확실하다. 6개월 짧은 기간의 훈련으로 기존의 스펙을 초월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대표 멘토가 되므로 보편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운 과정이므로, 또 다른 스펙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동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시범사업 이후 계속추진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2014년 예산은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8. 해외취업지원: 사업 확대 이전에 충분한 계획 수립 필요

- K-Move 사업으로 확대된 해외취업지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장기훈련의 경우 취업 후 지원되는 연수비용은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감액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해외취업지원(일반회계, 1998~, 출연)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교육 등을 제공하여 어학 및 직무역량을 제고함으로써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103억원 증가한 328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해외취업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해외취업지원	28,740	18,501	22,501	32,772	10,271	45.6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2014년 예산안 증액은 K-Move 스쿨 지원대상자가 2013년(추경) 120명에서 2014년 2,100명으로 확대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K-Move 사업은 청년층의 해외 일자리 확장을 위해 열정·잠재력이 있는 청년을 전문가 멘토링, 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통해 해외 취창업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 중 K-Move 스쿨은 맞춤형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내역사업이며, 참여하는 청년에 대해 1인당 580~800만원의 연수비용이 지원된다.

[표 2] 해외취업지원 내역사업

(단위: 백만원, %)

	2013 추경	2014 예산안	증감	증감율
해외취업지원	22,501	32,772	10,271	45.6
- 맞춤형 해외취업 훈련	4,500	-	-4,500	순감
- 글로벌청년취업(GE4U)	4,500	4,500	-	-
- K-Move 스쿨	960	12,620	11,660	1,214.6
- K-Move 멘토단	1,035	870	-165	-15.9
- K-Move 핵심거점	450	2,500	2,050	455.6
- K-Move 홍보사이트	250	-	-250	순감
- K-Move 헬프데스크	-	1,796	1,796	순증
- 월드잡 고도화	1,002	2,511	1,509	150.6
- 해외취업성공장려금	3,600	3,084	-516	-14.3
- 일자리 발굴 및 홍보	2,599	1,545	-1,054	-40.6
- 민간 해외취업알선 지원	1,000	1,000	-	0.0
- 취업애로청년층해외취업지원	900	900	-	0.0
- 기타	1,705	1,446	-259	-15.2

자료: 고용노동부(2013. 10)

나.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계획 수립 필요

정부는 기존 맞춤형 연수사업이 연수기간이 짧아 어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취업처의 일자리 질이 낮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K-Move 스쿨로 일원화하였다. K-Move 스쿨은 2013년 4월 추경 편성을 통해 시범 추진(120명, 9.6억원)되었으며, 2014년 기존 맞춤형 해외취업 훈련사업(1,000명)과 통합되면서 2,100명으로 확대되었다.

K-Move 스쿨은 기존 맞춤형 연수사업에 비해 워킹홀리데이 등의 단기 일자리가 아닌 취업비자가 발급되는 질 높은 취업처이며, 직무 관련 자격증과 연계된 장기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취업처 발굴, 운영기관 선정 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맞춤형 해외취업 훈련사업과 K-Move 스쿨 비교

	맞춤형 해외취업 훈련사업	K-Move 스쿨
연수모델	구인기업에 따른 각각의 연수과정	IT 등 우리가 강점이 있거나 신흥시장 취업과 연계된 과정 등
취업처	특정하지 않음 (단, 단순노무직종 외 직종)	특화된 국가, 직종 중심 일자리 (근로조건, 취업비자 등 중시)
비자 등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비자 (취업, 워킹홀리데이, J-1 비자 등)	취업비자 중심 (진출국가별 사정에 따라 J-1 비자 등 제한적 인정)
운영기관	영리법인, 대학	국내외 비영리법인(영리법인 최소화), 구인기업, 대학 등
연수기간	1~6개월 단기과정	6~12개월 장기과정 (직무 관련 자격증 등 연계)
멘토링	-	K-Move 멘토단과의 연계(필수)
1인당 연수비용	최대 450만원(연수비 70%) * 이외 개인부담	최대 800만원 * 운영기관 대응투자 시 우대
지원인원	2013년 1,000명	2014년 2,100명

자료: 고용노동부(2013. 10)

기존 맞춤형 해외취업 훈련사업 지원대상자가 1,0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K-Move 사업 지원대상자를 2,10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경우 내실 있는 운영기관 선정이 어려우며, 질 좋은 일자리로의 연계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K-Move 사업으로 확대한 해외취업지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영기관 연수비용의 60%는 선지급 되고 나머지 40%는 취업 후 지원될 계획이다. 그러나 운영기관 모집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취업 후 지원되는 연수비용의 40%에 대해 연내 전액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

9. 해외인턴사업: 사업성과 제고방안 필요

- 해외취업을 저조 등 사업성과가 미흡하므로 참여청년의 졸업예정자 비중을 제고하고 취업연계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

가. 현황

해외인턴사업(일반회계, 2009~, 출연)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대졸 미취업자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등을 제공하고 구인처가 요구하는 역량을 제고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20억원 감소한 70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해외인턴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해외인턴사업	8,625	8,952	8,952	7,000	-1,952	-21.8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해외인턴사업은 산업부 등 6개 부처에서 운영하던 해외인턴 프로그램 9개 사업¹⁰⁾이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것으로서, 2014년에는 해외인턴 청년 950명에 대해 항공료, 체제비 등이 1인당 730만원(최대 6개월) 지원될 계획이다.

나. 해외취업을 저조 등 사업성과 미흡

기존에는 각 부처가 해외인턴 개별사업을 담당하고 교육부가 예산과 사업평가를 총괄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각 부처 개별사업이 고용노동부 소관 해외인턴사업으로 통합되고, 고용노동부가 기본추진계획 수립, 운영기관 심의 등 총괄 기능뿐만 아니라 예산과 사업수행을 담당할 계획이다.

16) 글로벌무역인턴십·플랜트해외인턴·전시회 해외인턴·해외한인기업인턴(산업통상자원부), 외식기업 해외인턴(농림축산식품부), 물류인력 해외인턴(국토교통부), 해외관광인턴(문화체육관광부), 국제전문여성인턴(여성가족부), 중소기업 해외인턴(중소기업청)

해외인턴사업은 그 동안 취업연계 시스템이 미흡하여 해외취업을 저조 등 사업성과가 부진하였다. 2012년 인턴참여자 1,212명 중 해외취업은 57명(4.7%)에 불과하였다. 또한 해외인턴사업은 현장학습 중심으로 운영되어 2~3학년 대학재학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으며, 참여기업도 인턴기간 후 취업 연계 보다는 단기적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표 2] 해외인턴 참가자 진로현황(2012년)

(단위: 명)

사업명	참여자	중도 포기자	프로그램 수료자						
			국내 취업	국외 취업	복학	진학	기타	미파악	계
글로벌무역인턴십	123	-	19	2	-	-	102	-	123
플랜트해외인턴	280	-	159	6	62	-	53	-	280
전시회 해외인턴	156	-	35	1	117	-	-	3	156
해외한인기업해외인턴사업	102	-	34	10	24	-	34	-	102
외식기업해외청년인턴	110	-	6	1	-	-	-	103	110
해외관광인턴	104	14	4	6	25	1	20	34	90
국제전문여성인턴	40	-	18	3	10	5	-	4	40
물류인력해외인턴	60	-	11	6	29	-	14	-	60
중소기업해외인턴	237	2	42	22	-	3	1	167	235
합 계	1,212	16	328	57	267	9	224	311	1,196

자료: 고용노동부(2013. 10)

또한 기존 해외인턴사업 추진 체계를 보면 교육부가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담당부처는 단위사업 추계계획 수립 및 시행기관에 통보하며, 시행기관(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은 단위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담당부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사업이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어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은 예산배정, 실적점검 등 제한적인 역할만을 담당하여 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인턴 참여청년의 졸업예정자 비중을 제고하고, 채용희망 기업 중심으로 인턴기업을 선정하는 등 취업연계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의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0. 청년창직인턴제: 사업성과가 미흡하므로 예산 조정 필요

- 부적절한 사업운영으로 창업률 저조 등 사업성과가 미흡하므로,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턴기간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증액된 예산은 조정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청년창직인턴제(일반회계, 2010~, 민간위탁)는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문화콘텐츠 등의 산업분야에서 성공한 기업가와 함께 일하면서 전문지식과 창직·창업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32억원 증가한 101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청년창직인턴제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청년창직인턴제	16,528	6,887	6,887	10,070	3,183	46.2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인턴(3,000명)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인건비의 50%(평균 65만원)가 지원되며, 2014년 예산안 증가는 인턴 지원기간이 2013년 3개월에서 2014년 5개월로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

나. 창업률 저조 등 사업성과 미흡

현 정부는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 중 청년층 고용률 제고를 위해 청년취업·창업 활성화, 해외취업 활성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중 청년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직인턴제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6.2% 확대되었다.

청년창직인턴제는 2010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창업실적이 저조한 등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기간 동안 중도탈락자가 많으며, 수료 이후

에도 창업률이 낮으며, 취업자가 창업자보다 많은 실정이다. 2010~2012년 동안 참여자 6,082명 중 1,443명(23.7%)이 중도에 탈락하였으며, 인턴참여자 중 창업자는 593명(9.7%)인 반면 취업자는 939명(15.4%)이다.

[표 2] 청년창직인턴제 사업 성과

(단위: 명, %)					
	참여자	수료자	중도탈락자 (중도탈락률)	창업자 (창업률)	취업자 (취업률)
2010	664	471	193	76	198
2011	1,850	1,342	508	139	335
2012	3,568	2,826	742	378	406
합 계	6,082	4,639	1,443 (23.7)	593 (9.7)	939 (15.4)

주: 인턴참여자 중 중도탈락자, 창업자, 취업자 비중

자료: 고용노동부(2013. 10)

동 사업은 청년이 창업기업에서 5개월 간의 인턴기간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창업노하우를 전수받도록 하는 사업이나, 사업성과 저조는 사업운영 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턴지원방식은 참여 기업의 창직노하우 전수 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인턴 이후 창업자금 지원과 연계되지 않으므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에게 멘토링, 창업자금, 창업공간 등 사업모델 현실화까지 지원하는 방식보다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¹⁷⁾

따라서 2014년 인턴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는 계획이 창업률 제고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타부처 창업자금 지원과 연계 등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인턴기간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증액된 예산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

17) 동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고용노동부)의 창업률은 2011년 68%, 2012년 70%이다.

11. 직장어린이집지원: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저조하므로 사업성과 제고방안 필요

-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지원의 실효성이 낮고 보육수요 부족 등으로 인한 단독 설치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저조하므로, 성과제고 방안 검토 필요

가. 현황

직장어린이집지원(고용보험기금, 1995~, 직접)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181억 원 증가한 762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직장어린이집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직장어린이집지원	47,836	49,840	58,130	76,184	18,054	31.1
- 공공보육시설운영지원	3,500	4,994	5,082	6,274	1,192	23.5
-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15,457	14,932	23,134	23,674	540	2.3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지원	27,926	28,400	28,400	44,725	16,325	57.5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953	1,514	1,514	1,509	-5	-0.3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동 사업은 공공보육시설 설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직장보육교사 등의 인건비,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2014년 예산안 증액은 중소기업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2013년 100만원 → 2014년 120만원)에 주로 기인한다.

나.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저조

대규모기업¹⁸⁾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인 반면, 중소기업¹⁹⁾은 상대적으로 여성인력²⁰⁾이 높고, 보육수요가 많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에 대해 설치의무를 두지 않은 것은 부지·건물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과 설치 후 계속 발생하는 운영비 등이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설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대기업보다 높은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며,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한도가 더 높다.

[표 2] 직장보육시설 지원내용

구분	지원 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요건
				2013	2014	
설치비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2000~)	시설 전환비	단독	2억원	3억원	- 소요금액의 60~90% 지원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90%, 중소기업 80%, 영아·장애아 시설 80%, 기타 사업장 60%) - 유구비품은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공동	5억원	6억원	
			산단형	15억원	15억원	
		유구비품비		5천만원	5천만원	
운영비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1995~)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 ~100만원	1인당 월 80만원 ~120만원	- 시설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 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11.8.1부터 시간제보육교사 인건비지원 - 대규모기업 월 80만원, 중소기업 월 120만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2011~)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규모별 월 120~520만원 (*121월부터)	규모별 월 120~520만원 (*121월부터)	19인 이하(120만원)~100인 이상(52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2013. 10)

18)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9) 상시근로자 500명 미만, 여성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 여성종사자 비중: 300인 이하 41.0%, 300~500인 32.1%, 500인 이상 31.7%

이러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이 시작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장 381개소 중 중소기업은 98개소(25%)에 불과하다.

[표 3]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현황

(단위: 개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대규모 기업	1	-	-	10	15	15	27	14	22	19	50	46	64	283
우선지원 대상기업	1	2	-	6	7	4	6	7	5	12	11	19	18	98
합 계	2	2	-	16	22	19	33	21	27	31	61	65	82	381

주: 고용보험가입사업장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2013. 10)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전환비만 포함되고 신축비, 매입비 등은 제외되어, 정부지원이 실제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2년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신축비용 중 정부지원액 비중은 32.5%에 불과하며,²¹⁾ 정부지원 상한액(단독 2억원, 공동 5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시설전환비 지원단가 인상²²⁾은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1) 산단형의 경우 시설전환비 및 시설건립비가 지원되므로 제외한다.

22) 2014년 단독의 경우 2013년 2억원에서 3억원, 공동의 경우 2013년 5억원에 6억원으로 인상

[표 4] 2012년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전체 소요 비용(A)	정부지원 결정액(B)	비율 (B/A)	단독/공동
(의)청화의료재단 시민요양병원	345	350	72.5	단독
(주)마리오 (공동)	437	339	77.6	공동
한솔인티큐브(주)	208	154	74.0	공동
에스비에스플러스	458	360	78.6	공동
대전한국병원	159	91	57.2	단독
사회복지법인 갈릴리사랑의 집	509	250	49.1	단독
(주)에버그린광주스포렉스	61	56	80.0	공동
(주)더존비즈온	645	438	67.9	공동
인천국제공항공사	6,290	550	8.7	공동
(주)씨앤에스	670	381	56.9	공동
(주)네오위즈게임즈	1,009	550	54.5	공동
(의)영문의료재단	187	148	79.1	단독
합 계	10,987	3,567	32.5	-

자료: 고용노동부(2013. 10)

또한 중소기업은 보육수요 부족 및 재정부담으로 단독 설치가 어려우므로 대다수 공동으로 설치하며, 모두 대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대기업과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로, 이는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방식을 차별화하고 설치비를 건물매입·신축비 지원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성과 제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

I. 기상청 예산안 총괄

1. 예산안 개요

2014년 기상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계¹⁾ 기준 세입은 2013년 본예산 대비 7억 5,800만원(28%) 증액된 34억 6,700만원이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295억원(9.2%) 증액된 3,483억원인데, 이는 정지궤도기상위성개발사업과 차세대 도시·농림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개발사업에서의 대폭 증액에서 기인한다.

[표 1] 기상청 예산안 개요(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입	일반회계	4,213	2,709	-	3,467	758	28.0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111	-	-	-	-	-
	총 계	4,324	2,709	-	3,467	758	28.0
지출	일반회계	298,554	318,838	-	348,289	29,451	9.2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14,309	-	-	-	-	-
	총 계	312,863	318,838	-	348,289	29,451	9.2

자료: 기상청(2013. 10)

강상규 예산분석관 (skang@assembly.go.kr, 788-4635)

1) 기상청은 총계와 총지출이 동일함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014년 신규 사업은 일반회계 4개 사업으로 40억원 규모이다. 특히, 2017년 발사 예정인 천리안 후속 정지궤도기상위성의 자료를 실시간 관제·수신·처리·분석·서비스 하기 위한 지상국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지궤도기상위성 지상국개발사업(R&D)이 28억원의 예산안으로 신규 편성되었다.

[표 2] 기상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 예산안
일반회계	WMO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	430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	88
	보성 글로벌표준관측소 활용 연구	700
	정지궤도기상위성지상국 개발	2,780
총 4개 사업		3,998

자료: 기상청(2013. 10)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정지궤도기상위성개발사업은 2013년 대비 220억원(220%)이 증가하였고, 차세대 도시·농림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사업은 45억원(81.9%) 증액되었으며,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구축사업과 청사이전지원 사업은 각각 26억원(81.1%)과 9억원(371.5%) 증가하였다.

[표 3] 주요 증감사업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	2014 예산안	증 감	
		(A)	(B)	(B-A)	(B-A)/A
일반회계	국가태풍센터 운영	795	1,050	255	32.1
	지상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5,680	6,567	887	15.6
	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3,623	3,688	65	1.8
	기상레이더 운영	8,820	9,485	665	7.5
	범부처 융합 이중편파레이더 활용기술개발(R&D)	1,000	2,000	1,000	100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9,810	10,111	301	3.1
	기후변화관측망보강	1,014	1,300	286	28.2
	지역기후서비스	1,883	2,141	258	13.7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	2014 예산안	증 감	
		(A)	(B)	(B-A)	(B-A)/A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장기예보 서비스 체계 구축	1,388	1,471	83	6.0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5,482	6,500	1,018	18.6
	기상산업활성화	2,483	3,577	1,094	44.1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 체계 구축(정보화)	3,206	5,807	2,601	81.1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R&D)	5,500	10,003	4,503	81.9
	고고도 장기제공시범기 기상센서 탑재 및 활용기술개발(R&D)	1,000	1,030	30	3.0
	예보기술지원 및 활용연구(R&D)	5,200	5,650	450	8.7
	기후변화 예측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R&D)	3,611	3,800	189	5.2
	정지궤도기상위성개발(R&D)	10,000	32,000	22,000	220
	기상산업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R&D)	3,535	6,000	2,465	69.7
	항공기상관측망 구축 및 장비운영	3,940	5,235	1,295	32.9
	청사이전 지원	239	1,127	888	371.5

자료: 기상청(2013. 10)

3. 의무지출 예산안

의무지출사업으로는 WMO 국가분담금이 있으며 2013년 대비 14.9% 감소한 15억 7,800만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다. 2014년 기상청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로 2016년(0.6%)에 비하여 약간 낮아진 수준이다.

[표 4] 기상청 의무지출 총괄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증 감	
					(B-A)	(B-A)/A
총지출(A)		312,863	318,838	348,289	29,451	9.2
의무지출(B) (비중, B/A)		2,285 (0.7)	1,854 (0.6)	1,578 (0.4)	-276	-14.9
일반 회계	WMO 국가분담금	2,285	1,854	1,578	-276	-14.9

자료: 기상청(2013. 10)

4. 예산안의 주요 특징

기상청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라 기상(지상 및 수상 포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2014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3,483억원을 편성하였다.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국정과제’ 및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실천을 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기후변화 감시·예측능력 확보, 위험기상 감시 강화와 기상기후산업 진흥 등에 역점을 두었다.

2014년 기상청 예산안 분석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상청은 장비의 유지·보수, 기상정보 제공, 관측기기 측정 업무 등을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시키고 있는데, 항공기상라이다 장비 도입의 경우 2년에 걸쳐 기상청과 조달업자간 장비의 성능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4년 상반기까지도 이러한 분쟁이 해결될 기미가 희박한바, 2014년 항공기상라이다 도입 임차료 예산안의 조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둘째,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와 재해기상연구센터 등은 아직 기상청 정식 직제에 반영되지 못하여 인건비나 운영비를 비목에 맞지 않게 시험연구비나 타사업의 운영비에 반영하여 집행할 계획에 있는데, 조속한 직제 개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날씨경영인증제도 운영과 기상기후전문인력 양성을 대행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어 민간대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날씨경영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사업의 경우, 지난 2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 이를 고려하여 2014년 동 예산안의 조정이 요구된다.

넷째, 기상레이더 운영사업의 경우 레이더타워공사 및 레이더 테스트베드 공사를 위한 건설비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연례적으로 상당 규모의 이월액과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2014년 기상레이더 운영사업에 반영된 건설비는 지난 3년간(2011-2013)의 집행실적 부진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예산안 분석 요약

2014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집행실적 부진 2건, 법·제도 미비 1건 등 총 3건으로 요약된다.

[표 5] 기상청 예산안 주요 분석사항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분석사항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집행실적 부진]						
일반 회계	항공기상장비 보강 및 운영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 및 장비운영	○ 기상청과 조달업체간 항공기상레이더 장비 검사검수를 둘러싼 분쟁이 2014년 상반기까지 해결될 여지가 없어 동 장비 도입입차료의 조정이 요구됨	4,147	3,940	5,235
일반 회계	고층기상 관측망 운영	기상레이더 운영	○ 레이더타워 및 레이더테스트베드 건설비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집행실적 부진과 2013년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일부 조정 필요	8,867	8,820	9,485
[법·제도 미비]						
일반 회계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서비스 확대	기상산업 활성화	○ 날씨경영인증제도 및 동 인증제도 대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2012-2013년간 집행실적 저조를 고려하여 날씨경영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사업 예산안 조정 필요 ○ 기상기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기상청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민간대행의 근거를 마련한 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1,720	2,483	1,094

II. 기상청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1. 항공기 기상관측망구축 및 장비운영사업: 사업지연을 고려하여 항공기상라이다 도입 임대료 예산 조정 필요

- 기상청과 조달업체(주. K-Weather)간 장비의 검사·검수를 둘러싼 분쟁이 2014년 상반기까지 해결될 여지가 없어 예산집행의 차질이 우려됨으로, 2014년 항공기상 라이다 도입 임대료의 합리적 조정이 요구됨.

가. 현황

항공기 기상관측망 구축 및 장비 운영사업(일반회계, 2001~계속/직접, 민간대행)은 항공기상청의 시설관리 및 항공기상 관측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14년 예산안은 2013년 대비 12억 9,500만원(32.9%) 증가한 52억 3,500만원이다.

[표 1] 항공기 기상관측망 구축 및 장비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항공기 기상관측망 구축 및 장비 운영	4,147	3,940	-	5,235	1,295	32.9
- 공항기상라이다 도입 임차료	1,100	1,100	-	1,100	-	-

자료: 기상청,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II-1)」(2013. 9)

나. 항공기상라이다장비 도입 지연

공항기상라이다¹⁾ 도입임대료는 동 장비의 도입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인데, 2012-2013년간 라이다 도입사업의 장비도입 지연과 장비 검수문제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 라이다(LIDAR)는 대기 중 입자에 대한 레이저 반사파의 도플러 효과(적색/청색편이 현상)를 이용하여 공항 인근 10km 반경 하늘의 바람상태를 실시간 관측하여 관제탑, 조종사, 기상청 등에 저층 난류(윈드 시어 등) 발생 경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이·착륙을 지원하는 장비

당초 항공기라이다 도입사업은 2011년부터 민간대행(한국기상산업진흥원)으로 추진되었는데, 2011년 구매계약을 거쳐 2012년 김포와 제주공항에 각각 1대씩 설치할 계획이었다. 2011년 12월 28일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탈락업체의 소송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2012년 4월에 이르러 신용장을 개설하고 2013년 4월에 라이다 장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2013년 7월 검사·검수과정에서 기상청의 장비 성능에 대한 문제 제기로 라이다 장비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상청과 조달업체간에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상청은 장애가 빈발하고 관측 속도가 떨어지며 오류가 빈발하는 장비의 성능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조달업체는 제조업체가 프랑스에 위치하여 장비를 반송하여 성능을 개선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지체상금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항공기상라이다장비의 도입 지연으로, 기상청은 2012년 동 장비 도입 임차료(11억원)를 포함한 18억원을 불용시키지 않고, 공항기상레이더(TDWR) 부품 교체, 기상레이더 신규 도입사업 후보지(인천공항)조사 및 용역, 공항기상레이더(TDWR) 데이터 보존·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항공기상 업무 및 서비스정비를 위한 리눅스 서버 구입 등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또한 2013년 항공기상라이다 도입 임대료(11억원)는 현재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항공기상라이다 장비도입이 2년째 지연되고 있고, 특히 기상청과 조달업체간 분쟁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2014년 항공기상라이다 도입 임차료 예산안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2014년 임대료는 1년에 2번에 걸쳐 5억 5,000만원씩 지불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상청과 조달업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므로 상반기(6개월)분의 도입 임대료는 삭감 조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기상산업활성화사업: 민간대행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날씨경영인증제도 및 동 인증제도 대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2012-2013년간 집행실적 저조를 고려하여 날씨경영인증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 사업의 예산안 조정 필요
- 기상기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기상청이 직접 추진하든지 아니면 민간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가. 현황

기상산업활성화사업(일반회계, 2006~/직접사업)은 기상측기의 검증, 기상정보의 제공, 기상산업시장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민간대행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2014년 예산안은 2013년 대비 10억 9,400만원(44.1%) 증가한 35억 7,700만원이다.

동 사업의 예산안이 전년대비 대폭 증액된 것은 2013년 6월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의 개정을 통하여 출연의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인건비, 경영성과급, 운영비 등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의 74%(26억 4,700만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고, 26%(9억 3,000만원)은 대행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기상산업활성화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상산업활성화	1,720	2,483	-	3,577	1,094	44.1
- 날씨경영인증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26	100	-	100	100	순증
-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지원	-	-	-	130	130	순증

자료: 기상청,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II-1)」(2013. 9)

나.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역무대행의 근거 미흡

(1) 날씨경영인증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사업

날씨경영인증제도는 날씨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기상정보를 경영활동에 활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를 인증해 주는 제도인데, 동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날씨경영인증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사업이 2011년 11월 마련된 ‘날씨경영인증제도 운영요령’에 기반을 두고 2012년부터 예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날씨경영인증제도 및 인증대행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자체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부족하여 참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동 제도에 참여한 기업이 2012년에는 45개 그리고 2013년 9월 현재 34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참여 실적 저조로 인하여 2012-2013년간 날씨경영인증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사업 예산 집행실적도 각각 25.2%와 64%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제8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기상산업 진흥 및 아이디어 제안부문 심사평가회와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비목에 없는 예산집행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날씨경영인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동 제도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인증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2014년 예산안은 2012-2013년간 집행실적 부진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이 요구된다.

[표 2] 날씨경영인증 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사업 집행내역

(단위: 천원)

	집행내역	집행액
2012	1. 제1회 날씨경영인증(수여식 개최)	3,812
	2. 제2회 날씨경영인증(상표출원, 현장심사 및 수여식 개최 등)	5,748
	3. 제1회 기상기후정보 활용 세미나(회의실 대관, 여비, 등)	5,613
	4. 제2회 기상기후정보 활용 세미나(홍보물 제작 및 행사진행비)	3,423
	5. 제3회 기상기후정보 활용 세미나(홍보물 제작 및 행사진행비, 여비)	4,384
	6. 제4회 기상기후정보 활용 세미나(홍보물 제작 및 행사진행비)	2,466
	7. 우수 날씨앱 인증	321
	소 계	25,446

(단위: 천원)

	집행내역	집행액
2013	1. 제3회 날씨경영인증(현장심사, 수여식 개최 등)	4,660
	2. 제1차 날씨경영설명회(자료집, 홍보물 제작, 여비 등)	1,030
	3. 제2차 날씨경영설명회(자료집, 홍보물 제작, 여비 등)	1,469
	4. 제3차 날씨경영설명회(자료집, 홍보물 제작, 여비 등)	862
	5. 제8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기상산업진흥 및 아이디어 제안 부문 (심사평가회, 시상금 등)	9,080
	6. 기상기업 비즈니스지원단(출범식, 홈페이지구축, 자문실시, 여비 등)	11,352
	7. 날씨경영인증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발표심사, 컨설팅 지원금 등)	35,873
	소 계	53,899

주. 2013년은 9월말 기준

자료: 기상청(2013. 10)

(2)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동 사업은 국정과제²⁾를 반영하여 2014년 신규로 추진될 예정인데, 대학생·미취업자·재직자 재훈련 등을 통하여 기상산업 핵심인력을 양성하여 고용 및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동 사업은 기상기후산업 전문인력 양성(1억원)과 신규 창업 및 창업기업 활성화지원(3,000만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민간대행으로 추진될 예정이나 아직 대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기상청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제5항을 대행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본 조항은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수행업무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³⁾

따라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기상기후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기상청이 직접 추진하든지 아니면 예산사업에 앞서 민간대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국정과제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국정과제 8)’과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국정과제 21)’을 반영하여 신규 편성

3)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 제5호: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2. 기상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3. 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4. 기상관측 장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대민 기상상담시설 운영·관리 6. 그 밖에 기상산업진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기상레이더 운영사업: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 건설비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바, 2014년 건설비 예산안은 이러한 집행실적 부진과 2013년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이 요구됨.

가. 현황

기상레이더운영사업(일반회계, 1999~/직접사업)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기상레이더를 최첨단 레이더로 교체하는 등 국가 기상레이더망의 첨단화를 통하여 레이더자원의 고품질화 및 다분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예산안은 2013년 대비 6억 6,500만원이 증가한 94억 8,500만원이다.

[표 1] 기상레이더 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상레이더 운영	8,867	8,820	-	9,485	665	7.5

자료: 기상청,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II-1)」(2013. 9)

나. 건설비 집행부진에 따른 연례적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

2009년부터 기상레이더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기상레이더의 기종과 제작사가 달라 레이더의 품질편차가 크고 운영비용도 과다 소요되고 있으며 국방부-국토해양부-기상청간 소유 레이더의 공동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기상청은 이의 해결을 위하여 기상레이더 단일모델(S-band 이중편파레이더) 도입과 레이더 테스트베드 건립·운영을 통한 국가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표준화 및 첨단화를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2011-2013년간 기상레이더 운영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기상청의 정책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011년에는 예산현액 102억원 중 80억원이 집행되어 78.8%의 집행실적으로 나타나고, 2012년에는 예산현액 101억원 중 89억원이 집행되어 8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3년(10월 기준)의 경우 예산현액 98억원 중 65억원이 집행되어 66.5%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기상레이더 운영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A/B)
기상레이더 운영	2011	10,158	-	17/-17	10,158	8,007	1,160	991	78.8
	2012	8,919	1,160	2/-1	10,080	8,867	995	218	88.0
	2013	8,820	995	-	9,815	6,522	-	-	66.5

자료: 기상청(2013. 10)

이러한 기상레이더 운영사업의 집행실적 저조는 무엇보다도 s-band 이중편파 레이더설치를 위한 레이더타워 보강공사와 레이더 테스트베드 건립사업 등 건설비의 집행 저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011년의 경우 건설비 예산현액 32억 9,800만원 중 13억 4,100만원이 집행되어 40.7%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는데, 이는 백령도 레이더타워 보강 공사의 지연으로 11억 6,000만원이 이월되고 공사낙찰 차액으로 7억 9,7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2012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11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5억 3,400만원이었으나 이 중 14억 5,200만원이 집행되어 57.3%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부진은 레이더 테스트베드구축공사의 지연으로 9억 9,500만원의 이월과 낙찰차액 8,700만원의 발생에 기인한다. 2013년의 경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28억 3,300만원인데 레이더테스트베드 공사지연과 면봉산 레이더타워 공사부진으로 11억 8,300만원만이 집행되어 41.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표 3] 기상레이더 운영사업 중 건설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A/B)
건설비	2011	3,315	-	-17	3,298	1,341	1,160	797	40.7
	2012	1,374	1,160	-	2,534	1,452	995	87	57.3
	2013	1,838	995	-	2,833	1,183	-	-	41.8

주. 2013년은 10월 기준임

자료: 기상청(2013. 10)

2014년 기상레이더 운영사업에는 면봉산 레이더타워 공사비를 포함하여 15억 8,000만원의 건설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3년간의 건설공사 지연 그리고 이로 인한 연례적 이월액 및 불용액의 발생을 고려할 때, 집행가능성과 2013년 이월액 발생 규모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안의 일부 조정이 요구된다.

제 3 장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I. 국토교통부 예산안 총괄

1. 예산안 개요

2014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및 1개 기금(국민주택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계 기준 세입 및 기금수입은 2013년 본예산 대비 5조 1,850억원(9.1%) 증액, 추경예산 대비 4조 7,380억원(8.3%) 증액된 62조 810억원이고, 세출 및 기금지출은 2013년 본예산 대비 4조 7,757억원(6.1%) 증액, 추경예산 대비 3조 5,837억원(4.5%) 증액된 82조 9,737억원이다.

[표 1] 국토교통부 예산안 개요(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입	세입	14,534,422	15,178,025	15,625,025	15,536,408	-88,617	-0.6
	기금수입	45,362,159	41,717,965	41,717,965	46,544,618	4,826,653	11.6
	총계	59,896,581	56,895,990	57,342,990	62,081,026	4,738,036	8.3
지출	세출	31,896,740	36,480,041	37,672,016	36,429,061	-1,242,955	-3.3
	기금지출	45,372,159	41,717,965	41,717,965	46,544,618	4,826,653	11.6
	총계	77,268,899	78,198,006	79,389,981	82,973,679	3,583,698	4.5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총지출은 2013년 본예산 대비 7억원(0.0%) 감소, 추경예산 대비 1조 9,197억원(4.7%) 감소한 38조 5,427억원이다.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로 2013년 본예산 11.3% 대비 0.5%p가 감소하였고, 추경예산 11.6% 대비 0.8%p가 감소하였다.

김효진 예산분석관(hjk@assembly.go.kr, 788-4629)

남 희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표 2] 국토교통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회 계	16,988,892	21,325,458	22,020,433	20,517,571	-1,502,862	-6.8
기 금	19,322,715	17,217,979	18,441,979	18,025,124	-416,855	-2.3
총지출	36,311,607	38,543,437	40,462,412	38,542,695	-1,919,717	-4.7

주: 총지출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여유자금, 차입금원금상환),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2. 회계·기금별 개요

가.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 세입예산안을 각 회계별 총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통회계는 경부고속 철도건설 지원 용자금의 조기상환하여 세입규모가 2013년 15조 6,080억원에서 2014년 14조 7,544억원으로 5.5%감소하였다. 혁특회계는 중전부동산 매각 부진에 따른 청사신축비의 공자기금 차입 증가로 2013년 △6,572억원에서 2014년 639억원으로 109.7%증가하였다. 광특회계는 법정부담금 중 개발부담금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세입규모가 2013년 5,623억원에서 2014년 6,154억원으로 9.5%증가하였다.

[표 3] 국토교통부 세입예산안(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회계	일반	89,533	111,927	111,927	102,658	-9,269	-8.3
	교통	13,536,521	15,160,995	15,607,995	14,754,427	-853,568	-5.5
	혁특	430,039	-657,159	-657,159	63,907	721,066	-109.7
	광특	478,329	562,262	562,262	615,416	53,154	9.5
총 계		14,534,422	15,178,025	15,625,025	15,536,408	-88,617	-0.6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세출예산안은 총계 기준으로 교특회계와 광특회계의 경우 도로, 철도 등 교통 SOC 투자 감소에 따라 각각 2013년 15조 6,080억원에서 2014년 14조 7,544억원으로 5.5%와 2013년 2조 9,784억원에서 2014년 2조 5,685억원으로 13.8%감소하였다. 혁특회계는 공공기관 이차보전 사업등 추진에 따라 2013년 439억원에서 2014년 530억원으로 20.9%증가하였다.

[표 4]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회계	일반	17,558,117	18,405,839	19,035,514	19,045,549	10,035	0.1
	교특	11,810,871	15,160,995	15,607,995	14,754,427	-853,568	-5.5
	에특	5,506	6,219	6,219	7,555	1,336	21.5
	혁특	135,206	43,850	43,850	53,032	9,182	20.9
	광특	2,387,040	2,863,138	2,978,438	2,568,498	-409,940	-13.8
총 계		31,896,740	36,480,041	37,672,016	36,429,061	-1,242,955	-3.3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5개 회계의 전체 총지출은 2013년 22조 204억원에서 2014년 20조 5,176억원으로 6.8% 감액되었다. 일반회계 지출규모는 4조 5,739억원으로 2013년 대비 10.0% 감액되었으며,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출규모는 13조 3,567억원으로 2013년 대비 4.2% 감액되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출규모는 76억원으로 2013년 대비 21.5% 증액되었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지출규모는 109억원으로 2013년 대비 22.1% 증액되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출규모는 2조 5,685억원으로 2013년 추경 대비 13.8% 감액되었다.

[표 5] 국토교통부 회계별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회계	일 반	4,899,767	5,081,442	4,573,891	-507,551	-10.0
	교 특	13,547,372	13,945,372	13,356,688	-588,684	-4.2
	에 특	6,219	6,219	7,555	1,336	21.5
	혁 특	8,962	8,962	10,939	1,977	22.1
	광 특	2,863,138	2,978,438	2,568,498	-409,940	-13.8
회계별 총지출 합계		21,325,458	22,020,433	20,517,571	-1,502,862	-6.8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나.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총계 기준으로 총 46조 5,446억원으로 2013년 변경계획 대비 11.6% 증가하였다.

[표 6] 국토교통부 기금 총괄(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계획		2014 계획안 (B)	증 감	
			당초	변경(A)		(B-A)	(B-A)/A
기금	국민주택	45,372,159	41,717,965	41,717,965	46,544,618	4,826,653	11.6
총 계		45,372,159	41,717,965	41,717,965	46,544,618	4,826,653	11.6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1개 기금의 총지출은 18조 251억원으로 2013년 변경계획 18조 4,420억원 대비 2.3% 감소하였다.

[표 7] 국토교통부 기금별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2013 계획		2014 계획안(B)	증 감	
		당초	변경(A)		(B-A)	(B-A)/A
기금	국민주택	17,217,979	18,441,979	18,025,124	-416,855	-2.3
기금별 총지출 합계		17,217,979	18,441,979	18,025,124	-416,855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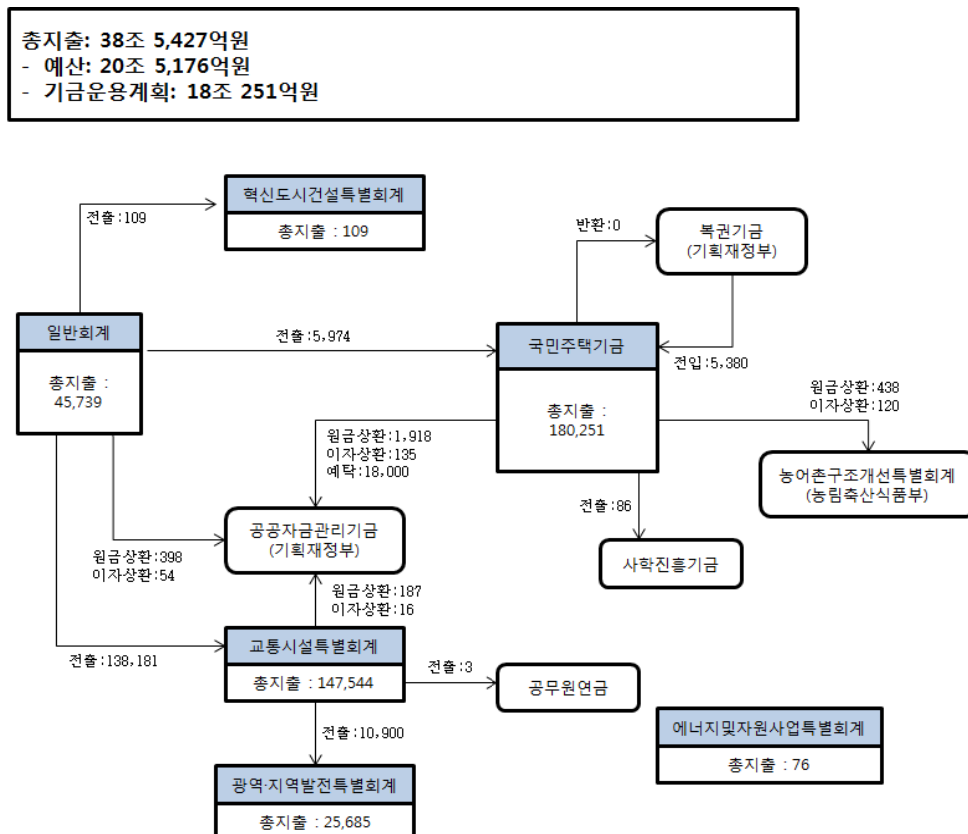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3.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국토교통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와 국민주택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2014년 국토교통부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단위: 억원)



4. 신규 및 주요 중액사업

2014년도 신규 사업은 총 70개 사업에 2조 9,058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저소득층 임차료 보조 및 주택개보수를 위한 주택바우처시범사업 등 14개 사업, 교통회계에 울릉도 및 흑산도 공항건설사업 등 19개 사업,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정부산하기관의 이전청사 신축사업비의 이차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차보전 지원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등 33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다. 기금사업으로는 철도부지·유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사업 등 3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다.

[표 8] 국토교통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 예산안(B)
일반회계	주택바우처시범사업지원	23,60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500
	제5차 아태주택도시장관회의 행사지원	423
	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제도운영위탁	80
	철도차량·용품인증제도운영위탁	600
	춘천-속초 사업재기획 조사	5,000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3,911
	수도권안전운전체험교육장건립	7,000
	구미권 국가산단 용수공급	200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용수공급사업	200
	수도권(Ⅱ)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지원	500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200
	도시방재 인프라 구축	300
	건축정책종합연구	400
교통시설 특별회계	남일-보은2국도건설	500
	오미재터널국도건설	500
	청송우회국도건설	500
	광도-고성국도건설	500
	학봉-공암 국도건설	500
	순창쌍치지내 국도건설	500
	고흥-봉래 국도건설	500
	용진-우아국대도건설	500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 예산안(B)
	옥률-대룡 국대도건설	500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2,000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	5,200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	1,000
	택시운행정보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523
	CNG 택시개조 지원	323
	CNG 택시충전소 설치	150
	BF인증 시범사업 조성	500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2,000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500
	항공산업발전지원	52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공공기관 이차보전 지원	3,622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태릉-구리 광역도로건설	300
	대림육교-경산시계 광역도로건설	2,000
	실춘-만선국지도건설	500
	동산-각남국지도건설	500
	단산-부석사국지도건설	500
	남평-화순국지도건설	500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300
	상일-하남복선전철	14,000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12,000
	산성터널민간투자사업	1,500
	포천용정산단진입도로	3,000
	장성나노산단진입도로	5,000
	부산오리산단진입도로	450
	부산반룡산단진입도로	3,000
	대전하소산단진입도로	12,250
	울산테크노산단진입도로	10,147
	세종명학산단진입도로	1,100
	김포학운3산단진입도로	3,000
	철원플라즈마산단진입도로	2,000
	충주메가폴리스산단진입도로	1,200
	음성생극산단진입도로	300
	천안동부바이오산단진입도로	500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 예산안(B)
	아산음봉단산진입도로	450
	여수울촌제2산단진입도로	900
	광양세풍산단진입도로	1,000
	광양황금산단진입도로	1,000
	담양산단진입도로	650
	경산4산단진입도로	1,000
	창원동산산단진입도로	600
	김해테크노산단진입도로	550
	고흥도양산단진입도로	900
	오송제2생명산단진입도로	2,000
	신촌-회천 구국대도건설	5,000
국민주택기금	행복주택출자	314,676
	행복주택	638,317
	국민주택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총괄계정)	1,800,000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100억원이상 증가한 사업은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등 일반회계 5개 사업, 위험도로개선 등 교통시설특별회계 43개 사업, 대중교통지원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1개 사업, 다가구매입임대출자 등 국민주택기금 4개 사업이다.

[표 9]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 회계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4,300	4,300	27,500	23,200	539.5
	건설기술연구(R&D)	36,413	36,413	48,175	11,762	32.3
	평화의담치수능력증대	10,000	10,000	25,000	15,000	150.0
	국가하천정비	413,270	413,270	427,837	14,567	3.5
	도시재생사업	500	500	24,300	23,800	4,760.0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교통 시설 특별 회계	위험도로개선	62,700	62,700	72,876	10,176	16.2
	민자유치건설보조금	652,307	772,307	1,163,946	391,639	50.7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	30,900	30,900	49,880	18,980	61.4
	충주-제천고속도로건설	85,150	85,150	99,800	14,650	17.2
	성남-장호원3 지역간선4차건설	30,000	30,000	43,000	13,000	43.3
	성남-장호원5 지역간선5차건설	11,000	13,400	25,200	11,800	88.1
	황등-오산물류간선1차	13,000	13,000	26,500	13,500	103.8
	용정-용진 물류간선1차건설	28,000	28,000	39,000	11,000	39.3
	무계-삼계 물류간선1차건설	20,000	20,000	37,256	17,256	86.3
	신갈우회 지역간선6차건설	27,000	27,000	329,800	302,800	1,121.5
	부산시계-웅상2 지역간선7차건설	16,000	16,000	35,000	19,000	118.8
	장안-온산1 지역간선7차건설	13,000	13,000	35,000	22,000	169.2
	장안-온산2 지역간선7차건설	14,000	14,000	35,000	21,000	150.0
	호계-불정 지역간선7차건설	22,000	22,000	32,324	10,324	46.9
	대구순환고속도로건설	3,000	3,000	39,980	36,980	1,232.7
	영천-언양고속도로건설	36,700	36,700	60,200	23,500	64.0
	성서-지천고속도로건설	3,900	3,900	27,420	23,520	603.1
	영광-해제국도건설	3,961	3,961	20,739	16,778	423.6
	보령-태안1국도건설	19,577	26,577	40,000	13,423	50.5
	부산웅상-무거국도건설	5,958	11,586	27,000	15,414	133.0
	진접-내촌국도건설	6,543	11,343	45,000	33,657	296.7
	주상-한기리국도건설	4,272	4,272	20,000	15,728	368.2
	하동-화개국도건설	4,272	4,272	15,000	10,728	251.1
	둔내-무이국도건설	8,543	8,543	36,400	27,857	326.1
	장평-간평국도건설	8,543	8,543	39,700	31,157	364.7
	보령-청양국도건설	2,000	2,000	19,600	17,600	880.0
	중군-진정국대도건설	7,392	10,392	35,000	24,608	236.8
	구포-생곡국대도건설	9,475	16,675	58,000	41,325	247.8
	염성-용두국대도건설	4,207	4,207	15,000	10,793	256.5
	구포-덕산1	12,000	12,000	26,000	14,000	116.7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간선8차건설					
	막동-나전					
	지역간선8차건설	10,000	10,000	28,000	18,000	180.0
	경부고속철도건설	310,000	310,000	348,700	38,700	12.5
	호남고속철도건설	950,000	950,000	1,127,700	177,700	18.7
	진주-광양복선화	170,000	170,000	200,000	30,000	17.6
	포항-삼척철도건설	170,000	170,000	192,400	22,400	13.2
	원주-강릉 철도건설	465,000	465,000	800,000	335,000	72.0
	울산-포항 복선전철	340,000	340,000	401,400	61,400	18.1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	26,000	26,000	45,000	19,000	73.1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	120,200	120,200	180,200	60,000	49.9
	항로관제시설	5,951	5,951	24,543	18,592	312.4
	제2항공교통센터구축	1,600	1,600	12,000	10,400	650.0
광역 지역 발전 특별 회계	대중교통지원	47,831	47,831	86,667	38,836	81.2
	용암-선남국지도건설	13,000	13,000	28,838	15,838	121.8
	수원-인천복선전철	75,000	75,000	105,000	30,000	40.0
	신안산선복선전철	1,000	6,000	30,000	24,000	400.0
	당고개-진접복선전철	2,000	2,000	20,000	18,000	900.0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지원	2,000	2,000	14,131	12,131	606.6
	광주북부 순환도로	10,000	10,000	20,000	10,000	100.0
	광역환승센터구축지원	4,488	4,488	15,228	10,740	239.3
	개발제한구역토지매입비	36,700	36,700	50,000	13,300	36.2
	해안권발전선도사업지원	7,800	7,800	20,660	12,860	164.9
	진곡산단진입도로	24,096	29,096	40,001	10,905	37.5
	부산방사선산단진입도로	900	2,900	17,000	14,100	486.2
	평택고덕산단진입도로	2,000	2,000	35,000	33,000	1,650.0
	파주적성산단진입도로	2,000	4,000	17,740	13,740	343.5
	원주부론산단진입도로	900	900	11,002	10,102	1,122.4
	춘천봉명산단진입도로	500	2,500	12,694	10,194	407.8
	보은첨단산단진입도로	1,300	1,300	12,282	10,982	844.8
	세종전의2산단진입도로	750	750	15,000	14,250	1,900.0
	칠곡왜관3산단진입도로	1,400	1,400	13,526	12,126	866.1
	서산테크노밸리산단진입도로	2,000	4,000	18,000	14,000	350.0
	아라-회천구국도건설	5,485	5,485	21,500	16,015	292.0
국민 주택 기금	다가구매입임대출자	199,750	199,750	409,500	209,750	105.0
	전세임대경상보조	37,917	37,917	56,637	18,720	49.4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7,650,000	8,674,000	9,364,300	690,300	8.0
	이차보전 지원	55,000	55,000	110,000	55,000	100.0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5. 의무지출 사업

의무지출 사업은 2013년 2조 1,764억원 대비 1.6% 감소한 2조 1,418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하천편입토지보상사업 및 공무원연금 부담금의 경우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은 재건축부담금 징수예정액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감소하였고,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은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이자분 감소로 전년도보다 예산안이 감소하였다.

[표 10] 국토교통부 의무지출 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총지출(A)		38,765,245	38,543,437	40,462,412	38,542,695	-1,919,717	-4.7
의무지출(B) (비중, B/A)		2,429,575 (6.2)	2,176,404 (5.6)	2,176,404 (5.4)	2,141,767 (5.6)	-34,637	-1.6
일반 회계	하천편입토지보상	46,375	50,000	50,000	50,000	-	-
광역 지역 발전 특별 회계	건강보험부담금	1	1	1	2	1	100.0
	공무원연금 부담금	5	5	5	5	-	-
국민 주택 기금	재건축초과 이익자본이전	-	1,000	1,000	860	-140	-14.0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출연	104,202	109,700	109,700	109,700	-	-
	기타민간예수금 이자상환	418,936	432,366	432,366	388,600	-43,766	-10.1
	국공채이자상환	1,859,696	1,583,332	1,583,332	1,592,600	9,268	0.6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6. 예산안의 주요 특징

국토교통부는 국토발전 및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로서, 2014년도 예산안에는 총지출 기준으로 38조 5,427억원(예산안 20조 5,176억원, 기금운용계획안 18조 251억원)을 편성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투자효율화를 추진하면서도 도시재생, 주택바우처 등 생활밀착형 SOC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는 입장이다.

2014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분석 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 SOC 부문의 경우 집행 여건을 감안한 신규 사업 편성 및 계속·완공 사업에 대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교통 및 물류 부문을 살펴보면 2014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5.2%감소하였고, 그 중에서도 도로, 철도 및 도시철도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항공·공항 및 물류 등 기타 부문은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표 11]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증감	
			(B-A)	(B-A)/A
교통 및 물류	171,474	162,485	-8,989	-5.2
- 도로	89,344	82,954	-6,390	-7.2
- 철도	61,380	59,810	-1,570	-2.6
- 도시철도	7,761	6,103	-1,658	-21.4
- 항공·공항	830	1,004	174	21.0
- 물류 등 기타	12,159	12,614	455	3.7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국토교통부는 교통 SOC는 전반적인 투자규모 감소에 따라 신규사업을 최소화 하고, 계속 및 완공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신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 이행 등 재정 투자를 위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2014년 완공이 예정되었던 고속철도 수도권 노선 확충사업은 광역철도 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 결정으로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는 등 사업관리가 부실한 측면이 있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에서는 공약사항을 반영하

여 영세 운송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택시관련 지원 사업들이 편성되었으나, 현재 「택시지원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심사과정에서 국회의 조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도시개발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SOC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나, 사업별 확대에 앞서 추진여건과 사업 계획 검토가 필요하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을 살펴보면 2014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1.3%감소하였고,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모든 부문의 예산안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표 1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증감	
			(B-A)	(B-A)/A
국토 및 지역개발	45,470	40,318	-5,152	-11.3
- 수자원	27,694	23,512	-4,182	-15.1
- 지역및도시	8,034	7,842	-192	-2.4
- 산업단지	9,742	8,964	-778	-8.0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국토교통부는 도시 재생사업 등을 전년대비 확대하였으나, 도시 재생사업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대상 지역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 간 업무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은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앞서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재정착 정책 부족 및 이주보상비로 인한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택부문의 경우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신규 주거대책 사업을 도입하고 있으나, 세부사업별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소관 사회복지 분야인 주택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27.2% 감액되었으나, 국민주택기금 계획안은 전년대비 11.6%증액되어 전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의 주택부문 사업비는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주택부문 예산안 및 국민주택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 (A)	2014 예산안(B)	증감	
			(B-A)	(B-A)/A
주택(예산)	3,260	2,372	-888	-27.2
국민주택기금	417,180	465,446	48,266	11.6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그러나 2014년 신규 도입 예정인 주택바우처시범사업은 관련 법안이 현재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법률의 개정 이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행복주택은 지구 지정이 미진하고, 평당 건설 단가를 일괄 책정하고 있는 등 사업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처럼 2014년도 국토교통부의 전년대비 총지출 규모가 4.7%(1조 9,198억원)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부문별로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계속 및 완공위주 투자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4년도 신규사업 건수는 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2013년 69건→2014년 67건) 향후 재원 확대 우려가 있는 바,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SOC부문 예산안 감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별 추진현황과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액을 편성하고, 사업간 이·전용 또는 차년도 이월을 최소화하여 SOC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7. 예산안 분석 요약

2014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업의 유사·중복 1건, 사업계획 부실 5건, 법·제도 미비 4건, 집행실적부진 10건, 사업성과 미흡 1건, 기타 3건 등 총 24건으로 요약된다.

[표 14] 국토교통부 예산안 주요 분석사항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분석사항
[사업의 유사·중복]						
일반 회계	도시재생	도시재생	-	500	24,300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과 대상 지역이 유사하므로 사업 내용의 정비가 필요함
[사업계획 부실]						
일반 회계	산업단지 지원(일반)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3,000	4,300	27,500	○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재 정착 정책 부족과 이주보 상비로 인한 갈등으로 인 해 사업 지연이 우려되며, 높은 지가로 인해 토지보 상금이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사 업 계획 수립이 요구됨
국민 주택 기금	임대주택 지원	행복 주택출자	-	-	952,993	○ 지구 지정이 완료된 지역이 2,150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 고 총 56,000호에 대해 예산 이 편성되어 조정이 필요함
	행복주택 지원(융자)	행복주택				
교통 회계	도시철도건설지원		482,372	651,155	575,459	○ 사전절차 미이행 및 지방 비 부족 등에 따른 일부 집행 부진 사업은 연례적 부진을 방지하도록 적정 사업비 계상 필요
	광역철도 건설지원	소사대곡 복선전철	-	2,000	2,000	○ 부처 간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2012년 불용 되었으나, 2013년 현재까지 도 추진 방식과 지원 비율 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바, 조속한 결정이 필요함
국민 주택 기금	임대주택 지원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192,595	384,250	409,500	○ 2009년 이후 계획 대비 매 입 실적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향후 집행부진이 우 려되므로 지원단가의 현실 화 및 홍보 강화 필요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분석사항
[법·제도 미비]						
일반 회계	주택정책 지원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23,604	○ 소관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으로 법률 개정을 전 체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철저한 시범사업 실시 필요
교특 회계	민자유치 사업지원	민자유치 건설보조금	307,154	772,307	1,163,946	○ 민간선투자이자비용은 민자 도로 부문 선투자 제도의 법령근거 및 사업체계가 전 혀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편성되었으 므로 조정이 필요
	대중교통 체계구축	택시감차 보상	-	5,000	5,575	○ 2014년에는 실거래가 보상 방안을 계획 중이나 이는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하 고 있어 국회 심의에 따른 예산 반영이 필요함
	항공안전 운영	항공산업 발진지원	-	-	520	○ 항공 레저는 문화체육관광 부와의 명확한 소관 구분 을 위한 관계 법령 등 추 진체계 마련이 필요
[집행실적 부진]						
일반 회계	지역 교통안전도 강화	교통안전시 범도시	-	2,000	2,000	○ 보조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 아 9월 현재 예산이 전혀 교부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감안한 예산 조정이 필요
	물류산업 지원	공동물류 지원	-	1,000	800	○ 2013년도 지자체 보조사업 은 신청 저조로 예산액의 47%만이 교부되었고, 실 집행률은 0.0%인 상태인 바, 지자체 수요저조를 감 안한 사업 효과 검토 필요
	철도안전및 시설관리 지원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사업	2,827	5,000	4,500	○ 교통광장, 캐노피 설치 등 사업 내용이 변경되고, 2010 년 이후 실행률이 계속적 으로 낮아져 2013년에는 24.5% 수준으로 저조하므 로, 이를 감안한 조정 필요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분석사항
	주거환경 개선지원	재정비축진 지원사업	85,000	180,000	110,000	○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매 년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지구별 집행 현황과 전년 도 이월액 등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 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국 토 국 회 계	항행안전 시설	항행안전 시설 유지관리	6,613	8,523	6,068	○ 연례적으로 동 사업의 일 반수용비 집행률이 저조함 에도 2014년도에 전년대비 70.7% 증가하여 집행실적 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
	고속도로 조사설계	고속도로 조사	82,722	87,599	52,357	○ 2013년 9월말 집행률이 예 산액의 25%수준으로 저조 하므로, 후속 설계사업 및 타당성 재조사 등이 진행 중인 사업 계상에 대한 적 정성 검토 필요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111,492	132,536	115,435	○ 도로명안내표지 선도사업 을 위한 지자체 보조예산 은 2012년 이후 실행실 적이 없는 상태로, 이를 감안한 예산 편성 필요
	광역철도 건설지원		619,965	366,629	254,896	○ 2013년 10개의 광역철도건 설사업 중 6개의 집행실적 이 전혀 없는 상태인 바, 이들 사업의 기본계획 수 립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집행 여건을 감안한 적 정 규모의 예산 반영 필요
국 민 주 택 기 금	준주택지원	준주택지원	55,600	137,400	123,660	○ 당초 계획과 달리 오피스텔 을 중심으로 용자가 이루어 지고 있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연례 적인 집행 실적 부진으로 인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함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분석사항
	주거환경 개선지원 (용자)	기존주택 개선	1,382	4,500	1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연례적 집행부진으로 인해 집행 가능한 규모의 적정한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준공공임대사업은 예산의 산출 근거가 미흡하여 정확한 계상이 요구됨

[사업성과 미흡]

교특 회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특별교통 수단도입 보조	-	5,000	4,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도입 대수 대비 부족 대수가 많은 지자체의 집행실적이 오히려 저조하고, 도입 이후 운영단계의 재정소요가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별 여건을 감안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	--------------------	--------------------	---	-------	-------	---

[기타]

교특 회계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시관내 국대도조사 설계	15,978	16,410	1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도 및 국대도 조사설계사업은 총액 계상사업이 아님에도 매년 총액 편성이후 부처단계에서 노선을 선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사사업별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는 내역편성이 필요
	일반국도 조사설계	일반국도 조사설계	100,827	104,993	76,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사업과 무관한 국제협력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 분리 편성이 필요하고, 그 중 제25회 세계도로대회 지원사업비는 전체 재원조달 및 지원규모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분석사항
국민 주택 기금	-	보금자리 주택	9,303,217	7,221,642	6,088,888	○ 국민주택기금이 사업승인 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 문에 2조 2,238억원에 이 르는 재원이 지원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해당 물량이 착공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주: 2013예산은 추경반영 예산

II. 국토교통부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1.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한 예산 조정 필요

- 2013년에 신규로 도입된 시범사업이나, 보조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아 9월 현재 예산이 전혀 교부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감안한 예산 조정이 필요함.
-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한 모델이 각 지자체의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가 요구됨.

가. 현황

교통안전시범도시(일반회계, 2013~, 출연)는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교통 안전도를 강화하고자 지자체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비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3년과 동일한 20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교통안전시범도시	-	2,000	2,000	2,000	-	-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나. 시범사업 집행 부진 및 부처간 사업 조정에 따른 사업 내용 정비 필요

동 사업은 지역 중심의 교통안전구역 조성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3개년 동안 국토교통부가 주체가 되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산 사상구, 전북 군산시 2개소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표 2]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개요

사업시행주체	전북 군산시, 부산 사상구
사업지원비율	지자체 보조 50%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그러나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부처 단계에서 9월말 현재까지 지자체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3] 2013년 교통안전시범도시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 이월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률 (B/A)
부산사상구	1,300	-	-	-	-	-	-	0.0
전북 군산	700	-	-	-	-	-	-	0.0

주: 2013년 9월말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이는 사업계획 수립시 국토교통부 단계에서는 총사업비 137억 중 120억(각 사·구별 60억)에 대해 매칭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와 협의한 상태이나, 기획재정부와 총 지원 규모와 지원 기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9월 중 국고 예산을 배정하고, 지자체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나 현재까지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하반기에 예산이 교부되더라도 지자체 단계에서 이월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일정별 사업 추진 계획

월별	추진일정	비고
2013. 1~	관계기관 회의	국토부
2013. 7	거버넌스 구축 매뉴얼 배포	국토부
2013. 9~	국고배정예정	국토부
2013. 9~	거버넌스 구축 및 실시설계 발주	지자체
2013. 10~2014. 2	용역 완료 및 공사발주	지자체
2014. 3~2015. 9	공사완료	지자체
2015. 4~	사후 모니터링	지자체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동 사업은 3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시범 사업인 만큼 사업 초기에 지원 기준 및 지원 사업 내용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향후 사업내용의 표준화와 확대 보급에 있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기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시설계도 발주하지 못한 상태인 바, 이를 감안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은 3개년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모델을 발굴하여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할 지자체 내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수행하는 만큼, 사업 추진 이후 모니터링 및 효과 홍보 등을 통해 교통 취약지에 대한 자발적인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공동물류지원: 지자체 수요저조를 감안한 사업 효과 검토 필요

- 2013년도 지자체 보조사업은 신청 저조로 예산액의 47%만이 교부되었고, 실집행률은 0.0%인 상태로, 지자체 수요가 낮은 상태인 바, 계속적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가. 현황

공동물류지원(일반회계, 2013~, 보조)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고층건물, 재래시장, 산업단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물류활동을 집산화하여 일괄처리하는 공동물류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2013년 대비 2억원(20.0%) 감소한 8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공동물류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동물류지원	-	1,000	1,000	800	200	-20.0
- 민간경상보조	-	300	300	500	200	66.6
- 자치단체경상보조	-	700	700	300	-400	-57.1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나. 지자체 수요 저조사업의 효과 검토 필요

물류공동화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들이 물류에 필요한 시설·장비·조직·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2013년에는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조하는 공공지원으로 7억원, 화주 및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을 보조하는 민간지원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다

[표 2] 2013년도 공동물류지원 세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2013년 예산안	산출근거	비목
건물단위 물류공동화 시설개선	200	2개소	자치단체경상보조
도심지구단위 물류공동화 컨설팅	500	2곳	
화주·물류기업대상 물류공동화 컨설팅	300	5개 컨소시엄	민간경상보조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실제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지원사업의 경우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5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예산액 3억원 중 50%인 1억 5,000만원을 우선 교부한 것으로 파악¹⁾된다.

[표 3] 2013년도 민간지원사업의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추진현황	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자동차 부품제조업체간 조달부문 공동물류 (5개 기업 컨소시엄)	한국무역협회	사업추진중 (컨설팅 실시)	150	117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수출부문 공동물류 (5개 기업 컨소시엄)				
수도권 제조기업간 공동물류 (4개 기업 컨소시엄)				
제주도 소재 제조기업간 공동물류 (4개 기업 컨소시엄)				
해외플랜트 수출부문 공동물류 (3개 기업 컨소시엄)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은 4차 공고까지 진행하였음에도 3개 사업이 선정되는데 그쳤고, 이에 예산액 7억원 중 3억 3,000만원만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역시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되면서 내년해야 집행이 이루어질 것인 바, 사실상 실집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²⁾이다.

1) 국토교통부는 향후 사업실적 확인 등을 통해 11월에 잔여금액 교부·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설명한다.

[표 4] 2013년도 공공지원사업의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추진현황	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인천국제공항 항공물류 공동화사업	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공사	사업추진중	75	-
인천 도화지구 중소기업 공동물류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지자체 매칭사업비 추경확보중	-	-
인천 옹진군 수산물 공동물류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자체 매칭사업비 추경확보중	-	-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동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당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사업 초기 연도의 관심 부족을 이유로 보조사업 임에도 시범사업 차원에서 사업비의 100%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50%지원으로 보조기준이 변경된 바 있다. 또한, 당초 2014년부터는 지자체 컨설팅 대상 사업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2014년도 예산안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가 편성되지 않아 계획대로의 추진이 어려운 상태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2013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지자체는 복지재정 부담과 추경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참여를 주저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참여 지자체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호응도가 낮은 상태에서 컨설팅만으로는 공동물류 전환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 사업의 법적근거인 「물류정책기본법」³⁾은 지난 8월 법률 개정을 통해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관련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주체로 시·도지사를 포함시키면서, 부처와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부처와의 협의 및 지역물류계획 등의 수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2) 국토교통부는 올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자 선정을 하여 실집행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중 2013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3)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물류 공동화·자동화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표 5]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내용

종 전	현 행(2013.8 개정)
제23조(물류 공동화·자동화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물류 공동화·자동화 촉진) ① ----- ----- <u>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u>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⑥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경우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공동물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국가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바, 지자체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사업: 사업내용 변경 및 지자체 실집행을 감안한 조정 필요

- 동 사업은 2009년 자전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전거주차장 확대를 위해 추진하였으나, 지자체 참여저조로 교통광장, 캐노피 설치 등 사업 내용이 변경되고 있는 바, 추진 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또한, 2010년 이후 실집행률이 계속적으로 낮아져 2013년에는 24.5% 수준으로 저조한 바, 이러한 집행실적을 감안한 조정이 필요함.

가. 현황

철도역환승동선개선(일반회계, 2009~, 보조)은 자전거 활성화 대책의 일환⁴⁾으로 자전거와 철도 간 연계를 위하여 2009년부터 자전거 주차장 및 교통광장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⁵⁾으로, 2013년 대비 10억원(20.0%) 감소한 40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철도역환승동선개선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철도역환승동선개선	2,827	5,000	5,000	4,000	-1,000	-20.0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나. 사업내용 확장의 적정성 검토 필요

동 사업의 그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매년 대상사업이 대략 5개소에 불과한 반면, 2012년부터 교통광장사업이 확대되었고, 2013년에는 철도역사에 캐노피를 설치해주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4)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지하철과 자전거간 연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전거 주차장 설치 필요하나, 자전거 이용시 애로사항으로 ①보관소 미비, ②도난손상 위험, ③자연재해기후 문제 등을 제기(「자전거 연계교통체계 활성화 방안」, 교통연구원, 2010.5)함에 따라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5) 일반철도 운행구간 대상역은 국비 70%, 철도공사 30%로 사업비를 부담하며, 광역철도 운행구간 대상역은 국비 30% 지자체 70%로 사업비를 부담한다.

[표 2] 철도역환승동선개선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교통광장	자전거주차장	캐노피
2009	서대전, 전주(2개소)	영등포, 대구, 광주, 조치원(4개소)	-
2010	천안, 홍성(2개소)	서대전, 밀양, 태화강(3개소)	-
2011	-	천안아산, 오산, 온양온천, 순천, 남원(5개소)	-
2012	남원,곡성,조치원,김천,두정,평내호평,마석(7개소)	울산역, 곡성역(2개소)	-
2013	충주,태백,덕정,김제,상주,물금(6개소)	양평,홍성,상주,물금 (4개소)	평내,호평,마석,영동,대천,군산,울산,진영,진주,나주(10개소)
2014	2,900 (5개소 예정)	800 (5개소 예정)	300 (4개소 예정)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자전거주차장은 설치 이후 연간 소요되는 운영부담 등으로 지자체의 수요가 낮아 신청이 저조하였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캐노피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광장이나 캐노피 사업 등은 지자체의 추가부담이 적어 상대적으로 선호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동 사업의 당초 추진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예산안에 교통광장 5개소, 자전거주차장 4개소, 캐노피 등 7개소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는데, 이처럼 사업내용을 당초와 달리 확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 예산 교부 이후 실집행 저조에 따른 집행 개선 필요

동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시행주체의 실집행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나, 2010년 이후 실집행률이 계속 낮아지는 등 효과적인 집행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3] 최근 사업시행주체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한국철도공사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2009	3,600	3,600	1,599	1,535	466	44.4
2010	1,980	3,515	2,473	949	93	70.4
2011	1,980	2,929	1,332	1,060	537	45.4
2012	2,827	3,887	1,169	2,059	659	30.1
2013	5,000	7,059	1,728	-		24.5

주: 2013년은 8월말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철도역 환승동선사업은 부처, 한국철도공사, 자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각의 의견이 상충되어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집행시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이 부진하다고 설명한다.

[표 4]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사업 보조사업자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구 분		교부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집행률 (B/A)	부진사유	
2012	교통 광장	남원 곡성 조치원 김천 두정 평내 호평 마석	국고	2,022	2,022	88	1,934	4.4	지자체 인허가 등 협의 및 사업추진의사 없음에 따라 대상지 변경 등으로 지연
			철도공사	811	811	34	777	4.2	
			지방비	304	304	18	286	5.9	
			소계	2,833	2,833	122	2,711	4.5	
	자전거 주차장	울산 곡성	국고	805	805	21	784	2.6	지자체 인허가 등 협의 및 사업추진의사 없음에 따라 대상지 변경 등으로 지연
			철도공사	345	345	9	336	2.6	
			소계	3,638	3,638	143	3,495	2.6	

(단위: 백만원, %)

연도		구 분	교부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집행률 (B/A)	부진사유
2013	교통 광장	충주 태백 덕정 김제 상주 물금	국고	3,302	3,302	55	1.7	現 지자체 인허가 협의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본 공 사는 10월부터 시행
			철도공사	1,297	1,297	24	1.9	
			지방비	644	644	0	0	
			소계	8,237	8,237	222	1.5	
	자전거 주차장	양평 홍성 상주 물금	국고	1,076	1,076	5	0.5	現 지자체 인허가 협의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본 공 사는 10월부터 시행
			철도공사	402	402	0	0	
			지방비	322	322	13	4.0	
			소계	9,715	9,715	227	1.0	
	캐노피	평내 호평 마석 영동 대천 군산 울산 진영 진주 나주	국고	622	622	0	0	現 자체 실시설계 중이며, 본 공사는 9월부터 시행
			철도공사	228	228	0	0	
			지방비	210	210	0	0	
			소계	10,565	10,565	0	0	

주: 각 회계연도 말 기준 집행률이며, 2013년은 8월말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비 교부 일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보조사업자의 실제 집행은 저조할 수 밖에 없고, 2013년도 역시 보조사업자 단계에서의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단년도에 사업대상지 선정, 지자체 협의, 실시설계, 시공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사업체계 하에서는 사업예산을 일시에 교부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월 발생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고속도로 조사사업: 사업비 성격에 따른 비목정정 및 집행실적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내역사업인 최적개통시기연구는 설계 소요경비 산출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정책방향 연구사업임에도 기본조사설계비목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연구개발비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함.
- 동 사업은 2013년 9월 현재 집행률이 예산액의 25%수준으로 저조한 바,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가 늦어진 후속 설계사업 및 타당성 재조사 등이 진행 중인 사업 계상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가. 현황

고속도로 조사사업(교특회계, 1998~, 직접)⁶⁾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와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대비 352억 4,200만원(40.2%)이 감소한 523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고속도로조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고속도로 조사	82,722	87,599	87,599	52,357	-35,242	-40.2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2014년도 고속도로 조사사업은 김포-과주 기본설계 등 6건의 완료사업과 광산-동광주 타당성 및 기본조사 등 11건의 계속사업 및 서창-안산 타당성 및 기본조사와 최적개통시기 연구 등 2건의 신규사업과 광주-해남 실시설계 등 2개 후속사업비가 반영되었다.

6)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 출자를 통해 추진하고 있지만, 노선선정, 사업계획, 기본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수행하되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업무를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표 2] 고속도로조사 예산안 편성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장 (km)	총설계비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B-A
계		657.0	362,690	87,899	52,557	-35,342
소 계		135.2	63,954	37,844	-	-37,844
완료	[기 본 설 계]					
	김포-파주(기본설계)	25.5	10,194	7,784	-	-7,784
	파주-포천(기본설계)	25.8	11,566	8,066	-	-8,066
	포항-영덕(기본설계)	31.8	12,500	50	-	-50
	화도-양평(설계보상)	17.6	12,152	12,152	-	-12,152
	성서-지천(설계보상)	12.7	3,692	3,692	-	-3,692
	[실 시 설 계]					
	대구순환(실시설계)	21.8	13,850	6,100	-	-6,100
소 계		421.8	260,447	49,655	43,819	-5,836
계속	[기 본 설 계]					
	광산-동광주(타당성및기본)	10.8	5,994	3,000	-	-3,000
	새만금-전주(기본설계)	54.3	19,279	6,068	11,039	4,971
	양평-이천(기본설계)	21.4	8,692	1,639	3,056	1,417
	[실 시 설 계]					
	성서-지천(기본및실시)	12.7	7,194	4,582	2,612	-1,970
	함양-울산(실시설계)	144.8	110,000	16,955	100	-16,855
	당진-천안(실시설계)	43.9	21,600	5,220	-	-5,220
	광주순환(실시설계)	16.2	9,116	1,112	1,100	-12
	남이-천안(실시설계)	34.6	8,309	3,779	4,056	277
	김포-파주(실시설계)	25.5	18,997	150	5,154	5,004
	파주-포천(실시설계)	25.8	24,673	200	6,902	6,702
	포항-영덕(실시설계)	31.8	26,593	6,950	9,800	2,850
	소 계	100.0	38,289	-	7,438	7,438
신규 후속	[기 본 설 계]					
	서창-안산(타당성및기본)	14.9	4126	-	1,238	1,238
	최적개통시기연구		200	-	200	200
	[실 시 설 계]					
	광주-해남(실시설계)	69.6	31,643	-	5,000	5,000
	창녕-현풍(실시설계)	15.5	2,320	-	1,000	1,000
시설부대비				20	1,220	1,200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나. 최적개통시기 연구사업의 비목 변경 필요

동 사업의 기본조사설계비⁷⁾ 중 2014년에 신규로 편성된 최적개통시기 연구는 30대 선도사업 등 비수익 노선의 최적개통시기, 사업기간 조정 등을 위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사업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나, 이를 통해 부처는 경제성이 저조한 일부 사업들에 대한 사업 추진 방안 등 정책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2014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본조사설계비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노선’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기초로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공사규모, 개략공사비 내역 등 ‘기본적 사항의 설계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산출하기 위해 편성하는 비목으로서 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 사업은 행정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과제로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한 전문적 특수사업인 바, 연구개발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집행 저조 사업에 대한 적정 소요액 편성 필요

2013년도 고속도로 조사설계 사업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9월말 현재 집행률이 예산액 대비 25%수준이고, 예산현액 대비 23%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표 3] 2013년도 고속도로 조사설계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노 선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비 고
계	87,899	92,955	21,694	-	-	25	23	
○ 기본조사	47,033	50,929	9,882	-	-	21	19	
광산-동광주 (타당성 및 기본)	3,000	3,000	-	-	-	-	-	예비타당성조사중
김포-파주(기본설계)	6,342	6,342	1,521	-	-	24	24	

- 7) 기본조사설계비란 ①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②주요설계 수행지침,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공사규모, 시설물 배치 및 표준도면, 실시설계방침 및 기준, 개략공사비 내역 등 기본적 사항의 설계에 소요되는 경비, ③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설계공모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단위: 백만원, %)

노 선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비 고
파주-포천(기본설계)	6,161	6,161	1,702	-	-	28	28	
포항-영덕(기본설계)	3,397	4,185	2,065	-	-	61	49	
새만금-전주(기본설계)	6,068	8,240	2,427	-	-	40	29	
양평-이천(기본설계)	1,639	2,575	1,941	-	-	118	75	
화도-양평(설계보상)	12,152	12,152	89	-	-	1	1	
성서-지천(설계보상)	3,692	3,692	127	-	-	3	3	
성서-지천 (기본 및 실시)	4,582	4,582	10	-	-	-	-	
○ 실시설계	40,466	41,626	11,764	-	-	29	28	
함양-울산	15,811	15,811	6,005	-	-	38	38	
당진-천안	5,220	5,220	57	-	-	1	1	
대구순환	6,944	6,944	3,140	-	-	45	45	
광주순환	1,412	2,173	-	-	-	-	-	
남이-천안	3,779	4,178	2,562	-	-	68	61	
김포-파주	150	150	-	-	-	-	-	기본설계중
파주-포천	200	200	-	-	-	-	-	기본설계중
포항-영덕	6,950	6,950	-	-	-	-	-	총사업비협의중
○ 시설부대비 등	400	400	48	-	-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이들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일부 사업은 타당성 및 기본조사에 앞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 집행률 50%미만 사업의 집행 부진사유

노 선	부진 사유
광산-동광주(타당성 및 기본)	예비타당성 조사중(2013.2~)
김포-파주(기본설계)	한강통과 구간에 대한 관계기관(환경부, 문화재청, 국방부) 협의지연
파주-포천(기본설계)	준공금 집행시 연내 집행 가능
포항-영덕(기본설계)	준공금 집행시 연내 집행 가능
새만금-전주(기본설계)	잔여기간에 주요공정 집중되어 있으며 연내 집행 가능
화도-양평(설계보상)	터키공사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2013.12월 낙찰자 결정시 탈락자 설계보상비 지급 예정
성서-지천(설계보상)	터키공사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2013.12월 낙찰자 결정시 탈락자 설계보상비 지급 예정
성서-지천(기본 및 실시)	관계기관 협의지연으로 설계 공정률 부진, 연내 집행 가능
함양-울산(실시설계)	창녕-울산구간 준공잔액 37억원 발생되어 함양-창녕 준공을 위해 2014년으로 이월 예정이며 잔액은 연내 집행 가능
당진-천안(실시설계)	제2서해안 연계등으로 인한 인주-염치 추진 지연(32억원)
대구순환(실시설계)	준공금 집행시 연내 집행 가능
광주순환(실시설계)	3공구 민원으로 추진지연(9억원)
김포-파주(실시설계)	기본설계중(2012.2~)
파주-포천(실시설계)	기본설계중(2012.2~)
포항-영덕(실시설계)	기본설계 완료 후 총사업비협의 중(2013.9~)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특히, 2014년 실시설계비가 편성된 사업 중 ‘김포-파주’와 ‘파주-포천’은 2013년 편성된 기본설계 사업비 집행이 저조하여 연차적으로 실시설계비 집행이 순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적정 소요액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2014년 신규사업인 ‘광주-해남 구간⁸⁾의 사업은 현재 타당성재조사를 진행(2013.5~2013.11) 중인 상태로, 타당성이 있는 경우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타당성재조사 결과 등 기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2011년 타당성재조사 결과 타당성 미흡(B/C=0.72)으로 중단된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구간이 축소된 사업이며, 현재 타당성재조사 조사 중(2013.5월~11월)으로 타재 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있을 경우 실시설계 추진을 위하여 50억원이 반영되었다.

5. 국도건설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국도 내역 편성 필요 등

- 국도 및 국대도 조사설계사업은 총액 계상사업이 아님에도 매년 총액 편성 이후 부처단계에서 노선을 선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사시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는 내역편성이 필요함.
- 국도조사설계사업에 동 사업과 무관한 국제협력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 분리 편성이 필요하고, 그 중 제25회 세계도로대회 지원사업비는 전체 재원 조달 및 지원규모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국도 계속비 사업 중 지역간선 3차 및 8차는 예산 집행 실적이 40% 수준 이므로, 적기 완공을 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국도건설 프로그램(교특회계, 계속, 직접)은 국가간선도로망인 일반국도, 시관 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통해 교통혼잡구간 해소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산업경쟁력 제고 및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3년도 대비 4,469억원(10.7%)이 감소한 3조 7,342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국도건설 프로그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도건설	3,675,805	3,997,092	4,181,092	3,734,185	-446,907	-10.7
- 일반국도조사설계	100,827	104,993	104,993	76,600	-28,393	-27.0
- 일반국도건설	920,765	956,489	1,039,719	1,004,560	-35,159	-3.4
- 시관내국대도조사설계	15,978	16,410	16,410	15,000	-1,410	-8.6
- 시관내국대도건설	15,978	178,002	190,602	217,777	27,175	14.3
- 지역간선국도3차	354,267	271,759	286,759	177,837	-108,922	-38.0
- 지역간선국도4차	351,462	370,265	379,865	290,610	-89,255	-23.5
- 지역간선국도5차	574,608	745,895	760,995	706,037	-54,958	-7.2
- 물류간선1차	412,483	513,765	528,564	297,930	-230,634	-43.6
- 지역간선국도6차	206,542	274,491	297,491	338,800	41,309	13.9
- 지역간선국도7차	304,686	368,523	379,194	353,534	-25,660	-6.7
- 지역간선국도8차	-	196,500	196,500	255,500	59,000	30.0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나. 조사설계 사업의 내역 사업별 편성 필요

국도건설프로그램 중 일반국도 조사설계사업과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조사사업에는 각각 국도건설 및 국대도건설 지원을 위한 설계비와 함께 운용비, 배상금 등을 계상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총액편성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편성한 이후 회계연도 1~3월에 부처 내부에서 설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국회의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대상 구간을 알 수 없고, 집행에 있어서도 부처 내부에서의 노선 결정 과정에 시일이 소요되어 하반기에 설계 용역이 발주되는 등 사업 지연 요소가 되고 있다.

국도 및 국대도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내역 편성이 어려웠으나, 2000년부터 국도건설 계획(국대도는 1997년)이 수립되고 있는 바,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11~2015년)등에 따라 내역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도 및 국대도의 기본 및 실시설계의 착수는 도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지역간 형평성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사업 대상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예산 편성시 총액이 아닌 내역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다. 국도조사설계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분담금, 민간보조 등 국제협력사업의 분리 편성 필요

국도조사설계사업은 일반국도를 건설하기 전에 필요한 기본조사, 실시설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나, 도로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국제부담금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 등 국제협력 예산⁹⁾이 포함되어 있다. 2014년도 동 사업 예산안에는 민간보조비가 전년대비 5억원 증액된 7억원, 국제부담금이 전년대비 1,400만원 증액된 4천만원이 편성되었다.

9) 국제분담금(IRF, 세계도로협회(PIARC), 아시아대양주 도로기술협회(REAAA)), 민간보조(아시아대양주 도로기술협회, 세계도로협회 등 운영비 지원) 등

[표 2] 일반국도조사설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 (A)	2014		
		예산안(B)	증감(B-A)	증감률
일반국도조사설계	104,993	76,600	-28,393	-27.0
기본조사설계비	29,281	16,380	-12,901	-44.1
실시설계비	39,919	27,105	-12,814	-32.1
감리비	32,000	29,000	-3,000	-9.4
시설부대비	3,000	2,700	-300	-10.0
운영비	89	85	-4	-4.5
여비	156	165	9	5.8
업무추진비	22	25	3	13.6
배상금	300	400	100	33.3
민간경상보조	200	700	500	250.0
국제부담금	26	40	14	53.8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그러나 국제협력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및 국제부담금은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협력 강화 및 국내 기술 발전 선도 등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서 국도 조사설계 지원이라는 동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이처럼 상이한 목적의 사업비를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 편성할 경우 정확한 예산안 심사 및 사후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도로 관련 국제협력 사업은 분리 편성하여 심사시 개별 사업비 성격에 부합하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금은 2015년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도로대회¹⁰⁾에 대한 준비 지원금으로 5억원을 신규로 반영¹¹⁾하였으나, 동 대회의 경우 현재까지 기업 후원이나 서울시의 지방비 지원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국비 지원 규모 등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10) 세계도로대회는 1908년부터 도로분야 정보·기술교류 및 국제협력을 위해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이며, 우리나라는 제25회 대회를 유치하여 2015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11) 세계도로대회는 「국제 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의 국제행사로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는 등 국제행사로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3] 세계도로대회 자원조달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비율
계		9,200	100
국고 지원(안)		2,000	22
지방비 지원(서울시)		1,350	14
자체 조달	참가자 등록비 수입	3,100	34
	전시부스 판매 수입	1,300	14
	후원 및 협찬 유치	1,450	16

주: 서울시 지방비 지원액(13.5억원)은 협의중에 있으며 추후 변동예정임

도로공사 후원금액이 약 10억원으로 예상되며, 기업 후원 및 협찬 유치 중임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도로의 높은 수준을 알리는 등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총사업비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요구되는 바, 비용 조달에 대한 명확한 분담계획 등을 바탕으로 국비 지원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마. 지역간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건설사업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와 사업관리를 위하여 일반국도건설사업 중 착공이 2년 이상 지나거나 잔여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 교통애로구간 또는 중장거리 간선망에 해당하는 사업 등¹²⁾을 분리하여 지역 간선사업으로 구분 편성하고 있다. 2014년도 지역간선(3차~8차) 예산안은 2013년 예산 대비 1,785억원(7.8%) 증가한 2조 1,223억원이다.

12) 국토교통부는 ① 착공 2년차 이상, 잔여사업비 1,000억원 수준으로 5년내 완공가능 사업, ② 교통애로 구간 우선해소사업, ③ 주요 간선축 중·장거리 간선망 형성사업, ④ 국책사업구간 및 산업단지 지원 등 조기 준공 필요구간, ⑤ 전·후구간이 4차로로 기 확장되어 조기 준공 필요 구간 등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

[표 4] 지역간선 국도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기간	구간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간선국도3차	2007-2014	32건	271,759	286,759	177,837	-108,922	-38.0
지역간선국도4차	2008-2015	20건	370,265	379,865	290,610	-89,255	-23.5
지역간선국도5차	2009-2016	39건	745,895	760,995	706,037	-54,958	-7.2
지역간선국도6차	2010-2015	15건	274,491	297,491	338,800	41,309	13.9
지역간선국도7차	2012-2017	15건	368,523	379,194	353,534	-25,660	-6.7
지역간선국도8차	2013-2018	14건	196,500	196,500	255,500	59,000	30.0
합계			2,227,433	2,300,804	2,122,318	178,486	7.8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이미 완료된 1·2차 지역간선을 제외한 3차~8차까지 지역간선 사업의 2013년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이 60.2%수준이며, 이 중 지역간선 3차 및 8차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각각 47.3%, 44.7%로 저조하다.

[표 5] 지역간선 국도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3 예산(A)	이전용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2014 예산안
지역간선국도3차	192,780	-7,857	178,565	84,531	43.8	47.3	173,837
지역간선국도4차	333,018	-9,021	307,532	195,025	58.6	63.4	260,610
지역간선국도5차	696,071	-5,897	686,176	424,405	61.0	61.9	686,037
지역간선국도6차	290,089	-18,328	269,039	181,417	62.5	67.4	330,800
지역간선국도7차	275,400	8,743	284,708	178,954	65.0	62.9	345,534
지역간선국도8차	187,500	-1,475	185,753	83,095	44.3	44.7	246,000
	1,974,858	-33,835	1,911,773	1,147,427	58.1	60.2	2,042,818

주: 2013년 8월말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이들 사업의 집행 부진은 그 외 일부 도급사 경영문제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진사업이 보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지역간선사업은 일반국도 사업 중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는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외상공사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에 따라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상 등 전반적인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간선 3차는 2014년 완공이 계획된 사업이고, 지역간선 8차는 2013년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인 바, 완공 사업과 신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6.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신규사업의 집행 여건 검토 및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는 민간선투자이자비용 조정 필요

- 신규 민자도로사업 중 1차년도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토지매입비의 이월·불용을 방지하여야 함.
- 내역사업인 민간선투자이자비용은 민자도로 부문 선투자 제도의 법령근거 및 사업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편성되었으므로 금액 조정이 필요함.

가. 현황

민자유치건설보조금(교특회계, 2002년~, 보조)은 도로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민자도로사업에 대해 토지매입비 등을 국고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대비 3,916억원(50.7%) 증액된 1조 1,639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민자유치건설보조금	307,154	772,307	772,307	1,163,946	391,639	50.7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나. 신규사업의 집행여건 조성 노력 필요

2014년도 예산안에는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등 7개 계속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및 서울-문산 및 옥산-오창 민자고속도로 2개 착공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었다.

[표 2] 민자유치건설보조금 토지매입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민자유치건설보조금	307,154	772,307	772,307	1,163,946	391,639	50.7
토지매입비	239,017	698,384	698,384	1,098,043	399,659	57.2
- 수원-광명	115,790	172,986	172,986	87,000	-85,986	-49.7
- 광주-원주	80,883	143,474	143,474	87,000	-56,474	-39.4
- 인천-김포	71,087	72,126	72,126	190,000	117,874	163.4
- 안양-성남	2,500	66,000	66,000	87,000	21,000	31.8
- 구리-포천	10,000	176,899	176,899	435,000	248,101	145.9
- 상주-영천	-	65,000	65,000	50,443	-14,557	-22.4
- 서울-문산	-	2,000	2,000	119,100	117,100	5,844
- 옥산-오창	-	-	-	12,500	12,500	순증
- 민간선투자이자비용	-	-	-	30,000	30,000	순증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의 경우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므로 통상 착공연도부터 5개년동안 연차적으로 20%, 30%, 25%, 20%, 5%의 토지매입비를 투입하였으나, 최근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신규사업은 편성시 착공 1년차 사업비로 분할측량감정평가 수수료 등 최소소요액을 편성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표 3]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별 추진 현황

구분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안양-성남
연장	27.4km(4~6차로)	57.0km(4차로)	28.5km(4~6차로)	21.8Km(4~6차로)
사업 기간	2011-2016	2011-2016	2012-2017	2012-2017
사업 추진 현황	○ 2008.12.31 : 실시협약체결 ○ 2011.03.15 : 실시계획승인 ○ 2011.04.29 : 공사착공	○ 2008.05.30 : 실시협약체결 ○ 2010.02.25 : 실시계획 승인 ○ 2011.11.11 : 공사착공	○ 2007.07.18 : 실시협약체결 ○ 2011.12.26 : 실시계획승인 ○ 2012.03.23 : 공사착공	○ 2007.07.31 : 실시협약체결 ○ 2010.03.15 : 실시계획 승인 ○ 2012.05.31 : 공사착공

구분	구리-포천	상주-영천	서울-문산	옥산-오창
연장	50.5km(4~6차로)	93.9km(4차로)	35.6km(4~6차로)	12.1km(4차로)
사업 기간	2012-2017	2012-2017	2014-2019	2014-2018
사업 추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12.29 : 실시협약체결 ○ 2012.05.31 : 실시계획 승인 ○ 2012.06.30 : 공사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12.31 : 실시협약체결 ○ 2012.03.30 : 실시계획 승인 ○ 2012.06.28 : 공사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08.29 : 실시협약체결 ○ 2013.08.28 : 실시계획 승인신청 ○ 2014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01.11 : 실시협약체결 ○ 2013.10.11 : 실시계획 승인 ○ 2013.12. : 공사착공 예정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신규사업 중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경우 2013년 8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착공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인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착공 1차년도 부터 토지매입비의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예산 집행에 필요한 선행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토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사업의 토지매입비 수준 관리 필요

민자도로건설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는 실시협약에 따라 국고에서 전액지원하고 있으나, 협약 제언 이후 사업 착수에 이르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총사업비 변동에 따른 국고 보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 사업 확대를 통해 국고 투자를 줄이면서 실질적인 SOC 투자 규모는 유지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사업제안부터 실제 사업 추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총사업비 증가에 따라 당초 계획된 사업비를 초과한 추가적인 국고 지원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사업기간 단축 및 총사업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표 4]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총사업비 변동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협약월 (제안월)	사업 기간	구분	총사업비(국고)		차이 (B-A)	변경사유
				협약 당시(A)	변경(B) (2012.5)		
수원광명	2008.12 (2002.12)	2011-2016	토지매입비	2,513	4,285	1,772	협약 당시는 불변가로 산정 되었으며 지급시점에는 불변가에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산정됨에 따른 변경
			건설보조금	1,460	1,918	458	
			소계	3,973	6,203	2,230	
광주원주	2008.05 (2003.02)	2011-2016	토지매입비	1,445	3,483	2,038	
			건설보조금	-	-	0	
			소계	1,445	3,483	2,038	
인천김포	2007.07 (2002.12)	2012-2017	토지매입비	2,589	7,235	4,646	
			건설보조금	1,134	1,444	310	
			소계	3,723	8,679	4,956	
안양성남	2007.07 (2002.04)	2012-2017	토지매입비	1,452	3,977	2,525	
			건설보조금	-	-	0	
			소계	1,452	3,977	2,525	
구리포천	2010.12 (2002.07)	2012-2017	토지매입비	7,572	12,519	4,947	
			건설보조금	346	412	66	
			소계	7,918	12,931	5,013	
영천상주	2008.12 (2003.04)	2012-2017	토지매입비	1,124	1,957	833	
			건설보조금	1,537	2,073	536	
			소계	2,661	4,030	1,369	
합 계			토지매입비	16,695	33,456	16,761	
			건설보조금	4,477	5,847	1,370	
			소계	21,172	39,303	18,131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라. 산출내역 없이 편성된 민간 선(先)투자 이자비용 감액 필요

동 사업에는 2014년 신규로 민간 선투자 이자비용(토지매입비목) 300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5]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중 민간선투자이자비용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민간 선투자 이자비용	-	-	-	30,000	30,000	순증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이는 정부재정의 보완차원에서 고속도로사업에서 민간 선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이나, 현재까지 민간 선투자 사업 대상 및 지원 시기,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운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토교통부는 종전에 국도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도급자가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하여 선투자시공하고 시공부분에 대한 기성검사가 완료될 경우, 다음년도 예산으로 선투자비(약 5%의 인센티브 포함)를 우선 상환하는 선투자 제도를 활용한 바 있었다.

그러나 동 제도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관리지침¹³⁾에서 총사업비의 조정항목에 인센티브산정기준을 정하면서 민간 선투자를 언급하고 있을 뿐 법령상 민간 선투자 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¹⁴⁾이 있어 왔다.

또한, 2011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민간 시공사의 선투자 신청 자체가 전무하여 2014년에는 국도 계속비 사업에서의 민간 선투자 상환 예산안조차 편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표 6] 국도 계속비 사업의 민간선투자 현황

(단위: 억원)

선투자 연도	계 획 (기획재정부협약액)	실 적 (선투자액)	상환연도	상환액	인센티브액
소 계	3,109	1,027		1,136	109
2009	2,269	646(8건)	-	-	-
2010	340	64(2건)	-	-	-
2011	500	317(4건)	-	-	-
2012	-	-	-	85	6
2013	-	-	-	1,051	103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13) 민간시공사는 민간 선투자 대상규모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민간선투자사업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5월말까지 확정하도록 한다.

14)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년 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선투자제도의 근거로 예산총칙의 규정을 들고 있으나, 예산총칙은 “민간선투자”란 명칭없이 계속비의 “연부액 초과시공”만을 규정하고 있고, “연부액 초과시공”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총사업비의 조정항목에 인센티브산정기준을 정하면서 민간선투자를 언급하고 있어 민간선투자제도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민간선투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공사를 하게하고 그 이자와 대금을 차후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명백히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에도 예산총칙의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이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적인 예산집행이라는 의견이다.

이처럼 국도 계속비 부문에 있어서도 선투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속도로 부문에서 법령상 근거와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출 근거 없이 민간 선투자 이자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바, 민간선투자이자비용은 조정이 필요하다.

7.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총액계상): 경관도로조성사업의 총액계상 분리 등

- 내역사업인 경관도로조성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대상 및 예산 규모 산출이 가능하므로 총액계상 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도로명안내표지 선도사업을 위한 지자체 보조예산은 2012년 이후 실집행실적이 없는 상태인 바, 집행 가능한 범위의 편성이 요구되며, 향후 본 사업 도입 여부등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함.

가. 현황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교특회계, 계속~, 직접)은 일반국도의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시설, 도로표지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확충하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적기에 시행하여 교통사고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3년 대비 54억 300만원(4.1%) 감액된 1,154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111,492	111,536	132,536	115,435	-5,403	-4.1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나. 경관도로조성사업의 총액계상 사업에서 분리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중 경관도로 조성사업은 전국의 적소에 다양한 테마(녹지, 수변, 역사문화 등)의 경관도로를 조성하여 휴식·조망·문화공간을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표 2] 경관도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위치	총사업비	예산액	사업기간
2011	국도77호선전남 영광	1,800	200	2011-2013
2012	국도 37호선전북 무주	1,500	750	2012-2013
	국도77호선전남 영광	1,800	1,000	2011-2013
	국도 17호선전남 곡성	2,307	1,000	2012-2013
	국도 35호선경북 봉화	419	419	2012
	국도 1호선경기 파주	1,910	867	2012-2013
2013	국도77호선전남 영광	1,800	600	2011-2013
	국도 37호선전북 무주	1,500	750	2012-2013
	국도 17호선전남 곡성	2,307	1,307	2012-2013
	국도 1호선경기 파주	1,910	1,043	2012-2013
	국도 14호선경남 거제	3,800	250	2013-2015
	국도 7호선강원 양양	1,200	250	2013-2014
2013	국도 46호선강원 고성	150	-	2014년계획
	국도 30호선전북 진안	1,850	-	
	국도 37호선충북 옥천	2,000	-	
2015	국도 18호선전남 곡성	2,700	-	2015년계획
	국도 7호선강원 삼척	350	-	
	국도 45호선경기 남양주	950	-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7조¹⁵⁾에 따라 총액계상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는 예산 편성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법령에 명시된 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경관도로사업은 2010년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국 52개 구간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인 바, 사전에 연차별 사업구역과 소요 예산을 산출할 수 있어 총액계상 사업¹⁶⁾요건에 부적합하다.

특히, 경관도로는 전국의 적소에 다양한 테마(녹지, 수변, 역사문화 등)의 경관 도로를 조성하여 휴식·조망·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도로 주변에 공원이나 화단, 자전거도로 등 인공지물을 설치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도로 안전 및

15)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6) 총액 편성시에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의 개별 심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관도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후 집행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환경개선이라는 사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바, 이를 총액계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지방자치단체이전(도로명안내표지 선도사업)의 본사업 추진 경과 및 실행을 감안한 예산 편성 필요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의 자치단체보조비는 안전행정부의 새주소(도로명주소)¹⁷⁾와 연계한 도시지역 도로명 안내표지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도 자치단체보조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15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3]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중 자치단체보조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A)	2014 예산안(B)	증 감	
				(B-A)	(B-A)/A
자치단체보조	1,600	1,500	1,500	-	-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도로명안내표지 선도사업은 도시지역 도로명 안내표지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 발굴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2011년부터 추진하였다. 이에 2011년 순천, 2012년부터는 전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 것으로 파악되나, 지자체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의 경우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4]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중 도로명안내표지 선도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지자체	부처		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A)	교부액 (A)	전년 이월(B)	예산현액 (A+B)	집행액 (C)	집행률 C/(A+B)
2011	순천	1,800	-	450	-	450	450	100
2012	전주	1,600	-	1,600	-	1,600	58	3.6
2013		1,500	-	1,000	1,600	2,600	-	-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17) 새도로명주소사업은 종전의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건물번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도로에 이름을,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주소체계로 2007년 도로명주소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고, 2014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다.

동 사업은 선도사업 공고 결과 설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없어 2011년 30%였던 국고보조율을 2012년부터는 70%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국고보조금 상향 협의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본 사업인 도시지역 도로명 안내표지 도입사업은 현재까지 추진 여부와 추진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범사업 역시 2014년 이후 추가적인 확대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시급히 마무리하기 보다는 향후 본 사업 도입 여부 등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한 바, 연내 지자체의 실집행이 가능한 적정 소요액 편성이 필요하다.

8.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확정 노선에 대한 신규 편성 및 집행실적을 감안한 적정 사업비 계상 필요

-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노선에 한해 신규 사업비 편성 필요
- 사전절차 미이행 및 지방비 부족 등에 따른 일부 집행 부진 사업은 연례적 부진을 방지하도록 적정 사업비 계상 필요

가. 현황

도시철도건설사업(교특회계, 계속~, 보조¹⁸⁾)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철도·모노레일 등 궤도 위를 주행하는 교통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대비 757억원(11.6%) 감액된 5,755억원이 편성되었다.

2014년도 예산안에는 재정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인 지하철 건설지원 사업에 서울 지하철9호선건설(2단계) 등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5,705억원, 민자로 추진하는 경량전철 건설지원사업에 서울~우이~신설경전철 등 2개 사업을 대상으로 50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도시철도 프로그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도시철도건설	482,372	651,155	651,155	575,459	-75,686	-11.6
지하철건설지원	452,372	625,755	625,755	570,459	-55,296	-8.8
- 서울지하철9호선건설(2단계)	4,000	65,755	65,755	6,359	-59,769	-90.5
- 부산지하철1호선 연장	55,000	88,000	88,000	92,000	4,000	4.5
- 대구지하철3호선 건설	156,022	204,000	204,000	142,100	-61,900	-30.0
-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	178,000	120,200	120,200	180,200	60,000	49.9
-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	18,400	24,900	24,900	25,000	100	0.4

18) 도시철도사업은 예산체계상 지하철건설지원과 경량전철건설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지하철건설지원은 재정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전체 건설 사업비에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라 60%(서울은 4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경량전철 건설지원은 민자로 추진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전체 건설사업비 중 민자를 제외한 재정투입분에 대해 일정부분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 서울지하철9호선 2-2단계	33,950	100,000	100,000	98,800	-1,200	-1.2
- 부산 사상~하간 도시철도 건설	5,000	2,100	2,100	3,000	900	42.9
- 마-창-진 도시철도 건설	-	4,800	4,800	5,300	500	10.4
- 부산도시철도1호선양산선 (노포-북정)	-	1,000	1,000	2,600	1,600	160
- 서울지하철7호선 석남연장	2,000	15,000	15,000	8,900	-6,100	-40.7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	-	-	5,200	5,200	순증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	-	-	1,000	1,000	순증
경량전철건설지원	30,000	25,400	25,400	5,000	-20,400	-80.3
- 서울~우이~신설경전철 건설	30,000	24,400	24,400	4,000	-20,400	-83.6
- 신림선 경전철 건설	-	1,000	1,000	1,000	-	-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나. 신규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점검 필요

2014년도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 중 신규사업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건설 및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며, 기본설계비로 각각 52억원과 10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2] 2014년 신규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증 감 (B-A)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	5,200	5,200	순증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	1,000	1,000	순증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으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기준을 규정한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설타당성이 인정(예비타당성조

사 결과 B/C 1 이상 또는 AHP 0.5 이상)되고,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라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¹⁹⁾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2011년 기본계획 승인이 있었으나, 고가구간을 저심도 지하 구간으로 전환하는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 중으로, 2013년 9월 현재 관계 부처 협의 중에 있다. 또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역시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보완 중인 단계로 2014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승인 후에 기본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표 3] 신규 예산반영 사업구간 개요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구간	총사업비	타당성조사일 (B/C, AHP)	기본계획 수립일	기본계획 승인일	2014 예산안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시청~백운 광장~시청	10,437	2010.12 (B/C=0.997, AHP=0.502)	2011년 승인이후 기본계획 변경 중	-	52
대전도시철도 2호선	진잠~유성	7,510	2011.12~2012. 11 (B/C=0.91, AHP=0.508)	기본계획 보완 중 2013년 하반기 제출예정	2014년 상반기 중	10

주: 총사업비는 국비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이전에도 부산사상~하단 등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승인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한 바 있다.

19) 「도시철도법」 제3조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2. 도시철도건설의 경제성과 그 밖에 타당성의 평가
3. 노선명(路線名), 노선 연장, 기점(起點)·중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등 개략적인 노선망(路線網)
4. 건설기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財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방안
5. 개략적인 건설비와 중·장기 자금운용계획
6. 건설기간 중 도시철도건설 지역의 도로교통대책
7.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도시철도 운영인력의 수급계획
9.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4] 기본계획 미수립 사업의 세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부산사상 ~하단	2010	1,000	-	-1,000	-	-	-
	2011	1,000	-	-518	482	-	482
	2012	5,000	-	-	5,000	5,000	-
	2013	2,100	-	-	2,100	2,100	-
마·창·진	2011	1,000	-	-	1,000	-	1,000
	2012	1,000	-	-	1,000	-	1,000
	2013	4,800	-	-	4,800	-	-
부산1호선 양산선	2011	2,000	-	-	2,000	-	2,000
	2012	2,700	-	-	2,700	-	2,700
	2013	1,000	-	-	1,000	-	-

주: 2013년은 9월말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이들 사업 중 부산사상~하단의 경우 기본계획 승인 이후 2012년 말부터 예산이 교부되기 시작하였고, 마·창·진 도시철도와 부산1호선 양산선은 2013년까지도 집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 양산선은 기본계획을 보완 중인 단계이다.

[표 5] 부진사업 예산반영 사업구간 개요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 구간	총사업비	타당성조사일 (B/C, AHP)	기본계획 수립일	기본계획 승인일	2014 예산안
부산 사상~하단	사상~하단	2,756	2009년 상반기 (B/C=0.872, AHP=0.503)	2012	2012.12	30
마·창·진	마산~창원~ 진해	6,186	2009년 하반기 (B/C=0.880, AHP=0.502)	2012.3	2012.12	53
부산1호선 양산선	부산 노포~ 양산 북정	2,975	2009년 하반기 (B/C=0.890, AHP=0.501)	2011.12	기본계획 보완 중	16

주: 총사업비는 국비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기본계획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본계획에 대한 부처 승인, 기본설계 등 사업 추진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 중 기본계획이 수립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행정 절차의 이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 집행여건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검토

도시철도건설사업의 2013년도 9월말 현재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마-창-진 도시철도건설, 부산도시철도1호선양산선(노포-북정)건설, 신림선 경전철건설의 경우 부처 단계에서의 교부실적이 전혀 없고, 우이-신설 경전철건설의 경우 예산액의 75%를 교부하였으나, 지자체 실집행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서울지하철7호선 석남연장은 예산액의 33.3%만이 교부되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 6] 도시철도건설사업의 2013년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3									2014 예산안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C)	집행액 (D)	이월액	집행률 (D/C)	
마창진 도시철도건설	4,800	-	-	-	-	-	-	-	-	5,300
부산도시철도1호선 양산선(노포-북정)건설	1,000	-	-	-	-	-	-	-	-	2,600
서울지하철7호선 석남연장	15,000	5,000	33.3	5,000	-	5,000	5,000	-	33.3	8,900
우이신설 경전철건설	24,400	18,300	75.0	18,300	-	18,300	-	-	-	4,000
신림선 경전철건설	1,000	-	-	-	-	-	-	-	-	1,000

주: 집행액은 2013년 9월말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이 중 서울지하철7호선 석남연장의 경우 부평구청역에서 석남동 간 4.2km구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현재 실시설계(2012.10~2014.1)가 진행 중인 바, 내년 상반기에야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13년도에 편성한 공사비 100억원은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감안한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표 7] 집행저조 사업의 부진 사유

사업명	2013		2014 편성 사업내용
	편성 사업내용	집행저조 저조 사유	
마-창-진 도시철도건설	기본설계비	기본설계 발주지연으로 미교부	실시설계비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기본설계비	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아 미교부	기본설계비
서울지하철7호선석남연장	기본설계비, 공사비	설계 중으로 착공이 되지 않음에 따라 100억원(공사비) 미교부	공사비

주: 집행액은 2013년 9월말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또한, 우이~신설 경전철²⁰⁾사업과 신림선경전철²¹⁾사업은 민자사업으로 민간투자협약에 따라 서울시에 12%보조하고 있으나, 2013년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지방비 역시 전혀 집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표 8] 경전철사업의 2013년도 국비 및 지방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처		사업시행자					
			국비			지방비		
	예산	집행	예산액	현액	집행액	예산액	현액	집행액
우이~신설 경전철건설	24,400	12,200	24,400	24,400	12,200	47,800	82,000	0
신림선 경전철건설	1,000	0	1,000	1,000	0	5,000	5,000	0

주: 집행액은 2013년 9월말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우이~신설 경전철은 시공사 법정관리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신림선 경전철의 경우 서울시의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용역²²⁾ 추진

20) 우이~신설구간 11.4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12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2015이며, 서울시를 대상으로 12% 국고보조한다.

21) 여의도~신림구간 7.8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456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2017이며, 서울시를 대상으로 12% 국고보조한다.

22)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2013.7월)은 2008년 확정된 기본계획에 위례-신사선, 위례선, 서울도시철도9호선 4단계 등 3개 노선을 추가하여 10개 노선을 확정 발표한 것으로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에 대해 지역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영향평가법) 단계로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로 기본계획 변경 신청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어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집행이 부진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표 9] 집행저조 사업의 부진 사유

사업명	2013		2014 편성 사업내용
	편성 사업내용	집행저조 저조 사유	
우이~신설 경전철건설	건설보조금	시공사 법정관리로 인한 공사추진 저조	건설보조금
신림선 경전철건설	건설보조금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용역(2012.1~2013.8)결과에 서 예타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추 진 방안 검토	건설보조금

주: 집행액은 2013년 9월말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9.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지자체별 여건을 감안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은 법정도입 대수 대비 부족대수가 많은 지자체의 집행실적이 오히려 저조하고, 도입 이후 운영단계의 재정소요가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별 여건을 감안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가. 현황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교통회계, 2013년~, 보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보조(서울 40%, 지자체 50%)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5억원(10.0%) 감소한 45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	5,000	5,000	4,500	-500	-10.0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나. 부족대수가 많은 지자체의 집행 저조 개선 필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²³⁾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1·2급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이륜 바, 장애인 콜택시)을 도입·운행할 의무²⁴⁾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체 법정도입대수 2,748대 대비 62%인 1,704대만이 운행되고 있어, 정부지원²⁵⁾을 통해 2016년까지 부족대수를 확충하고자 2013년에 신규로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3)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2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도입하여야 한다.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⑥ 국가 또는 도(道)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표 2] 시도별 법정도입대수 대비 부족대수

(단위: 대)

지자체별	법정 도입대수	운행 대수	부족 대수	연차별 도입계획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748	1,704	-1,044	309	346	274	178
서울시	454	383	-71	50	20	-	-
부산시	187	109	-58	17	17	17	36
대구시	131	80	-51	12	15	16	18
인천시	141	132	-9	3	7	10	5
광주시	77	55	-22	13	12	-	-
대전시	80	35	-45	4	5	6	10
울산시	50	28	-22	3	3	1	1
세종시	9	2	-7	2	2	2	2
경기도	548	243	-305	110	100	105	-
강원도	110	34	-76	17	48	45	-
충청북도	106	78	-28	10	12	-	-
충청남도	136	33	-103	6	12	-	-
전라북도	139	89	-50	21	26	27	28
전라남도	154	36	-118	14	20	25	58
경상북도	189	58	-131	13	25	20	20
경상남도	198	297	99	9	9	-	-
제주도	39	12	-27	5	13	-	-

주: 시도별 법정도입대수 대비 부족대수는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동 사업의 2013년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 평균 실집행률은 34.8% 수준이며, 17개 지원 대상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만 집행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표 3] 2013년 시도별 도입수요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대, %)

구분	예산		집행		집행률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계	5,000	258	1,739	96	34.8
서울	672	42	672	42	100
부산	340	17	-	-	-
대구	240	12	-	-	-
인천	260	13	260	13	100
광주	140	7	140	7	100
대전	80	4	-	-	-
울산	60	3	60	3	100
세종	40	2	40	2	100
경기	1,340	67	-	-	-
강원	340	17	200	10	58.8
충북	200	10	100	5	50.0
충남	120	6	-	-	-
전북	400	20	247	13	61.8
전남	280	14	-	-	-
경북	260	13	-	-	-
경남	120	6	20	1	-
제주	100	5	-	-	-
배정잔액	8	-	-	-	-

주: 2013년 9월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이처럼 집행이 저조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은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확보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칭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이라 현재까지 교부액이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 사업은 국고지원을 통해 2016년까지 시도별 법정 도입대수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하고 있으나, 부족대수가 많은 경기, 충남, 전남, 경북 등의 집행이 특히 부진한 상태이다.

[표 4] 당초 도입계획 대비 2014년 수요조사 현황

(단위: 대)

구분	당초 계획(A)	실제 수요(B)	B-A
계	346	348	2
서울시	20	30	10
부산시	17	17	-
대구시	15	20	5
인천시	7	7	-
대전시	12	5	-7
광주시	5	12	7
울산시	3	3	-
세종시	2	2	-
경기도	100	100	-
강원도	48	48	-
충청북도	12	12	-
충청남도	12	12	-
전라북도	26	32	6
전라남도	20	0	-20
경상북도	25	25	-
경상남도	9	10	1
제주도	13	13	-

주: 2013년 9월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장애인 콜택시를 확충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안을 계속적으로 편성하기에 앞서 부족대수가 많은 지자체에 지원을 확대하거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향후 운영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부담 확대 문제

동 사업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은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조제1항 별표2에 따라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이후 운영 단계에서 대당 연 4천만원 이상의 운영비(인건비, 차량관리비, 유류비)를 전액 부담하게 되는 바, 이러한 운영부담이 도입을 유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표 5] 지자체별 연간 운영비 소요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2년 총 운영비	2012년 1대당 평균 운영비
서울	24,675,000	68,541
부산	4,057,510	40,575
대구	4,251,590	53,337
인천	6,516,216	53,494
광주	4,471,614	81,302
대전	3,347,525	39,383
울산	941,582	36,215
세종	25,000	25,000
경기	7,252,640	40,070
강원	1,330,000	39,000
충북	-	-
충남	1,391,335	34,783
전북	1,288,098	35,780
전남	-	-
경북	-	-
경남	10,457,920	35,938
제주	750,000	62,500
평균	5,054,002	46,137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도입 이후 운영²⁶⁾이 지속되어야 실질적인 장애인 편의제고 효과가 발생하지만, 운영단계에서의 지자체 재정 부담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단편적인 정부의 도입 보조 정책이 특별교통수단 확충·운영에 있어 확실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

이에 동 사업의 경우 관계 법률상 지자체의 도입 및 운영 의무의 현실적 집행 가능성과 향후 재정소요, 지자체별 정책의지 등을 감안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교통수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재정여건, 지자체장 의지 등에 따라 이용요금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10. 택시감차보상: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감차 사업비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2013년에는 택시 대당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액 대비 44.3% 수준만 신청하는 등 수요가 저조하였음. 이에 2014년에는 실거래가 보상 방안을 계획 중이나 이는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인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가. 현황

택시감차보상(교통회계, 1999~, 출연)은 택시업계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택시 감차 보상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5억 7,500만원(11.5%) 증가한 55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택시감차보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택시감차보상	-	5,000	5,000	5,575	575	11.5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나. 잦은 지원기준 변경 및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1995년 민선 지자체장 출범 이후, 택시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택시면허 발급이 남발되면서 공급 과잉상태가 심화되었고, 이에 택시 업계의 수급을 보전하기 위한 감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감차 보상을 실시해 왔고, 2013년부터는 국가가 직접 감차를 확대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감차 보상비로 택시 대당 1,300만원²⁷⁾이 적정하다고 보고, 대당 30% 수준인 390만원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27) 폐업지원금(2년간의 영업이익) + 차량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표 2] 택시감차보상 사업개요

전체 사업대상	과잉공급된 택시 13,000대
감차기준	지자체가 공모를 거쳐 접수한 신청 차량에 대해 국토부가 우선 순위에 따라 잠정차량을 선정하고 지자체가 최종 감차대상 차량 선정 후 감차 실시
감차대상	택시 지역별 총량계획상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차량
감차 시행 주체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 방식	보상액의 30%를 국비로 지원(대당 390만원 한도)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그러나 동 사업의 2013년 9월 현재까지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1,200대 가량 보상할 수 있는 예산액(5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7월말 지자체에서 공모한 신청 접수 후 지자체별 감차대상 선정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시달하였으나 수시배정으로 인해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假) 신청한 지자체의 감차 보상 수요 역시 569대(569*39만원 = 22억 1,910만원)에 불과하여 예산액 대비 44.3%수준만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행 수요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27억 8,000만원 규모의 불용이 불가피하다.

[표 3] 2013년도 지자체가 공모를 거쳐 접수한 신청 차량 현황

(단위: 개소, 대)

구 분		총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신 청	시·군	19	1	1	6	8	2	1
	차 량(대)	619	50	12	351	61	107	38
선 정 (감차대상)	시·군	17*	1	1	6	7	2	
	차 량(대)	569	50	12	351	49	107	

주: 2개 지자체(제주도·강진)의 차량은 사업시행지침에 부합되지 않아 감차대상에서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동 사업은 사실상 택시업계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나, 법인택시 프리미엄이 4,500~5,000만원, 개인택시 프리미엄이 6,500~7,000만원을 형성하고 있는 상

태에서 감차 보상 시 나머지 번호판 프리미엄 값이 오를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와 현행 보상수준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보상 실수요가 확대될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제도를 변경하여 정부·지자체의 감차예산과 업계 자체부담금을 감차재원으로 조성하여 시장거래가로 감차 보상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2014년 시범사업 이후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표 4] 기존 감차방식과 비교

구 분	기존 감차	자율감차
감차재원	정부와 지자체 감차예산	정부와 지자체 감차예산 + 택시업계 자체 부담금
감차 보상금	법인·개인 모두 1,300만원 (2년간 영업보상 + 차량잔존가치)	개인·법인 실거래가 보상 (개인 약 7천만원, 법인 약 3천만원)
감차주체	지자체	감차위원회 (업계, 지자체, 전문가)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그러나 실거래가 보상방식의 자율감차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난 6월 제출한 「택시지원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는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택시업계는 감차재원을 조성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감차규정²⁸⁾을 수정·반영하는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정부 추진 사업이 1년 만에 보조 기준을 달리하여 집행되는 것은 사업 대상자의 정책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고,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은 국회에 제출된 「택시지원법안」의 연내 통과 및 내년도 효력 발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거래가 보상 방식의 시범 추진을 위한 동 예산안은 법률안 심사 과정에 따라 적정 소요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8) 감차재원 조성의무 불이행시 유가보조금 등 정부·지자체가 지급 중인 각종 보조금을 중지할 수 있는 이행담보 규정 마련 및 효과적으로 감차가 진행되도록 자율감차 시행기간 동안 감차보상을 우선 신청하지 아니하고는 개인 간 양도·양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11. 항행안전시설유지관리: 일반수용비의 적정 조정 및 사업목적에 맞는 내역사업의 편성 조정 필요

- 연례적으로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2014년도에 전년 대비 70.7% 증가 편성하였는 바, 「2014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집행실적 반영한 조정이 필요함.
- 연구개발과제 중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국제표준 기술기준 연구는 사업목적에 맞도록 동 사업이 아닌 차세대항행안전시설구축사업에 편성하도록 함.

가. 현황

항행안전시설유지관리사업(교특회계, 2000~, 직접)은 항공기의 안전정보를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제공하기 위한 공항 관제레이더 시설 확충·현대화, 항행안전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대비 24억 5,500만원 (28.8%) 감소한 60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항행안전시설유지관리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항행안전시설유지관리	6,613	8,523	8,523	6,068	-2,455	-28.8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나. 연례적 집행이 저조한 일반수용비 조정 검토

최근 4년간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목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사업비로 아·전용 등²⁹⁾을 하거나 불용하였다.

²⁹⁾ 국토교통부는 2011년 및 2012년은 국제회의장 임차료를 세목 조정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저조한 것으로 설명한다.

[표 2] 항행안전시설유지관리사업 일반수용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0	122	-	-	122	80	65.6	-	42
2011	139	-	-52	87	76	54.7	-	11
2012	133	-	-49	84	83	62.4	-	1
2013	152	-	-	152	32	21.1	-	-

주: 2013년은 9월말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2013. 9)

그런데 이러한 집행 저조에도 불구하고, 2014년 예산안은 오히려 일반수용비가 전년대비 70.7% 증가한 5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3] 항행안전시설유지관리 일반수용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수용비	84	152	519	367	70.7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일반수용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2014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배분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일반수용비는 최근 수년간의 이·전용, 불용 등 집행실적 반영하여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과 달리 일반수용비를 과다 편성하는 것은 부적정한 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다.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연구용역의 분리 편성 필요

2014년도 예산안에는 항행안전구축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년대비 92.3% 증액된 7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4] 항행안전시설유지관리 연구용역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증 감	
				(B-A)	(B-A)/A
연구용역비(260)	329	390	750	360	92.3

자료: 국토교통부(2013)

이는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국제표준 기술기준, 자연재해 대비 항행시스템 및 중사자 보강방안 연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이다.

[표 5] 2014년도 항행안전구축연구개발 세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과제명	예산안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국제표준 기술기준 연구	300
자연재해 대비 각종 항행안전시설 보강방안 연구	300
항공산업(국내 항행안전시설 장비 생산) 지원 중사자 양성방안, 안전관리·감독체계 확립 연구	150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그러나 이 중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은 지상과 항공기를 연결하는 일반 항행 안전시스템과 달리 인공위성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의 시스템으로서 차세대항행안전 시설구축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동 사업 내 연구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표 6] 차세대항행안전시설구축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증 감	
				(B-A)	(B-A)/A
차세대항행안전시설구축	310	1,500	570	-930	-62.0
-GPS항공감시시스템구축	-	1,500	-	-1,500	순감
-비상용통합접근관계 시스템구축	310	-	435	435	순증
-차세대 항공감시멀티 시스템구축	-	-	135	135	순증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이에 동 사업은 사업 추진 목적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항행안전시설유지관리 사업에서 분리하여 차세대항행안전시설구축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항공산업발전지원(신규): 항공레포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 마련 필요

- 동 사업은 공항개발 및 안전규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항공레포츠 등 관광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이나, 항공 레저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명확한 소관 구분을 위한 관계 법령 등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함.

가. 현황

항공산업발전지원사업(일반회계, 신규, 직접)은 ① 항공정책기본계획 마련 등 정책지원과 ②청소년항공교실, 항공레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항공산업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신규로 5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항공산업발전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항공산업발전지원	-	-	-	520	520	순증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나. 항공레저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필요

항공산업발전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을 살펴보면, 항공운송동향분석 및 항공수요예측분석은 국제항공안전표준화 사업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별도 분리한 것이고, 청소년 항공교실, 항공체험프로그램, 항공레포츠제전 이상 3개 내역사업이 신규사업이다.

[표 2] 항공산업발전지원 사업 내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2014 예산안	비고
합 계	520	
항공정책기본계획	50	5년 단위 법정계획인 항공정책기본계획
항공운송동향분석	100	국제항공안전표준화 사업
항공수요예측분석	70	
청소년항공교실	140	신규
항공체험프로그램	70	
항공레포츠제전	90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지금까지 항공분야는 항공운송사업과 공항분야 위주의 정책과 안전규제 중심의 사업에 집중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청소년의 꿈 함양, 저변확대, 관광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통해 기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8월 법제처에서 주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레저 전반에 관한 정책만을 총괄하고, 분야별 레저는 소관부처(항공레저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흥 및 안전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된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항공분야 레저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태이다.

항공레저는 다양한 레포츠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나,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수반되어야 할 것인 바, 향후 부처 차원에서 입법적 보완을 하고, 중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13. 광역철도건설: 사전 사업계획 철저 필요 및 집행여건을 감안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은 부처 간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2012년 불용되었으나, 2013년 현재까지도 추진 방식과 지원 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의 계속적 불용이 우려됨.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2013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지난 4월 정부의 결정(고속철도 수도권 사업과의 동시시공방안)에 따라 올 하반기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사실상 국회 심사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될 수 있음.
- 2013년 10개의 광역철도건설사업 중 6개의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인바, 이들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집행 여건을 감안한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이 요구됨.

가. 현황

광역철도³⁰⁾건설 프로그램(광특회계/계속~/보조)은 대도시권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1,117억원(30.5%) 감액된 2,549억이 편성되었다.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은 국비 75%, 지방비 25%로 사업비를 부담한다.

[표 1] 광역철도건설 프로그램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광역철도건설프로그램	6,170	3,666	3,666	2,549	-1,117	-30.5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2014년도 예산안에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광교~호매실), 상일~하남 등 3건의 신규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 편성되었다.

30) 광역철도 요건은 ①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② 전체 구간이 50km 이내일 것, ③ 표정속도가 40km/h 이상일 것, ④ 국토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것이다.

[표 2] 광역철도 세부사업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기간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증감	
					(B-A)	(B-A)/A
완공	용산~문산 복선전철	1996~2014	77,629	15,796	-61,833	-79.7
계속	수원~인천 복선전철	1995~2015	75,000	105,000	30,000	40.0
	신분당선(경자~수원)	2005~2016	85,000	43,800	-41,200	-48.5
	신안산선 복선전철(착공)	2006~2022	6,000	30,000	24,000	400.0
	소사~대곡 복선전철	2006~2017	2,000	2,000	-	-
	별내선 복선전철	2007~2016	2,000	10,000	8,000	400.0
	신분당선(용산~강남)	2008~2018	10,000	2,000	-8,000	-80.0
신규	신분당선(광교~호매실)	2014~2019	-	300	300	순증
계속	당고개~진접 복선전철	2012~2019	2,000	20,000	18,000	900.0
신규	상일~하남 복선전철	2013~2020	-	14,000	14,000	순증
	삼성~동탄 광역 급행철도(착공)	2014~	-	12,000	12,000	순증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나. 대곡~소사 노선의 사업 추진 방식 결정 필요

대곡~소사복선전철³¹⁾ 사업(광특회계, 2012~2017, 출연)은 소사~원시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수도권 서북부지역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용지비로 20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3] 대곡~소사 복선전철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곡~소사 복선전철	2,000	2,000	2,000	2,000	-	-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31) 경기도 부천시 소사~고양시 대곡을 연결하는 19.6km의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3,504억원, 사업기간은 2012~2017년이며,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2년부터 광역철도 예산으로 20억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부처간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매년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표 4] 대곡~소사 복선전철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2	2,000	-	-	2,000	-	-	2,000
2013	2,000	-	-	2,000	-	-	-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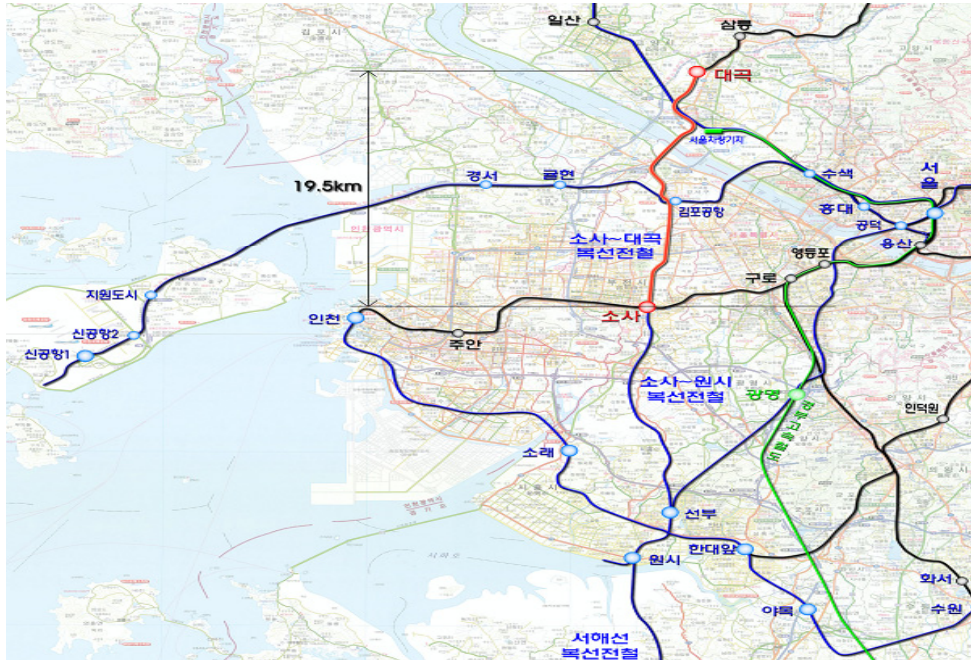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은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에 일반철도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철도 지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 사업과 연장노선 상에 있는 타 사업(소사~원시)은 일반철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일반철도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개 시도(서울경기)를 연결하고 있어 광역철도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회계 전환 시 재정부담이 증가됨을 이유로 전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동 사업은 200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120억 8,900만원을 들여 기본설계 및 민자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나, 현재까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13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시에는 국회가 부대의견³²⁾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추진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바, 입장 차이가 조정되지 않는 한 2014년도 사업 추진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 부대의견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간 조속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 방식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32) 2013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보고서 부대의견 (13) 대곡-소사 복선전철을 일반 철도로 분류하되, 사업비는 국고 90%, 해당 지방자치단체 10%의 비율로 분담한다.

[그림 1] 소사~대곡 복선전철 사업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다. 신규로 추진하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의 사전 추진 문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사업(광특회계, 2014~2021, 출연)은 수도권광역철도와 연계된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의 하나로 삼성~동탄간 37.9km의 복선전철을 신설하려는 신규사업이다. 2014년도 예산안은 기본설계 수립 및 설계 등을 위한 사업비로 120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5]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예산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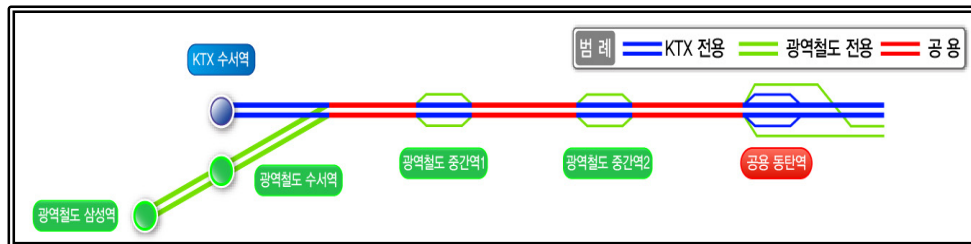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	-	-	12,000	12,000	순증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동 사업은 당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³³⁾(GTX사업: 킨텍스~삼성, 송도~청량리, 금정~의정부)구간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3년 4월 철도산업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삼성~동탄구간은 고속철도 수도권노선 확충 사업과의 선로공용을 위한 동시시공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결정하면서 2014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다.

[그림 2] 수도권 고속철도와 삼성~동탄 광역철도간 구간 공용 개념도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이는 삼성~동탄 지역으로는 고속철도 수도권노선과 광역급행철도가 모두 지나가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지하구간 여건 및 경제성을 감안할 때 고속철도와 별도의 광역철도 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동일 노선으로 추진하는 경우 고속철도 건설 이후에는 안전문제 등으로 광역철도를 위한 추가 시공이 불가능하였기 때문³⁴⁾이다.

그런데 2013년 예산안 편성 및 심사 당시에는 삼성~동탄 구간에 대한 동시시공 방안이 가시화되지 않아,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비 조달 방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33) 위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명	삼성-동탄광역급행철도	수도권고속철도수도권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프로그램	광역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내용	삼성-동탄간 복선신설	서울-시흥간 고속철도 선로확충	킨텍스~삼성, 송도~청량리, 금정~의정부 3구간
기간	2014-2021	2008-2015	2011.12~ 예타 중
총사업비	1조 6,965억원	3조 1,181억원	11조 1,273억원

3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노선이 판교, 분당, 용인 등 신도시 택지구역을 관통하고 주요 도로 하부를 통과하므로 별도의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동일노선으로 계획되어도 고속철도 건설후에는 KTX가 정기 운행함에 따라 안전문제 등으로 터널 발파건설장비 투입이 위험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사실상 추가시공이 불가하며, 동시시공이 안될 경우, 동탄 신도시 광역교통수단으로 계획된 삼성~동탄 광역철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도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고속철도 사업이 무기한 지연될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설명한다.

동 사업은 2013년 예산안 심사시 동시시공 방안 등을 미리 검토·결정하였더라면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 검토가 회계연도 도중에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철도건설 사업의 착수가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사실상 추진될 우려가 있고, 고속철도 수도권 노선 확충 사업이 당초 계획 보다 1년 늦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는 바,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를 보다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라. 집행저조 사업에 적정 소요액 편성 필요

2013년도 광역철도 건설의 부처단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기준으로는 72.4%가 집행되었으나, 2013년 추진된 10건의 광역철도 사업 중 용산~문산 복선전철 등 4개 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은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표 6] 2013년 광역철도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부처			사업시행자							
				국비				지방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 광역철도건설지원	366,629	265,314	72.4	366,629	372,766	269,622	72.1	103,449	103,449	70,920	68.6
용산~문산 복선전철	77,629	61,564	79.3	77,629	77,663	56,455	72.7	25,876	25,876	13,743	53.1
수원~인천 복선전철	75,000	43,500	58.0	75,000	75,000	57,476	76.6	35,971	35,971	26,471	73.6
오리~수원 복선전철	97,000	75,250	77.6	97,000	97,002	69,691	71.8	13,269	13,269	2,373	17.9
신분당선(경자~수원)	85,000	85,000	100.0	85,000	85,000	85,000	100.0	28,333	28,333	28,333	100.0
신안산선 복선전철	6,000	0	0.0	6,000	7,000	1,000	14.3	0	0	0	-
대곡~소사 복선전철	2,000	0	0.0	2,000	2,001	0	0.0	0	0	0	-
별내선 복선전철	2,000	0	0.0	2,000	2,000	0	0.0	0	0	0	-
신분당선(용산~강남)	10,000	0	0.0	10,000	15,100	0	0.0	0	0	0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10,000	0	0.0	10,000	10,000	0	0.0	0	0	0	-
당고개~진접복선전철	2,000	0	0.0	2,000	2,000	0	0.0	0	0	0	-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이들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별내선과 당고개~진접 구간의 경우 2013년 현재 사업 내용 구체화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중인 단계이고, 신안산선은 사업 추진방식이 미확정되었고, 신분당선(용산~강남)은 강북 구간 노선 미확정에 따라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착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7] 2013년 집행률 0%인 광역철도 세부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2013 예산	집행부진 이유	2014 예산안
신안산선	2006~2022	6,000 (설계비)	사업 추진방식에 대하여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연구 용역중(2013.7~10)	30,000 (용지비, 공사비)
별내선	2007~2016	2,000 (기본설계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	10,000 (기본설계비)
당고개~진접	2012~2019	2,000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	20,000 (기본 및 실시설계)
대곡~소사 복선전철	2006~2017	2,000 (용지비)	사업추진방식(일반,광역) 결정 지연에 따른 미 집행	2,000 (용지비)
신분당선 (용산~강남)	2008~2017	10,000 (용지비)	사업실시계획 승인 지연에 따른 공사 미 착공	2,000 (용지비)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철도건설법」³⁵⁾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별로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별내선, 당고개~진접의 경우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상태로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야 실질적인 사업 추진 단계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5) 「철도건설법」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제8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표 8] 2013년 집행률 0%인 광역철도 세부사업별 향후 추진계획

사업명	향후 추진 계획
신안산선	민자적격성조사, 신규사업모델 적용가능성검토, 민자사업 실용대안 구축 등(2013. 7. 10 ~ 2013. 12. 31)
별내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2010. 5 ~) 기본계획 고시 : 2014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 2014년 하반기
신분당선 (용산~강남)	용산개발사업 차질에 따라 기재부에서 수요예측 재조사를 진행 중(2013.9~)이며, 수요예측 재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결과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착공(2013.12) 등 후속절차 추진
당고개~진접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2012. 12. 21 ~ 2013. 10. 16) 이후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 중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또한,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지 않거나, 수요예측 재조사 등이 진행 중인 상
태로서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신안산선 및 신분당선(용산~강남) 역시 연
례적인 이월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소요액을 편성
할 필요가 있다.

14. 주택바우처시범사업지원(신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및 철저한 준비를 통한 시범사업 실시 필요

- 동 사업은 2014년 신규사업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 소관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한 시범사업 실시 필요.

가. 현황

주택바우처시범사업지원(일반회계, 신규, 보조)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가구)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자가가구)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4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시범사업비·주거현황 위탁조사비·정보시스템 구축·연구용역비·교육홍보비 등으로 총 236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표 1] 주택바우처시범사업지원 예산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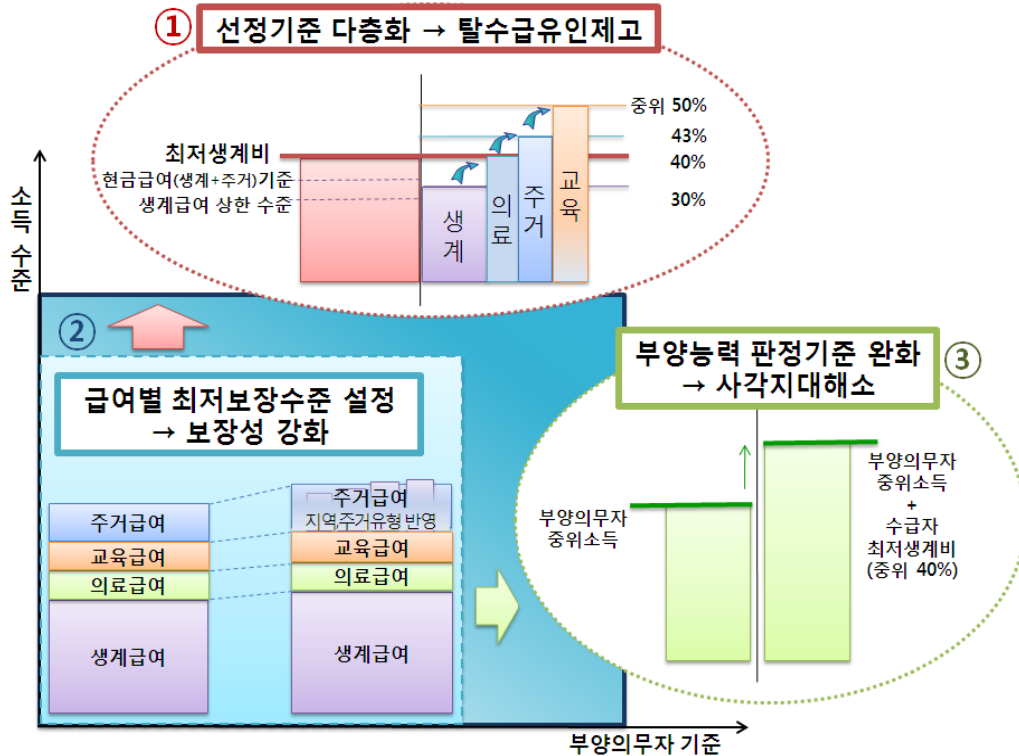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2 결산액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주택바우처시범사업지원	-	-	-	23,604	23,604	순증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 (2013.10)

동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이며, 주거급여를 확대·발전시킨 것이다. 개편의 기본방향은 선정기준 다층화 및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별 특성과 상대적 빈곤의 관점(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보장수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그림 1] 맞춤형 급여체계의 개편 방향



자료: 관계부처 합동,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2013. 9)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를 대신하여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 제도를 소관하게 될 예정이며, 주거현물급여 내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은 2015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지급대상 및 임대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주거급여를 소득,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편성된 236억원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의 주거급여 사업에 7,28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개편시점인 2014년 10월 이후 3개월분에 해당하는 2,340억원이 국토교통부로 이체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급여 개편을 통해 대상가구가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확대되어 약 97만 가구가 될 예정이며(73만→97만 가구, 약 24만 가구 증가), 지원수준의 현실화에 따라 연간 예산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표 2] 주택바우처시범사업지원 예산안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안 (23,604)	목적
시범 사업	3,016	<자치단체이전> 주거급여 개편(2014.10)에 앞서 시행 초기 혼란을 예방하고 제도 도입의 안정적 기반 마련(3만 가구 대상 3개월 시행) *3만가구*4.2만원(14.4만원-10.2만원)*3개월*국고보조율 79.78%
위탁 수수료	17,051	<민간경상보조> 주거실태, 임대차 관계 조사 등을 위해 전담기관에 위탁 *(유사사례)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중
시스템 구축	2,937	<연구개발비> ‘행복 e음’은 소득/재산 부문 조사에 특화하고, 주거실태 관련 조사에 관한 지원 기능은 별도 시스템 구축
연구비	500	<연구개발비> 주거급여 개편으로 인한 사례관리, 신규제도의 쟁점 연구
교육 홍보비	100	<운영비> 사업의 차질없는 도입·시행을 위해 언론, 신청공고 포스터 등을 통한 홍보, 사업안내 책자 제작, 순회 교육 등 추진

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6.14.발의)에 시범사업 실시, 주거실태 등의 전담기관 위탁, 시스템 구축 등의 근거규정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2013. 9)

나.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및 사전 사업 준비 철저 필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16일 현재 각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해당 예산은 법안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다.³⁶⁾

36)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관련 법안이 각 부처의 중점처리법안으로 해당 예산은 법안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3] 현행제도와 개편안의 비교

구분	현행 주거급여	주거급여 개편안
근거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택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2013년 73만 가구	약 97만 가구 (증 24만 가구)
지원 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19.35%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80.65%)+주거급여 액(19.35%)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유지수선비를 토 대로 소득,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 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좌 동 (주택개량 비중 확대계획)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2013년 8만원	약 11만원
전달 체계	지자체	좌동 (주택조사는 지자체가 전달기관에 의뢰)

자료: 국토교통부(2013. 9)

한편 동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료는 타인의 주택 등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 보조하며, 해당 보조금은 임대인 등의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⁷⁾ 현행 제도는 주거급여를 실제 임대료 지출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면 수혜 계층인 임차인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조금을 임대인에게 지급 할 경우 지급 과정에서 임대료·임대 규모 등을 파악 할 수 있어³⁸⁾ 임대인이 기피 할 우려가 있다.

3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0조의4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임차료는 타인의 주택 등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 보조하며, 해당 보조금은 임대인 등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8) 진미윤·남원석·최조순,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과 실행을 위한 준비 과제」, 한국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9.

따라서 임차료의 지급방식에 있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수급자)에게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

다. 철저한 준비를 통한 시범사업 실시 필요

2014년 주택바우처시범사업지원의 전체 예산인 236억원은 시스템 구축비에 29억원이 편성되었고, 위탁수수료가 171억원 편성되었다.

이 중 위탁 수수료는 개편 된 주거급여 대상인 97만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 임대차 관계 조사 등을 전담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비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업무 과부하 및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으로 위탁수수료를 편성하였다.

동 사업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주택바우처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며, 주거기준의 충족여부, 임대차 계약 실태, 임대료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있다.³⁹⁾ 그러나 미국은 예산을 정하고 주택바우처를 도입하였으며, 수급 가구는 전체 가구의 1%대이다.⁴⁰⁾

유럽 국가의 임대료 보조는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⁴¹⁾ 저성장과 실업 증가 등으로 주거비 보조 대상이 증가하여 예산 부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편, 영국은 행정적인 업무를 간소화하여 2006년 주거비보조제도 개편을 통해, 실제 지불 임대료를 고려하지 않고 가구규모와 소득만을 고려해서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전환하였다.⁴²⁾

이처럼 다양한 외국의 사례로 미루어보아 향후 동 사업과 관련한 상당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주거실태를 주거급여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토대로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9) 진미윤·남원석·최조순,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과 실행을 위한 준비 과제」, 한국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9.

40) 2010년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박신영의 「주택바우처 도입에 따른 대안과 문제점」(한국감정원 부동산포커스 vol 63, 2013.) 참조.

41) 진미윤·남원석·최조순,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과 실행을 위한 준비 과제」, 한국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9.

42) 박신영, 「주택바우처 도입에 따른 대안과 문제점」, 한국감정원 부동산포커스, 2013.

라. 기존 주거실태조사 활용 및 관련 사업 통합

저소득층의 주택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의 시급성과 건축 구조 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수급 계층의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기존의 ‘행복e음 시스템’ 및 ‘주거실태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표 4]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 정책 활용 현황

주요내용	정책 활용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및 특성	· 주거실태 파악 · 주거복지정책 대상 파악 · 최저주거기준 미달 해소 방안 마련 · 지역별 기준미달가구 특성 분석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 주거바우처제도 도입
원시자료	· 주택바우처제도 모델 구축 연구
지역별, 소득계층별 주거실태	·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관련 연구
주거복지 소요 추정	·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주거복지소요추정 연구
국민임대주택 수요 추정	·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 연구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2013.10)

환경부의 ‘취약계층 옥내급수관계량지원 사업’, 안전행정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 집수리사업’ 등 여러 부처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각 사업의 성격도 도배·장판·지붕교체 등으로 유사하다. 따라서 2015년부터 도입되는 국토교통부의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각 부처의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5. 재정비촉진지원사업: 집행 부진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 동 사업은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매년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지구별 집행 현황과 전년도 이월액 등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함.

가. 현황

재정비촉진지원사업(일반회계, 2009~, 보조, 일명 뉴타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낙후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대비 700억원(38.9%) 감소한 1,100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반시설 설치 소요비용의 10~50%를 지원한다.

[표 1] 재정비촉진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결산액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85,000	110,000	180,000	110,000	-70,000	-38.9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2013. 10)

나. 집행 능력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재정비촉진지원사업은 2007~2008년 균특회계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고, 2009년부터 일반회계 계속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연도별 보조사업자 세부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2007년 15.3%, 2008년 30.2%, 2009년 2.0%, 2010년 55.3%, 2011년 63.5%, 2012년 77.3%이며, 2013년 9월 말 기준 38.8%에 불과하다.

[표 2] 연도별 보조사업자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회계)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자)					
	교부액	전년이월	예산현액(A)	집행액(B)	차년이월	집행률(B/A)
2007(균특회계)	5,000	-	5,000	766	4,234	15.3
2008(균특회계)	4,000	4,234	8,234	2,490	5,744	30.2
2009(일반회계)	50,800	-	50,800	1,000	49,800	2.0
2010(일반회계)	12,000	49,800	61,800	34,162	27,638	55.3
2011(일반회계)	50,000	27,638	77,638	49,312	28,326	63.5
2012(일반회계)	85,000	28,326	113,326	87,637	25,689	77.3
2013(일반회계) 9월 말 기준	77,000	25,545	102,545	39,794	-	38.8

주: 2009년의 경우 추경예산 확정 후 지역별로 예산을 배정하였음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2013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집행률이 가장 높은 강원도는 교부받은 예산을 전액 집행한 반면, 가장 집행이 부진한 경기도의 집행률은 12.9%에 불과하다.

[표 3]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3 교부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서울	2,617	4,611	7,228	1,427	19.7
부산	18,310	4,576	22,886	11,464	50.1
대구	8,749	-	8,749	3,750	42.9
인천	2,043	1,200	3,243	1,694	52.2
대전	28,309	3,068	31,377	7,891	25.1
경기	4,361	8,427	12,788	1,649	12.9
강원	10,257	-	10,257	10,257	100.0
충남	854	3,663	4,517	1,082	24.0
전남	1,500	-	1,500	580	38.7
합계	77,000	25,545	102,545	39,794	38.8

주: 2013년 9월 말 집행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국토교통부는 동 예산이 2013년부터 수시배정예산으로 전환되어 교부시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2년까지 동 사업은 사업규모에 비례하여 예산을 교부했기 때문에 교부기준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구별 배분내역을 협의하기 위해 수시배정으로 전환되었다. 동 사업은 배정 기준과 관련하여 전년도 교부기준인 지원예정액을 배제하고, 연내 집행가능성(64.4%), 실집행률(19.4%), 지방비확보액(10.6%)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추진현황(6.1%)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그러나 2013년의 9월 현재 총 1,800억원의 예산 중 770억원만이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이 1,025억원에 이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38.8%에 불과하다. 동 사업은 최근 집행실적이 향상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매년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집행능력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또한 지자체별 집행현황이 상이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지구별 사업진행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표 4] 재정비촉진구역 지구별 현황

사·도	지 구	면적 (천㎡)	유 형	지구 지정일	계획 결정일	진행현황
서울시 (30)	1. 은평 은평	3,492	주거지형	2006.10.19	2007.10.18	-
	2. 성북 길음	1,251	"	"	2009.02.01	-
	3. 용산 한남	1,110	"	"	2009.10.01	-
	4. 노원 상계	648	"	"	2008.09.11	-
	5. 은평 수색·증산	897	"	"	2008.05.22	-
	6. 서대문 북아현	900	"	"	2008.02.05	-
	7. 금천 시흥	721	"	"	2008.10.16	-
	8. 영등포 신길	1,469	"	"	2007.11.29	관리처분
	9. 동작 흑석	896	"	"	2008.09.11	사업시행인가
	10. 관악 신림	530	"	"	2008.04.10	조합
	11. 송파 거여·마천	738	"	"	2008.08.28	-
	12. 동대문 이문·휘경	1,013	"	"	2008.01.07	사업시행인가
	13. 성북 장위	1,874	"	"	2008.04.03	-
	14. 중랑 상봉	506	중심지형	"	2009.08.20	-

시·도	지 구	면적 (천㎡)	유 형	지구 지정일	계획 결정일	진행현황
	15. 광진구의·자양	385	"	"	2009.06.04	-
	16. 강동 천호·성내	276	"	"	2008.12.26	-
	17. 종로·중구 세운	434	"	"	2009.03.19	-
	18. 중랑 중화	511	주거지형	2006.12.21	2009.06.04	-
	19. 양천 신정	689	"	"	2008.12.11	-
	20. 강서 방화	509	"	"	2006.12.21	-
	21. 동작 노량진	735	"	"	2006.12.21	-
	22. 구로구 가리봉	333	중심지형	2008.05.22	2008.05.22	정비계획
	23. 동대문 전농·답십리	906	주거지형	2008.12. 2	2008.11.20	일부 준공
	24. 강북 미아	980	"	2008.12.11	2008.12.11	일부 준공
	25. 동대문구 청량리	371	중심지형	2009.09.10	2009.09.10	-
	26. 서대문구 가재울	1,077	주거지형	2009.12.10	2009.12.10	-
	27. 영등포구 영등포	226	"	2010.01.21	2010.01.21	-
	28. 마포구 합정	298	중심지형	2010.01.21	2010.01.21	-
	29. 마포구 아현	1,088	주거지형	2010.08.19	2010.08.19	-
	30. 서대문구 홍제	201	중심지형	2010.12.16	2010.12.16	-
부산시 (3)	31. 금정구 서·금사	1,524	주거지형	2007.05.23	2009.05.27	추진위
	32. 진구시민공원주변	896	중심지형	"	2008.04.23	조합
	33. 영도구영도제1	1,346	주거지형	"	2009.06.10	정비계획
대구시 (2)	34. 동구 신암	1,085	"	2007.05.21	2010.05.20	추진위
	35. 서구 평리	689	"	2010.11.22	수립중	정비계획
인천시 (2)	36. 동구 동인천역	310	중심지형	2007.05.21	2010.04.26	정비계획
	37. 남구주안2,4동	1,274	주거지형	2008.05.26	2010.05.24	조합
대전시 (8)	38. 동구대전역세권	887	중심지형	2006.12.29	2009.05.22	조합
	39. 대덕구 상서·평촌	2,595	"	2007.08.03	2009.06.26	정비계획
	40. 서구 도마변동	2,219	주거지형	2007.08.31	2009.08.07	조합
	41. 중구 신화·용두	739	"	2007.11.09	2009.06.19	사업시행인가
	42. 유성구 유성시장	338	중심지형	2007.12.31	2009.12.18	추진위
	43. 대덕구 신탄진	469	"	2007.12.31	2010.05.07	정비계획

사·도	지 구	면적 (천㎡)	유 형	지구 지정일	계획 결정일	진행현황
	44. 동구 신흥	679	주거지형	2008.03.28	2009.12.31	추진위
	45. 유성구 도룡	1,444	중심지형	2008.09.12	2011. 9. 9	-
경기도 (13)	46. 부천 소사	2,497	주거지형	2007.03.12	2009.05.01	일부 준공
	47. 부천 고강	1,745	"	"	2009.06.30	-
	48. 부천 원미	1,915	중심지형	"	2009.05.11	조합
	49. 구리 인창·수택	2,072	주거지형	2007.06.04	2010.05.11	조합
	50. 광명 광명	2,281	"	2007.07.30	2009.12.04	조합
	51. 고양 원당	1,306	"	2007.09.10	2010.09.06	-
	52. 고양 능곡	843	"	2007.11.05	2010.07.29	-
	53. 남양주 덕소	671	"	2007.11.26	2010.08.02	조합
	54. 고양 일산	612	"	2007.12.31	2010.08.02	-
	55. 평택 신장	1,176	"	2008.05.07	2010.07.30	-
	56. 남양주 도농	601	중심지형	2008.06.02	2011.05.27	-
	57. 김포 재정비	2,008	주거지형	2009.01.16	2011.11.28	-
	58. 남양주 퇴계원	1,107	"	2009.04.30	2012.04.19	-
강원도 (2)	59. 춘천 약사	729	"	2008.08.29	2010.11.05	조합
	60. 춘천 소양	829	"	"	2011.08.26	조합
충남도	61. 아산 온양중심상권	517	중심지형	2007.12.10	2010.07.30	추진위
전남도	62. 목포 서산·온금	388	주거지형	2009.11.27	2012.11.05	정비계획
경북도	63. 포항 동빈내향복원	591	주거지형	2009.02.12	2011.12.29	-

자료: 국토교통부(2013. 9)

또한 재정비촉진지구의 무리한 지정과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현황은 총 18개에 이른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 주택이 밀집해 있고,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취약하여 다른 정비 사업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실행행률 제고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출구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표 5]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현황

시도	지구	위 치	면적(㎡)	지정일	해제일
서울 (1)	종로창신·송인	종로 창신·송인동	846,000	2007.04.30	2013.10.10
인천 (3)	가좌	서구 가좌동 556-15 일원	681,000	2007.02.05	2010.02.01
	제물포 역세권	남구 도화동 272 일원	942,180	2007.03.12	2010.02.01
	인천역 주변	중구 북성동 3 일원	440,750	2008.06.30	2010.02.01
경기 (10)	금정 역세권	군포시 산본동·금정동· 재궁동 일원	872,082	2007.09.10	2010.09.09
	평택 안정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일원	500,412	2008.05.07	2011.01.05
	안양 만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원	1,776,040	2008.04.07	2011.04.06
	김포양곡 재정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구래리 일원	386,700	2009.04.09	2011.06.10
	오산 재정비	오산시 오산동, 원동, 수청동 등 7개동 일원	2,974,703	2009.01.02	2011.07.29
	시흥 대야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일원	1,173,262.5	2009.07.14	2011.10.31
	시흥 은행	시흥시 은행동, 신천동 일원	611,162	2010.12.31	2012.02.16
	의정부 가능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동 일원	1,326,827	2008.04.07	2012.03.30
	군포 역세권	군포시 금정동·재궁동 일원	812,088	2008.07.08	2012.09.01
	의정부 금의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동, 가능동 일원	1,010,120	2008.04.07	2012.10.19
부산 (2)	사하 괴정	사하구 괴정동, 당리동 일원	835,612	2008.05.21	2011.04.20
	서구 충무	서구 민동 초장동,아미동	1,006,000	2008.12.31	2012.06.06
대전 (1)	대덕 오정	대덕구 오정동 일원	1,872,365	2009.06.26	2013.01.25
제주 (1)	제주시 구도심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	453,200	2008.12.24	2011.12.09

주: 2013.10월 초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16. 도시재생사업: 유사·중복 우려로 사업 내용의 정비 필요

- 동 사업은 부처 내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과 대상 지역이 중복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내용의 정비가 필요함.
- 지방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와 무관하게 보조금의 매칭 비율을 일괄적으로 책정하고 있어 이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도시재생사업(일반회계, 2013~, 보조)은 쇠퇴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기능회복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238억원(4,760%) 증가한 243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도시재생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결산액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도시재생사업	-	500	500	24,300	23,800	4,760.0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2013. 10)

동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하며, 구도심을 비롯한 도시 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자생적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는 도시재생계획의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⁴³⁾ 도시재생 선도지역⁴⁴⁾ 내 계획수립비 10.4억원, 사업비 220억원,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비 12.5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동 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산단·항만·철도·국도·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의 정비·개발 등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

4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⑧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입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기반형과 소규모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

[표 2] 예산안 세부내역

① 계획수립비 10.4억원
·경제기반형 선도지역 5억원(2개소×5억원/개소×50%)
·근린재생형 선도지역 5.4억원(6개소×1.8억원/개소×50%)
② 사업비 220억원
·경제기반형 선도지역 100억원(2개소×250억원/개소×1년차 사업비 20%)
·근린재생형 선도지역 120억원(6개소×100억원/개소×1년차 사업비 20%)
③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비 12.5억원
·도시재생대학 2억원, 도시재생제도 조사연구 3억원, 홍보비 1억원, 도시재생종합 정보시스템 운영 6.5억원 등
④ 기타 운영비 0.1억원
·수용비 0.02억원, 업무추진비 0.08억원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2013. 10)

나. 유사·중복으로 인한 사업 내용의 정비 필요

동 법 시행령에 의한 도시재생 대상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인구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개 요건 중 2개를 갖추어야 한다. 인구 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을 말하고, 산업 쇠퇴 지역은 지난 10년간 해당 지역 내 사업체 수의 최대치 대비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한 지역이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을 말한다. 이 밖의 주거환경 악화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을 의미한다.⁴⁵⁾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자체는 특별·광역시의 구·군, 인구 50만이상의 도농복합시로⁴⁶⁾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은 대

4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2013. 7. 4)

상지역의 선정에 있어 지역의 특징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 사업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표 3]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과의 비교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상지역	전국 도시쇠퇴지역 *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악화 등 3개요건 중 2개 이상 해당지역	특·광역시, 일반시, 인구 50만 이상 도농복합시 등 99개 시·군·구
근거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
추진주체	지자체	지자체
사업목표	쇠퇴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 지원,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도시의 경쟁력 제고 등	기초생활권(시·군·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재정지원	국비 50% 보조	국비 50% 보조
지원내용	계획수립비, 도시재생사업비 지원, 주민역량강화 사업 지원 (도시재생전문가 양성, 주민교육 등)	지역발전사업 포괄보조 지원
유형	- 경제기반형 - 근린재생형	- 주거지재생(주거지역) - 중심시가지활성화(상업지역) - 기초생활기반확충(농촌개발) - 지역역량강화(주민지원사업)
지원 절차	(지자체) 도시재생계획수립 → 국가지원사항 결정 요청 → (국토부) 관계부처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원사항 결정 → (소관부처) 결정된 사항 지원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작성 → (국토부) 가이드라인 제시 → (지자체) 사업기획/예산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제출 → (국토부) 대상사업 검토 및 예산 요구서 제출 → (기재부) 최종 예산편성
심의기관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	-
2014년 예산안	243억원	1,032억원

자료: 국토교통부(2013. 9) 제공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4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 지자체와 함께하는 ‘맞춤형 도시재생(도시만들기)’의 새주인공을 찾다.”(2013. 3. 26)

사업 유형의 경우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주거지재생사업과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의 근린재생형과 유사하여 향후 동 사업의 시행령 및 사업 계획의 정비를 통해 대상 지역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표 4]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유형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사업명	내용	사업명	내용
근린재생형	소규모 생활권 단위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골목경제 활성화, 달동네 생활여건 개선 등	주거지재생	거주여건이 악화된(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등) 주거지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중심시가지 재생	쇠퇴한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경제기반 마련, 경관개선 등을 하는 사업

자료: 1. 국토교통부(2013. 9)

2. 국토교통부, 「201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2013. 10)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 이탈, 주거환경 악화 등 쇠퇴가 진행 중인 전국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특화 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민과 지자체가 쇠퇴하는 도시지역의 재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사업을 연계·융합하여 종합재생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장소를 중심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개별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종합적인 도시기능의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반면,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으로 지원하는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기존의 17개 사업을 통합하여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 중 특별시·광역시·일반시·인구 50만 이상의 도농통합시 등 99개 시·군·구에 국한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은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어촌개발·식수원개발 등 농어촌 관련 사업을 상당 수(34%) 포함⁴⁷⁾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자체·주민이 수

47) 2013년도 1,086억원 중 367억원이 농어촌개발경작로 확장 및 포장·지표수개발 등 비도시지역에 투자

립한 종합재생계획에 따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은 단일사업만을 지원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결정은 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관계부처의 합동심사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차별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 보조금 매칭 비율의 다양화 필요

도시재생사업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서, 편성된 220억원의 사업비에 대해 50%의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되어있어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집행부진의 가능성이 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재생계획의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율을 60%~80%로 차등지원 할 계획이었으나⁴⁸⁾ 2014년 예산안은 50%를 지원하도록 편성되었다.

따라서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개요건 중 2개를 갖춘 지자체가 50%의 지방비를 해당 국고에 매칭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재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낙후지역 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5]를 통해 시·도별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를 보면, 자치단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와 도의 재정자립도의 경우 서울이 87.7%로 가장 높고 전남은 16.3%에 불과하다. 재정자주도도 이와 유사하여 가장 높은 서울이 88.5%인 반면, 전남은 36.6%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매칭 비율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⁴⁹⁾ 및 재정자주도⁵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편성 범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4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2013. 7. 4)

49) 산출방식=(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100

50) 산출방식=(자체수입+자주재원)/자치단체 예산규모×100

[표 5] 시·도별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현황

(단위: %)

시도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시도별 평균 (순계규모)	특별시· 광역시 (총계규모)	도 특별자치도 (총계규모)	시도별 평균 (순계규모)	특별시·광역시 (총계규모)	도 특별자치도 (총계규모)
서울	88.8	87.7	-	90.1	88.5	-
부산	56.6	51.8	-	74.1	69.9	-
대구	51.8	46.5	-	75.0	70.3	-
인천	67.3	64.6	-	77.3	71.9	-
광주	45.4	40.1	-	67.6	63.0	-
대전	57.5	52.2	-	75.4	71.6	-
울산	70.7	62.7	-	80.0	70.7	-
세종	38.8	38.8	-	77.7	77.7	-
경기	71.6	-	60.1	81.4	-	62.2
강원	26.6	-	21.7	74.1	-	42.9
충북	34.2	-	27.4	73.6	-	47.3
충남	36.0	-	29.4	71.8	-	43.4
전북	25.7	-	19.1	69.1	-	38.3
전남	21.7	-	16.3	68.5	-	36.6
경북	28.0	-	22.1	73.2	-	42.5
경남	41.7	-	34.4	73.4	-	44.0
제주	30.6	-	30.0	70.6	-	69.3

주: 2013년 기준

자료: 재정고(<http://lofin.mopas.go.kr/index.jsp>), 2013년 10월 14일 접속

17. 노후공단재정비지원: 정상적인 사업 진행의 지연이 우려되는바 철저한 사전 사업계획 수립 필요

- 동 사업은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재정착 정책 부족, 이주보상비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우려됨.
- 높은 지가로 인해 토지보상금이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이 요구됨.

가. 현황

노후공단재정비지원사업(일반회계, 2009~2021, 보조)은 60~70년대에 조성된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정비, 첨단업종으로 재편,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엔진으로 재창조하려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232억원(539.5%) 증가한 275억원 편성되었다.

[표 1]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2 결산액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감	
		예산액	추경(A)		(B-A)	(B-A)/A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3,000	4,300	4,300	27,500	23,200	539.5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2013. 10)

동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⁵¹⁾를 기반으로 하며, 재생계획수립→지구지정→재생시행 계획수립 및 승인→사업착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014년 예산안은 4개 우선사업지구(대전 1·2산단, 대구도심공단, 전주 제1산단, 부산 사상공단)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이 편성되었다. 대구·대전·전주에는 보상비 등 건설사업비가 편성되었고, 부산은 재생시행계획수립 용역비 등이 편성되었다.

5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시행계획 미흡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

동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산업단지는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⁵²⁾며,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과 달리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량 및 확충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잔존해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재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입주 업체는 선순위 사업완료지구 또는 대체산업단지 등으로 이전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이며, 지구별 전략업종 등 업종배치계획이나 환경 및 근로 등 관련 시설 구축여부 등에 따라 기존업체의 재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 우선사업지구인 대전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 적정 보상시 이전을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높으나 보상비에 대한 수준이 매우 높고, 영업보상비 등이 추가로 발생될 우려가 있다.⁵³⁾ 이러한 문제는 산단 내 공장용지의 소유주와 사용자가 불일치할 경우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사업지연이 우려된다.

둘째, 노후산단이 설치되었던 60~70년대에는 해당 지역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대도시 주변에 입지하여 지가가 매우 높다. 이로 인해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토지보상금이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8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 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절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53) 대전광역시의 「대전산업단지 재생계획」(2011.5)에 따르면, 이전에 따른 적정 보상 의견에 관하여 기존 산업단지 내 응답자의 61.7%가 ‘대체산업단지에 동일 규모/임대료의 공장 확보’에 응답하였다.

18. 보금자리주택사업: 주택기금 지원 시점과 주택 착공 사이의 시차에 대한 검토 필요

- 동 사업은 국민주택기금이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2조 2,238억원에 이르는 재원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량이 착공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가. 현황

보금자리주택사업(국민주택기금, 2009~2018, 출자·보조·융자·직접)은 국민임대출자 등의 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대비 1조 1,328억원(15.7%) 감소한 6조 889억원이 편성되었다. 이 중 행복주택을 제외한 예산안은 2013년 대비 2조 857억원(28.9%) 감소한 5조 1,359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액	2013		2014 계획안(B)	증 감	
			당초	수정(A)		(B-A)	(B-A)/A
행복주택 외	국민임대출자	287,581	621,179	612,939	602,276	-10,663	-1.7
	국민임대(융자)	606,675	1,445,773	1,445,773	1,397,107	-48,666	-3.4
	다가구매입(출자)	192,595	199,750	384,250	409,500	25,250	6.6
	영구임대(출자)	401,422	439,735	255,235	210,936	-44,299	-17.4
	공공임대(융자)	2,981,997	2,881,024	2,881,024	1,390,697	-1,490,327	-51.7
	매입임대(융자)	10,826	-	-	-	-	-
	분양주택지원(융자)	4,822,121	1,442,421	1,642,421	1,125,379	-517,042	-31.5
	합 계	9,303,217	7,029,882	7,221,642	5,135,895	-2,085,747	-28.9
행복주택(출자)		-	-	-	314,676	314,676	순증
행복주택(융자)		-	-	-	638,317	638,317	순증
합 계		9,303,217	7,029,882	7,221,642	6,088,888	-1,132,754	-15.7
이차보전 지원		-	55,000	55,000	110,000	55,000	-100.0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보금자리주택은 2014년 79,000호를 목표로 11,000호의 다가구 매입 임대를 포함한 국민임대 15,000호와 2,000호의 영구임대 및 6,000호의 공공임대, 10,000호의 공공분양, 그리고 46,000호의 행복주택으로 구성된다. 이는 2013년 계획과 비교할 때, 8,232호 증가한 수치이다.

[표 2] 보금자리주택 공급 현황

(단위: 호)

	2009~2012 공급현황			2013년				2014년	
	계	수도권	지방	계획	9월말 기준 공급현황			계획	
					계	수도권	지방		
보금자리주택	538,196	352,050	186,146	70,768	4,416	3,010	1,406	79,000	
○ 국민임대 (다가구매입 임대)	149,237 (25,957)	85,646 (13,779)	63,591 (12,178)	42,198 (11,000)	3,639 (3,137)	2,477 (1,975)	1,162 (1,162)	15,000 (11,000)	행복 주택 (46,000)
○ 영구임대	23,339	17,170	6,169	4,451	244	-	244	2,000	
○ 공공임대	116,161	78,462	37,699		533	533	-		
- 5,10년분납임대	100,450	62,779	37,671	14,494	-	-	-	6,000	
- 장기전세	15,711	15,683	28		533	533	-		
○ 공공분양	249,459	170,772	78,687	9,625	-	-	-	10,000	

주: 사업승인 기준, 2013년 이후부터는 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나. 주택기금 지원 시점과 주택 착공 사이의 시차에 대한 검토 필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시점은 주택의 유형별로 상이하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국민임대(용자)사업과 공공임대(용자)사업의 경우 사업승인시 30%가 지급되고, 사업승인 2년차에 40%, 주택 준공시 30%가 지급되는 구조를 지닌다. 국민임대(출자)와 공공분양(용자)는 사업승인시 20%가 지급되고, 2년차와 3년차에 25%, 주택 준공시 30%가 지급된다.

[표 3]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기준

(단위: %)

		지원연도				비고
		사업승인	2년차 (사업승인 2년차)	3년차 (사업승인 3년차 또는 주택준공)	주택준공 (사업승인 4년차)	
○ 국민임대						
- 국민임대(출자)	20	25	25	30	평균건설평형 : 17.8평 지원비율 : 30%	
- 국민임대(용자)	30	40	30	-	평균건설평형 : 17.8평 지원비율 : 40%	
- 다가구 매입 임대 (출자)	100	-	-	-	지원비율 : 45%	
○ 영구임대(출자)		30	40	30	-	평균건설평형 : 12.5평 지원비율 : 85%
○ 공공임대(용자)						
- 60㎡이하	30	40	30	-	평균건설평형 : 호당지원 지원비율 : 100%	
- 60㎡ 초과 85㎡이하	30	40	30	-	평균건설평형 : 호당 지원 지원비율 : 100%	
○ 공공분양(용자)						
- 60㎡ 이하	20	25	25	30	평균건설평형 : 호당 지원 지원비율 : 100%	
- 60㎡초과 85㎡이하					평균건설평형 : 호당 지원 지원비율 : 100%	

주: 2013년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사업승인 및 착공현황을 보면, 사업승인물량과 착공물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은 승인 물량에 비해 착공물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2013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어 승인물량 보다 많은 주택이 착공되었다.

[표 4]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 및 착공 현황

(단위: 호)

	2009		2010		2011		2012		2013.9	
	승인	착공	승인	착공	승인	착공	승인	착공	승인	착공
○ 국민임대	48,310	0	35,297	2,491	36,171	5,543	29,459	2,824	3,639	5,744
○ 영구임대	3,633	0	10,103	0	6,462	1,060	3,141	2,500	244	2,094
○ 공공임대	22,551	4,705	38,018	350	31,715	7,424	23,877	20,486	533	1,811
- 5,10년,분납임대	19,901	4,705	32,722	54	28,085	4,300	19,742	19,046	0	1,303
- 장기전세	2,650	0	5,296	296	3,630	3,124	4,135	1,440	533	508
○ 공공분양	71,480	1,920	81,432	5,236	52,033	29,870	44,514	24,385	0	7,701

주: 1. 보금자리주택은 2009년부터 공급

2. 착공현황에서는 매입물량(2009~2013.9월간 54,817호)을 제외하였으며, 2009년 이후 보금자리주택으로 사업승인된 물량의 착공실적만을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보금자리주택 주택 중 2012년 사업이 승인되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었으나 2013년 9월 말 기준 아직 착공되지 않은 금액은 총 2조 2,2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분양(용자)주택에 지원되었으나 착공되지 않은 금액은 전체 지원 금액의 91%에 이르고, 국민임대주택에 지원되었으나 착공되지 않은 금액은 90%에 이른다. 미착공 비중이 가장 낮은 영구임대(출자)주택도 63%로 나타나 2012년 지원된 기금의 88%가 아직 착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 보금자리주택 미착공분에 대한 집행액

(단위: 백만원, %)

	착공분		미착공분		합계액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 국민임대	93,581	10%	831,123	90%	924,704	100%
- 국민임대(출자)	6,026	2%	268,407	98%	274,433	100%
- 국민임대(용자)	87,555	13%	562,716	87%	650,271	100%
○ 영구임대(출자)	52,067	37%	88,194	63%	140,261	100%
○ 공공임대	112,317	13%	721,313	87%	833,630	100%
○ 공공분양(용자)	57,643	9%	583,183	91%	640,826	100%
합계액	315,608	12%	2,223,813	88%	2,539,421	100%

주: 1. 2012년도 사업승인 물량의 착공현황(2013년 9월말 현재)에 따른 2012~2013.9월말 집행액을 기재

2. 건설물량에 대한 집행액임(매입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국민주택기금이 사업 승인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 승인과 착공 사이의 이자액은 기금의 손실로 귀결된다. 보금자리주택의 착공지연은 부동산경기 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여건 악화 등에 따른 공공부문의 착공여력 감소와 보상관련 민원 발생 등에 의한 것으로 이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업 시행자의 사내에 유보된다. 사업 승인을 기준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용지보상 및 택지조성 등 착공 이전에 투입되는 비용 때문이며, 이러한 비용은 총 사업비의 50%에 이른다. 따라서 건설공정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강화 등을 통해 착공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2조 2,238억원에 이르는 기금이 지원된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19. 행복주택(신규): 지구 확정 이후 예산 반영 필요

- 동 사업의 예산안은 56,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나,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시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함.
- 지형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평당 건설단가를 책정하였으므로 정확한 건설단가를 산출하여 이를 계획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행복주택(국민주택기금, 신규, 출자·용자)은 철도부지·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신규사업으로 3,147억원의 출자와 6,383억원의 용자가 편성되었다.

[표 1] 행복주택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액	2013		2014 계획안(B)	증 감	
		계획액	수정액(A)		(B-A)	(B-A)/A
행복주택(출자)	-	-	-	314,676	순증	-
행복주택(용자)	-	-	-	638,317	순증	-
합 계	-	-	-	952,993	-	-

자료: 국토교통부(2013.10)

동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20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⁵⁴⁾와 제3조⁵⁵⁾를 근거로 한다. 2014

54)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55)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제3조(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및 채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보금자리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또는 매입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년 보금자리주택 관련 예산안은 행복주택이 새롭게 편성되고, 분양주택지원이나 공공임대 등에 대한 융자사업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나. 행복주택 사업 계획 미흡

행복주택의 기본 방향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도심 내에 위치한 철도부지·유수지 등에 아파트 및 상업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를 건설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3년 5월 20일 7개 행복주택 시범사업 지구를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의 2014년 행복주택 예산안은 총 9,530억원이며, 56,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2013년 10월 현재 행복주택 지구 지정이 완료된 지역은 전체 시범사업 지구 7개 중 2개로 2,150호이며, 7개 이외의 추가 후보지의 선정 및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인⁵⁶⁾ 단계이다.

[표 2] 행복주택 출자 및 융자 산정내역 및 산출 근거

비목	예산액 (백만원)	물량	산정내역 및 산출근거
출자금	314,676	(계속사업) 2013년 사업승인 물량 10,000호	= 호수(10,000호) x 평당단가(6.6백만원) x 건설평형(평균13.6평) x 지원율(30%) x 연차별(25%)
		(신규사업) 2014년 사업승인 예정물량 46,000호	= 호수(46,000호) x 평당단가(6.6백만원) x 건설평형(평균13.6평) x 지원율(30%) x 연차별(20%)
융자금	638,317	(계속사업) 2013년 사업승인 물량 10,000호	= 호수(10,000호) x 평당단가(6.6백만원) x 건설평형(평균13.6평) x 지원율(40%) x 연차별(40%)
		(신규사업) 2014년 사업승인 예정물량 46,000호	= 호수(46,000호) x 평당단가(6.6백만원) x 건설평형(평균13.6평) x 지원율(40%) x 연차별(30%)
합 계	952,993	56,000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2013. 1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또는 매입에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5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행복주택 추가 후보지, 아직 결정된 바 없음」(2013. 9. 23)

더욱이 시범사업 지구 중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5개 지역의 주민이 행복주택 건설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사업 시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⁵⁷⁾

[표 3] 행복주택 진행 현황

(단위: km², 호)

지구명	지자체 및 주민 협의 진행 사항	건설 호수	현재 진행 사항	총 면적	지형별 특징
① 오류동지구	전반적으로 찬성	1,500	지구 지정완료(828)	109	철도역사
② 가좌지구	전반적으로 찬성	650	지구 지정완료(828)	26	철도역사
③ 공릉지구	일부반대 다소 완화→ 주민지자체 접촉하여 설명설득 중	200	지구 지정 준비 중	17	폐선부지
④ 고잔지구	일부 강력 반대→ 주민지자체 접촉하여 설명설득 중	1,500	지구 지정 준비 중	48	철도역사
⑤ 목동지구	일부 강력 반대→ 주민지자체 접촉하여 설명설득 중	2,800	지구 지정 준비 중	105	유수지
⑥ 잠실지구	일부반대→ 주민지자체 접촉하여 설명설득 중	1,800	지구 지정 준비 중	74	유수지
⑦ 송파지구	일부반대→ 주민지자체 접촉하여 설명설득 중	1,600	지구 지정 준비 중	110	유수지
합계		10,050		489	

자료: 국토교통부(2013. 9)

다. 정확한 건설단가 반영 필요

행복주택은 도심 내 철도역사나 폐선부지 및 유수지 등에 건설되는 것이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평당 건설단가를 일괄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수준인 6.6백만원으로 책정하였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8년 9월 19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과 관련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지 유

57)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한 행복주택 2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2014년에 56,000호를 공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후 철도부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을 계획한바 있었다. 그러나 동 계획의 서울 망우 철도부지 주택건설사업은 당초 저렴한 철도부지 활용취지와 달리 평당 건설단가를 포함하여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여건변화에 따른 재무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2009년 12월 31일 사업추진(후보지선정)이 취소되었다.⁵⁸⁾

[표 4] 서울 망우 철도부지 주택건설사업 개요

-
-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72 일원 (A=24,000m²)
 - 건설호수 : 1,022호(국민임대 932호, 도시형생활주택 90호)
 - 용 적 륜 : 344% (39층 = Deck 3층+아파트36층)
 -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망우 철도부지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2010. 3)

이와 같은 선례로 미루어보아 행복주택의 건설비용 및 사업성과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철도부지 및 유수지 등의 국유지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은 아파트 입주자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므로 사실상 민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예산안에 편성한 평당 건설단가를 초과한 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초기에 행복주택의 건설단가를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안에 반영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8)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망우 철도부지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2010. 3.)

20.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집행 부진에 따라 매입단가 및 사업 추진 절차 점검

- 동 사업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려는 사업으로 2009년 이후 계획 대비 매입 실적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향후 집행부진이 우려되므로 지원단가의 현실화 및 홍보 강화 필요

가. 현황

다가구매입임대출자(국민주택기금, 2004~, 용자보조)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예산안은 2013년 대비 253억원(6.6%) 증가하여 4,095억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다가구매입임대(용자)는 2013년 대비 275억원(6.6%) 증가하여 4,450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다가구매입임대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2 계획액	2013		2014 계획안(B)	증감	
		계획액	수정액(A)		(B-A)	(B-A)A
다가구매입임대출자	192,595	199,750	384,250	409,500	25,250	6.6
다가구매입임대용자	270,800	212,500	417,500	445,000	27,500	6.6
합 계	463,395	199,750	801,750	854,500	52,750	6.6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나. 집행 부진에 따라 지원단가의 현실화 및 홍보 강화 필요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의 일환으로 민간의 다양한 주택을 활용하여 취약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

29조에 규정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⁵⁹⁾으로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동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2009년 7,499호를 매입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매입 실적이 하락하였으며, 2013년의 경우 7,000호의 매입을 계획하였으나 9월 말 기준 2,520호를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표 2] 다가구매입임대 계획 대비 주체별 매입 현황

(단위: 호)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	다가구 등	계 획	4,500	6,000	6,500	7,000	7,500	7,000	7,000	7,000	7,000
	원룸형		-	-	-	-	-	-	-	-	4,000
	다가구 등	실 적	4,539	6,339	6,526	7,130	7,499	6,941	5,641	5,428	2,520
	원룸형		-	-	-	-	80	42	115	211	617

주: 1. 매입임대 중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에 포함된 매입임대는 미반영

2. 2013년 실적은 9월 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동 사업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으로 호당 총사업비 8,500만원을 기준으로 재정 45%, 기금(융자)50%, 입주자보증금 5%를 분담하여 지원되었다. 2014년에는 호당 총사업비가 인상되어 다가구 등은 9,000만원, 원룸형은 6,50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2012년 기존주택 매입단가는 평균 1억 1천만원에 이르러 재정지원액이 실제 매입단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59)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원룸형 주택을 포함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있음

[표 3] 기존주택 매입단가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시행자	호수	매입금액	평균 단가
전국	총계	5,639	621,062,497	110,137
수도권	합계	3,255	457,958,358	140,694
	서울	LH	59,663,090	179,972
		SH	265,365,443	
	인천	LH	32,022,788	89,449
	경기	LH	80,071,899	92,490
		경기도시공사	20,835,138	
지방	합계	2,384	163,104,139	68,416
	5대광역시	소계	1,504	102,943,328
	부산	LH	10,066,635	91,853
		부산도시공사	7,936,605	
	대구	LH	22,159,940	68,926
		대구도시공사	2,791,206	
	광주	LH	8,164,797	54,673
		광주도시공사	17,640,804	
	대전	LH	23,463,482	69,738
		대전도시공사	7,500,000	
	울산	LH	3,219,859	107,328
	8개도	소계	880	60,160,811
	강원	LH	11,773,417	73,584
	충북	LH	4,436,750	73,946
	충남	-	-	-
	전북	LH	11,395,576	63,662
	전남	-	-	-
	경북	LH	5,939,972	45,692
	경남	LH	20,772,909	72,379
	제주	LH	5,842,187	91,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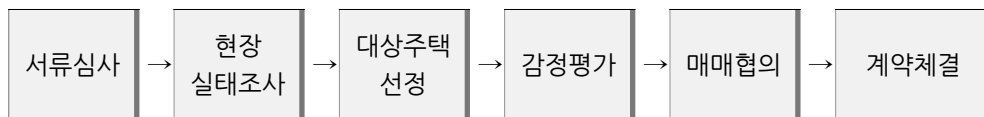
주: 2012년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사업시행자(지자체 및 지방공사 등)가 매입단가와 지원단가 간의 차액을 부담하여 매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부진한 상황을 고려할 때, 목표로 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단가가 현실화되어야한다.

동 사업은 매입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주택을 선정하고 이를 매매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노후정도·생활 편의성·임대가능성·향후 개발가치 등을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 주택을 확정하고,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받는다. 대상 주택의 매입가격은 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되며, 매도희망자의 희망가격으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 사업의 절차를 고려할 때, 매입신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표 4] 매입임대주택 매입 절차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2013.9)

21. 준주택지원: 지원 적정성 검토 및 집행 실적 부진으로 인한 예산안 조정 필요

- 동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용자가 이루어지고 노인복지주택이나 공공기관 이전 기숙사에 대해서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례적인 집행 실적 부진으로 인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함.

가. 현황

준주택지원사업(국민주택기금, 2011~, 용자)은 오피스텔·고시원·노인복지주택 등에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137억원(10%) 감소한 1,237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준주택지원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2 결산액	2013		2014 계획안(B)	증감	
		계획액	수정액(A)		(B-A)	(B-A)/A
준주택지원	55,600	137,400	137,400	123,660	-13,740	-10.0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2013. 10)

동 사업은 준주택⁶⁰⁾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도심 내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사업으로 「주택법」 제63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

나. 지원 적정성 검토 및 집행 실적 부진으로 인한 예산안 감액 필요

2013년 9월말 기준 준주택사업의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34.4%에 불과하고, 과거 집행률도 2011년 21.5%, 2012년 61.8%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동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우려되므로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60)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숙사, 2. 고시원, 3. 노인복지주택, 4. 오피스텔

동 사업은 준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도심 내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사업으로 2014년 예산안은 대학기숙사에 가장 많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2013년의 집행현황을 보면 9월말 기준 전체 474억원의 집행액 중 오피스텔에 374억원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기준 완화(욕실설치 및 업무용 공간 설치 기준 완화)와 저리 기금지원으로 인해 기금 수요가 증가하여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324.0%에 이른다.

준주택이 분양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해당 주택의 공실률 및 분양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말 기준 170건의 용자가 지원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표 2] 준주택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유형	계획액 (A)	계획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2011	오피스텔	23,000	23,000	6,122	26.6	26.6	16,878
	고시원	5,000	5,000	339	6.8	6.8	4,661
	노인복지주택	2,000	2,000	0	0	0	2,000
	대학기숙사	-	-	-	-	-	-
	공공기관이전 기숙사	-	-	-	-	-	-
	합 계	30,000	30,000	6,461	21.5	21.5	23,539
2012	오피스텔	23,000	23,000	53,279	231.6	231.6	-30,279
	고시원	5,000	5,000	2,319	46.4	46.4	2,681
	노인복지주택	2,000	2,000	-	-	-	2,000
	대학기숙사	-	60,000	-	-	-	60,000
	공공기관이전 기숙사	-	-	-	-	-	-
	합 계	30,000	90,000	55,598	185.3	61.8	34,402
2013 (9월 말 기준)	오피스텔	12,000	12,000	37,448	324.0	324.0	-
	고시원	3,000	3,000	1,436	47.8	47.8	1,564
	노인복지주택	6,000	6,000	-	-	-	6,000
	대학기숙사	86,400	86,400	8,482	9.8	9.8	77,918
	공공기관이전 기숙사	30,000	30,000	-	-	-	30,000
	합 계	137,400	137,400	47,366	34.4	34.4	90,034

(단위: 백만원, %)

연도	유형	계획액 (A)	계획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2014	오피스텔	27,260	-	-	-	-	-
	고시원	2,400	-	-	-	-	-
	노인복지주택	1,200	-	-	-	-	-
	대학기숙사	92,800	-	-	-	-	-
	공공기관이전 기숙사	-	-	-	-	-	-
	합 계	123,660	-	-	-	-	-

주: 2014년은 계획안임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준주택은 건축허가 후 용자 신청을 하는 구조로 노인복지주택 및 공공기관 이전 기숙사의 경우 2011년 이후 용자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해당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 사업의 재원이 당초 편성한 주택의 건설에 사용되지 못하고 특정 유형의 주택에 집중되므로 당초 계획한 주택의 건설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금리 조정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 등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표 3] 준주택사업 용자금액 및 대출한도·금리

(단위: 백만원, %)

연도	유형	총 용자금액	총용자건수	대출한도	대출금리
2011	오피스텔	6,122	78	80만원/m ²	2.0%
	고시원	339	6	40만원/m ²	5.0%
	노인복지주택	-	-	3,000만원/호	5.0%
	대학기숙사	-	-	-	-
	공공기관이전 기숙사	-	-	-	-
	합계	6,461	84		
2012	오피스텔	53,279	494	80만원/m ²	2.0%
	고시원	2,319	28	40만원/m ²	5.0%
	노인복지주택	-	-	3,000만원/호	5.0%
	대학기숙사	-	-	-	-
	공공기관이전 기숙사	-	-	-	-
	합계	55,598	522	-	-

(단위: 백만원, %)

연도	유형	총 융자금액	총융자건수	대출한도	대출금리
2013 (9월말 기준)	오피스텔	37,448	170	80만원/m ²	5.0%
	고시원	1,436	7	40만원/m ²	5.0%
	노인복지주택	-	-	3,000만원/호	5.0%
	대학기숙사	8,482	2	80만원/m ²	2.0%
	공공기관이전 기숙사	-	-	80만원/m ²	4~5.0%
	합계	47,366	179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22. 기존주택개선사업: 연례적 집행부진으로 인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동 사업은 노후불량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주택 개량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연례적인 집행부진으로 인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적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은 예산의 산출 근거가 미흡하여 정확한 계상이 요구됨.

가. 현황

기존주택개선사업(구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국민주택기금, 1990~, 융자)은 도시 지역 노후불량주택의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준공공임대주택의 개량을 위해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85억원(189%) 증가한 130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기존주택개선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액	2013		2014 계획안(B)	증 감	
		계획액	수정액(A)		(B-A)	(B-A)A
기존주택개선 사업	1,382	4,500	4,500	13,000	8,500	189.0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2013. 10)

동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준공공임대사업으로 구성되며, 각각 30억원과 100억원이 편성되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택개량 20억원,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주택개량 5억원, 대학가 노후하숙집 개량에 5억원으로 구성되고, 준공공임대사업은 500호에 대해 100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개인 및 준공공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금리는 연 2.7%(65세 이상 노인 주택은 2.0%)로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동안 상환하는 구조이다.

나. 연례적 집행부진으로 인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집행부진이 제기되었으며, 융자조건 조정 등 융자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말 기준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이 26.2%에 불과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4년 동 예산을 축소 편성하였으나, 집행 가능한 규모의 적정한 예산 편성과 함께 동 사업의 용자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2] 기존주택개선사업 연도별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A)	계획현액 (B)	집행액 (C)	계획액 대비 집행률 (C/A)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C/B)	전년대비 예산액 증감액	전년대비 예산액 증감률
2008	10,000	10,000	6,025	60.3	60.3	20,000	-66.7
2009	10,000	10,000	1,989	19.9	19.9	-	-
2010	10,000	10,000	1,464	14.6	14.6	-	-
2011	5,000	5,000	1,008	20.2	20.2	-5,000	-50
2012	5,000	5,000	1,382	27.6	27.6	-	-
2013 9월 기준	4,500	4,500	1,177	26.2	26.2	-500	-10

자료: 국토교통부(2013.9)

다. 준공공임대사업 관련 예산 추계 근거 미흡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용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2013년 12월 5일 시행 예정이다.

동 사업의 계획안은 60㎡이하인 주택과 60㎡ 초과 85㎡이하인 주택의 비율이 각각 75%와 25%라는 가정을 토대로 계상되었다. 이 비율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재고 물량⁶¹⁾에서 도출한 것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의 규모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같은 분포를 가졌다고 가정한 것이다.

61) 60㎡이하 74.1%, 60㎡ 초과 85㎡ 이하 24.3%, 85㎡ 이상 1.6%

[표 3] 준공공임대 지출계획안 산출 근거

- 지원가구: 추정물량(연평균 민간매입임대 신규물량 약 30,000호×준공공임대전환물량 1/3)×개량자금 신청비율 1/20=500호
- 지원액수: 1,833만원×(500호×0.75)+2,500만원×(500호×0.25)=100억원

주: 1. 5년간 연평균 민간매입임대 신규물량: 연평균 32,294호
 2. 민간임대주택 재고: 60㎡ 이하 74.1%, 60㎡ 초과 85㎡ 이하 24.3%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그러나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은 동 사업과 대상 주택의 면적요건⁶²⁾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사업의 규모별 주택 분포가 유사하다. 따라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을 통해 매입한 주택의 규모를 보면, 연면적 85㎡ 이하인 주택의 89.5%가 60㎡ 이하이고, 60㎡ 초과 85㎡ 이하인 주택은 10.5%에 불과하다.

동 사업의 계획안은 공공에 의해 계획적으로 건설된 건설임대주택과 민간에 의해 공급된 주택의 규모가 상이함을 고려하지 않고 계상되어 편성된 예산의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

[표 4] 다가구매입임대사업 연면적별 주택 비중

(단위: %)			
규모	비율(1)		비율(2)
40㎡ 이하	36.2	86.6	89.5
40㎡ 초과~50㎡ 이하	25.6		
50㎡ 초과~60㎡ 이하	24.8		
60㎡ 초과~85㎡ 이하	10.2	10.2	10.5
85㎡ 초과	3.2	3.2	-
합 계	100.0	100.0	100.0

주: 1. 2008년~2012년 매입현황을 토대로 함
 2. 비율(1)은 85㎡를 초과한 물량까지 고려하여 도출한 비율이고, 비율(2)는 85㎡ 초과 물량을 배제하고 도출한 비율임
 자료: 국토교통부(2013. 10)

62) 전용면적 85㎡ 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안 총괄

1. 예산안 개요

2014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 편성되어있다. 세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는 방식이다.

총계 기준 세입예산은 2013년 대비 1,540억원(18.3%) 감소한 6,885억원이고,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430억원(15.2%) 감소한 1조 3,575억원이다. 이 중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40억원(18.3%) 감소한 6,885억원이다.

[표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안 개요(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C=B-A)	(C/A)
세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	1,004,234	842,450	842,450	688,461	-153,989	-18.3
	총계	1,004,234	842,450	842,450	688,461	-153,989	-18.3
세출	일반회계	742,967	757,978	757,978	668,993	-88,985	-11.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	910,815	842,450	842,450	688,461	-153,989	-18.3
	총계	1,653,782	1,600,428	1,600,428	1,357,454	-242,974	-15.2

주: 총계 기준임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3. 10)

총지출은 2013년 대비 1,541억원(18.3%) 감소한 6,873억원이다.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9%로 2013년 본예산 대비 0.06%p 감소하였고, 추경예산 대비 0.05%p가 감소하였다.

[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	909,946	841,345	841,345	687,252	-154,093	-18.3
총지출	909,946	841,345	841,345	687,252	-154,093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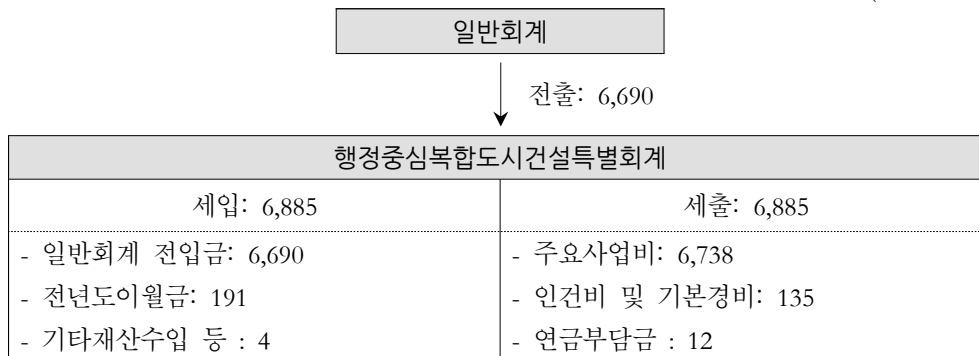
주: 총지출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여유자금, 차입금원금상환),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3. 10)

2.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2014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재정운용 체계는 일반회계로 편성된 예산 전액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는 구조이다.

[그림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임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3. 10) 세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014년도 신규사업은 총 8개 사업 173억원 규모이다. 가장 규모가 큰 신규사업은 청사이전사업으로 99억이 편성되었고, 복합민원센터 건립에도 20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 예산안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복합민원센터 건립	2,000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1,820
	행복도시-공주시 연결도로(2구간)	1,120
	2생활권 환승주차장	708
	공공자전거시스템 구축	347
	2-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710
	3-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710
	청사 이전 사업	9,924
합 계		17,339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3. 10)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오송-청주 연결도로사업이 전년대비 253억원 (1,014%) 증가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증액되었고, 행정지원센터건립사업은 가장 많은 금액인 304억(125.1%)이 증가하여 547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러한 증액 사업들은 주로 교통시설 확충, 도시 입주민을 위한 시설 건립 등이 대부분으로 이는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지원센터 건립	24,283	24,283	54,672	30,389	125.1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7,875	7,875	18,350	10,475	133.0
	오송-청주 연결도로	2,500	2,500	27,848	25,348	1,013.9
	행복도시-부강역 연결도로	600	600	2,023	1,423	237.2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362	362	1,246	884	244.2
	사후환경영향조사	833	833	1,224	391	46.9
	1생활권 환승주차장	455	455	1,847	1,392	305.9
	시청사 건립	5,388	5,388	25,300	19,912	369.6
	교육청사 건립	5,019	5,019	27,001	21,982	438.0
	소방서 청사 건립	2,355	2,355	4,254	1,899	80.6
	1-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A)	3,230	3,230	12,171	8,941	276.8
	1-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B)	3,230	3,230	12,170	8,940	276.8
	1-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10,180	10,180	17,042	6,862	67.4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1,464	1,464	10,376	8,912	608.7
	아트센터 건립	1,230	1,230	1,725	495	40.2
	행복아파트 건립	12,091	12,091	20,023	7,932	65.6
	경로복지관 건립	3,322	3,322	4,611	1,289	38.8

주: 2013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세부사업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3. 10)

4. 의무지출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사업은 모두 재량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무지출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5. 예산안의 주요 특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로서, 2014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6,873억원을 편성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06년부터 충청남도 연기군·공주시 및 충청북도 청원군 일원에 세종시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은 2030년까지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복합적 기능을 유치하는 인구 50만명 규모의 자족적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 등 19개의 중앙행정기관 기관과 조세심판원 등 18개의 소속기관이 단계별로 이전할 계획이며, 1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 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2014년 정부부처 이전을 계획대로 완료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2014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안 분석 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이월액이 과다하여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오송~청주시 연결도로 사업과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며, 사업비의 대부분이 토지매입비로 집행 부진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또한 1생활권,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도 집행부진의 우려가 있어 가능한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2-2생활권과 3-3생활권에 대한 동 사업의 경우 3-3생활권은 2013년 6월 토지매각이 이루어졌고, 2-2생활권의 경우 아직 토지매각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인근 생활권에 위치한 복합화 시설의 이용을 고려하여 연내 착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행복도시건설 홍보사업과 자족기능유치지원 사업이 중복의 우려가 있어 관련 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

6. 예산안 분석 요약

2014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업의 유사·중복 1건, 집행실적 부진 3건 등 총 4건으로 요약된다.

[표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안 주요 분석사항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분석사항
[사업의 유사·중복]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특별 회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운영	행복도시건설 홍보	602	615	554	○ 자족기능 유치지원사 업과 행정도시건설 홍 보사업 내 도시기능 마케팅사업이 중복의 우려가 있어 시정이 필요함
		자족기능유치지원	891	950	835	
[집행실적 부진]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특별 회계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1-1생활권(A) 복합커뮤니티센터	704	3,230	12,171	○ 연례적으로 집행실 적이 부진하고 이월 액이 과다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 해야함
		1-1생활권(B) 복합커뮤니티센터	768	3,230	12,170	
		1-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463	10,180	17,042	
		3-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483	-	1,665	
		3-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594	-	1,346	
		2-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	-	710	
		3-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	-	710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분석사항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특별 회계	광역교통 시설건설	오송~청주공항	1,106	7,875	18,350	○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오송~청주	155	2,500	27,848	
	광역복지 센터건립	1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630	14,570	18,328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10,882	1,464	10,376	

주: 2013년 예산은 추경 기준

I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1.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연례적 집행 부진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교부된 예산의 대부분을 이월하고 있어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006~2026, 직접)은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의해 기초생활권당 1개소의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2013년 완공 예정인 1-2, 1-4, 1-5 생활권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292억(175.3%) 증액 편성되었다.

[표 1] 복합커뮤니티센터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결산	2013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합계	47,232	47,291	47,291	45,814	-1,477	-3.1
1-2 생활권	17,873	15,811	15,811	0	-15,811	순감
1-4 생활권	11,505	7,076	7,076	0	-7,076	순감
1-5 생활권	14,842	7,764	7,764	0	-7,764	순감
소계	3,012	16,640	16,640	45,814	29,174	175.3
1-1 생활권(A)	704	3,230	3,230	12,171	8,941	276.8
1-1 생활권(B)	768	3,230	3,230	12,170	8,940	276.8
1-3 생활권	463	10,180	10,180	17,042	6,862	67.4
3-2 생활권	483	0	0	1,665	1,665	순증
3-1 생활권	594	0	0	1,346	1,346	순증
2-2 생활권(신규)	0	0	0	710	710	순증
3-3 생활권(신규)	0	0	0	710	710	순증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3. 10)

동 사업의 목적은 행정,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을 복합화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부지매입비용 및 건축·운영·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며, 복합화시설에는 주민센터(동사무소), 복합문화시설(도서관, 문화의집), 아동 복지시설(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체육시설(체육관, 헬스장) 등이 포함된다.

나. 연례적 집행부진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데, 2012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 1-1생활권(A) 70.8%, 1-1생활권(B) 74.3%이고, 1-3생활권 59.5%, 3-1생활권 68.0%, 3-2생활권 35.4%에 불과하여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2013년 9월 기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도 1-1생활권(A) 3.2%, 1-1생활권(B) 3.2%, 1-3생활권 25.2%, 3-2생활권 31.3%에 불과하여 집행 부진 및 이월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생활권에 대해 예산안이 증액 편성되어 집행 부진의 우려가 제기되므로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연으로 동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각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본격적인 주민입주시기에 맞추어 건립하기 위해 2014년도 소요공정에 필요한 공사비를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표 2]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최근 5년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C/A)	(C/B)		
1-1 생활권 (A)	2010	2,389	0	0	2,389	0	0	0	0	2,389
	2011	758	0	0	758	40	5.3	5.3	678	40
	2012	318	678	0	996	705	221.7	70.8	292	0
	2013	3,230	292	-1,844	1,678	54	1.7	3.2	-	-
	2014	12,171	-	-	-	-	-	-	-	-
1-1 생활권 (B)	2010	2,389	0	0	2,389	0	0	0	0	2,389
	2011	755	0	0	755	0	0	0	715	40
	2012	319	715	0	1,034	768	240.8	74.3	266	0
	2013	3,230	266	-2,400	1,096	35	1.1	3.2	-	-
	2014	12,170	-	-	-	-	-	-	-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C/A)	(C/B)		
1-3 생활권	2010	1,103	0	0	1,103	0	0	0	0	1,103
	2011	670	0	0	670	293	43.7	43.7	337	40
	2012	441	337	0	778	463	105.0	59.5	315	0
	2013	10,180	315	-4,500	5,995	1,510	14.8	25.2	-	-
	2014	17,042	-	-	-	-	-	-	-	-
3-1 생활권	2010	2,163	0	0	2,163	0	0	0	0	2,163
	2011	670	0	0	670	40	6.0	6.0	590	40
	2012	283	590	0	873	594	209.9	68.0	279	0
	2013	0	279	0	279	0	-	-	-	-
	2014	1,346	-	-	-	-	-	-	-	-
3-2 생활권	2010	3,317	0	0	3,317	978	29.5	29.5	0	2,339
	2011	985	0	0	985	0	0	0	945	40
	2012	421	945	0	1,366	483	114.7	35.4	883	0
	2013	0	883	0	883	276	0	31.3	-	-
	2014	1,665	-	-	-	-	-	-	-	-
1-2 생활권	2010	16,754	0	-20	16,734	0	0	0	0	16,734
	2011	11,863	0	-2	11,861	16	0.13	0.13	11,845	0
	2012	10,277	11,845	-700	21,422	17,873	173.9	83.4	3,549	0
	2013	15,811	3,549	700	20,060	11,470	72.5	57.2		
	2014	0								
1-4 생활권	2010	12,057	0	0	12,057	0	0	0	0	12,057
	2011	9,285	0	0	9,285	14	0.15	0.15	9,271	0
	2012	7,219	9,271	0	16,490	11,505	159.4	69.8	4,985	0
	2013	7,076	4,985	934	12,995	9,990	141.2	76.9		
	2014	0								
1-5 생활권	2010	14,408	0	0	14,408	0	0	0	0	14,408
	2011	11,256	0	0	11,256	16	0.14	0.14	11,240	0
	2012	8,057	11,240	0	19,297	14,842	184.2	76.9	4,455	0
	2013	7,764	4,455	344	12,563	12,243	157.7	97.4		
	2014	0								

주: 2013년 9월 기준임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3. 10)

2. 행복도시건설홍보·자족기능유치지원: 유사·중복 우려로 사업 내용 조정 필요

- 행복도시건설 홍보사업과 자족기능 유치지원사업이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어 사업 내용의 조정 필요

가. 현황

행복도시건설 홍보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012~계속, 직접)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현황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자족기능유치지원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006~계속, 직접)은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복도시건설 홍보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6,100만원(9.9%) 감액된 5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족기능유치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억 1,500만원(12.1%) 감소한 8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행복도시건설 홍보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2 결산액	2013		2014 예산안(B)	증감	
		예산액	추경(A)		(B-A)	(B-A)/A
행복도시건설 홍보	602	615	615	554	-61	-9.9
자족기능유치지원	891	950	950	835	-115	-12.1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2013. 9)

나. 자족기능 유치지원사업과 유사중복 우려로 사업 내용 조정 필요

행복도시건설 홍보사업은 자족기능 유치지원사업이 홍보에만 치중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2012년에 자족기능 유치지원사업으로부터 분리·신설된 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행복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과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1단계 사업의 마무리와 2단계 사업의 시작을 홍보하여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사업의 2013년 9월말 집행내용은 도시건설과정 홍보, 국민참여 이벤트, 도시기능마케팅, 기념품 제작, 홍보컨설팅 영상물 제작으로 구성된다. 세부집행 내역은 홍보컨설팅 영상물 제작에 1억 9천만원, 도시건설과정 홍보 9,400만원, 국민참여 이벤트 3,700만원, 도시기능마케팅 6,600만원 등이다.

[표 2] 행정도시건설 홍보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내용	건 명	집행액
	합 계	395
도시건설과정 홍보 (94)	블로그기자단 운영	17
	홍보용 쇼핑백 제작비 지급	4
	홍보책자 제작비(전지)	6
	홍보책자 제작비(녹색책자)	10
	행복도시이야기 제작비	57
국민참여 이벤트 (37)	국별 SNS 담당자용 태블릿 PC 사용료	4
	BRT 명칭공모 상품권 구입비 등	4
	직장동호회 체육대회 행사 비용	9
	행복도시 BRT 정식운행 기념행사비	19
	국제축구대회 입장권 구입비	1
도시기능마케팅 (66)	신문 등 간행물구독료	11
	뉴스저작권 이용료	24
	세종호수공원 개장 광고	30
	언론 브리핑용 임시 배경 스크린 제작 등	1
기념품 제작 (7)	홍보용 기념품 제작(접시, 머그컵 2종)	7
홍보컨설팅 영상물 제작(191)	2012년도 세종시 건설 홍보 용역 준공(이월)	17
	2013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홍보 용역 선금	11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작용역 선금	62

주: 2013년 9월말 집행액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3. 10)

자족기능유치지원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주민의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생활편익시설과 공공기관, 언론기관, 국내외 대학, 기업 등을 유치하여 세종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9월말 집행 현황을 보면, 도시마케팅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등에 3,600만원이 집행되었고, 투자유치활동에 1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행정도시건설 홍보사업의 세종호수공원 개장 광고나 자족기능 유치지원사업의 호수공원 조각품 전시회 및 자족기능유치지원을 위한 행복도시 광고 등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기획한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초청 공연과 정부세종청사 예술품 전시회 등도 자족기능 유치지원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행정도시건설 홍보사업의 ‘도시기능마케팅’과 자족기능 유치지원 사업의 ‘도시마케팅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표 3] 자족기능 유치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내용	건명	집행액
	합계	191
도시마케팅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등 (36)	자족기능유치지원을 위한 행복도시 광고	12
	호수공원 조각품 전시회	5
	정부세종청사 예술품 전시회	13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초청 공연	1
	영문홈페이지 게재 자료 번역 등	2
	자족기능 전략위원회 민간위원 참석 수당 등	3
투자유치활동 (155)	해외투자유치 전략수립 수립 등	40
	생활편의시설 등 설명회 개최(3회)	7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대학설립제안 평가 위탁	52
	공공기관 등 국내투자유치 활동 위탁	55
	세종시 관계기관 합동워크숍(투자유치 관련) 및 대전·충청권 벤처기업 조찬간담회 등	1

주: 2013년 9월말 집행액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3. 10)

자족기능 유치지원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기능유치 관련 언론 등 홍보에 3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있고, 그 세부 내역이 방송사 홍보·신문사 홍보·인터넷 홍보·옥외광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도시건설 홍보사업의 도시기능 마케팅과 매우 유사하다.

[표 4] 예산안 산출 근거

자족 기능 유치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 : 803백만원 - 기능유치 관련 언론 등 홍보 : 3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 홍보 140백만원, 신문사 홍보 80백만원, 인터넷 홍보 50백만원, 옥외광고 50백만원 부동산 전문 매체 홍보 30백만원 - 국내외 투자설명회·도시기능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 358백만원 - 투자유치 자료 작성, 자료번역, 자문 등 : 95백만원 ○ 차량 임차료 : 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투자설명회(2회) 6백만원, 도시기능증진을 위한 국제협력(1회) 3백만원 ○ 국외여비 : 2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투자설명회 및 도시 기능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한 국외여비 소요액
행정 도시 건설 홍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건설과정 홍보 : 14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유인물(책자, 리플릿, 브로슈어, 책자 등) 제작 100 -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44백만원 ○ 국민참여 이벤트 : 9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이벤트 70 - 지역주민 참여 이벤트 20백만원 ○ 도시기능 마케팅 : 12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광고료 76백만원 - 뉴스저작물 통합시스템 사용료 50백만원 ○ CI 활용 기념품 제작 : 45백만원 ○ 홍보건설팅·영상물제작 : 14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건설팅 및 영상물 제작 149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2013. 9)

행정도시건설 홍보사업의 도시기능마케팅과 자족기능 유치지원사업의 도시마케팅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 두 사업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생활권별 유치 실적을 보면, 국무조정실 등 14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이전은 세종시 설립 초기부터 계획되었던 것이고, 시청·시의회·교육청 등 지방청사 건설도 유치 실적이라기보다는 세종시가 행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의 일환에 불과하다. 대형유통시설을 제외하면, 당초 계획과 달리 해당 시설이 활발하게 유치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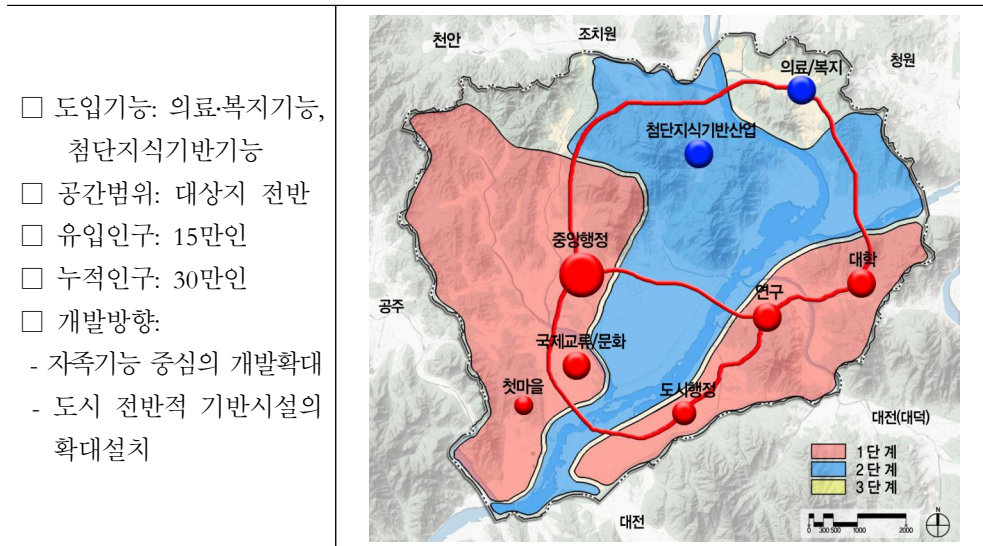
[표 5] 개발계획상 생활권별 유치계획 대비 실적

개발계획상 생활권별 유치계획		유치실적
생활권	유치계획 시설	
1생활권 (중앙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조정실 등 14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조세심판원 등) 이전 •이전대상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유치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일보, 금강일보 유치 •CGV 유치 •대형유통시설 홈플러스 유치
2생활권 (문화·국제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박물관 등 •호텔·국제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텔(세경그룹) 유치 •대형유통시설 이마트 유치 •대형유통시설 농협하나로마트 유치 및 착공
3생활권 (도시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행정기관 (시청·검찰청·교육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시의회·교육청 등 지방청사 건설 진행 중
4생활권 (대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민간연구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5개대와 MOU 체결 •KAIST를 우선입주대학으로 선정
5생활권 (의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대학병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대병원과 병원설립 MOU체결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중)
6생활권 (첨단지식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지식산업(IT·BT)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3.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지는 2단계 계획은 자족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은 2단계 사업의 성공을 가름하는 기틀이 되므로 사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통해 동 사업을 면밀하게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2단계 시행에 관한 계획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서」(2013. 8)

3. 오송 ~ 청주시 연결도로, 오송 ~ 청주공항 연결도로: 연례적 집행 부진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며, 토지매입비가 전체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가. 현황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012~2017, 직접)은 세종시-청주국제공항 간 이용을 위한 연결로 확보 및 오창과학산업단지·진천·증평 등으로의 접근성 향상 등 이용 교통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05억원(133%) 증가한 184억원이 편성되었다.

오송~청주시 연결도로 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007~2017, 직접)은 오송역 연결도로, 청주3차 우회도로와 연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인 세종시, 오송, 오창 간 연결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청주, 오창지역으로부터의 세종시 접근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53억원(1,014%) 증가한 278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오송~청주시 연결도로 및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2014 예산안(B)	증 감	
		예산	추경(A)		(B-A)	(B-A)/A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1,106	7,875	7,875	18,350	10,475	133.0
오송~청주시 연결도로	155	2,500	2,500	27,848	25,348	1,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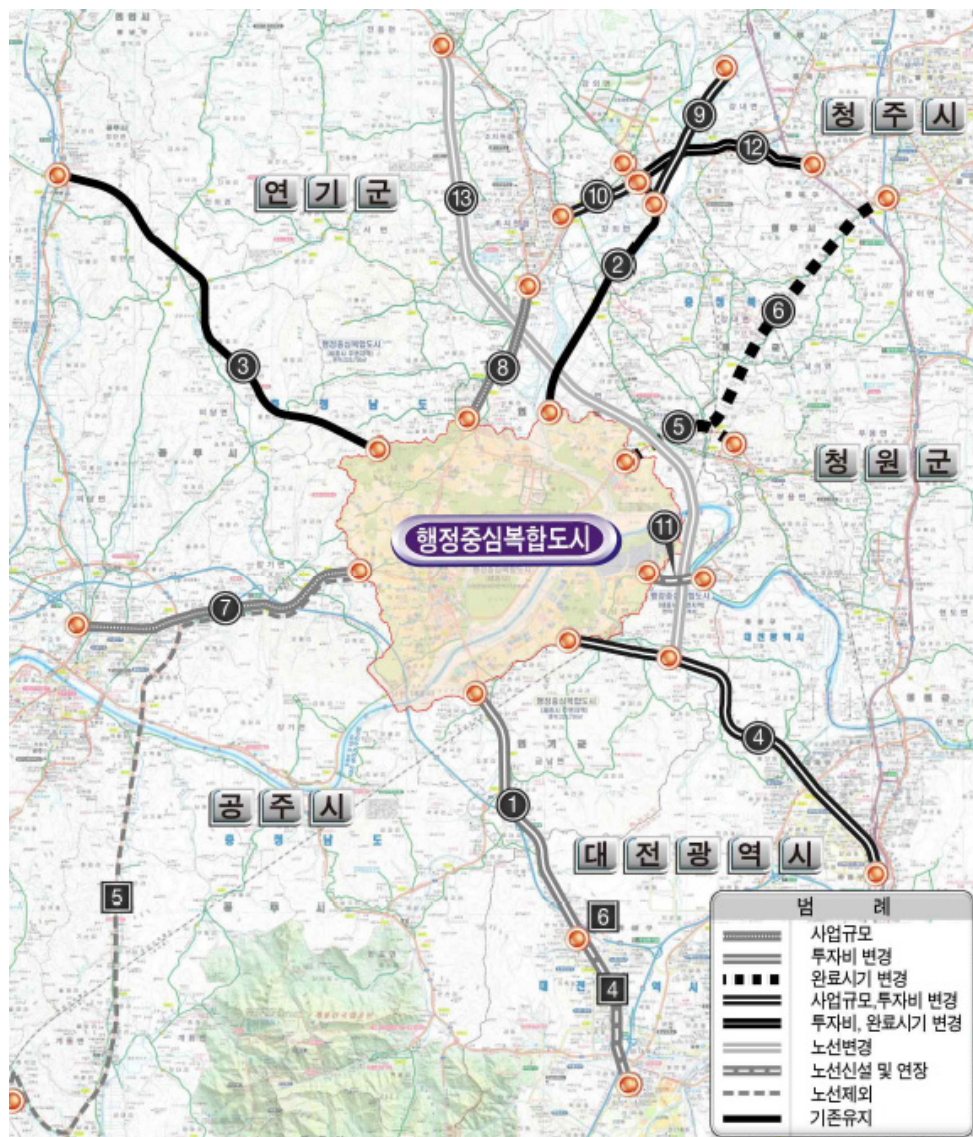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3. 10)

나. 연례적 집행부진 및 토지매입비 과다로 인한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광역교통시설 건설 사업 중 오송~청주시 연결도로는 다음 그림의 12번에 해당하고,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는 9번에 해당한다. 이 두 사업은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과 충청북도 청주시 사이의 교통체계 개선 방안이므로 해당 구간이 세종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두 사업은 당초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2007.5)할 때부터 계획된 사업으로 행복도시와 경부고속도로 청주IC 및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림 1]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내역도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2011. 11)

오송~청주시 연결도로는 강내면 시가지(강내면 월곡리, 탑연리)를 통과하는 구간으로 교차로 형식 변경(지하차도→평면교차로) 및 지역민원 등으로 사업이 일부 지연되었다.

오송~청주시 연결도로는 2013년 9월 말 기준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0.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예산안은 각각 278억원과 184억원이 편성되었다.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오송~청주시 연결도로의 토지매입비는 예산안의 88.0%를 차지하고,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사업의 경우 토지매입비가 95.4%에 이른다. 따라서 두 사업의 내년 예산은 도로 건설을 위한 보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송~청주시 연결도로는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에 설치예정이던 지하차도(2개소)로 인해 도로변 상권위축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임을 감안할 때, 토지 매수의 어려움으로 인한 집행부진이 우려된다.

[표 2] 오송~청주시 연결도로 및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예산액	2013				2014 예산안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오송~청주시 연결도로	2,000	2,500	2,600	-	-	27,848
토지매입비	1,400	2,500	2,500	-	-	24,500
기본조사설계비	10	-	10	-	-	-
실시설계비		-		-	-	-
-시설비	500	-		-	-	2,598
-감리비	80	-	80	-	-	700
-시설부대비	10	-	10	-	-	50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1,600	7,875	8,369	1,670	20.0	18,350
토지매입비	-	5,252	5,252	-	0.0	17,500
기본조사설계비	1,280	315	489	114	23.3	-
실시설계비	300	1,791	2,091	1,553	74.3	-
-시설비	-	-		-	-	500
-감리비	20	367	387	-	0.0	300
-시설부대비	-	150	150	3	2.0	50

주: 집행액은 9월 말 기준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3. 10)

4. 1생활권,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집행실적을 감안한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안 조정 필요

-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이월액이 과다하여 집행실적을 감안한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안 조정 필요

가. 현황

1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008~2014, 직접)은 전년대비 38억원(25.8%) 증가한 183억원이 편성되었고,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012~2015, 직접)은 전년대비 89억원(608.7%) 증가한 104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광역복지지원센터는 도시 초기 이주민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보건시설 등을 통합한 시설이다. 예정지역 내 요보호대상자(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복합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치료, 자활 및 재활사업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시설을 구축하려는 사업이다.

[표 1] 1생활권,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결산액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
1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630	14,570	14,570	18,328	3,758	25.8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10,882	1,464	1,464	10,376	8,912	608.7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3. 10)

나.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동 사업의 2013년 9월 말 기준 집행내역을 보면, 1생활권은 54억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43%가 집행되었고, 2생활권의 경우는 7억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40.8%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총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인해 2012년 12월말에 공사가 착수되었기 때문에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되었고, 2생활권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1생활권은 골조공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2생활권의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우려된다.

[표 2] 광역복지지원센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 생 활 권	2010	1,628	-	20	1,648	10	0.6	0.6	1,297	341
	2011	3,041	1,297	-1,011	3,327	927	30.5	27.9	2,400	-
	2012	12,586	2,400	-9,676	5,310	245	1.9	4.6	2,149	-
	2013	14,570	2,149	-4,072	12,647	5,443	37.4	43.0		
2 생 활 권	2010	-	-	-	-	-	-	-	-	-
	2011	-	-	-	-	-	-	-	-	-
	2012	1,600	-	9,676	11,276	10,297	643.6	91.3	296	98
	2013	1,464	296	-	1,760	718	49.0	40.8		

주: 2013년은 9월 말 기준

자료: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13. 9)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3. 10)

동 사업은 연례적 이월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의 토지매입비나 교육청사 부지비 및 국립도서관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비 등으로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어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새만금개발청]

I. 새만금개발청 예산안 총괄

1. 예산안 개요

2014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 12일 개청하였으며, 2013년도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다. 세출은 2013년 예비비 대비 43억 1,000만원(62.0%) 증액된 112억 6,100만원이다.

[표 1] 새만금개발청 예산안 개요(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예비비(A)		(B-A)	(B-A)/A
지출	-	-	6,951	11,261	4,310	62
총계	-	-	6,951	11,261	4,310	62

자료: 새만금개발청(2013. 10)

총지출은 2013년 대비 43억 1,000만원(62.0%) 증가한 112억 6,100만원이다.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3%로, 전년 대비 0.001%p가 증가하였다.

[표 2] 새만금개발청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예비비(A)		(B-A)	(B-A)/A
일반회계	-	-	6,951	11,261	4,310	62
총지출	-	-	6,951	11,261	4,310	62

주: 총지출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여유자금, 차입금원금상환),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자료: 새만금개발청(2013. 10)

김효진 예산분석관(hjk@assembly.go.kr, 788-4629)

2. 신규 및 주요 증감사업

2014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에 1억 7,500만원 규모이다.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은 새만금개발청 자체 학습, 교육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고, 새만금위원회운영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그 밖의 사업은 2013년도 9월 새만금 개발청 개정 이후 예비비를 편성·집행하고 있어 신규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표 3] 새만금개발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 예산안
일반회계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62
	새만금위원회운영	113

자료: 새만금개발청(2013. 10)

주요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부처 신설에 따라 청의 내부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한 행정정보망 구축 사업이 전액 감액되었고, 인건비는 2013년도에 3개월 분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나, 2014년 12개월 분을 편성함에 따라 증액되었다.

[표 4] 새만금개발청 소관 주요 증감사업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예비비(A)		(B-A)	(B-A)/A
일반 회계	행정정보망구축	-	2,785	-	-2,785	순감
	인건비	-	1,789	7,816	6,027	436.9

자료: 새만금개발청(2013. 10)

3. 예산안의 주요 특징

새만금개발청은 6개 정부부처와 전라북도로 분산된 새만금사업 개발기능을 통합·추진하고자 2013년 9월 12일 출범한 신설 부처로서, 2014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112억 6,100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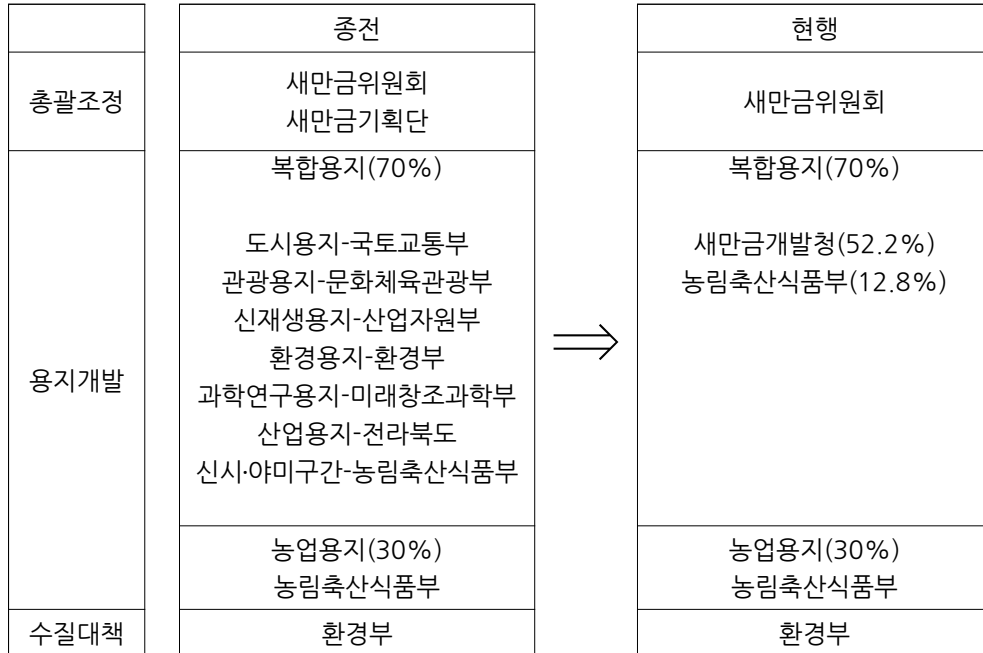
새만금사업은 1991년 사업초기 새만금사업지역 대부분을 농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구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후 2007년도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에서 새만금사업 범위를 농업·산업·관광·도시·환경 부분 등의 개발로 확대하였고, 2011년 3월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서는 30%를 첨단농업용지 등 농지로 조성하고 70%를 산업용지·관광용지·물류용지·국제업무용지·과학연구용지·신재생에너지용지·주거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개발하도록 토지용도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수행한 결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어렵고, 전체적인 사업의 속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개 부처의 개발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개발전담기구(새만금개발청)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하게 된 것이다.

중전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새만금사업기획단이 새만금관련 주요 정책·사업을 총괄 조정 및 점검하고, 복합 용지의 토지개발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국가, 공공 또는 민간)를 지정하여 각각 개발하는 체제였으나,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되면서 동 부처가 새만금사업 총괄과 복합용지의 토지개발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2014년에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복합도시 개발 사업 및 국무조정실 소관이었던 새만금위원회운영 등 일부 사업이 새만금개발청으로 편성되었다.

[그림 1] 새만금사업 추진체계 개편도



주: 현행 용지개발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재생용지내 바이오시험단지, 농업용지내 환경 생태용지 및 농촌도시용지 등을 주관하게 된다.
 자료: 새만금개발청(2013. 10)

새만금개발청은 2014년도에는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안정적 사업추진체계를 확고하게 하고, 투자유치 등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014년도 예산안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하고는 새만금 명품복합도시건설지원, 새만금투자유치지원 등 3건의 개발·유치사업과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행정능률향상사업만이 편성되어 사실상 기존 타 부처 사업 중 일부를 이어 받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표 5] 새만금개발청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A)	2014 예산안(B)	증감	
			(B-A)	(B-A)/A
계	6,951	11,261	4,310	62
새만금명품복합도시건설지원	-	560	560	순증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	62	62	순증
새만금투자유치지원	785	700	-85	-10.8
행정정보망구축	2,785	-	-2,785	순감
새만금위원회운영	-	113	113	순증
인건비	1,789	7,816	6,027	436.9
기본경비	1,592	2,010	418	26.3

주: 2013년도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음.

자료: 새만금개발청(2013. 10)

또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¹⁾은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²⁾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출범 초기로 조직 정상화 및 사업 추진 체계 확립을 위한 준비단계가 필요하겠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자 신설 조직을 마련한 만큼, 향후 부처별 사업의 효율적인 통합 및 적극적인 사업 개발 등을 통해 새만금개발사업이 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특별회계의 설치)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2)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4. 예산안 분석 요약

2014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업성과 미흡 1건, 기타 1건 등 총 2건으로 요약된다.

[표 6] 새만금개발청 예산안 주요 분석사항

(단위: 백만원, %)

회계/ 기금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분석사항
[사업성과 미흡]						
일반 회계	새만금 개발사업 지원	새만금명품 복합도시 건설지원	500	4,400	560	○ 동서2축 도로 기본설계 의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기반시설 적기 조 성 필요
[기타]						
광특 회계	관광레저 개발육성	새만금국제 관광단지 개발사업	1,000	950	846	○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 광부 소관 사업으로 편 성되었으나, 부처 신설 취지에 맞도록 새만금 개발청으로 이관 필요

주: 2013예산은 추경반영 예산

II. 새만금개발청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1. 새만금명품복합도시건설지원: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기반시설 적기 조성 필요

- 새만금복합도시 기반시설의 적기 완공을 위하여 동서2축 도로 기본설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새만금명품복합도시건설지원(일반회계, 2012~, 직접)은 새만금신항만에서부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진입부간 4차로 연결도로인 동서2축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 대비 38억 4,000만원(87.2%) 감소한 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4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비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다.

[표 1] 새만금명품복합도시건설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새만금명품복합도시 건설지원	500	400	4,400	560	-3,840	-87.2

주: 2013년까지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편성되었음

자료: 새만금개발청(2013. 10)

나. 동서2축 도로사업 관리를 통한 복합도시 기반시설의 차질없는 지원 필요

새만금사업은 총 면적 401km²(매립 283km², 담수호 118km²), 방조제 33.9km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2020년까지 1단계로 복합도시(36.9km²), 산업단지(전체), 방수제

(전체), 농업용지(전체) 등 205.8km²(72.7%)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2021년 이후 2단계로 복합도시(30.4km²), 과학연구용지, 도시용지, 신재생에너지 등 77.1km²(27.3%)를 개발할 계획이다.

[표 2] 용지별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계획

	종전 주관부처	개발시기	비 고
농업용지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까지	방수제공사 시행중
명품복합도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1단계 : 2020까지 2단계 : 2021부터	미착수
관광용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1단계 : 2020까지 2단계 : 2021부터	미착수
신재생에너지용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까지	미착수
산업·관광용지	전라북도	2020년까지	일부구간매립
과학연구용지	미래창조과학부	2020년 이후	미착수
환경용지	환경부	2020년까지	미착수

자료: 새만금개발청(201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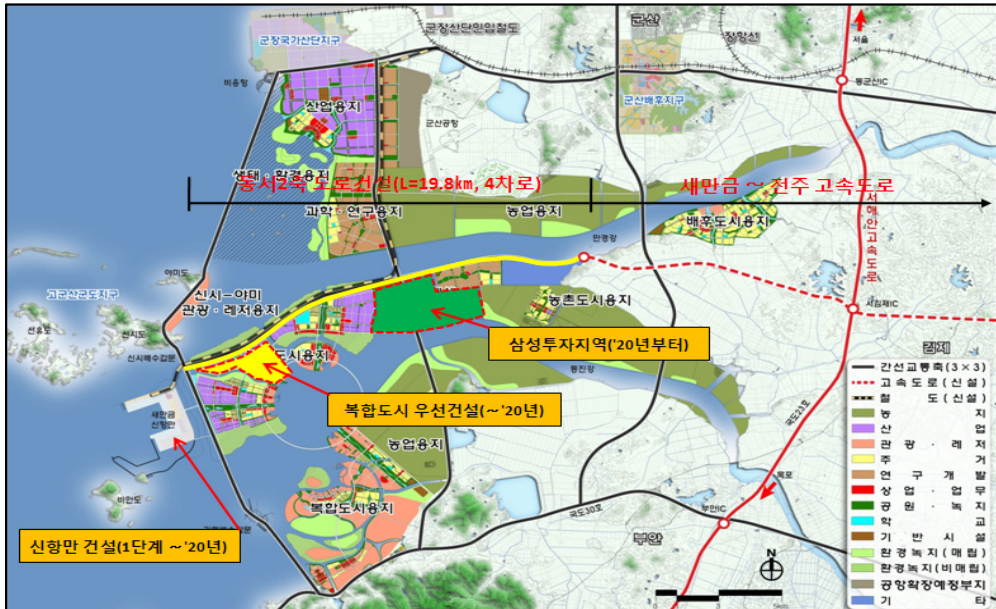
동 사업은 이 중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복합도시(25.8km²) 1단계 지구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에는 동서2축 도로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비를 편성하였다.

[표 3] 동서2축 도로건설 사업 개요

사업내용	신항만~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진입부(4차로, 19.8km)
총사업비	3,020억원
사업기간	2013~2020년

자료: 새만금개발청(2013. 10)

[그림 1] 새만금 복합도시 내부 개발도(동서2축 도로건설)



자료: 새만금개발청(2013. 10)

2013년 9월 기준 동 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기본설계비로 편성한 40억원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표 4] 동서2축 도로건설 기본설계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금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13	4,000	-	4,000	-	-	-	0.0

주: 2013년은 9월말 기준임

자료: 새만금개발청(2013. 10)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기본설계는 8월에 발주되어 2014년 11월까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도에는 기본설계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기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인 바, 복합도시 건설에 있어 1차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시설인 만큼 사업 초기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새만금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문화체육관광부)의 새만금개발청 이관 필요

- 새만금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14년 예산안 편성시 종전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법률제정 및 기관신설 취지에 맞도록 새만금개발청으로의 이관이 필요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농지개발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질대책은 환경부에서 계속 수행하도록 하되, 그 밖에 각 부처별로 추진인 중인 개발사업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업을 이관 받아 추진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새만금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14년 예산안 편성시 새만금개발청 소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표 1]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새만금국제관광단지 개발	1,000	950	950	846	-104	-10.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한 것은 새만금사업이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유사한 사업을 중복되게 추진하거나, 용지별로 사업내용이 상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각 부처별로 사업을 분산하는 것은 법률 제정 및 기관 신설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을 정비하여 소관을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이체 받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제 4 장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I. 여성가족부 예산안 총괄

1. 예산안 개요

201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1개 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및 2개 기금(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계 기준으로, 세입 및 기금수입은 2013년 대비 297억원(12.9%) 증액된 2,592억원, 세출 및 기금지출은 2013년 본예산 대비 433억원(8.3%), 추경예산 대비 346억원(6.5%) 증액된 5,673억원이다.

[표 1] 여성가족부 예산안 개요(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입	세입	6,920	8,149	8,149	10,158	2,009	24.7
	기금수입	311,716	221,413	221,413	249,059	27,646	12.5
	총계	318,636	229,562	229,562	259,217	29,655	12.9
지출	세출	242,064	302,570	311,270	318,245	6,975	2.2
	기금지출	311,716	221,413	221,413	249,059	27,646	12.5
	총계	553,780	523,983	532,683	567,304	34,621	6.5

자료: 여성가족부(2013. 10)

총지출 기준으로는 2013년 본예산 대비 414억원(8.4%), 추경예산 대비 327억원(6.5%) 증액된 5,356억원이다.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5%이다.

[표 2] 여성가족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회 계	242,064	302,570	311,270	318,245	6,975	2.2
기 금	171,947	191,606	191,606	217,364	25,758	13.4
총지출	414,011	494,176	502,876	535,609	32,733	6.5

주: 총지출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여유자금, 차입금원금상환),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2013. 10)

2. 회계 · 기금별 개요

가.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 세입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되며, 총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등 기타경상이전 수입 증가(20억원) 등에 따라 2013년 81억원에서 2014년 102억원으로 24.7% 증가하였다.

[표 3] 여성가족부 세입예산안(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회계	일반	6,920	8,149	8,149	10,158	2,009	24.7
총 계		6,920	8,149	8,149	10,158	2,009	24.7

자료: 여성가족부(2013. 10)

2014년 세출예산안은 총계 기준과 총지출 규모가 동일하며, 2013년 추경 기준으로 3,113억원에서 2014년 3,182억원으로 2.2% 증액되었다. 일반회계는 아동양육 지원 등 사업 확대에 따라 2013년 2,607억원에서 2014년 2,733억원으로 4.8% 증가하였고, 광특회계의 경우 지역계발계획인 청소년시설확충사업에 대한 시도 자율편성액의 감소에 따라 2013년 대비 11.0% 감소하였다.

[표 4] 여성가족부 세출예산안(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회계	일반	200,587	252,020	260,720	273,254	12,534	4.8
	광특	41,477	50,550	50,550	44,991	-5,559	-11.0
총 계		242,064	302,570	311,270	318,245	6,975	2.2

주: 총계 기준과 총지출 규모가 동일

자료: 여성가족부(2013. 10)

나.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총계 기준 총 2,491억원으로 2013년 변경계획 대비 12.5% 증가하였다. 각 기금별로는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규모가 2013년 대비 22.2% 증가한 반면, 청소년육성기금은 운용규모가 2013년 대비 2.0% 축소되었다.

[표 5] 여성가족부 기금 총괄(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계획		2014 계획안(B)	증 감	
			당초	변경(A)		(B-A)	(B-A)/A
기 금	여성발전	194,242	132,462	132,462	161,868	29,406	22.2
	청소년육성	117,474	88,951	88,951	87,191	-1,760	-2.0
총 계		311,716	221,413	221,413	249,059	27,646	12.5

자료: 여성가족부(2013. 10)

2개 기금의 총지출은 2,174억원으로 2013년 변경계획 1,916억원 대비 13.4% 증가하였다. 각 기금별로는 여성발전기금이 1,493억원으로 2013년 대비 20.4%, 청소년육성기금은 681억원으로 2013년 대비 0.7% 증가하였는데, 이는 복권기금 사업비 전입금의 증가에 기인한다.

[표 6] 여성가족부 기금별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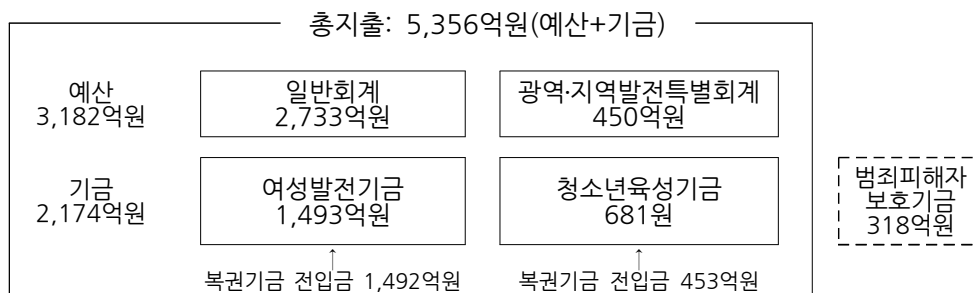
		2013 계획		2014 계획안(B)	증 감	
		당초	변경(A)		(B-A)	(B-A)/A
기금	여성발전	123,934	123,934	149,252	25,318	20.4
	청소년육성	67,672	67,672	68,112	440	0.7
기금별 총지출 합계		191,606	191,606	217,364	25,758	13.4

자료: 여성가족부(2013. 10)

3. 회계 · 기금간 재정구조

여성가족부 재정구조의 특징은 소관 2개 기금(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재원 중 복권기금 전입금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소관 재정으로 포함되지 않는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318억원)을 수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을 포함한 여성가족부 사업규모는 5,674억원이다.

[그림 1] 여성가족부 소관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주: 1. 총지출 기준(기금의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을 제외)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여성가족부 소관 재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여성가족부에서 일부 사업(318억원)을 수행하고 있어 점선으로 표시함

자료: 여성가족부(2013. 10)

4.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014년도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 25억원 규모이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여성인재품을 확충하고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한 미래 여성인재 양성사업과 청사 이전사업 등 2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2015년 실시될 예정임에 따라 본 조사 전년도인 2014년에 시험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표 7] 여성가족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 예산안
일반회계	미래 여성인재 양성	500
	청사이전	1,647
여성발전기금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344
합 계(총 3개 사업)		2,491

자료: 여성가족부(2013. 10)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20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은 아동양육지원 등 일반회계 3개 사업,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등 여성발전기금 1개 사업이다.

[표 8] 여성가족부 소관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아동양육지원	67,318	71,518	75,674	4,156	5.8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교육	3,441	3,441	6,310	2,869	83.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6,918	6,918	13,960	7,042	101.8
여성발전기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8,744	48,744	51,564	2,820	5.8

자료: 여성가족부(2013. 10)

5. 의무지출 사업

의무지출 사업은 2013년 498억원 대비 2.7% 증가한 52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보상금) 사업은 지원실적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3.1% 감소한 10억원이 편성되었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하던 것을 실소요액을 반영한 결과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표 9] 여성가족부 의무지출 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 A
총지출(A)		414,011	494,176	502,876	535,609	32,733	6.5
의무지출(B) (비중, B/A)		38,886 (9.4)	49,768 (10.1)	49,768 (9.9)	52,556 (9.8)	2,788	2.7
일반 회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보상금)	980	1,024	1,024	992	-32	-3.1
여성발전 기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7,906	48,744	48,744	51,564	2,820	5.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예산안의 주요 특징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포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로서, 2014년도 예산안에는 총지출 기준으로 5,356억원을 편성하였다.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고용율을 제고하고, 여성인재육성 기반을 마련하며, 위기청소년 보호, 한부모·맞벌이가족 자녀 양육 및 다문화가족 서비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데 있다.

201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분석 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증액하였으나, 신규로 실시하려는 특화형 새일센터 10개소 지정·운영 사업은 참여 희망 여성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효과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며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6개월 전에 퇴직하는 등 취업유지율이 낮은 데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맞벌이 등 취업부모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이양육지원(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예산안이 증액되었으나, 영아 종일제 돌봄 신청대상을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 확대하면서 아이돌보미 수당은 연령에 관계 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저(低)연령일수록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수급기준 등을 연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실제 정부 지원 총액의 증감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의 세사업인 아동교육지원비(중·고생 학용품비)는 급여내용이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급여)와 동일한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시 교육급여 지급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급여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바, 교육급여 예산의 국회 심사 및 관련 법률 개정 경과를 보아가며 적정 수준으로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성발전기금은 자체재원이 취약하며 매년 복권기금 전입액이 확대되는 등 기금의 불안정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사업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2014년에도 6개 사업이 회계간 이관될 예정인 바,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해 여성발전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양성평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10] 여성발전기금 회계간 이관 사업

(단위: 백만원, %)

회계	사업명	2013예산		2014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 여발기금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2,541	2,541	2,287	-254	-1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3,749	3,749	3,374	-375	-10.0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	1,263	1,263	1,263	-	-
범피기금 → 여발기금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1,594	1,594	1,594	-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2,293	12,293	13,343	1,050	8.5
여발기금 → 일반회계	여대생커리어 개발 지원	885	885	630	-255	-28.8

자료: 여성가족부(2013. 10)

7. 예산안 분석 요약

201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예산 과다편성 1건, 사업계획 부실 1건, 사업성과 미흡 1건 등 총 3건으로 요약된다.

[표 11] 여성가족부 예산안 주요 분석사항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분석사항
[예산 과다 편성]						
여성 발전 기금	한부모가족 지원(기금)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37,906	48,744	51,5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등의 정보제공 명의인 우편통보요금은 우편통보 실적 저조에 따른 일부 감액 필요 ○ 아동교육지원비(중·고생 학용품비)는 보건복지부 교육급여(기초생활급여) 예산 국회 확정 결과에 따라 중복지원분 조정 필요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분석사항
[사업계획 부실]						
일반 회계	아동양육지원	아동양육지원	43,804	71,518	75,6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종일제 돌보미 수당은 저(低)연령의 돌봄 부담 가중을 고려한 연령별 차등 편성 필요 ◦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보건복지부)와 기능이 유사하므로, 연계 운영 방안 검토 필요
[사업성과 미흡]						
일반 회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지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28,038	38,196	39,0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의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이 48.2%에 불과 ◦ 특화형 새일센터 별도 지정 지원방식 효과성 미흡 우려

주: 2013예산은 추경반영 예산

II.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특화형 새일센터 별도 지정의 효과성 미흡 우려를 고려한 시범운영 필요 등

- 신규 세사업인 특화형 새일센터 지정·운영은 참여 희망자의 접근성 확보 곤란, 고학력자 대상 특화 센터의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 필요성, 기존 교육 과정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2014년 10개소 시범운영 후 본사업 실시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의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취업의 질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가. 현황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일반회계, 2009~, 보조)은 임신·출산·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한다)의 직업교육훈련,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처 발굴 등을 지원¹⁾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2013년 대비 9억원(2.4%) 증가한 391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8,038	34,596	38,196	39,097	901	2.4
- 특화형 새일센터 지정·운영	-	-	-	2,226	2,226	순증
- 새일센터 지정·운영	24,529	30,574	34,174	33,263	-911	-2.7
- 광역본부 지정·운영 등	3,509	4,022	4,022	3,608	-414	-10.3

자료: 여성가족부(2013. 10)

1)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공동 사업임.

- 여성가족부 : 여성인턴제,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직업 교육훈련, 일·가정 양립지원
- 고용노동부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직업상담원 인건비, 취업 후 사후관리비 포함)

나. 특화형 새일센터 별도 지정시 기존 과정과의 중복성 등에 따른 효과성 미흡 우려

여성가족부는 현재 새일센터 118개소를 지정하여 취업설계사 인건비, 인턴채용 지원금, 직업교육훈련비, 사후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4년 예산안에서는 고학력자, 사회취약계층 등 대상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새일센터와 별도로 특화형 새일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있다. 특화형 10개소에 대하여 취업설계사 인건비(개소당 4인), 새일인턴채용 지원금,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2] 특화형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 예산 산출근거

특화형 새일센터 지정·운영(10개소) : 2,226백만원(순증)	
○ 취업설계사 인건비(보조율 50%) : 418백만원	
- 10개소 × 3명 × 12개월 × 1,654천원 × 50% = 298백만원	
- 10개소 × 1명 × 12개월 × 2,000천원 × 50% = 120백만원	
○ 새일인턴제 운영(보조율 80%) : 600백만원	
- 10개소 × 25명 × 6개월 × 50만원 × 80%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보조율 100%) : 1,000백만원	
- 10개소 × 25백만원 × 4개 과정 × 100%	
○ 사후관리 지원(보조율 50%) : 208백만원	
- 10개소 × 41.6백만원 × 50%	

기존 새일센터는 기본형(취업집중형)으로 유형화하고, 특화형은 고학력자 대상의 경력개발형(I 유형), 가정폭력피해자, 장애여성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의 자립지원형(II유형), 창업집중형(III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 또는 교육내용에 맞도록 관련 직능단체 및 협회를 특화형 새일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표 3] 새일센터 유형 재편안

	기본형 (취업집중형)	특화형		
		경력개발형 (특화 I 유형)	자립지원형 (특화 II 유형)	창업집중형 (특화 III 유형)
대상	일반 경력단절여성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일반기업체 취업이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 장애여성 등 사회취약계층	창업 희망 여성
사업특징	구인·구직 상담,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 등 취업연계	기존 경력·전공 등을 고려한 상담, 재취업 훈련, 관련분야로의 인턴쉽 기회제공 등 관련 분야로의 취업연계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창업준비 상담, 교육, 아이템 선정, 법률자문 등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여성단체 등	주요 직능단체 및 협회 예) IT여성벤처협회	취약계층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앙 단위 조직 활용 예정 예) 봉제협회	창업관련 단체 및 협회 예) 여성창업협회

자료: 여성가족부(2013. 10)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직업분야 또는 창업을 목표로 하는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이 이미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어 일견 중복 우려가 있으나, 새일센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면 특화형으로 지정하여 운영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새일센터는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60~350시간), 구인업체 발굴, 동행면접, 취업 후 일·가정 양립 및 직장 적응 지원 등 취업 전 과정에 대한 밀착형 지원을 실시하며, 기존 여성회관 및 인력개발센터 등에 설치되어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특화형의 경우 특정 직업분야 관련 직능단체나 협회 등을 센터로 지정할 계획이어서 센터 소재지와 참여 희망자, 구인처의 분포가 일치하리라고 담보하기 어렵다²⁾. 한 번 설치된 후 동일 지역에서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계속사

2) 참고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검토보고서」(2013. 9)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사회공헌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장년희망찾기 지원사업의 세사업)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퇴직 중고령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참여자들의 활동 분야가 교육, 경영지원 등 일부 분야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참여자의 전문성과 희망하는 분야에 비해 참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공헌일자리 분야가 한정되거나 참여기관의 소재지에 따른 참여자의 거리상의 제약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별도 유형을 지정하면서까지 지원할 타당성 찾기 어렵고, 이미 2013년에 새일센터에서 고학력자 대상으로 특화된 전문 직종 직업교육훈련 31개 과정(교육생 722명)이 실시되고 있으며, 현장실습을 포함한 심화 과정도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업 및 장애여성 대상 교육과정도 기 운영 중이다.

[표 4] 2013년 직업교육훈련 실시 현황

(단위: 개, 명)

유형	과정수	교육 인원	훈련과정 유형	주요 과정명
고학력	31	722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특성을 고려한 전문 직종 과정	MICE전문가과정, 글로벌교육 컨 설턴트, 표현예술치료사, 의료관광 통역 전문인력, 영어연극&뮤지컬 공연기획자 양성과정 등
전문기술	24	535	IT·기술·제조 관련 과정	웹콘텐츠 디자인, 캐드&모델링, 영상CG 제작자, 조선·선박설계기 사, CNC 선반전문가 양성과정 등
심화	49	1,073	취업유망과정, 전문기 술과정, 고학력과정 중 현장실습 등을 포 함한 중·고급 단계의 교육이 필요한 과정	CAD/CAM오퍼레이터, 태양광산 업 QC 전문인력, HACCP·식품 QC 과정, 제약·화장품QC과정 등
창업	35	795	창업 준비 단계, 운영 및 창업 성공을 위한 전반적이 창업 교육 과정	여성친화협동조합창업, 수공예공 방창업과정, 떡카페창업과정 등
장애	3	62	장애여성에게 적합하 고 취업이 유망한 분 야의 인력 양성 과정	행정사무원, 바리스타 양성과정
중고령 등 6개 유형	521	11,738	중고령, 결혼이민, 북한이탈, 기업맞춤형, 폴리텍연계, 취업유망	
합 계	663	14,000		

자료: 여성가족부(2013. 10)

따라서, 특화형 새일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보다는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시 관련 직능협회 등과의 연계³⁾, 우수 사례 공유 등 중앙 및 광역 단위에서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적극적 역할 수행을 통한 해결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력단절여성 취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시도한다는 의의는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화형 새일센터의 연도별 확충(2014년 10개소 → 2017년 80개소)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유지율 저조

2011년간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의 고용유지율을 조사한 결과 취업인원 11.7만명 중 60.8%(7.1만명)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질 좋은 일자리로 취업하지 못하는 비율이 약40%에 이른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 중에서도 51.8%(3.7만명)가 6개월 이전에 그만두고, 30.9%(2.2만명)만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2011년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고용유지율 조사

<p>○ 조사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인원 : 117,370명(※'11.1.1~12.31까지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 조사시점 : 2013. 7월 -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를 통해 조사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가입인원 71,360명(전체 취업자 대비 60.8%) - 기간별 고용유지인원 				
	(단위: 명)			
고용보험 가입인원	3개월 미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12개월 이상
71,360	22,469	14,519	12,356	22,016
(100.0%)	(31.5%)	(20.3%)	(17.3%)	(30.9%)

3) 일례로, 여성가족부는 2013. 2월 폴리텍대학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위주의 전문기술과정 직업훈련 교육(웹콘텐츠 디자인, 캐드&모델링, 한식조리)을 실시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새일센터는 2009년 72개소를 시작으로 2013년 10월말 현재 센터 118개소, 광역본부 10개소 등이 운영 중인데, 개소수의 양적 확대보다는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되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아동양육지원: 종일제 지원연령에 따른 아이돌보미 수당 차등 편성 필요 등

- 세사업인 아이돌봄지원 중 영아 종일제 돌봄은 지원연령을 확대(만 0세→0~1세)하면서 연령별 아이돌보미 수당은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으나, 저(低)연령일수록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차등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보건복지부)와 기능이 유사하므로, 향후 연계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가. 현황

아동양육지원사업(일반회계, 2007~, 보조)은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아이돌봄 지원), 양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42억원(5.8%) 증가한 757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아동양육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아동양육지원	43,804	67,318	71,518	75,674	4,156	5.8
- 아이돌봄 지원	43,454	66,618	70,818	74,974	4,156	5.9
-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350	700	700	700	0	0.0

자료: 여성가족부(2013. 10)

나. 종일제 돌봄의 연령별 돌봄 부담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 수당 편성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취업 한부모 등 취업가구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출장, 야근과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 돌봄’과 영아를 둔 부모의 1:1 개별 보육 선호에 대응하는 ‘영아 종일제 돌봄’이 있다.

영아 종일제 돌봄은 2010년 실집행률이 4.3%, 2011년 35.6%, 2012년 70.4%, 2013년 8월말 현재 33.2%(본예산 대비 46.2%)로 연례적으로 저조하였던 사업이나, 2014년 예산안에서는 지원가구수를 2013년 추경과 동일한 수준(4,244가구)으로 편성하면서 지원대상을 당초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로 확대하고 있어 연례적인 집행 부진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표 2] 영아 종일제 돌봄 연도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실집행액(C)	실집행률(8월말 현재)	
	본예산(A)	추경(B)		본예산 대비(C/A)	추경 대비(C/B)
2010	4,421	-	191	4.3	-
2011	5,961	-	2,122	35.6	-
2012	7,184	-	5,056	70.4	-
2013	7,184	10,764	3,571	49.7	33.2

자료: 여성가족부(2013. 10)

한편, 동 사업은 모든 취업부모 가구에 돌보미 수당 월 100만원에 대한 일정 비율(40~70%, 40~70만원)을 정부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차액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게 된다. 2014년에는 돌보미 수당을 월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정부 지원액은 만 0세는 5만원씩 상향 조정된 45~75만원, 만 1세는 40~70만원으로 책정하였다.

[그림 1] 영아 종일제 돌봄 지원 변경 내용

구분	2013년	2014년			
아이돌보미 수당	월 100만원 (200시간 기준)	월 110만원(200시간 기준)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0세 (4,244가구)		0세 (2,444가구)		1세 (1,800가구)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70만원	30만원	75만원	35만원	70만원
	60만원	40만원	65만원	45만원	60만원
	50만원	50만원	55만원	55만원	50만원
100%초과	40만원	60만원	45만원	65만원	40만원

자료: 여성가족부(2013. 10)

한편, 아이돌보미 수당을 연령에 상관없이 월 110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은 낮은 연령일수록 보육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⁴⁾ 영아 종일제 돌봄 사업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이유 중 하나로 영아를 10시간 이상 하루 종일 돌보는 노동의 강도로 인해 아이돌보미가 시간제보다 종일제 근무를 기피하는 점도 지적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아이돌보미 수당을 연령과 상관 없이 책정할 경우 만 1세에 비해 만 0세의 돌봄이 기피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연령별 돌봄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과 향후 동 사업을 만 2세까지 확대할 계획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돌보미 수당을 연령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공동육아나눔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보건복지부)의 연계운영 방안 검토 필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아이양육과 관련한 정보를 교류 할수 있는 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말 현재 67개소가 운영 중이다. 주요 기능은 학습지도, 놀이, 체험활동 등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이웃간 품앗이 구성 지원, 부모자녀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나눔 기회 제공, 도서, 장난감, 교구 등 양육 관련 물품 비치 및 대여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66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교재·교구 등 장난감 대여, 부모에 대한 육아교육 및 부모간 육아정보 교류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공동육아나눔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표 3] 공동육아나눔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비교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소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적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12.8.1.시행)	●영유아보육법 제7조(‘13.12.5.시행)
사업 시작	●‘11년~ (‘10년 시범운영, 5개소)	●‘11년~/ (보육정보센터 운영: ‘95년~)
예산	●‘13년 7억원 * ‘12년 3.5억원	●‘13년 196억원(추경 110억 포함) * 센터 신축: 160억원(16개소) * 보육정보센터 운영: 36억원

4)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경우도 연령이 낮을수록 보육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단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26개 지역, 67개소 운영	●16개소 신축(6개소 14년 오픈 예정) - 보육정보센터 66개소 운영
목적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 보완 ●이웃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확산 지원	●가족·공동체의 육아기능 보완 및 가 정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사회 중심의 전문적 육아지원 인프 라 마련
기능	●학습지도, 놀이, 체험활동, 등하교 안 심동행 품앗이 구성 지원 ●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부모자녀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 나눔 기회 제공 ●도서, 장난감, 교구등 양육 관련 물품 비치 및 대여	●일시보육서비스 ●교재·교구 등 장난감 대여 ●부모에 대한 육아교육 및 부모간 육 아정보 교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지역별 육아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용 대상	●초등학교 이하 아동 - 전업주부의 취학전 아동이 주 이용 대상	●취학전 아동
운영 방식	●건강가정센터 등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기존 유휴공간 활용, 리모델링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설치지역 선정 ●신규 시설 신축 지원
지원 내용	●운영비 연간 4천만원(지자체 매칭) * 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70% ●리모델링 선정 시 5천만원(전액 국비) * 삼성생명 기부(17년까지 총 25억원)	●신축비 개소당 20억원(지자체 매칭, 국비 50%, 지방비 50%) * 운영비 지원여부는 미정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 중앙: 1,080백만원(국비 100%) - 시도(17개소): 개소당 312백만원(국 고보조 서울 20%, 지방 50%)

자료: 여성가족부(2013. 10)

현재 공동육아나눔터가 전국 67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66개소등 총 13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두 사업 모두 향후 개소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두 사업이 개별적으로 확대될 경우 중복 설치의 우려도 있는 바, 향후 신규 설치시 지역내 상대 사업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두 사업을 통합 운영하거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교육급여(기초생활급여) 예산의 국회 확정 내용을 반영한 아동교육지원비 예산 조정 필요

- 세사업인 아동교육지원비(중·고생 학용품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교육급여 지급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인 바, 교육급여 예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중복지원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세사업인 금융등의 정보제공 명의인 우편통보요금은 우편통보 실적이 편성 대비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함.

가. 현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여성발전기금⁵⁾, 1992~, 보조)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중고생 자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28억원(5.8%) 증가한 516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을 과소 편성하고 하반기에 기금계획변경 등을 통해 증액하여 왔으나, 2014년 예산안에서는 실소요액을 반영하고 있다.

[표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계획		2014 계획안(B)	증 감	
		당초	변경(A)		(B-A)	(B-A)/A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7,906	48,744	48,744	51,564	2,820	5.8
- 아동양육비	32,612	45,229	45,229	46,715	1,486	3.3
- 추가 아동양육비	884	284	284	807	523	184.2
- 아동교육지원비 (중고생 학용품비)	4,200	2,800	2,800	3,817	1,017	36.3
- 생계비	210	210	210	125	-85	-40.5
- 금융등의 정보제공사실 명의인 우편통보요금	-	221	221	100	-121	-54.8

자료: 여성가족부(2013. 10)

5) 2009년까지는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사업이었으나, 2010년에 복권기금(기획재정부 소관) 사업으로 이관되었다가, 2011년부터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이관되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이기는 하나 복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비만큼 복권기금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전입한다.

나. 아동교육지원비(중고생 학용품비)의 기초생활보장급여 개편 내용 즉시 반영 필요

동 사업은 급여 종류에 따라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중고생 학용품비), 생계비로 구분되며, 지원시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00~130% 이하이다. 기초수급자에게는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⑥에서 급여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동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급여별로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것으로 개편할 계획인 바 이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도 급여내용별 지급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구 또는 조손가구라는 가구 특성에 따른 양육비 지원 내용이므로, 향후 지원을 지속하지 지속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아동교육지원비(중고생 학용품비)는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용품비(연 5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급여내용이 유사하다.

-
-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4.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7)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5.1만원/연), 부교재비(3.8만원/연), 교과서대(12.6만원/연), 입학금 및 수업료를 연 1회 또는 학기당 나누어 연 2회로 지급한다.(단가는 2013년 예산 기준)

그간 최저생계비 100~130%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자에게 아동교육지원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교육급여 기준선은 중위소득 5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인 바, 이는 최저생계비 130%보다 높은 수준이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시 아동교육지원비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의 교육급여 지원대상에 새로이 포함되어 교육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표 2]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비교

(단위: 원)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100%	130%	100%	50%
2007	1,205,535	1,567,196	3,258,613	1,629,307
2008	1,265,848	1,645,602	3,384,660	1,692,330
2009	1,326,609	1,724,592	3,466,735	1,733,368
2010	1,363,091	1,772,018	3,646,387	1,823,194
2011	1,439,413	1,871,237	3,970,318	1,985,159

주 1. 4인, 전가구, 경상소득 기준임.

2. 2012년 및 2013년의 경우 통계청 가계금융조사자료(2011년)에 현행 최저생계비에 활용하는 가구 균등화지수를 적용하고, 직전 2개년 중위소득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출됨.

자료: 보건복지부(2013. 5)

보건복지부는 교육급여 2014년 예산요구시 제도 개편에 따라 8.8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전년 대비 증액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부안은 학기제를 고려하여 2015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교육급여 예산 확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상황을 보아 가며 아동교육지원비 예산액도 동시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⁸⁾

8) 이와 유사하게,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100~15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검정고시지원비, 자립촉진수당, 자산형성계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구별되는 급여내용이므로 추후 사업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 금융정보 조회 건수 저조에 따른 우편통보요금 집행 부진

금융등의 정보제공사실 명의인 우편통보요금은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 등 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에 따른 우편요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4년 예산안에서는 2013년 대비 1억 2,100만원 감소한 1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동 예산은 2012년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한 우편요금(160만원)은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집행한 결과 전액 불용되었으며, 2013년은 3분기까지 집행액이 1,100만원(31,132건)에 불과하여 연도말 상당 부분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금융등의 정보제공사실 명의인 우편통보 실적

2012년	우편통보 실적	2013년	우편통보 실적
1분기	-	1분기	· 6,390건, 2,300천원
2분기	-	2분기	· 9,935건, 3,700천원
3분기	· 4,442건, 1,600천원	3분기	· 14,807건, 5,500천원
4분기	복지부에서 일괄 집행	4분기	
합 계	· 4,442건, 1,600천원	합 계	31,132건, 11,500천원

주: 우편료는 주관부처인 복지부로부터 분기별로 납부의뢰 받아 집행함

자료: 여성가족부(2013. 10)

따라서, 2014년 편성된 1억원도 집행 추이를 볼 때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5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발간일	2013년 11월
발행인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사회문화사&세무정보사 (Tel 02·2263·0523)

1.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88·3771)
-

ISBN 978-89-6073-690-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3